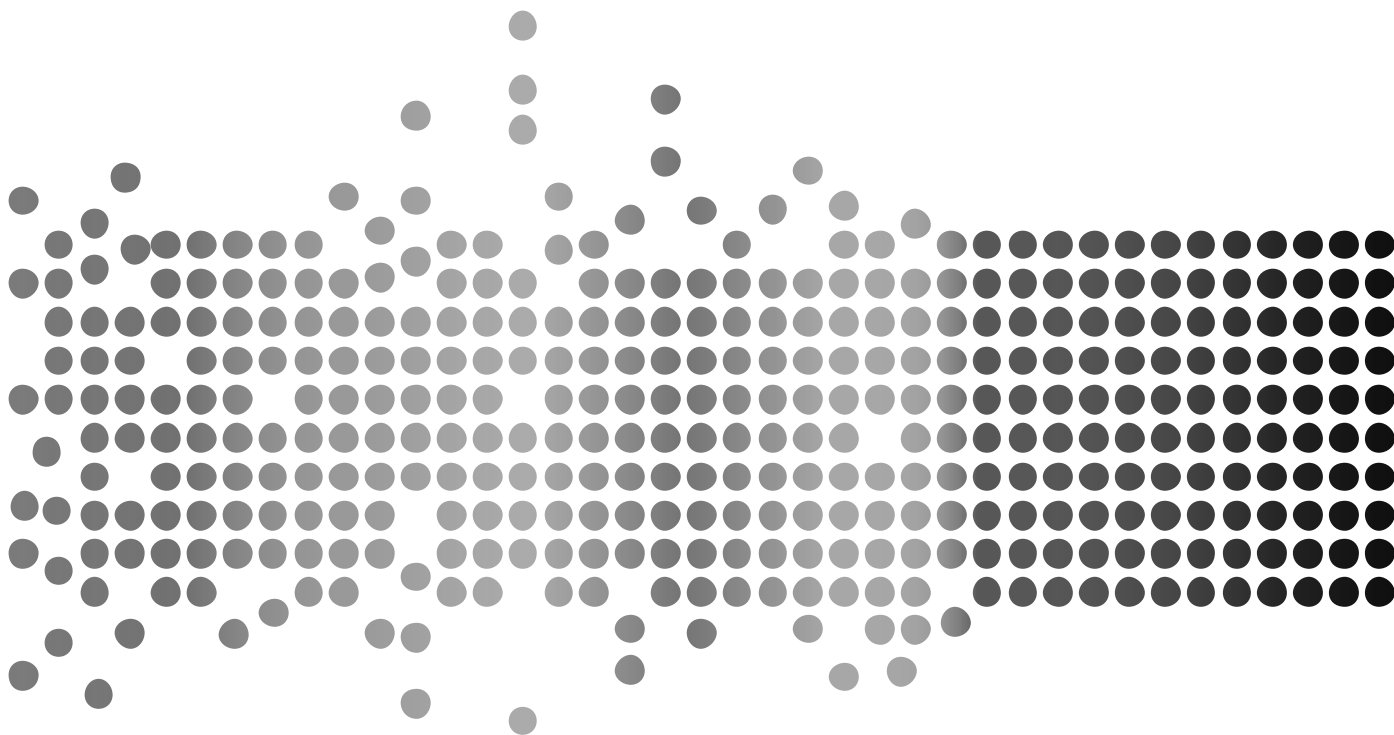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Public Opinion Survey for Ecosystemic Development

김미숙 · 조성한 · 김효진 · 이정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57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발행일	2011년 12월
저자	김미숙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57-3 93330



머리말

국민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의식은 사회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주요 요인이다. 국민이 어떠한 가치관,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정치성향이 영향을 받는다. 정치성향은 또한 한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책의 대상, 범위, 규모 등 핵심적인 정책 내용의 기반이 된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파악하여, 국민의 욕구와 지향점을 진단하여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의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고 사회통합도 증진될 수 있다.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태도는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제도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동으로 가치관의 혼란, 상충하는 가치 체계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사회제도의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태도와 수용정도 등 각종 의식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배정의에 기반하고 형평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민의 정치, 사회, 정부정책, 경제적 변화, 분의 배분, 공생 등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였다. 지난 2004년에 학계에서 ‘복지의식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에서는 정부, 민간, 사회적 관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였다. 지난 7년간의 국민의 의식변화를 분석하여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방향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간 국민의 의식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민의 의식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정치적 가치와 이념의 변화방향을 진단하고, 이를 향후 정책결정의 근간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복지정책 수립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

고, 사회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조사에 협조해주신 일반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조사를 담당해 주신 한국능률협회와 관계자 여러분에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검독을 통해서 보고서를 질적으로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신 김유경 부연구위원과 박수지 부연구위원께 감사함을 지면으로나마 전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원활한 소통과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16
제3절 연구의 방법	16
제2장 공생발전과 국민의식조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제1절 공생발전의 정의	21
제2절 국민의식조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23
제3장 공생발전에 관한 국민의식실태	29
제1절 조사개요	29
제2절 경제 관련 정부의 역할	32
제3절 경제 및 사회 인프라 운영주체 (민간 vs 정부)	51
제4절 정부의 책임 분야	57
제5절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견해	77
제6절 부의 재분배 정도에 대한 견해	97
제7절 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	118
제8절 정치성향, 가구 경제	146
제9절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 등	166
제10절 요약 및 시사점	172

제4장 공생사회 구현방안	177
제1절 복지의식의 전반적 추이	177
제2절 정부의 역할 및 책임	179
제3절 정부의 지출과 복지	181
제4절 형평적 부의 재분배 방안	183
제5절 사회통합방안	186
 참고문헌	189
 부록	191

표 목차

〈표 1- 1〉 ISSP 연도별 조사 주제	17
〈표 3- 1〉 조사항목 및 내용	30
〈표 3- 2〉 응답자 특성	31
〈표 3- 3〉 경제 관련 정부의 역할	33
〈표 3- 4〉 연령 및 소득별 정부의 임금규제에 대한 태도	36
〈표 3- 5〉 연령 및 소득별 물가통제에 대한 태도	37
〈표 3- 6〉 연령 및 소득별 근로자 정년보장에 대한 태도	39
〈표 3- 7〉 연령 및 소득별 정부지출 삭감	40
〈표 3- 8〉 연령 및 소득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전개	41
〈표 3- 9〉 연령 및 소득별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43
〈표 3-10〉 연령 및 소득별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위한 정부의 산업체 지원	44
〈표 3-11〉 연령 및 소득별 고용보호를 위해 정부의 사양산업 지원	45
〈표 3-12〉 연령 및 소득별 일자리 창출을 근로시간 단축	47
〈표 3-13〉 경제관련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1	48
〈표 3-14〉 경제 관련 정부의 역할 평균 국제비교 2(평균점수 비교)	51
〈표 3-15〉 민간부분 및 정부부분의 운영주체	52
〈표 3-16〉 연령별 민간 및 정부의 운영주체	54
〈표 3-17〉 소득별 민간 및 정부의 운영주체	56
〈표 3-18〉 사회보장 관련 정부의 책임 (2011년)	57
〈표 3-19〉 사회보장 관련 정부책임(2004년 2011년 비교)	59
〈표 3-20〉 연령 및 소득별 일자리 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	61
〈표 3-21〉 연령 및 소득별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	63
〈표 3-22〉 연령 및 소득별 노인의 생계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64

〈표 3-23〉 연령 및 소득별 실업자 생계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65
〈표 3-24〉 연령 및 소득별 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66
〈표 3-25〉 연령 및 소득별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	67
〈표 3-26〉 연령 및 소득별 저소득층 주거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	69
〈표 3-27〉 연령 및 소득별 양질의 교육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	70
〈표 3-28〉 연령 및 소득별 빈부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역할	71
〈표 3-29〉 연령 및 소득별 성장이 필요한 산업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	72
〈표 3-30〉 사회보장 관련 정부책임 국제비교 1	73
〈표 3-31〉 사회보장 관련 정부책임 국제비교 2(평균점수 비교)	77
〈표 3-32〉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 (2011년)	78
〈표 3-33〉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2004년 2011년 비교)	80
〈표 3-34〉 연령 및 소득별 환경분야 지출증감	82
〈표 3-35〉 연령 및 소득별 보건의료분야 지출증감	83
〈표 3-36〉 연령 및 소득별 경찰분야 지출증감	84
〈표 3-37〉 연령 및 소득별 교육분야 지출증감	85
〈표 3-38〉 연령 및 소득별 국방분야 지출증감	86
〈표 3-39〉 연령 및 소득별 문화예술 분야 지출증감	88
〈표 3-40〉 연령 및 소득별 국민연금 분야 지출증감	89
〈표 3-41〉 연령 및 소득별 고용보험 분야 지출증감	90
〈표 3-42〉 연령 및 소득별 공적부조 지출증감	91
〈표 3-43〉 정부지출 관련 정부책임 국제비교 1	92
〈표 3-44〉 정부지출 관련 정부책임 국제비교 2(평균점수 비교)	96
〈표 3-45〉 가족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	97
〈표 3-4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	98
〈표 3-47〉 연령 및 소득별 소득세 수준에 관한 의견	99

〈표 3-48〉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수준 비교	100
〈표 3-4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수준 비교	101
〈표 3-50〉 연령 및 소득별 기업조세 수준 비교	102
〈표 3-51〉 사회복지지출 및 세금수준 비교	103
〈표 3-5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복지지출 및 세금수준 비교	104
〈표 3-53〉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사회복지지출 및 세금수준에 관한 의견	106
〈표 3-54〉 정책우선순위	107
〈표 3-5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책 우선순위	107
〈표 3-56〉 연령 및 성별 정책우선순위	109
〈표 3-57〉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	110
〈표 3-5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	110
〈표 3-59〉 연령 및 소득별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한 견해	112
〈표 3-60〉 의료서비스에 대한 견해	113
〈표 3-6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견해	113
〈표 3-62〉 연령 및 소득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견해	115
〈표 3-63〉 국민연금에 대한 견해	116
〈표 3-6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국민연금에 대한 견해	116
〈표 3-65〉 연령 및 소득별 국민연금에 대한 견해	118
〈표 3-66〉 부의 세습	119
〈표 3-6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의 세습에 대한 견해	119
〈표 3-68〉 인생의 성공여부와 가족배경	121
〈표 3-6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생의 성공여부와 가족배경	122
〈표 3-70〉 근면과 부	123
〈표 3-7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근면과 부에 대한 견해	124
〈표 3-72〉 빈민의 근면성	126

〈표 3-7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민의 근면성에 대한 견해	126
〈표 3-74〉 빈곤의 원인: 노력부족	128
〈표 3-7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곤의 원인: 노력부족	129
〈표 3-77〉 우리사회의 기회 불평등성	131
〈표 3-7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우리사회의 기회 불평등성에 대한 견해	131
〈표 3-79〉 공적부조 수급자격의 적정성에 대한 동의	133
〈표 3-8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수급자는 Deserving Poor에 대한 견해 ..	134
〈표 3-81〉 한국사회의 형평성 종합	136
〈표 3-82〉 근로능력자들의 수혜 기간	137
〈표 3-8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근로능력자들의 적절한 수혜기간	137
〈표 3-84〉 정부지원기간	139
〈표 3-8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부지원기간	139
〈표 3-86〉 근로능력있는 빈곤층에 적합한 정책	141
〈표 3-8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근로 능력있는 빈곤층에 적합한 정책	142
〈표 3-88〉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한도	144
〈표 3-8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한도	144
〈표 3-90〉 귀하가 속하는 정치적 성향	146
〈표 3-91〉 정치적 성향(좌/우)	147
〈표 3-92〉 정치적 성향(진보/보수)	149
〈표 3-93〉 성, 연령, 학력 및 소득별 정치적 성향(진보 VS 보수)	150
〈표 3-94〉 주관적 사회적 위치 수준	151
〈표 3-95〉 연령, 학력 및 소득별 주관적 사회적 위치 수준	152
〈표 3-96〉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 현황 (2인가구 이상)	153
〈표 3-97〉 가구 월평균 소득	154
〈표 3-98〉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당/상여금/이자소득/세금 포함 총액)	155

〈표 3- 99〉 적정소득	156
〈표 3-100〉 현소득 대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평균점수 비교)	157
〈표 3-101〉 가구월평균소득 대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158
〈표 3-102〉 연령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1(평균점수 비교)	160
〈표 3-103〉 지역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1(평균점수 비교)	161
〈표 3-104〉 연령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2	162
〈표 3-105〉 지역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2	164
〈표 3-106〉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2004년 2011년 비교)	166
〈표 3-107〉 연령별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의 차이 여부	171

그림 목차

[그림 2- 1] 공생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22
[그림 3- 1] 정부의 역할: 임금규제에 대한 개입	36
[그림 3- 2] 정부의 역할: 정부 물가 통제(관리)	37
[그림 3- 3] 정부의 역할: 근로자 정년 보장	38
[그림 3- 4] 정부의 역할: 정부지출 축소	40
[그림 3- 5] 정부의 역할: 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사업 전개	41
[그림 3- 6] 정부의 역할: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42
[그림 3- 7] 정부의 역할: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산업체 지원	44
[그림 3- 8] 정부의 역할: 고용보호 위해 정부의 사양산업 지원	45
[그림 3- 9] 정부의 역할 : 일자리 창출 위해 주당근무일수 축소	46
[그림 3-10]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 정부지출 삭감	49
[그림 3-11]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 공공사업 지원	49
[그림 3-12]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 기업규제 완화	49
[그림 3-13]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 신상품·신기술 개발 산업체 지원	50
[그림 3-14]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 사양산업 지원	50
[그림 3-15]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 주당 근무일수 단축	50
[그림 3-16] 경제 및 사회 인프라의 운영주체	52
[그림 3-17] 정부의 책임 : 모든 구직자에게 일자리 제공	61
[그림 3-18] 정부의 책임 : 의료서비스 제공	62
[그림 3-19] 정부의 책임 : 노인의 일정 수준 생계보장	64
[그림 3-20] 정부의 책임 : 실업자 일정 수준 생계보장	65
[그림 3-21] 정부의 책임 : 모든 사람들 일정 수준 소득보장	66
[그림 3-22] 정부의 책임 : 저소득가정 대학생 재정지원	67
[그림 3-23] 정부의 책임 : 어려운 사람들 적정한 주거제공	68

[그림 3-24] 정부의 책임 : 양질의 교육제공	70
[그림 3-25] 정부의 책임 :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소득 격차 해소	71
[그림 3-26] 정부의 책임 : 성장 필요한 산업 지원	72
[그림 3-27]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일자리 제공	74
[그림 3-28]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의료서비스 제공	75
[그림 3-29]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노인 생계보장	75
[그림 3-30]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실업자 생계보장	75
[그림 3-31]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저소득가정 대학생 재정지원	75
[그림 3-32]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어려운 사람 적정한 주거제공	76
[그림 3-33]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소득격차 해소	76
[그림 3-34]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성장이 필요한 산업지원	76
[그림 3-35] 정부 지출증감 : 환경분야	82
[그림 3-36] 정부 지출증감 : 보건·의료분야	83
[그림 3-37] 정부 지출증감 : 경찰분야	84
[그림 3-38] 정부 지출증감 : 교육분야	85
[그림 3-39] 정부 지출증감 : 국방 분야	86
[그림 3-40] 정부 지출증감 : 문화·예술분야	87
[그림 3-41] 정부 지출증감 : 국민연금 분야	89
[그림 3-42] 정부 지출증감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분야)	90
[그림 3-43] 정부 지출증감 : 저소득층 생계지원(공적부조) 분야	91
[그림 3-44]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보건의료	94
[그림 3-45]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교육	94
[그림 3-46]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문화예술	94
[그림 3-47]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환경	94
[그림 3-48]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환경	95

[그림 3-49]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경찰	95
[그림 3-50]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국방	95
[그림 3-51]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국민연금	95
[그림 3-52]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고용보험	96
[그림 3-53] 가족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	97
[그림 3-54]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수준	100
[그림 3-55] 사회복지지출 및 세금수준 비교	104
[그림 3-56] 정책우선순위	107
[그림 3-57]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	110
[그림 3-58] 의료서비스에 대한 견해	113
[그림 3-59] 국민연금에 대한 견해	116
[그림 3-60] 부의 세습	119
[그림 3-61] 인생의 성공여부와 가족배경	121
[그림 3-62] 근면과 부	124
[그림 3-63] 빈민의 근면성	126
[그림 3-64] 빈곤의 원인: 노력부족	128
[그림 3-76] 우리 사회는 기회가 불평등함	130
[그림 3-66] 공적부조 수급자격의 적정성에 대한 동의	133
[그림 3-67] 근로능력자들의 적절한 수혜기간	136
[그림 3-68] 정부지원기간	139
[그림 3-69] 근로 능력있는 빈곤층에 적합한 정책	141
[그림 3-70]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한도	143
[그림 3-71] 정치적 성향(좌/우)	146
[그림 3-72] 세대별 정치적 성향(좌/우)	147
[그림 3-73] 정치적 성향(진보/보수)	149

[그림 3-74] 연령별 정치적 성향(진보/보수)	149
[그림 3-75] 주관적 사회적 위치 수준	151
[그림 3-76] 가구의 월평균 소득	155
[그림 3-77] 사회관계에 대한 의식 주요결과	167
[그림 3-78] 집단조화에 관한 의식 주요결과	168
[그림 3-79] 가족관계에 대한 의식 주요결과	169
[그림 3-80] 경쟁에 대한 의식 주요결과	170
[그림 3-81] 연령별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의식 비교	172

Abstract

People's consciousness towards the nation and society is very important in making policies. The political trend is affected by people's value system and ideology. Political stance also affects policies of a nation. In other words, it is a basis in determining beneficiaries, types of benefits, and amounts of benefits.

As long as the government establishes policies based on people's consciousness, their social needs and their intentions, citizen's satisfaction with society can be increased and thus social integration can be incremented. Since socially shared values and attitudes of the people influence social welfare system and various social policies, and be very useful reference in predicting the future of a society, it is urgent to detect people's attitudes toward society. In particular, to analyze people's attitudes and needs is inevitable to construct the social system in this era of value confusion and social conflict.

This study analyzes people's attitudes towards politics, society, welfare policies, economic changes, wealth distribution, symbiosism, etc. By analyzing the attitude changes of the citizens for the past 7 years, it has tried to make some scientific foundations in realizing a society with justice.

요약

1. 서론

□ 연구배경

- 국민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의식은 사회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주요 요인임.
 - 국민이 어떠한 가치관,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정치성향이 영향을 받음. 정치성향은 또한 한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이는 정책의 대상, 범위, 규모 등 핵심적인 정책 내용의 기반이 됨.
-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파악하여, 국민의 욕구와 지향점을 진단하여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의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고 사회통합도 증진될 수 있음.
-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동으로 가치관의 혼란, 상충하는 가치체계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사회제도의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태도와 수용정도 등 각종 의식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함.

□ 연구목적

- 분배정의에 기반하고 공평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민의 정치, 사회 정부정책, 경제적 변화, 부의 배분, 공생발전에 대한 의식을 파악함
- 지난 5년간 국민의식변화를 분석하여 공생발전 사회구현 방향설정에 활용

□ 주요 연구내용

- 정부의 역할 및 책임: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태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태

도, 정부의 지출에 대한 태도

○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평등수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

○ 정치적 성향, 적정소득 수준, 공생 및 사회관계 등

□ 연구방법

○ 실태조사

— 전국 16개 시·도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2011년 10월 31일부터 23일간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크기는 1,500명임

— 모집단은 통계청의 「2011년 인구추계」를 활용하였으며,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추출법을 적용하였음

○ 2011년 실태조사결과는 2004년 동일한 조사결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정부의 역할 등 일부 내용은 ISSP 데이터와 국제비교하였음

2.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 경제개입 관련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지는 전반적으로 2004년에 비하여 낮아진 경향을 보였으나

— 정부의 물가통제에 대해서 ‘찬성’ 48.5% ‘매우 찬성’ 17.1%로 강한 지지를 보였으며 2004년에 비하여 물가통제를 찬성하는 입장 증가

— 2004년에 비해 기업규제 완화는 찬성률이 감소(56.7% → 50.1%)

○ 정부의 공공사업 전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식이 높아짐

— 2004년 강한지지를 보였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2011년에는 지지율(찬성+매우찬성)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지지정도가 다소 낮음

—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보다는 민간시장 활성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됨

□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관련 운영 주체 (정부 vs 민간)

○ 전력·병원·금융·대중교통의 운영주체를 정부로 인식

- － 금융기관은 2004년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2011년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아짐
- － 전력산업은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로 정부운영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임
- － 병원은 정부(49%)와 민간(51%) 응답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나, 2004년에 비하여 정부운영에 대한 지지 13% 증가

□ 정부의 책임

○ 사회보장 관련 대부분 정부의 책임이라고 의식하고 있으나 2004년에 비하여는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낮음

- － 노인생계보장, 실업자생계보장, 양질의 교육제공, 빈부격차해소, 성장이 필요한 산업 지원은 2004년 정부의 책임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였던 분야였으나 2011년에는 현격히 감소

○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이 높은 분야는 노인 생계보장 72.3%, 양질의 교육제공 70.4%,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69.9% 등 고령자 지원 또는 교육 관련 지원이 높음

- － 반면, 보편적 복지 관련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은 정부책임이 아니라는 응답이 높음 (정부책임 아님 52.6%, 정부책임 47.4%)

□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견해

○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출을 증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2004년에 비해서는 정부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낮아진 경향을 보임

- －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정부지출이 대폭 증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 증가 지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의료(58.3%), 교육(57.7%), 국민연금(53.8%), 공적부조(50.2%)의 순이며, 감소 지지율이 높은 분야는 국방(20.8%), 문화·예술(20.8%), 경찰(1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 분야는 감소해야한다는 응답이 10% 미만임

- － 국방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하여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공존하여 타 분야에 비해 감소 지지율이 높고 증가 지지율도 낮음(대폭감소 4.6%, 감소 16.8%, 현수준 유지 36.9%, 증가 27.7%, 대폭 증가 14.0%)
 -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공적 부조는 2004년에 비하여 강한 지지율이 감소하였음
 - － 국민연금 23.8%→12.6% / 고용보험 20.5% →7.8% / 공적부조 26.3% →10.0%로 ‘정부지출 대폭 증가’ 응답률이 크게 감소
 -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은 반면 고용보험은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임
- 세금에 대한 견해
 - 가족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04년에 비하여 다소 낮아진 경향이라고 보고 있음
 - － 소득세 수준이 ‘높다’는 견해는 69.1%에서 61.4%로 감소하고 소득세 수준이 ‘적당하다’는 27.5%에서 34.4%로 증가함
 -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의식이 증가
 - － '04년에는 기업의 조세가 높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던 반면, '11년에는 32.1%로 다소 감소하였음
 - － 가구의 소득세와 달리 기업의 조세는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 복지지출과 조세
 - 세금을 줄이는 것과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 중 7년 전과는 달리 세금을 줄이는 것을 선호
 - － '04년에는 복지지출 증가가 더 우세한 56.8%이었으나, '11년에는 44.9%로 감소
 - － 사회복지지출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자는 의견은 '04년 43.2%에서 55.1%로 11.9% 포인트 증가함
 - － 특히 고소득일수록 세금을 줄이자는 의견이 많음

-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지지율: 47.2%('04) → 65.2%('11)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지지율: 46.2%('04) → 49.1%('11)

□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인플레이션 vs 실업 감소)

- 정부의 정책우선 순위에서 '인플레이션 감소'보다는 '실업 감소'라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04년에 비하여는 비율은 낮아짐

- 2011년의 고물가로 인플레이션 대책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실업 감소 지지율 하강: 67.1%('04) → 58.8%('11)

- 인플레이션 감소지지율 약간 상승: 32.9%('04) → 41.2%('11)

□ 선별복지 대비 보편복지

-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대폭 감소

- 진보라는 답변은 2.9%p 감소한 데 비하여,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8.5% 포인트로 크게 감소함

- 선별복지 대비 보편복지에서는 선별복지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응답비율은 '04년에 비하여 높아짐

- '국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을 돕는 것이 좋다'는 선별 복지에 대한 인식은 '04년 57.9%보다 7.0% 포인트 증가 (64.9%)

-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려 모두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응답은 '04년 42.1%에서 '11년 35.1%로 감소함

- 의료서비스 혜택 수준에 있어서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지지하는 비율이 선별 적 의료서비스보다 높음

- 단, 그 비율은 '04년에 비해 13.2% 포인트 감소함.

- 의료서비스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04년→'11년) : 64.6%→51.4%

- 국민연금의 적정수준은 '04년에는 적정수준의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응답이 55.7%로 최소한의 소득보장의 응답보다 더 높았으나, '11년에는 인식이 바뀌 어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더 우세

-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04년에 44.3%에

서 13.0% '11년 51.3%로 13.0% 포인트 증가

- 국민들은 국민연금으로만 노후생계를 전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정도

- 우리사회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0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하고 있음
 - 우리 사회는 기회가 불균등하다('04년→'11년): 찬성 58.2%→54.4%, 중립: 30.6%→35.7%, 반대: 11.1%→9.9%
 - 즉, 우리 사회가 학력, 가족배경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함을 나타냄
 -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기회, 진학기회 등 각종 기회의 균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정치적 성향 및 가구경제

- 전반적으로 극좌와 극우인 경우가 낮아지고 중도좌와 중도의 응답이 2004년에 비하여 높아짐
 - 40대 이상인 경우 극우와 우인 경우가 30대 미만보다 높았으며 극좌와 좌인 경우는 낮음
-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중에서 중도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2004년에 비하여 높아졌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의 성향이 많아졌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높았음
-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주관적 사회적 위치를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하층이라고 생각하였음
 - 고소득 집단인 경우도 자신이 사회적으로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율이 높지 않음
- 2011년 적정소득금액은 가구월소득 증가로 인하여 2004년에 비하여 높아짐 (여유있게 충분한 소득 평균액 약470만원, 충분한 소득 약383만원, 불충분한 소득 249만원, 매우 불충분 182만원, 최저생계비 약254만원, 4인가족 최소한 월소득 405만원)

□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 등

-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 등에 대해서 집단과의 조화와 관련해서는 2004년에 비하여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집단내에서 경쟁의식은 높아진 경향을 보임
- 가족관계에서도 가족을 위한 희생, 노부모 부양의식 등은 낮아진 경향을 보임
 - 연도별 및 세대별로 응답의 차이를 보인 것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 관계에 관한 것으로,
 -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와 관련하여 강한 긍정의 응답이 전반적으로 모두 줄어든 경향을 보였음.
 -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강한 긍정적 응답이 절반가량 줄어들었음.

3. 공생사회 구현방안

□ 정부의 역할 및 책임

- 국민들은 경제정책과 사회보장서비스 정책 어느 분야에 정부가 더 치중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를 원함
 -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이나 보수적인 정책 중 하나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 따라서 소수집단의 목소리에 따라 포퓰리즘적 정책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신뢰를 잃게 됨.
- 국민들은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민간부문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더 신뢰하는 선택을 하고 있음
 - 현재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과 에너지위기에 대한 인식이 작용
 - 현재로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안정감을 위해 더 높은 개입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해야 함
-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해서 국민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점차 개인의 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

- 이념적 이익집단이 아닌 침묵하는 국민들은 과반수가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정부의 지출과 복지

-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무조건 세율은 낮추면서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
- 정부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무상급식이나 반액등록금과 같은 정책에 대해 정치권이나 이념적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의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무조건 수긍할 것이란 생각은 제고될 필요
- 국민들은 가구의 조세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기업에 대한 조세는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정부는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 할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국민들은 현 정치권의 생각과 달리 조세도 줄이고 복지지출도 줄이기를 희망

□ 형평적 부의 재분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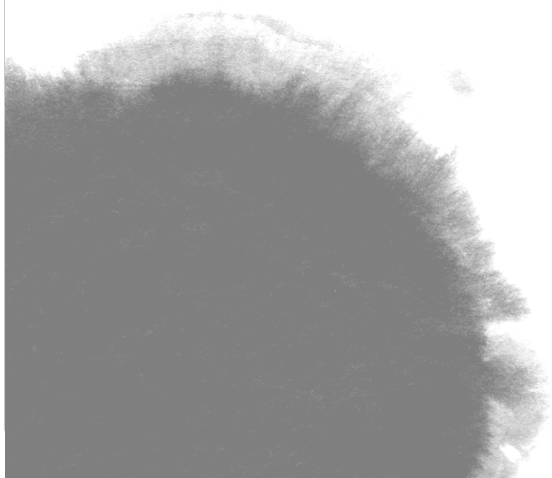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 정부는 무조건 국민들에게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정책보다는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에 더욱 집중해야 함
- 공공부조 역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보장보다는 자활서비스나 근로교육을 활성화
- 정부는 의료의 민영화를 추구하는 것이나 의료시스템을 국영체제로 하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
-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에 대해 국가가 복지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강해짐
 - 노인들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될 정도의 소득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만, 그 이상은 각자의 경제적 수준에 맞도록 생활하는 것을 원함
 - 현재 국민연금이나 노인연금은 그 수준도 보장하고 있지 못하지만, 선거철마다 모든 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늘리려고 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제동이 필요

□ 사회통합 방안

-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인 것보다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자활
이 우선되어야 함
- 노인복지와 의료에 있어서도 현재보다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만 모든 소득수준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로 필요한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본인의 선택에 맞기는 것을 원함
-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해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는 찬성하지 않으므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올리는 것도 합당함
- 복지를 통한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물가통제를 통한 실질적 소득감소를
막는 것이 중요함
- 복지와 시장경제의 활성화 등 균형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함

01

서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의식은 사회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주요 요인이다. 국민이 어떠한 가치관,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정치성향이 영향을 받는다. 정치성향은 또한 한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책의 대상, 범위, 규모 등 핵심적인 정책 내용의 기반이 된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파악하여, 국민의 욕구와 지향점을 진단하여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의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고 사회통합도 증진될 수 있다.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태도는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제도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동으로 가치관의 혼란, 상충하는 가치 체계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사회제도의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태도와 수용정도 등 각종 의식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배정의에 기반하고 형평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민의 정치, 사회, 정부정책, 경제적 변화, 분의 배분, 공생 등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난 2004년에 학계에서 ‘복지의식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에서는 정부, 민간, 사회적 관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였다. 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간 국민의 의식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의 의식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정치적 가치와 이념의 변화방향을 진단하고, 이를 향후 정책결정의 근간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복지정책 수립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난 7년간의 국민의 의식변화를 분석하여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방향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로서 공생사회의 의의 및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국민의식조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고찰하였다. 둘째, 분야별 국민의식실태를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담당분야, 정부의 책임 분야, 분야별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견해, 복지지출에 대한 견해, 부의 재분배 정도에 대한 견해, 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 정치성향, 가구 경제,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 등이 포함된다. 2004년과 2011년의 결과 비교를 통해서 지난 7년간 국민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나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생사회 구현방안 마련하였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2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국내외 기존문헌 분석으로 공생발전과 국민의식조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파악하였다. 최근 이슈가 된 공생발전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고, 국민의식조사의 중요성과 선행연구의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실태조사로서 일반국민 1,500명에 대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와 동일한 방법 실시를 통한 비교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실태조사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자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국제비교를 실시한 내용은 정부의 역할과 관한 태도로 ISSP 2006년 '정부의 역할 IV(Role of the Government)'와 비교하였다. 2006년 ISSP '정부의 역할 IV'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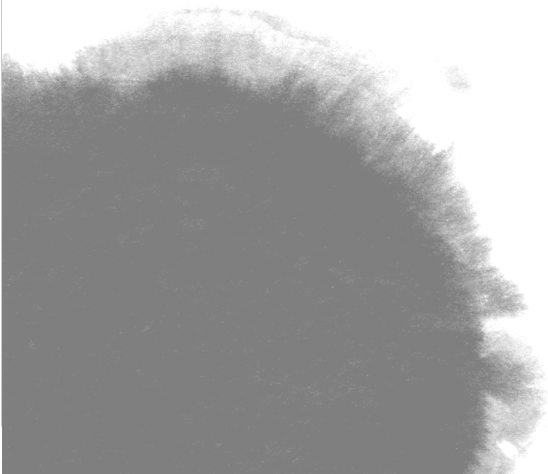
총 34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태도, 정부책임에 대한 태도,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개입, 책임, 지출에 대한 태도를 우리나라와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다.

참고로 ISSP에는 현재 4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조사주제를 확정하여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회원국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표성있게 표본 조사를 하고 각국의 조사결과는 ISSP 홈페이지(www.issp.org)에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확정된 주제는 시민사회 불평등, 시민권, 근로권, 정부의 역할, 레저와 스포츠, 종교, 환경,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등으로 확정된 주제는 5~10년 간격을 두어 반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1년 보건, 2012년 가족, 노동, 성의 역할을 조사주제로 선정하였다.

〈표 1-1〉 ISSP 연도별 조사 주제

연도	조사주제	연도	조사주제
1985	Role of Government I	1999	Social Inequality III
1986	Social Networks	2000	Environment II
1987	Social Inequality	2001	Social Relations and Support Systems
1988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	200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I
1989	Work Orientations I	2003	National Identity II
1990	Role of Government II	2004	Citizenship
1991	Religion I	2005	Work Orientations III
1992	Social Inequality II	2006	Role of Government IV
1993	Environment I	2007	Leisure Time and Sports
1994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	2008	Religion III
1995	National Identity I	2009	Social Inequality IV
1996	Role of Government III	2010	Environment III
1997	Work Orientations II	2011	Health
1998	Religion II	2012	Family, Work and Gender Roles

02

공생발전과 국민의식 실태조사의 의의

제2장 공생발전과 국민의식조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 절 공생발전의 정의

공생발전은 사전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생태계형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창조적으로 의역한 것으로 2011년 8.15 경축사에서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생태계형 발전이란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발전,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된다(김주성, 2011). 혹은 공생보다는 상생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 상생발전이라 표현한 학자도 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변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입니다.

높아진 우리의 국력과 강해진 우리경제를 공생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읍시다.

(이명박 대통령, 2011년 광복절 경축사 중)

이렇게 공생발전의 의미는 정부에서 정책담론으로 제기되어, 정부가 주도로 그 의미와 원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생발전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첫째, 상호보완성으로 공생발전 경제에서는 각 경제주체간 경쟁적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을 통해 보다 나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성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함께 아우르는 것이다. 셋째 다양성 및 개방성으로 닫힌사회가 아니라 열린 사회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넷째 자발성으로 정부정책 등 외부 힘만으로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사회구성원들의 공감과 참여 등 자발적인 협력은 필수이다.

이러한 공생발전을 통해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는 미래의 성장 기회를 함께 나누어 전체 파이를 키우고 사회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하여 동반성장하는 것이다. 학력차별을 넘어 증력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것, 정부나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에 사회적 기업이 나섬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찾아주는 것 등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예는 공생발전의 중요한 모델이기도 한다. 이렇듯 현 사회가 공생발전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림 2-1] 공생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책자(2011) 공생발전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p.19.

이렇듯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생발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생발전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근식(2011)은 공생발전의 원리를 적용하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분배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인간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윤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 원리를 국제사회에 적용하면 세계 평화도 달성되며 자본주의로 인한 자연파괴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환경과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절 국민의식조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국민의식조사의 개념 및 필요성

국민의식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태도 및 가치관을 말한다. 이를 복지에 국한하여서 보면 복지의식, 영어로는 welfare consciousness라고 할 수 있다. 복지의식이란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가치 및 태도를 의미한다(김신영, 2010).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식이 사회정책을 결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과연 복지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나에 있어서 국민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복지의식은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 복지인식 등과 같은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들은 약간씩 강조하는 바가 달라 의미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개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복지에 대한 지향성을 의미한다. Taylor-Gooby(1985)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내지 사회적 태도를 '복지태도'라고 명명하였다. Jakobsen(2011)은 복지태도란 분배정책 및 국가의 개입에 대한 성향이라고 하였다. 그는 복지태도와 사회복지레짐 간에는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자유주의 레짐의 경우는 소득의 불평등과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소득의 재분배와 적극적 국가개입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김

신영(2010)은 사회적 신뢰감이 높을수록 국가의 공공복지정책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민주사회에서 구성원들의 복지의식은 복지정책 수립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본이다(김신영, 2010).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은 복지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을 예측하는 준거가 된다. 또한 국가복지제도의 정당성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우호적 지지도 및 그러한 지지가 현실 정치 속에서 정치적 행위나 의사결정의 원천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김신영, 2010).

최근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매우 상이한 복지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가치, 신념, 태도 등을 파악하여 복지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좌표로 삼아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하에 정책 수행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생계유지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여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미래의 정책발전방향을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김상균·정원오, 1995). 서구에서도 복지의 발전은 국민의 복지의식 혹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다(Rimlinger, 1971: 변미희, 2002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독일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빠르게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19세기 중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Rimlinger, 1971: 변미희, 2002에서 재인용). 또 다른 예로서 미국의 1935년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미국인들간에 ‘대공황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하게 형성되어 제도가 만들어졌(신광영·조돈문·이성균, 2000). 윌렌스키(Wilensky, 1975: 신광영·조돈문·이성균, 2000에서 재인용)도 ‘국민들이 국가가 국민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식에 기반하여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복지의식은 한 국가의 복지제도 형성에 근간이 되는 것이다.

복지의식은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고 있다. 유범상·이현숙(2008)은 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 연대의식 그리고 복지수혜의 성격 등으로 복지의식을 측정하였다. 한편, 주은선·백정미(2007)은 평등에 대한 태도, 공공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 그리고 공공복지 재원 부담의 의사 등으로 구분하여 복지의식을 파악하였다. Jakobsen(2011)은 복지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World Value Survey에서 제시된 4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소득불평등, 정부의 책임성, 경쟁에 대한 인식, 일반적인 복지태도가 포함된다. 즉 복지의식 혹은 복지태도에 대한 합의된 항목이 있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불평등, 국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학자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목적에 따라서 척도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복지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선행연구들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규명하였다. 주로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복지the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규명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성, 연령, 계층 등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사용되었다.

성별 복지인식 차이를 살펴본 류만희·최영(2009)에 의하면, 성별은 외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친복지적임을 발견하였다. 외국의 경우, 복지를 통한 일자리가 주로 여성 일자리이고, 복지서비스 혜택 대상도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조돈문(2001)은 세금 인상과 관련된 여성의 지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여성은 가계경제의 담당자로서의 복지에 필요한 세금 징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다수의 논문은 복지인식과 사회계층 및 직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김영모(1986)는 국가의 복지역할에 대한 직업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관리 및 사무직 계층과 고용주 그룹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영업민은 시장기능과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함을 밝혔다. 그후 1991년 논문에서는 국가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무직 노동자에게 두드러진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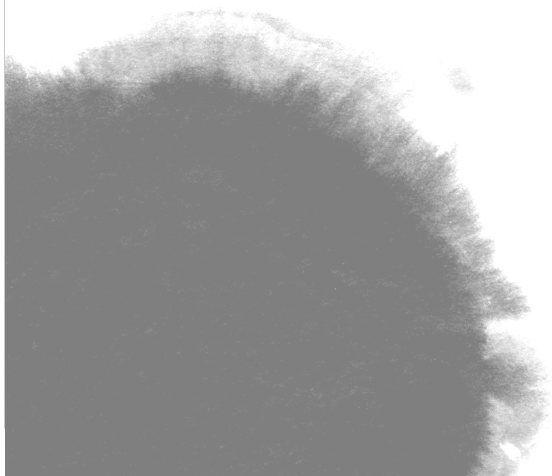
(김영모, 1991).

반면 많은 연구들(김영란, 1995; 안치민, 1995; 조돈문, 2001; 이성균, 2002)은 한국은 서구와 다르게 계급적 지위가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은선·백정미(2008)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간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과,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의 빈민화로 인한 계층적 동질성의 약화를 지적하였다.

한편 류만희·최영(2009)은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가 복지정책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우선, 복지의식이 높을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층요인에서 볼 때,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복지정책 지지도 높았다.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이 복지정책 지지도가 높았다. 자기이해관계가 정책적 지지도를 제고한다. 즉, 장애인은 장애인 정책을 지지하고, 아동이 있는 가정은 아동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단,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음을 발견하였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책 지지도가 높았다.

계급의 결속력 약화와 관련하여 안상훈(2000)은 사회복지정책은 ‘기존의 계급구분의 경계에 종속되지 않는 경향을 띄는 새로운 이해집단들을 창출하였으며(대표적으로 연금수급노인, 장애인, 여성, 공공부문 종사자 등) 이와 같은 집단들은 경제적 계급과는 일정부분 무관하게 공통의 이해관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03

공생발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제3장 공생발전에 관한 국민의식실태

제1 절 조사개요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공생발전에 관한 복지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주간 “공생발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500명을 조사하였다. 모집단은 통계청의 ‘2011년 인구’추계를 활용하였으며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층화추출법을 적용하였다. 본 조사 방법은 2004년 조사와 동일한 방법을 실시되었다. 조사방식은 전문조사원들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2004년도 조사방법과 동일하다.

2. 조사항목

본 조사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태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태도, 정부의 지출에 대한 태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평등수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 적정소득 수준 등으로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세부내용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3-1〉 조사항목 및 내용

구분	조사항목 및 내용	
정부의 역할,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담당분야	최저임금제, 물가통제, 정년보장, 정부지출 삭감,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전개,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완화, 산업체의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지원,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사양산업 지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정부의 책임 분야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의 생계보장, 실업자 생활보장, 모든 사람에게 일정수준의 소득보장, 저소득층 대학생 재정지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 제공, 양질의 교육제공, 빈부격차 해소, 성장이 필요한 산업 지원	
분야별 정부지출증감에 대한 견해	환경, 보건·의료, 경찰, 교육, 국방, 문화·예술, 국민연금, 고용보험, 저소득 생계지원	
부의재분배에 대한 견해	세금부담의 적정성	가구 소득세 부담, 기업 조세부담
	복지지출	복지지출과 조세부담, 조세부담과 복지혜택 수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인플레이션 안정 vs 실업 감소
	복지혜택 수준	의료서비스, 국민연금
	가정배경에 따른 성공기회, 일을 통한 성취기회, 빈곤의 원인, 기회평등 정도, 공적부조	
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기간, 근로 빈곤층에 대한 적합한 지원,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도	
정치성향, 가구경제	정치적 성향	정당(좌/우), 정치이념(진보/보수)
	가구경제	주관적 사회적 계층, 월평균 소득, 생활유지 수준에 따른 월 평균 소득, 월평균 최저생계비,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액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	집단과의 조화, 가족과의 소통 등 24개 항목	
응답자 특성	지역,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가족관계, 종교, 주거형태, 경제활동여부, 직업, 종사산업, 종사상 지위	

3. 응답자 특성

본 조사(2011년)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 48.9%, 여성 51.1%이며 20대 17.9%, 30대 21.1%, 40대 22.3%, 50대 17.8%, 60대 이상은 20.9%로 성별과 연령의 경우 모집단의 분포를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8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4년 응답자에 비하여 학력수준이 높아졌다. 직업상 지위는 상용직이거나 고용주인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 24.0%, 자영업자 22.0%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301~400만원이 30.8%이며 201~300만원이 29.8%로 200~4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50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7.1%나 차지하였다. 2004년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상승하였다.

〈표 3-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2004년		2011년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506)	100.0	(1500)	100.0
성별	남성	(742)	49.3	(734)	48.9
	여성	(764)	50.7	(766)	51.1
연령	20대	(324)	21.5	(269)	17.9
	30대	(359)	23.8	(317)	21.1
	40대	(338)	22.4	(334)	22.3
	50대	(203)	13.5	(267)	17.8
	60대 이상	(281)	18.7	(313)	20.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41)	16.0	(171)	11.4
	고등학교 졸업	(597)	39.7	(729)	48.6
	전문대 졸업	(187)	12.4	(188)	12.5
	대학교 졸업 이상	(481)	31.9	(412)	27.5
결혼 여부	미혼	(350)	23.2	(300)	20.0
	유배우	(1087)	72.2	(1136)	75.7
	사별+이혼+별거	(69)	4.6	(64)	4.3
지위	상용직+고용주	(608)	40.4	(547)	36.5
	임시직+일용직	(97)	6.4	(124)	8.3
	자영업자	(314)	20.9	(330)	22.0
	전업주부	(280)	18.6	(367)	24.5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7)	13.7	(132)	8.8
월평균 소득	100 만원 이하	(127)	8.5	(60)	4.0
	101-200 만원 이하	(454)	30.2	(213)	14.2
	201-300 만원 이하	(540)	35.9	(447)	29.8
	301-400 만원 이하	(250)	16.6	(462)	30.8
	401-500 만원 이하	(90)	6.0	(205)	13.7
	501 만원 이상	(44)	2.9	(107)	7.1
	거절	-	-	(6)	0.4
지역	대도시	(738)	49.0	(706)	47.1
	중·소도시	(618)	41.0	(550)	36.7
	군지역	(150)	9.9	(244)	16.3

제2절 경제 관련 정부의 역할

1.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가. 2011년 전반적 의견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중립의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25.4%~38.4%의 수준을 보였으며 찬성의 입장도 적게는 40%에서 높게는 65%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는 두드러진 정책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매우 찬성 보다는 찬성의 비율이 매우 반대보다는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 극단적 지지나 반대를 보이는 압도적인 정책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립입장을 보인 경우도 25.4%~38.4%로 나타나 지지 혹은 반대의 강도는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경제개입 정책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지지된 분야는 물가통제이다. 물가 통제에 대해서 반대의 비율은 10%미만이며 찬성은 48.5%, 매우 찬성하는 응답자도 17.1%로 가장 높아 지지의 강도도 가장 강하였다. 이외에도 비교적 높은 지지도를 보인 정책으로는 근로자의 정년보장,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공사업전개,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체 지원, 최저임금제 등 임금규제,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지지(매우찬성+찬성)하는 응답자가 모두 50%를 넘게 나타났다.

정년보장에 대한 지지는 매우 찬성하는 응답자가 16.3%, 찬성하는 응답자는 45.8%였으며 공공사업전개는 매우 찬성 12.7%, 찬성이 50.0%, 신상품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산업체 지원은 매우 찬성 12.9%, 찬성 45.5%, 임금규제는 매우찬성 10.7%, 찬성 46.0%로 나타나 높은 지지를 보였다. 정부지출 삭감과 관련해서는 물가통제, 정년보장 다음으로 매우 찬성하는 응답자가 14.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고용보호를 위해 사양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주당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매우찬성+찬성)하는 응답은 절반 이하를 차지하였다. 특히 고용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지지하는 비율이 41.1%로 가장 낮은 반면 비율은 20.%로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태도 2004년과 2011년 비교

2004년에 비하여 2011년에는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임금규제와 물가통제는 정부의 역할을 찬성하는 입장이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정년보장, 정부지출삭감, 공공사업 전개, 기업규제완화, 신상품신기술개발 지원, 사양산업 지원, 근무일수 단축 분야는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찬성하는 입장은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물가통제를 제외하고는 2004년에 비하여 중립을 지지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4년에 비하여 가장 큰 지지의 변화를 보인 것은 신상품·신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가 산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반대하는 비율이 4.9%에서 2011년 8.9%로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역할을 매우 찬성한다는 강한 지지 비율이 23.9%에서 12.9%로 약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매우 찬성한다는 강한 지지의 입장이 2004년에 비하여 눈에 띄게 감소한 분야로는 신상품·신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체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22.2%에서 12.7%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3-3〉 경제 관련 정부의 역할

		2004년		2011년		전체		χ^2
		N	%	N	%	N	%	
임금규제	매우 반대	17	2.0	22	1.5	52	1.8	22.409***
	반대	220	14.9	163	11.0	383	12.9	
	중립	415	28.3	459	30.9	874	29.6	
	찬성	602	41.0	684	46.0	1,286	43.5	
	매우 찬성	203	13.8	159	10.7	362	12.2	
	전체	1,470	100.0	1,487	100.0	2,957	100.0	
	Mean(SD)	3.50(0.973)		3.53(0.878)		3.52(0.927)		1.290

		2004년		2011년		전체		χ^2
		N	%	N	%	N	%	
물가통제	매우 반대	24	1.6	22	1.5	46	1.6	22.447***
	반대	178	11.9	113	7.6	291	9.8	
	중립	413	27.8	378	25.4	791	26.6	
	찬성	659	44.3	722	48.5	1,381	46.4	
	매우 찬성	214	14.4	254	17.1	468	15.7	
	전체	1,489	100.0	1,489	100.0	2,978	100.0	
	Mean(SD)	3.58(0.932)		3.72(0.885)		3.65(0.912)		18.260***
정년보장	매우 반대	21	1.4	29	1.9	50	1.7	5.181
	반대	131	8.8	152	10.2	283	9.5	
	중립	359	24.1	385	25.8	744	24.9	
	찬성	727	48.8	684	45.8	1,411	47.3	
	매우 찬성	252	16.9	244	16.3	496	16.6	
	전체	1,490	100.0	1,494	100.0	2,984	100.0	
	Mean(SD)	3.71(0.897)		3.64(0.936)		3.68(0.917)		3.873*
정부지출삭감	매우 반대	40	2.7	25	1.7	65	2.2	14.104***
	반대	186	12.6	187	12.5	373	12.6	
	중립	423	28.6	501	33.6	924	31.1	
	찬성	568	38.3	558	37.4	1,126	37.9	
	매우 찬성	264	17.8	220	14.8	484	16.3	
	전체	1,482	100.0	1,491	100.0	2,973	100.0	
	Mean(SD)	3.56(1.008)		3.51(0.947)		3.54(0.978)		1.911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지원	매우 반대	17	1.1	36	2.4	53	1.8	68.749***
	반대	108	7.3	135	9.0	243	8.1	
	중립	273	18.3	387	25.9	660	22.1	
	찬성	764	51.1	749	50.0	1,513	50.6	
	매우 찬성	333	22.2	190	12.7	523	17.5	
	전체	1,495	100.0	1,497	100.0	2,992	100.0	
	Mean(SD)	3.86(0.883)		3.62(0.903)		3.74(0.901)		56.021***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매우 반대	35	2.4	51	3.4	86	2.9	32.272***
	반대	150	10.2	189	12.7	339	11.4	
	중립	453	30.7	501	33.7	954	32.2	
	찬성	607	41.1	607	40.8	1,214	41.0	
	매우 찬성	230	15.6	139	9.3	369	12.5	
	전체	1,475	100.0	1,487	100.0	2,962	100.0	
	Mean(SD)	3.57(0.951)		3.40(0.942)		3.49(0.950)		25.200***
신상품·신기술	매우 반대	8	0.5	16	1.1	24	0.8	111.041***
	반대	61	4.1	116	7.8	177	5.9	
	중립	312	21.0	490	32.8	802	26.9	
	찬성	748	50.4	680	45.5	1,428	48.0	
	매우 찬성	355	23.9	192	12.9	547	18.4	
	전체	1,484	100.0	1,494	100.0	2,978	100.0	
	Mean(SD)	3.93(0.811)		3.61(0.845)		3.77(0.843)		109.749***

		2004년		2011년		전체		χ^2
		N	%	N	%	N	%	
사양산업지 원	매우 반대	43	2.9	35	2.4	78	2.6	17.738***
	반대	185	12.6	193	13.0	378	12.8	
	중립	421	28.6	518	34.8	939	31.7	
	찬성	653	44.4	615	41.3	1,268	42.9	
	매우 찬성	168	11.5	127	8.5	295	10.0	
	전체	1,471	100.0	1,488	100.0	2,959	100.0	
	Mean(SD)	3.49(0.952)		3.41(0.902)		3.45(0.928)		5.785***
근무일수 단축	매우 반대	74	5.0	33	2.2	107	3.6	39.680***
	반대	265	17.8	274	18.3	539	18.1	
	중립	472	31.7	574	38.4	1,046	35.0	
	찬성	535	36.0	530	35.4	1,065	35.7	
	매우 찬성	141	9.5	85	5.7	226	7.6	
	전체	1,487	100.0	1,496	100.0	2,983	100.0	
	Mean(SD)	3.27(1.022)		3.24(0.892)		3.26(0.959)		0.769

***p<.001

2. 분야별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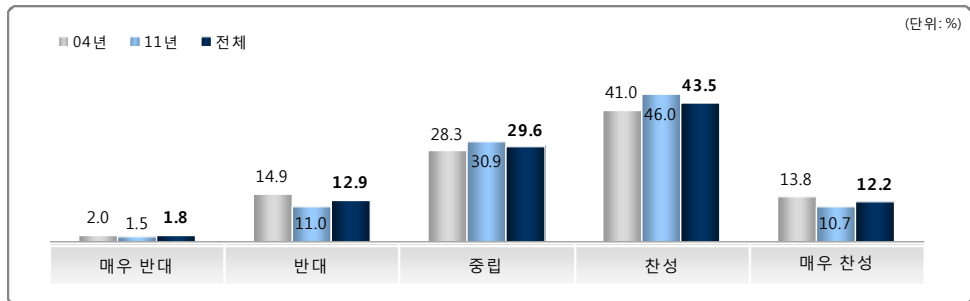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의식은 현재 응답자가 가진 사회경제적 특성 혹은 소속된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응답자 특성 중에서 대표적인 특성으로 연령과 소득을 선정하여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의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임금규제에 대한 개입

최저임금제 등과 같이 정부가 임금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60세 이상인 경우 찬성율이 2004년, 2011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04년과 2011년 모두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11년에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임금규제에 가장 찬성하였으며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반대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2004년에는 101~200만원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가 정부의 임금규제에 대해 반대율은 가장 낮고 찬성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 정부의 역할: 임금규제에 대한 개입



〈표 3-4〉 연령 및 소득별 정부의 임금규제에 대한 태도

구분	반대		중립		찬성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12,402^{**}$)	17.0	12.4	28.3	30.9	54.8	56.7	100.0	1469	1487
연령	$\chi^2 = 6.813$ (2004) / $\chi^2 = 5.945$ (2011)								
전체	17.0	12.4	28.2	30.9	54.8	56.7	100.0	1469	1487
20대	16.8	12.7	26.3	31.1	56.8	56.2	100.0	315	267
30대	18.4	12.4	31.4	29.3	50.3	58.3	100.0	354	314
40대	17.6	13.2	27.2	31.5	55.2	55.3	100.0	335	333
50대	16.4	14.3	30.8	33.5	52.7	52.3	100.0	201	266
60세 이상	15.2	9.8	25.4	29.3	59.5	60.9	100.0	264	307
소득	$\chi^2 = 33.901^{***}$ (2004) / $\chi^2 = 28.604^{***}$ (2011)								
전체	17.0	12.4	28.3	30.9	54.8	56.7	100	1472	1481
100만원 이하	17.6	8.6	30.3	41.4	52.1	50.0	100	119	58
101-200만원 이하	14.2	11.4	21.9	28.1	63.9	60.5	100	443	210
201-300만원 이하	16.8	13.9	28.4	33.0	54.8	53.1	100	529	446
301-400만원 이하	21.0	12.9	37.5	35.4	41.5	51.7	100	248	458
401만원 이상	18.8	10.7	30.1	21.4	51.1	68.0	100	133	30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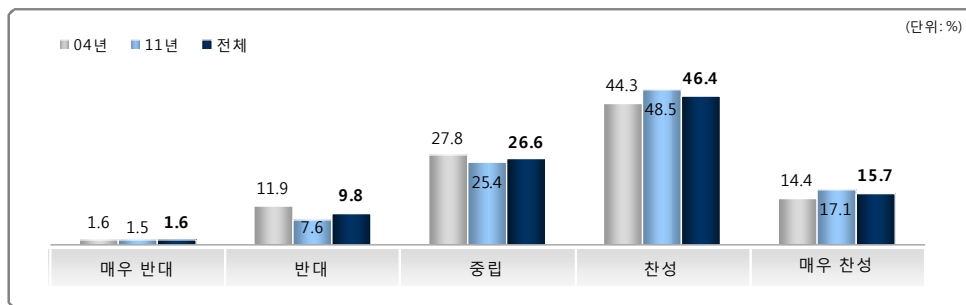
나. 물가 통제

정부가 물가통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살펴보면 2004년 2011년 모두 40대의 찬성율이 가장 높았다. 2004년에는 40~50대의 찬성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았으며 20대~30대의 찬성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세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011년에도 20~30대는 40대 이상에 비하여 찬성율이 낮고 반대율이

높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별로는 2004년은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찬성율은 유사하였다. 2011년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물가통제에 대한 찬성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2] 정부의 역할: 정부 물가 통제(관리)



<표 3-5> 연령 및 소득별 물가통제에 대한 태도

구분	반대		중립		찬성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20.607^{***}$)	13.6	9.1	27.8	25.4	58.7	65.5	100.0	1488	1489
연령	$\chi^2=16.587^*$ (2004) / $\chi^2=9.355$ (2011)								
전체	13.6	9.1	27.7	25.4	58.7	65.5	100.0	1489	1489
20대	14.3	11.6	30.5	23.5	55.1	64.9	100.0	321	268
30대	13.0	10.8	32.8	22.3	54.2	66.9	100.0	354	314
40대	12.8	7.5	20.8	24.6	66.4	67.9	100.0	336	333
50대	14.4	7.5	24.8	29.3	60.9	63.2	100.0	202	266
60세 이상	13.8	8.1	28.6	27.6	57.6	64.3	100.0	276	308
소득	$\chi^2=13.964$ (2004) / $\chi^2=10.406$ (2011)								
전체	13.6	9.1	27.7	25.4	58.7	65.5	100.0	1491	1483
100만원 이하	14.5	10.3	29.0	32.8	56.5	56.9	100.0	124	58
101-200만원 이하	15.2	8.0	23.5	31.1	61.3	60.8	100.0	447	212
201-300만원 이하	11.9	8.8	28.4	26.3	59.7	64.9	100.0	536	445
301-400만원 이하	12.0	10.3	34.9	23.8	53.0	65.9	100.0	249	458
401만원 이상	17.0	8.4	24.4	21.3	58.5	70.3	100.0	135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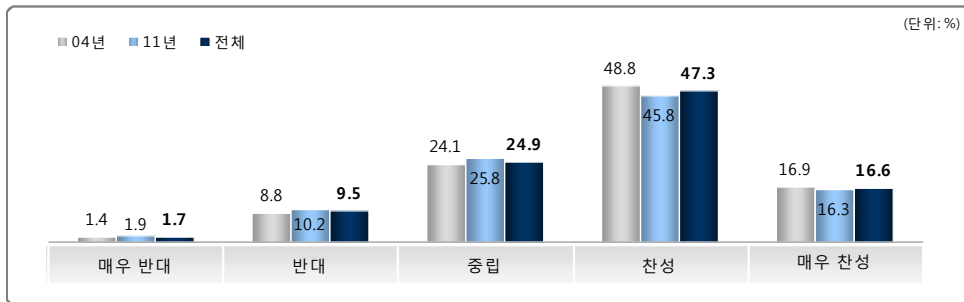
* $p<.05$

다. 근로자 정년보장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세대별로는 2004년에는 연령이 높은 50대 이상에 찬성율이 높았으며 2011년에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찬성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별 반대, 중립, 찬성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소득별로는 2004년에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서 반대율이 낮고 찬성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011년에도 소득이 높을수록 정년보장에 대해 반대하여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반대율이 낮고 찬성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구간에 따른 정년보장 지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림 3-3] 정부의 역할: 근로자 정년 보장



〈표 3-6〉 연령 및 소득별 근로자 정년보장에 대한 태도

구분	반대		중립		찬성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4.703^{**}$)	10.2	12.1	24.1	25.8	65.7	62.1	100.0	1490	1494
연령	$\chi^2 = 10.185$ (2004) / $\chi^2 = 2.984$ (2011)								
전체	10.2	12.1	24.1	25.8	65.7	62.1	100.0	1489	1494
20대	8.1	11.2	28.7	27.5	63.2	61.3	100.0	321	269
30대	10.1	12.1	24.6	25.5	65.3	62.4	100.0	357	314
40대	11.9	12.9	23.4	25.1	64.7	62.0	100.0	337	334
50대	11.9	13.1	17.9	27.7	70.1	59.2	100.0	201	267
60세 이상	9.5	11.3	23.4	23.5	67.0	65.2	100.0	273	310
소득	$\chi^2 = 12.964$ (2004) / $\chi^2 = 19.901^*$ (2011)								
전체	10.2	12.2	24.1	25.7	65.7	62.1	100.0	1491	1488
100 만원 이하	10.2	15.5	18.8	19.0	71.1	65.5	100.0	128	58
101-200 만원 이하	11.8	10.4	21.2	26.4	67.0	63.2	100.0	448	212
201-300 만원 이하	10.5	15.4	27.3	27.7	62.2	56.8	100.0	532	447
301-400 만원 이하	7.6	10.7	27.3	28.5	65.1	60.9	100.0	249	460
401 만원 이상	8.2	10.3	20.1	19.6	71.6	70.1	100.0	134	31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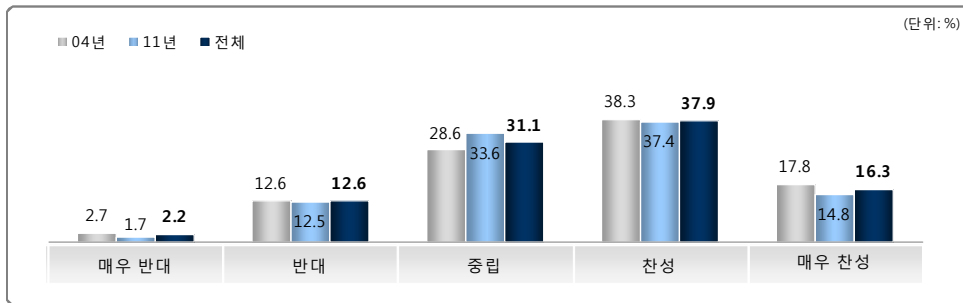
라. 정부의 지출 삭감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중에서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2011년에는 세대와 소득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는 연령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정부지출을 감소하는 것에 대해 가장 반대율이 높고 찬성율이 낮았다. 반면 2011년에는 노년층의 반대율이 가장 낮고 찬성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집단이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가장 높았으며 찬성입장은 적었다. 2011년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지출 축소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정부지출 축소의 반대율은 확연히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낮고 찬성율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 정부의 역할: 정부지출 축소



〈표 3-7〉 연령 및 소득별 정부지출 삭감

구분	반대		중립		찬성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8,310^*$)	15.4	14.2	28.7	33.6	55.9	52.2	100.0	1498	1498
연령	$\chi^2 = 15,915^* \text{ (2004)} / \chi^2 = 15,853^* \text{ (2011)}$								
전체	15.4	14.2	28.7	33.6	55.9	52.2		1496	1498
20대	16.5	11.9	29.9	39.0	53.6	49.1	100.0	321	269
30대	13.4	17.4	29.6	35.3	57.0	47.3	100.0	358	317
40대	13.0	16.2	24.3	30.2	62.7	53.6	100.0	338	334
50대	14.3	13.9	32.5	28.5	53.2	57.7	100.0	203	267
60세 이상	20.7	11.3	28.6	35.0	50.7	53.7	100.0	276	311
소득	$\chi^2 = 10,376 \text{ (2004)} / \chi^2 = 17,001^* \text{ (2011)}$								
전체	15.4	14.2	28.7	33.6	55.8	52.1	100.0	1497	1492
100만원 이하	22.2	15.3	32.5	35.6	45.2	49.2	100.0	126	59
101-200만원 이하	14.6	11.3	27.3	39.9	58.1	48.8	100.0	451	213
201-300만원 이하	13.9	15.0	28.6	34.7	57.4	50.3	100.0	538	447
301-400만원 이하	14.8	17.6	29.6	31.2	55.6	51.2	100.0	250	461
401만원 이상	18.9	9.9	28.8	31.1	52.3	59.0	100.0	132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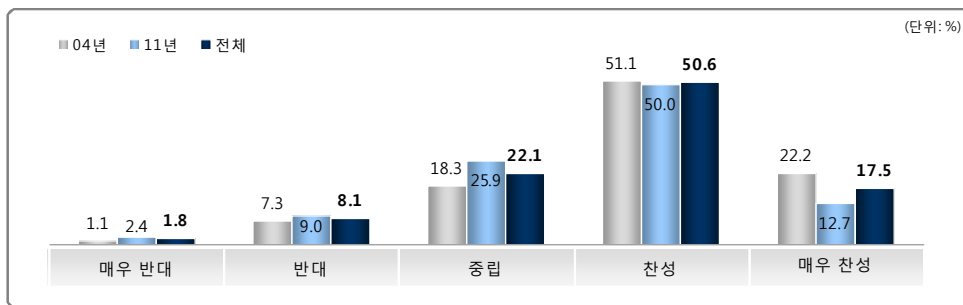
* $p<.05$,

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전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대별로는 입장의 차이에 차이가 없었으며 소득별로는 2011년 차이를 보였다. 2004년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사업에 대한 반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2011년에는 60대 노년층의 찬성율이 낮아지고 반대율이 높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소득별로는 2004년에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집단과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에서 공공사업을 반대율이 낮

고 찬성율이 높았다. 2011년에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집단에서 공공사업 찬성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집단과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의 반대율은 낮고 찬성율이 낮았다. 반면 200~300만원의 소득집단은 반대율이 가장 높고 찬성율은 낮은 편이었다.

[그림 3-5] 정부의 역할: 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사업 전개



〈표 3-8〉 연령 및 소득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전개

구분	반대		중립		찬성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38.770^{***}$)	8.4	11.4	18.2	25.9	73.3	62.7	100.0	1496	1497
연령	$\chi^2 = 10.157$ (2004) / $\chi^2 = 9.894$ (2011)								
전체	8.4	11.4	18.3	25.9	73.4	62.7	100.0	1495	1497
20대	5.9	8.2	17.8	29.4	76.3	62.5	100.0	320	269
30대	6.4	11.7	20.9	22.5	72.7	65.8	100.0	359	316
40대	9.5	13.8	17.6	23.1	72.9	63.2	100.0	336	334
50대	10.8	10.5	15.7	27.3	73.5	62.2	100.0	204	267
60세 이상	10.5	12.2	18.1	28.0	71.4	59.8	100.0	276	311
소득	$\chi^2 = 11.358$ (2004) / $\chi^2 = 16.429^*$ (2011)								
전체	8.4	11.5	18.3	26.0	73.4	62.6	100.0	1494	1491
100 만원 이하	7.0	10.0	16.4	38.3	76.6	51.7	100.0	128	60
101-200 만원 이하	10.5	9.9	16.3	25.8	73.2	64.3	100.0	448	213
201-300 만원 이하	7.6	15.0	18.8	24.4	73.6	60.6	100.0	537	447
301-400 만원 이하	8.1	10.4	23.5	23.4	68.4	66.2	100.0	247	461
401 만원 이상	6.0	9.4	14.9	29.7	79.1	61.0	100.0	134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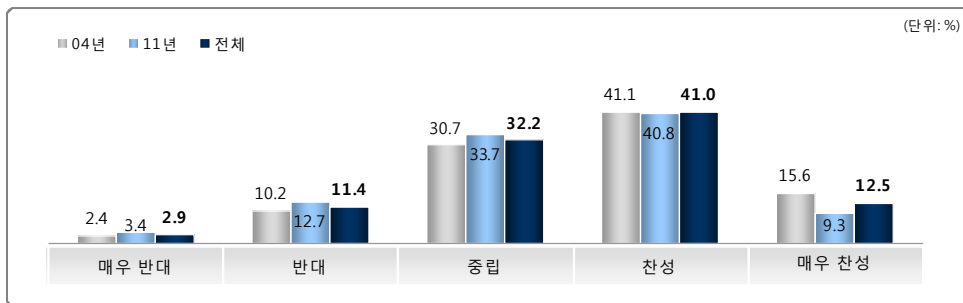
* $p<.05$

바.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해 2004년은 세대별, 소득별 입장의 차이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소득별로만 찬반의 입장을 달리하였다. 2004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율이 가장 높았다. 2011년은 20대의 경우 기업규제 완화를 반대율은 낮고 찬성율은 높게 나타났다.

2004년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집단이 기업규제 완화를 가장 반대하였으며 찬성율은 가장 낮았다. 반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은 반대율도 높았으나 찬성율도 높게 나타났다. 2011년에는 200~300만원의 소득자가 기업규제 완화에 대하여 반대율이 가장 높고 찬성율이 가장 낮아 반대입장을 강하게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 찬성율이 낮았고 300만원 이상에서는 찬성율이 높았다.

[그림 3-6] 정부의 역할: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표 3-9〉 연령 및 소득별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구분	반대		중립		찬성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14.716^{**}$)	12.5	16.1	30.7	33.7	56.7	50.2	100.0	1475	1487
연령	$\chi^2 = 18.326^*$ (2004) / $\chi^2 = 7.584$ (2011)								
전체	12.5	16.1	30.7	33.7	56.8	50.2	100.0	1476	1487
20대	14.5	13.9	34.9	31.6	50.6	54.5	100.0	318	266
30대	10.3	18.3	36.2	34.7	53.6	47.0	100.0	351	317
40대	13.1	16.6	27.2	31.7	59.7	51.7	100.0	335	331
50대	10.6	14.7	27.6	32.7	61.8	52.6	100.0	199	266
60세 이상	13.9	16.6	25.3	37.5	60.8	45.9	100.0	273	307
소득	$\chi^2 = 16.048^*$ (2004) / $\chi^2 = 23.726^{**}$ (2011)								
전체	12.6	16.2	30.6	33.8	56.8	50.0	100.0	1476	1481
100 만원 이하	19.7	13.8	27.9	41.4	52.5	44.8	100.0	122	58
101-200 만원 이하	12.6	13.7	29.4	38.4	58.0	47.9	100.0	445	211
201-300 만원 이하	9.2	20.3	33.7	36.6	57.1	43.1	100.0	534	443
301-400 만원 이하	14.5	15.5	30.2	31.8	55.4	52.7	100.0	242	459
401 만원 이상	16.5	13.5	25.6	28.1	57.9	58.4	100.0	133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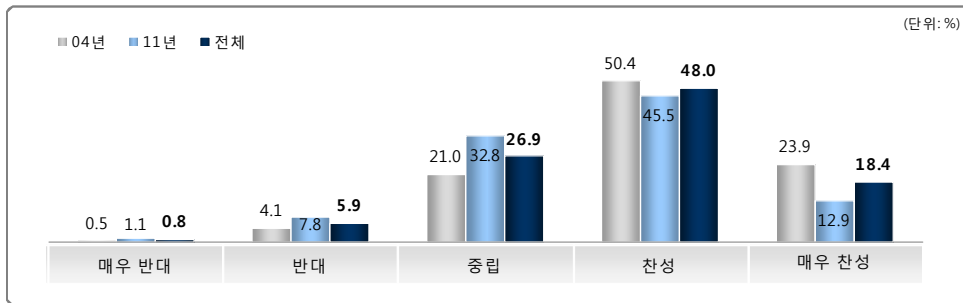
* $p<.05$, ** $p<.01$

사.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위한 정부의 산업체 지원

정부가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산업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득별로는 2004년에만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찬성율이 가장 낮았으며, 2011년에는 20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찬성율이 낮았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2004년에는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찬성율이 낮고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찬성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2011년에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찬성율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유사한 찬성율을 보였다.

[그림 3-7] 정부의 역할: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산업체 지원



〈표 3-10〉 연령 및 소득별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산업체 지원

구분	반대		중립		찬성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86.238^{**}$)	4.6	8.8	21.0	32.8	74.3	58.4	100.0	1484	1494
연령	$\chi^2 = 11.554$ (2004) / $\chi^2 = 4.999$ (2011)								
전체	4.7	8.8	21.0	32.8	74.4	58.4	100.0	1483	1494
20대	5.3	9.7	20.2	28.3	74.5	62.1	100.0	321	269
30대	4.2	7.6	20.7	32.6	75.1	59.8	100.0	357	316
40대	6.0	8.7	17.9	34.8	76.2	56.5	100.0	336	333
50대	3.5	9.0	19.1	35.6	77.4	55.4	100.0	199	267
60세 이상	3.7	9.4	27.4	32.4	68.9	58.3	100.0	270	309
소득	$\chi^2 = 15.829^*$ (2004) / $\chi^2 = 14.822$ (2011)								
전체	4.6	8.9	21.0	32.9	74.3	58.3	100.0	1484	1488
100만원 이하	4.0	8.5	27.4	33.9	68.5	57.6	100.0	124	59
101-200만원 이하	2.5	7.5	21.0	38.7	76.5	53.8	100.0	447	212
201-300만원 이하	5.6	11.4	22.1	32.3	72.3	56.3	100.0	534	446
301-400만원 이하	5.7	9.1	19.5	33.4	74.8	57.5	100.0	246	461
401만원 이상	6.8	5.8	13.5	28.7	79.7	65.5	100.0	133	310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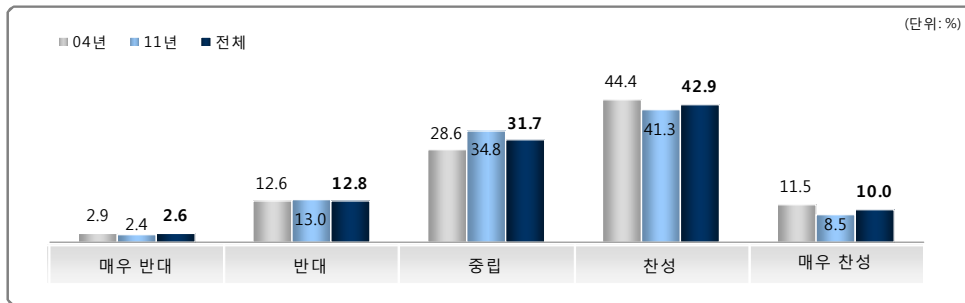
아. 고용보호를 위해 정부의 사양산업 지원

고용보호를 위해 정부가 사양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20~30대의 사양산업 지원에 대한 반대율이 낮았으며 찬성율도 비교적 높았다. 2011년에는 50~60세 이상의 노년층의 반대율을 낮았다.

소득별로는 2004년에는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과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반대율이 가장 높았으며 찬성율도 높게 나타났다. 2011년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양산업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졌으며 반면 찬성하는 입장도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림 3-8] 정부의 역할: 고용보호 위해 정부의 사양산업 지원



〈표 3-11〉 연령 및 소득별 고용보호를 위해 정부의 사양산업 지원

구분	반대		중립		찬성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14.015^{**}$)	15.5	15.3	28.6	34.8	55.9	49.9	100.0	1471	1488
연령	$\chi^2 = 15.226$ (2004) / $\chi^2 = 8.017$ (2011)								
전체	15.4	15.3	28.7	34.8	55.9	49.9	100.0	1469	1488
20대	10.9	15.4	33.0	33.3	56.1	51.3	100.0	312	267
30대	13.1	16.4	27.7	32.2	59.1	51.4	100.0	350	317
40대	18.3	18.6	25.2	34.5	56.5	46.8	100.0	333	333
50대	18.5	13.7	26.5	37.4	55.0	48.9	100.0	200	262
60세 이상	17.5	12.0	31.0	36.9	51.5	51.1	100.0	274	309
소득	$\chi^2 = 4.790$ (2004) / $\chi^2 = 16.107^*$ (2011)								
전체	15.5	15.2	28.6	34.9	55.9	49.9	100.0	1472	1482
100 만원 이하	18.2	10.3	24.0	44.8	57.9	44.8	100.0	121	58
101-200 만원 이하	13.8	11.0	29.8	39.0	56.4	50.0	100.0	443	210
201-300 만원 이하	15.2	15.1	30.1	37.8	54.7	47.2	100.0	532	445
301-400 만원 이하	16.7	15.9	27.8	33.8	55.5	50.2	100.0	245	458
401 만원 이상	17.6	18.3	24.4	27.7	58.0	54.0	100.0	131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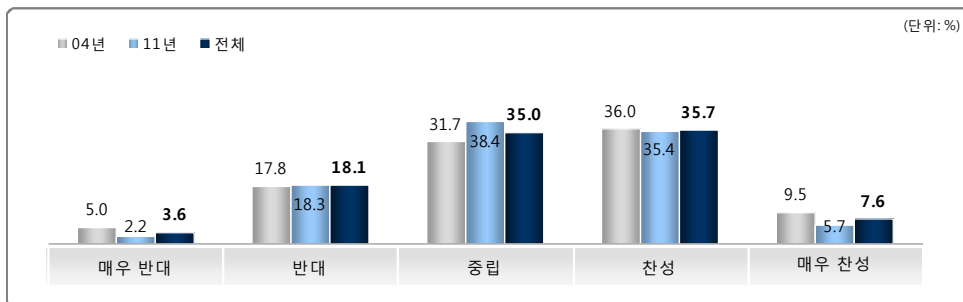
* $p < .05$

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당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2004년에는 세대별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별로는 2004년 2011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04년에 주당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은 상반된 의견을 보여 청년층은 근무시간단축에 반대율은 가장 낮고 찬성율은 높았으며 노년층은 반대율이 가장 높고 찬성율은 가장 낮았다. 2011년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20대 청년층의 근무시간단축에 찬성하는 입장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 수록 찬성율은 낮아졌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4년 2011년 모두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찬성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3-9] 정부의 역할 : 일자리 창출 위해 주당근무일수 축소



〈표 3-12〉 연령 및 소득별 일자리 창출을 근로시간 단축

구분	반대		중립		찬성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14.491^{**}$)	22.8	20.5	31.7	38.4	45.4	41.1	100.0	1488	1496
연령	$\chi^2 = 35.515^{***}$ (2004) / $\chi^2 = 9.479$ (2011)								
전체	22.8	20.5	31.7	38.4	45.4	41.1	100.0	1490	1496
20대	15.2	16.7	34.2	36.1	50.6	47.2	100.0	322	269
30대	20.6	22.1	37.0	36.9	42.4	41.0	100.0	354	317
40대	25.3	20.4	26.2	40.1	48.5	39.5	100.0	336	334
50대	22.2	24.1	29.1	36.1	48.8	39.8	100.0	203	266
60세 이상	32.0	19.4	30.9	41.9	37.1	38.7	100.0	275	310
소득	$\chi^2 = 6.089$ (2004) / $\chi^2 = 10.513$ (2011)								
전체	22.8	20.4	31.7	38.5	45.5	41.1	100.0	1488	1490
100 만원 이하	22.6	27.1	36.3	39.0	41.1	33.9	100.0	124	59
101-200 만원 이하	23.7	16.4	28.6	39.9	47.8	43.7	100.0	448	213
201-300 만원 이하	21.2	20.4	31.8	42.1	47.0	37.6	100.0	532	447
301-400 만원 이하	24.4	19.8	33.2	37.6	42.4	42.6	100.0	250	460
401 만원 이상	23.1	22.8	35.1	33.8	41.8	43.4	100.0	134	311

***p<.001

3.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태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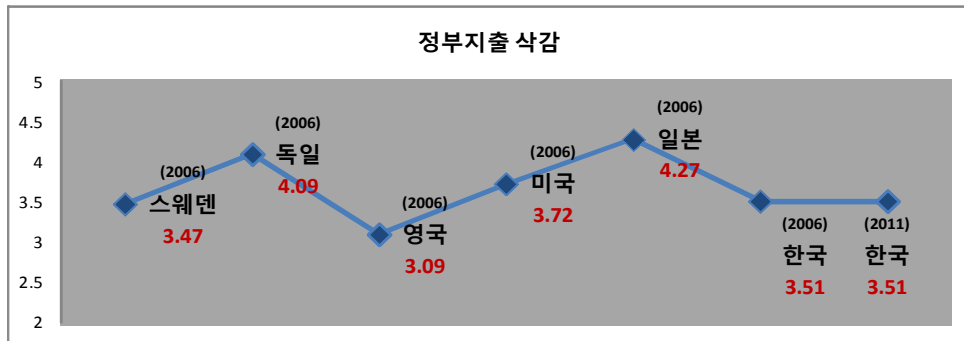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태도에 대해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모두 반대보다는 중립 혹은 찬성에 대한 지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찬성 지지도는 모두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전개 지원, 신상품·신기술 상품개발을 위한 산업체 지원, 고용보호를 위해 사양산업 지원의 경우는 2006년의 ISSP의 응답결과와 대조적으로 나타나 2006년에는 찬성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가장 높았던 반면 2011년에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13〉 경제관련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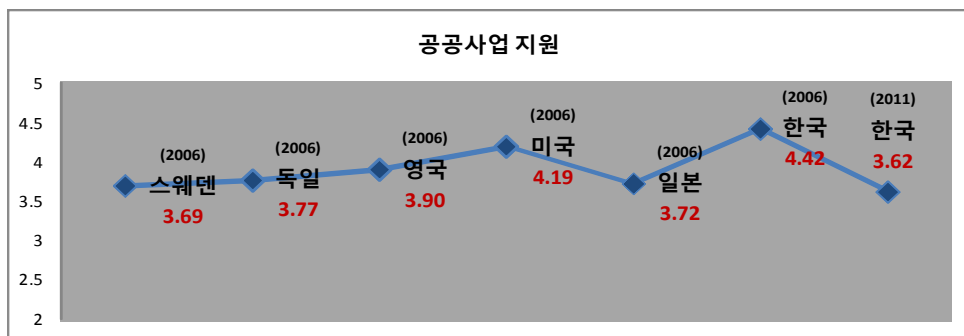
		ISSP 2006						2011	χ^2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한국	
정부지출 삭감	매우 반대	6.4	2.9	8.2	4.3	3.0	3.5	1.7	1342.284 ***
	반대	16.1	6.6	24.4	9.9	3.7	14.6	12.5	
	중립	21.8	14.6	29.4	22.5	13.6	26.7	33.6	
	찬성	35.4	30.7	26.3	35.7	22.5	37.7	37.4	
	매우 찬성	20.4	45.2	11.8	27.6	57.3	17.6	14.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089	1556	858	1483	1091	1544	149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지원	매우 반대	3.4	5.0	1.1	1.8	3.7	0.3	2.4	1176.865 ***
	반대	9.2	10.8	5.9	4.7	8.1	1.7	9.0	
	중립	19.5	16.3	17.8	8.2	27.3	5.2	25.9	
	찬성	51.0	37.4	51.6	43.6	34.1	41.1	50.0	
	매우 찬성	17.0	30.4	23.5	41.7	26.9	51.7	12.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03	1549	881	1510	1089	1564	1497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매우 반대	3.3	2.3	2.8	4.7	8.7	1.8	3.4	900.560 ***
	반대	16.2	7.6	8.8	15.9	15.7	8.9	12.7	
	중립	33.2	16.7	41.5	27.4	36.0	20.5	33.7	
	찬성	32.1	35.6	33.9	35.0	25.9	48.8	40.8	
	매우 찬성	15.2	37.9	13.0	17.0	13.7	20.1	9.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023	1527	820	1480	1002	1545	1487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산업체 지원	매우 반대	1.0	2.1	0.3	1.3	1.3	0.1	1.1	1189.415 ***
	반대	8.8	4.3	1.5	4.0	2.2	1.4	7.8	
	중립	20.6	12.9	12.8	8.6	15.9	7.6	32.8	
	찬성	51.6	35.2	57.2	49.6	40.2	40.4	45.5	
	매우 찬성	17.9	45.6	28.2	36.6	40.4	50.5	12.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20	1558	870	1504	1119	1558	1494	
고용보호를 위해 사양산업 지원	매우 반대	5.1	8.1	2.7	3.0	5.1	4.4	2.4	719.737 ***
	반대	19.1	14.1	13.7	13.5	9.2	10.7	13.0	
	중립	24.9	18.9	21.8	15.5	28.7	14.4	34.8	
	찬성	38.4	28.4	46.8	43.4	32.5	40.1	41.3	
	매우 찬성	12.6	30.6	14.9	24.6	24.5	30.4	8.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22	1547	873	1500	1086	1560	1488	
일자리 만들기 위해 주당근무일 수 단축	매우 반대	7.7	18.2	7.8	12.3	10.0	3.6	2.2	1006.244 ***
	반대	17.6	17.7	26.8	32.8	15.5	15.0	18.3	
	중립	22.7	21.3	32.7	19.0	35.4	22.4	38.4	
	찬성	29.7	24.3	24.3	25.6	21.1	39.1	35.4	
	매우 찬성	22.3	18.5	8.5	10.3	17.9	19.9	5.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29	1546	863	1500	1070	1562	1496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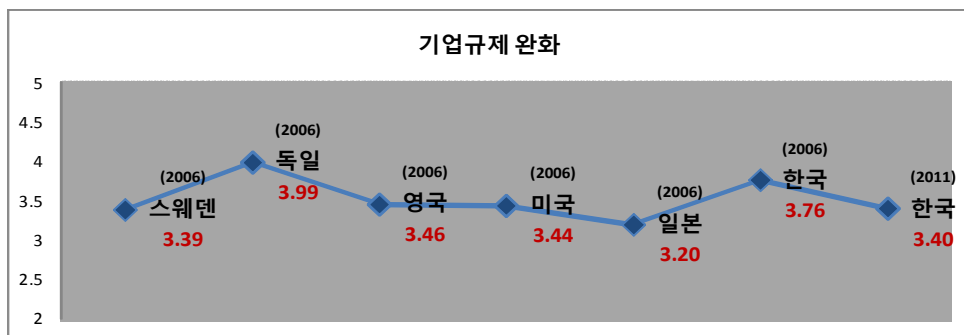
[그림 3-10]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 정부지출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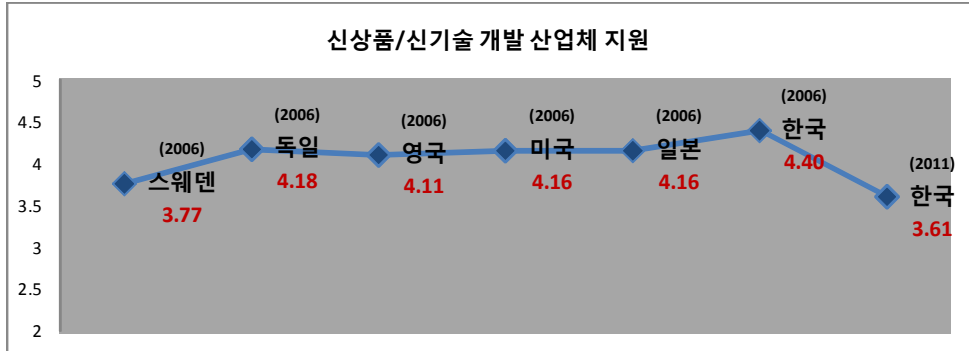
[그림 3-11]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 공공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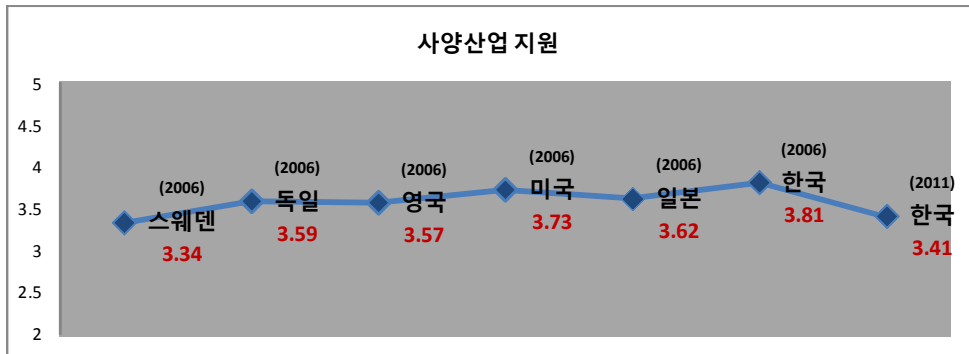
[그림 3-12]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 기업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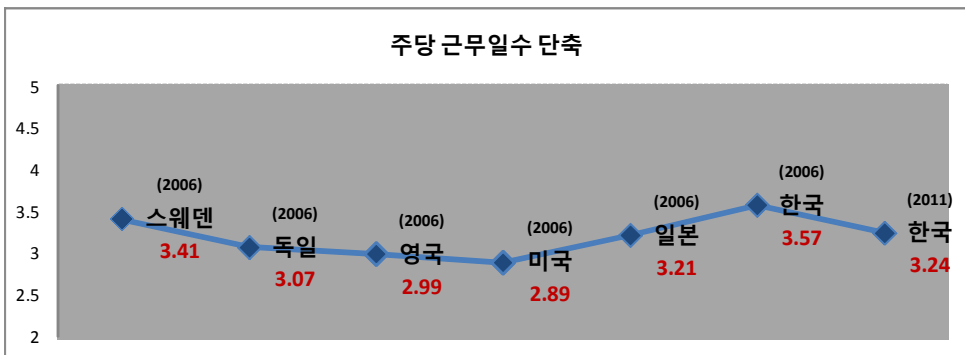
[그림 3-13]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 신상품·신기술 개발 산업체 지원



[그림 3-14]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 사양산업 지원



[그림 3-15] 정부의 역할 국제비교 : 주당 근무일수 단축



〈표 3-14〉 경제 관련 정부의 역할 평균 국제비교 2(평균점수 비교)

		ISSP 2006						2011	전체	F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한국		
정부지출 삭감	Mean	3.47	4.09	3.09	3.72	4.27	3.51	3.51	3.69	1075.397***
	(SD)	1.17	1.06	1.14	1.10	1.03	1.05	0.95	1.12	
	scheffé	b	d	a	c	e	b	b		
공공사업 지원	Mean	3.69	3.77	3.90	4.19	3.72	4.42	3.62	3.92	771.805***
	(SD)	0.97	1.14	0.86	0.90	1.06	0.70	0.90	0.98	
	scheffé	ab	bc	c	d	ab	e	a		
기업규제 완화	Mean	3.39	3.99	3.46	3.44	3.20	3.76	3.40	3.55	573.207***
	(SD)	1.03	1.03	0.92	1.09	1.13	0.93	0.94	1.09	
	scheffé	b	d	b	b	a	c	b		
신상품· 신기술 개발 산업체 지원	Mean	3.77	4.18	4.11	4.16	4.16	4.40	3.61	4.06	623.806***
	(SD)	0.88	0.95	0.70	0.84	0.86	0.70	0.85	0.87	
	scheffé	b	c	c	c	c	d	a		
시양산업 지원	Mean	3.34	3.59	3.57	3.73	3.62	3.81	3.41	3.59	226.392***
	(SD)	1.08	1.27	0.99	1.07	1.10	1.11	0.90	1.10	
	scheffé	a	bc	b	cd	bc	d	a		
주당근무일수 단축	Mean	3.41	3.07	2.99	2.89	3.21	3.57	3.24	3.20	475.358***
	(SD)	1.23	1.37	1.08	1.21	1.20	1.08	0.89	1.18	
	scheffé	e	bc	ab	a	cd	e	d		

주: 매우반대(1점)~매우찬성(5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의 역할 찬성

***p<.001

제3절 경제 및 사회 인프라 운영주체 (민간 vs 정부)

1. 민간부분과 정부부분의 운영주체

전력, 병원, 금융기관, 대중교통 네 분야의 운영의 주체가 정부 또는 민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원을 제외하고 전력, 금융기관, 대중교통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해야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모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병원의 경우도 민간 51%, 정부 49%로 민간과 정부 모두 대동소이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2004년과 비교해서는 2011년에는 네 가지 분야 모두에서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2004년에 비해 민간과 정부의 운영비율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력산업으로 2004년 68.1%에서 2011년 80.3%로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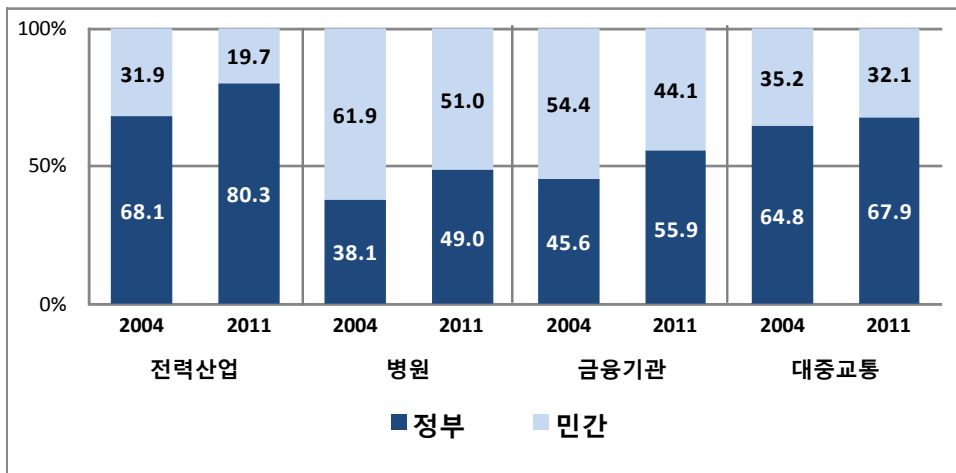
12% 이상 상승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는 2004년에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나 2011년에는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병원의 경우 2004년에는 운영의 주체를 민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으나, 2011년 민간과 정부 모두 지지하는 응답율이 유사해졌다.

〈표 3-15〉 민간부분 및 정부부분의 운영주체

구분		2004년		2011년		전체		χ^2
		N	%	N	%	N	%	
전력 산업	주로 민간 운영	455	31.9	291	19.7	746	25.7	$\chi^2=56.412$ ***
	주로 정부 운영	973	68.1	1,187	80.3	2,160	74.3	
	전체	1,427	100.0	1,478	100.0	2,905	100.0	
병원	주로 민간 운영	902	61.9	749	51.0	1,651	56.4	$\chi^2=35.450$ ***
	주로 정부 운영	556	38.1	721	49.0	1,277	43.6	
	전체	1,458	100.0	1,470	100.0	2,928	100.0	
금융 기관	주로 민간 운영	789	54.4	649	44.1	1,438	49.2	$\chi^2=30.936$ ***
	주로 정부 운영	662	45.6	823	55.9	1,485	50.8	
	전체	1,451	100.0	1,472	100.0	2,923	100.0	
대중 교통	주로 민간 운영	517	35.2	475	32.1	992	33.6	$\chi^2=3.267^*$
	주로 정부 운영	951	64.8	1,006	67.9	1,957	66.4	
	전체	1,468	100.0	1,481	100.0	2,949	100.0	

* $p<.05$, *** $p<.001$

[그림 3-16] 경제 및 사회 인프라의 운영주체



2. 연령 및 소득별 운영주체

가. 세대별 의식 비교

전력산업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1년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이 확연하게 높아졌는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운영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이 전력산업을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대별 운영주체에 대한 지지차이는 2004년에는 보이지 않았다.

병원은 2004년 연령별로 운영의 주체에 대한 지지를 차이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세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4년 60세 이상 노인세대에서는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지지율이 타세대에 비해서 높았으나, 2011년에는 모든 세대가 전반적으로 정부의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져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은행은 2004년 20대와 60대 이상은 정부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세대보다 높게 나타나 세대별로 운영의 주체에 대한 지지를 차이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4년 민간운영의 지지율이 높았던 30~50대도 2011년에는 정부의 운영지지율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정부의 운영지지율이 민간운영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은 2004년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운영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 50대와 60대의 정부운영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1년에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운영 지지율이 비슷하여져 세대별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16〉 연령별 민간 및 정부의 운영주체

구분	민간		정부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력산업	$\chi^2 = 4,018$ (2004) / $\chi^2 = 13,926^{**}$ (2011)						
전체	31.9	19.7	68.1	80.3	100.0	1427	1478
20대	27.6	21.0	72.4	79.0	100.0	301	267
30대	34.8	24.1	65.2	75.9	100.0	339	311
40대	32.3	22.5	67.7	77.5	100.0	331	329
50대	32.8	16.2	67.2	83.8	100.0	195	265
60세 이상	31.8	14.1	68.2	85.9	100.0	261	306
병원	$\chi^2 = 20,008^{***}$ (2004) / $\chi^2 = 2,056$ (2011)						
전체	61.8	48.4	38.2	51.6	100.0	1459	1470
20대	58.9	51.0	41.1	49.0	100.0	314	265
30대	64.9	49.4	35.1	50.6	100.0	348	310
40대	69.1	52.6	30.9	47.4	100.0	327	329
50대	61.7	53.2	38.3	46.8	100.0	201	260
60세 이상	52.4	50.8	47.6	49.2	100.0	269	306
금융기관	$\chi^2 = 11,066^*$ (2004) / $\chi^2 = 4,778$ (2011)						
전체	54.4	44.1	45.6	55.9	100.0	1451	1472
20대	49.7	40.8	50.3	59.2	100.0	304	265
30대	57.8	45.7	42.2	54.3	100.0	344	315
40대	59.6	43.8	40.4	56.2	100.0	329	329
50대	54.3	41.0	45.7	59.0	100.0	199	261
60세 이상	49.1	48.3	50.9	51.7	100.0	275	302
대중교통	$\chi^2 = 12,090^*$ (2004) / $\chi^2 = 2,121$ (2011)						
전체	35.2	32.1	64.8	67.9	100.0	1467	1481
20대	39.0	32.3	61.0	67.7	100.0	315	269
30대	39.9	33.2	60.1	66.8	100.0	346	313
40대	34.6	33.3	65.4	66.7	100.0	332	330
50대	29.5	28.4	70.5	71.6	100.0	200	261
60세 이상	29.6	32.5	70.4	67.5	100.0	274	308

* $p < .05$, ** $p < .01$, *** $p < .001$

나. 소득수준별 의식 비교

전력산업은 소득수준별로 운영주체에 대한 지지에 차이를 보여, 200만원 이하 소득인 응답자인 경우 정부의 운영을 가장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0만원 이상의 경우도 정부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비교적 높았다. 가장 낮은 소득구간은 30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구간별 차이는 2011년에만 보였으며, 2004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득구간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병원은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의 운영을 지지하고 높을수록 민간의 운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에 따른 운영주체에 대한 지지의 차이는 2004년과 2011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2011년에는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것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2004년도 소득이 낮을 수록 정부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소득수준에 따른 지지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대중교통은 2011년의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00만원 이하인 소득구간에서 정부의 운영을 지지하는 응답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응답자들도 정부의 운영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2011년의 소득구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004년에도 100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는 정부의 운영을 지지하는 비율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하여 확연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1~200만원 소득을 가진 응답자와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가 정부의 운영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2004년의 소득구간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004년과 2011년 모두 200만원에서 400만원이하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들은 정부의 운영을 지지하는 비율이 다른 소득구간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표 3-17〉 소득별 민간 및 정부의 운영주체

구분	민간		정부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력산업	$\chi^2 = 2,523$ (2004) / $\chi^2 = 15,014^{**}$ (2011)						
전체	31.8	19.7	68.2	80.3	100.0	1427	1473
100만원 이하	25.6	15.5	74.4	84.5	100.0	117	58
101-200 만원	31.5	12.0	68.5	88.0	100.0	426	208
201-300 만원	33.1	20.8	66.9	79.2	100.0	514	442
301-400 만원	32.4	24.0	67.6	76.0	100.0	241	458
400만원 이상	32.6	17.6	67.4	82.4	100.0	129	307
병원	$\chi^2 = 22,045^{***}$ (2004) / $\chi^2 = 11,998^*$ (2011)						
전체	61.9	51.0	38.1	49.0	100.0	1458	1465
100만원 이하	48.3	36.8	51.7	63.2	100.0	118	57
101-200 만원	57.7	44.7	42.3	55.3	100.0	437	208
201-300 만원	62.9	49.7	37.1	50.3	100.0	523	441
301-400 만원	69.2	54.5	30.8	45.5	100.0	247	453
400만원 이상	69.9	54.6	30.1	45.4	100.0	133	306
금융기관	$\chi^2 = 34,306^{***}$ (2004) / $\chi^2 = 7,840$ (2011)						
전체	54.4	44.2	45.6	55.8	100.0	1451	1467
100만원 이하	37.9	29.3	62.1	70.7	100.0	124	58
101-200 만원	49.4	41.7	50.6	58.3	100.0	431	206
201-300 만원	60.3	47.6	39.7	52.4	100.0	521	437
301-400 만원	52.0	44.5	48.0	55.5	100.0	244	458
400만원 이상	67.2	43.5	32.8	56.5	100.0	131	308
대중교통	$\chi^2 = 21,865^{***}$ (2004) / $\chi^2 = 3,421$ (2011)						
소득	35.2	32.1	64.8	67.9	100.0	1468	1476
100만원 이하	22.6	25.9	77.4	74.1	100.0	124	58
101-200 만원	30.6	32.9	69.4	67.1	100.0	438	210
201-300 만원	39.8	33.4	60.2	66.6	100.0	527	440
301-400 만원	41.1	33.6	58.9	66.4	100.0	248	459
400만원 이상	32.8	28.8	67.2	71.2	100.0	131	309

p<.01, *p<.001

제4절 정부의 책임 분야

1. 정부의 책임

가. 정부의 책임 2011년 의식

사회보장관련 정부의 책임에 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대체로 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의식하고 있었다. 반면 모든 사람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응답이 11.5%, 대체로 정부책임이 아니라는 응답이 41.1%로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의식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8.7%로 다른 분야중에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라는 강한 지지를 보인 분야로는 의료서비스 제공 21.1%, 양질의 교육제공 20.6%, 빈부격차 해소와 노인들의 생계보장 19.4%으로 나타났다. 전혀 정부책임이 아니라고 강한 반대를 보인 분야로는 실업자의 생계보장 11.8%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생계보장 11.5%로 나타났다.

〈표 3-18〉 사회보장 관련 정부의 책임 (2011년)

구분	전혀 정부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책임	전적으로 정부책임	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일자리 제공	3.9	27.9	57.4	10.8	100.0	1492	2.75(0.69)
의료서비스 제공	4.5	27.1	47.3	21.1	100.0	1496	2.85(0.80)
노인들에게 일정수준 생계보장	3.8	23.8	52.9	19.4	100.0	1498	2.88(0.76)
실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생계보장	11.8	30.7	45.1	12.4	100.0	1491	2.58(0.85)
일정수준의 소득보장	11.5	41.1	38.7	8.7	100.0	1493	2.45(0.81)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6.4	23.6	52.5	17.4	100.0	1496	2.81(0.79)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제공	7.3	31.8	47.2	13.7	100.0	1494	2.67(0.80)
양질의 교육제공	3.7	25.9	49.8	20.6	100.0	1498	2.87(0.77)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소득격차 해소	4.7	26.1	49.7	19.4	100.0	1497	2.84(0.79)
성장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지원	1.7	27.1	55.6	15.6	100.0	1490	2.85(0.69)

나. 2004년과 2011년 비교

사회보장 관련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2004년에 비하여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식은 낮아진 결과를 보였으나 저소득 가정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2004년 68.2%에서 69.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비록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식은 2004년에 비하여 낮아졌으나 조사 10개분야 중에서 9개 분야가 여전히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여전히 정부의 책임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2004년에 비하여 낮아져 2011년에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보다는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반대 인식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다.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강한 지지가 높았던 노인의 생계보장은 2004년 35.0%에서 2011년 19.4%로 낮아졌으며 반대로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응답은 2004년 17.5%에서 27.6%로 낮아졌다. 이렇게 2004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강한 지지가 높았던 분야 중에서 2011년 현격히 줄어든 분야로는 노인생계보장, 실업자 생계보장, 양질의 교육제공, 빈곤격차해소, 성장이 필요한 산업 지원이 해당된다.

또한 전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강한 반대의 입장이 2004년에 비하여 현격히 증가한 분야는 실업자의 생계보장이다. 실업자의 생계보장에 대해서 2004년에는 전혀 정부책임이 아니라는 의식이 4.8%였으나 2011년에는 11.8%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19〉 사회보장 관련 정부책임(2004년 2011년 비교)

		2004년		2011년		전체		χ^2
		N	%	N	%	N	%	
일자리 제공	전현 정부책임 아님	36	2.4	58	3.9	94	3.1	29.743***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310	20.8	416	27.9	726	24.3	
	대체로 정부책임	947	63.4	857	57.4	1,804	60.4	
	전적으로 정부책임	202	13.5	161	10.8	363	12.2	
	전체	1,495	100.0	1,492	100.0	2,987	100.0	
	Mean(SD)	2.88(0.651)		2.75(0.693)		2.82(0.675)		27.321***
의료서비스 제공	전현 정부책임 아님	20	1.3	67	4.5	87	2.9	93.774***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234	15.7	406	27.1	640	21.4	
	대체로 정부책임	821	55.1	707	47.3	1,528	51.2	
	전적으로 정부책임	416	27.9	316	21.1	732	24.5	
	전체	1,491	100.0	1,496	100.0	2,987	100.0	
	Mean(SD)	3.10(0.693)		2.85(0.800)		2.97(0.758)		80.146***
노인 생계보장	전현 정부책임 아님	22	1.4	57	3.8	79	2.6	129.531** *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198	13.2	357	23.8	555	18.5	
	대체로 정부책임	756	50.4	793	52.9	1,549	51.6	
	전적으로 정부책임	526	35.0	291	19.4	817	27.2	
	전체	1,501	100.0	1,498	100.0	2,999	100.0	
	Mean(SD)	3.19(0.710)		2.88(0.755)		3.03(0.749)		133.892***
실업자 생계보장	전현 정부책임 아님	73	4.8	176	11.8	249	8.3	106.381***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322	21.5	457	30.7	779	26.1	
	대체로 정부책임	795	53.1	673	45.1	1,468	49.1	
	전적으로 정부책임	307	20.5	185	12.4	492	16.5	
	전체	1,495	100.0	1,491	100.0	2,986	100.0	
	Mean(SD)	2.89(0.777)		2.58(0.853)		2.74(0.830)		108.868***
모든 사람들 일정수준 소득보장	전현 정부책임 아님	156	10.6	172	11.5	328	11.0	28.710***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499	33.7	613	41.1	1,112	37.4	
	대체로 정부책임	625	42.2	578	38.7	1,203	40.5	
	전적으로 정부책임	199	13.5	130	8.7	329	11.1	
	전체	1,479	100.0	1,493	100.0	2,972	100.0	
	Mean(SD)	2.59(0.851)		2.45(0.808)		2.52(0.832)		21.272***
저소득 가정 대학생 재정지원	전현 정부책임 아님	104	7.0	96	6.4	200	6.7	4.109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369	24.8	353	23.6	722	24.2	
	대체로 정부책임	728	48.9	786	52.5	1,514	50.7	
	전적으로 정부책임	287	19.3	261	17.4	548	18.4	
	전체	1,488	100.0	1,496	100.0	2,984	100.0	
	Mean(SD)	2.80(0.826)		2.81(0.795)		2.81(0.810)		0.033
어려운 사람 적정한 주거제공	전현 정부책임 아님	54	3.6	109	7.3	163	5.5	65.663***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340	22.9	475	31.8	815	27.4	
	대체로 정부책임	783	52.7	705	47.2	1,488	49.9	
	전적으로 정부책임	308	20.8	205	13.7	513	17.2	
	전체	1,485	100.0	1,494	100.0	2,979	100.0	
	Mean(SD)	2.91(0.757)		2.67(0.800)		2.79(0.788)		66.256***

		2004년		2011년		전체		χ^2
		N	%	N	%	N	%	
양질의 교육제공	전혀 정부책임 아님	30	2.0	55	3.7	85	2.8	76.140***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244	16.5	388	25.9	632	21.2	
	대체로 정부책임	731	49.3	746	49.8	1,477	49.6	
	전적으로 정부책임	477	32.2	309	20.6	786	26.4	
	전체	1,481	100.0	1,498	100.0	2,979	100.0	
	Mean(SD)	3.12(0.744)		2.87(0.772)		2.99(0.768)		76.529***
빈곤 격차 해소	전혀 정부책임 아님	48	3.2	71	4.7	119	4.0	71.593***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267	17.8	391	26.1	658	22.0	
	대체로 정부책임	709	47.4	744	49.7	1,453	48.5	
	전적으로 정부책임	472	31.6	291	19.4	763	25.5	
	전체	1,496	100.0	1,497	100.0	2,993	100.0	
	Mean(SD)	3.07(0.787)		2.84(0.787)		2.96(0.795)		66.372***
성장이 필요한 산업 지원	전혀 정부책임 아님	23	1.6	25	1.7	48	1.6	118.296***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214	14.4	404	27.1	618	20.8	
	대체로 정부책임	818	55.0	829	55.6	1,647	55.3	
	전적으로 정부책임	431	29.0	232	15.6	663	22.3	
	전체	1,486	100.0	1,490	100.0	2,976	100.0	
	Mean(SD)	3.11(0.696)		2.85(0.687)		2.98(0.704)		107.775***

***p<.001

2. 분야별 정부의 책임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의식은 현재 응답자가 가진 사회경제적 특성 혹은 소속된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응답자 특성 중에서 대표적인 특성으로 연령과 소득을 선정하여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의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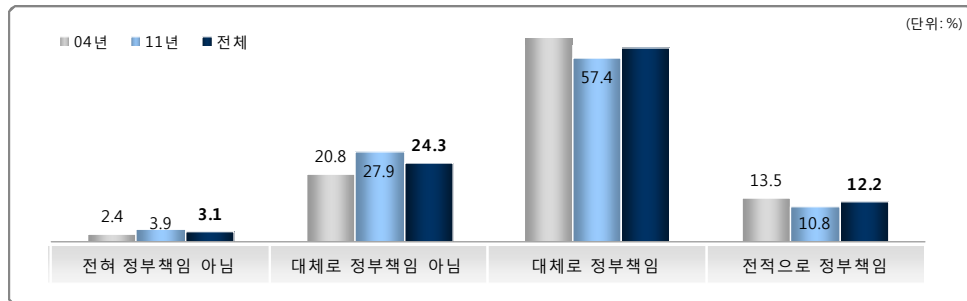
가. 일자리 제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세대별, 소득별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세대별로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2004년에는 50~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11년에는 50대가 가장 낮았으며 20대와 60대가 일자리 제공을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소득별로는 2004년 2011년 모두 100만원 이하 저소득집단에서는 일자리 제공

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특히 2011년의 경우 1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서 일자리 제공이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25.9%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전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그림 3-17] 정부의 책임 : 모든 구직자에게 일자리 제공



〈표 3-20〉 연령 및 소득별 일자리 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구분	전혀 정부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책임		전적으로 정부책임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29,743^{***}$)	2.4	3.9	20.7	27.9	63.3	57.4	13.5	10.8	100.0	1495	1492
연령	$\chi^2=28,116^{**}$ (2004) / $\chi^2=9,227^{**}$ (2011)										
전체	2.4	3.9	20.7	27.9	63.4	57.4	13.5	10.8	100.0	1496	1492
20대	2.8	3.7	26.3	28.3	60.0	55.8	10.9	12.3	100.0	320	269
30대	2.2	3.5	20.4	27.1	63.9	59.2	13.4	10.2	100.0	357	314
40대	3.9	5.4	20.5	25.4	65.2	57.8	10.4	11.4	100.0	336	334
50대	3.0	3.8	18.2	32.3	62.1	56.0	16.7	7.9	100.0	203	266
60세 이상	-	2.9	16.8	27.2	65.4	57.9	17.9	12.0	100.0	280	309
소득	$\chi^2=18,629$ (2004) / $\chi^2=24,144^*$ (2011)										
전체	2.5	3.9	20.7	27.9	63.3	57.5	13.5	10.7	100.0	1495	1486
100만원 이하	1.6	-	11.8	19.0	69.3	55.2	17.3	25.9	100.0	127	58
101-200 만원	3.3	4.3	20.3	25.1	60.5	60.7	15.8	10.0	100.0	448	211
201-300 만원	1.9	5.2	22.7	30.7	63.4	54.5	12.1	9.6	100.0	538	446
301-400 만원	2.0	3.9	19.0	28.5	66.9	57.6	12.1	10.0	100.0	248	460
400만원 이상	3.7	2.6	25.4	26.4	60.4	60.1	10.4	10.9	100.0	134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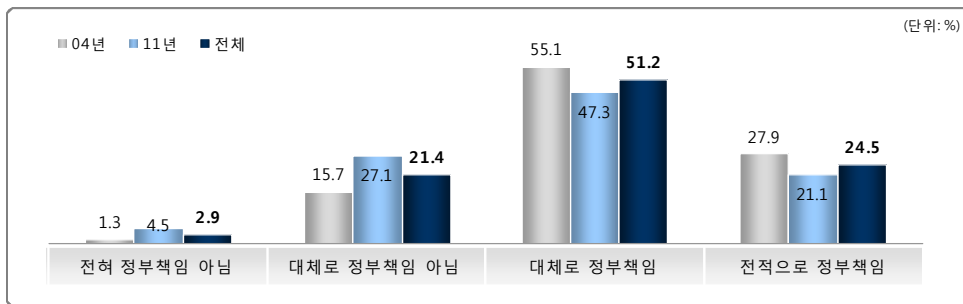
* $p<.05$, ** $p<.01$

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나 2011년의 경우 20대는 다른세대에 비해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낮고 대체로 정부책임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지지율은 낮게 나타난 경향을 보였다.

소득별로는 2004년 응답에 차이를 보였는데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도 그 지지정도에 차이를 보여 2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서 적적으로 정부책임이라는 인식은 높은 반면 4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2004년 소득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2011년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러한 소득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3-18] 정부의 책임 : 의료서비스 제공



〈표 3-21〉 연령 및 소득별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구분	전혀 정부책임 아님		정부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책임		전적으로 정부책임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93.774$)	1.3	4.5	15.7	27.1	55.1	47.3	27.9	21.1	100.0	1491	1496
연령	$\chi^2=13.856$ (2004) / $\chi^2=23.170^*$ (2011)										
전체	1.3	4.5	15.7	27.1	55.1	47.3	27.9	21.1	100.0	1489	1496
20대	1.6	4.1	16.0	23.8	56.3	56.1	26.1	16.0	100.0	318	269
30대	1.4	6.0	14.0	26.9	55.9	42.4	28.7	24.7	100.0	356	316
40대	1.5	5.7	13.8	26.7	60.2	46.5	24.6	21.0	100.0	334	333
50대	1.0	3.8	19.7	25.6	51.7	50.0	27.6	20.7	100.0	203	266
60세 이상	0.7	2.6	16.9	32.1	48.9	42.9	33.5	22.4	100.0	278	312
소득	$\chi^2=27.578^{**}$ (2004) / $\chi^2=15.309$ (2011)										
전체	1.4	4.5	15.7	27.2	55.0	47.3	27.9	21.0	100.0	1491	1490
100만원 이하	2.4	3.3	13.4	21.7	44.9	43.3	39.4	31.7	100.0	127	60
101-200 만원	1.1	2.8	14.9	30.3	53.1	46.0	30.9	20.9	100.0	450	211
201-300 만원	0.9	3.6	16.4	28.7	55.5	49.3	27.3	18.4	100.0	532	446
301-400 만원	2.4	6.5	19.0	26.7	55.9	46.0	22.7	20.8	100.0	247	461
400만원 이상	1.5	4.2	11.9	24.7	67.4	48.1	19.3	23.1	100.0	135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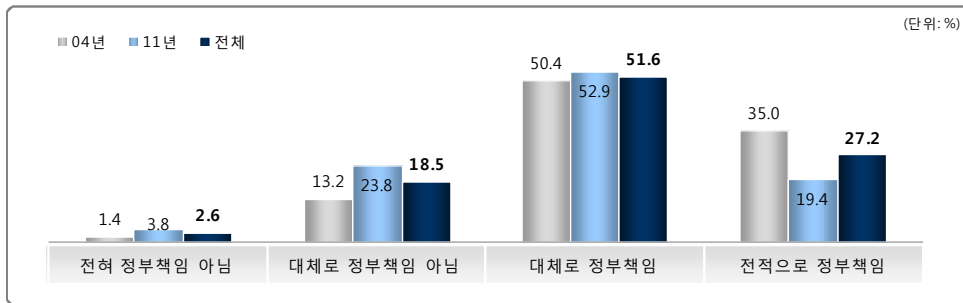
* $p<.05$, ** $p<.01$

다. 노인의 일정수준 생계보장

노인들의 일정수준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세대별로는 2004년 소득별로는 2004년 2011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로는 2004년의 경우 60세 이상에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46.6%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정부의 적극적 책임에 대해 인식한 경우가 현격히 높았으며, 2011년의 경우는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응답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가장 낮고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소득인 가장 낮은 100만원 이하 집단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2004년 2011년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9] 정부의 책임 : 노인의 일정 수준 생계보장



〈표 3-22〉 연령 및 소득별 노인의 생계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구분	전혀 정부책임 아님		정부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책임		전적으로 정부책임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129,513^{***}$)	1.5	3.8	13.2	23.8	50.3	52.9	35.0	19.4	100.0	1592	1498
연령	$\chi^2 = 29,497^{**}$ (2004) / $\chi^2 = 16,573$ (2011)										
전체	1.5	3.8	13.2	23.8	50.3	52.9	35.0	19.4	100.0	1501	1498
20대	1.2	3.7	12.4	24.9	56.3	51.7	30.0	19.7	100.0	323	269
30대	0.8	3.2	14.0	22.1	50.3	54.6	34.9	20.2	100.0	358	317
40대	1.5	5.4	14.6	25.7	50.0	47.0	33.9	21.9	100.0	336	334
50대	2.5	3.4	16.3	27.7	52.2	54.3	29.1	14.6	100.0	203	267
60세 이상	1.8	3.2	9.3	19.3	42.3	57.6	46.6	19.9	100.0	281	311
소득	$\chi^2 = 48,440^{***}$ (2004) / $\chi^2 = 26,101^*$ (2011)										
전체	1.5	3.8	13.2	23.9	50.2	52.9	35.0	19.3	100.0	1505	1492
100만원 이하	2.3		10.2	21.7	36.7	51.7	50.8	26.7	100.0	128	60
101-200 만원	1.1	3.3	8.4	15.1	51.0	61.3	39.5	20.3	100.0	453	212
201-300 만원	0.7	4.0	16.7	22.6	52.2	56.6	30.3	16.8	100.0	538	447
301-400 만원	2.8	4.8	16.8	26.0	52.4	49.7	28.0	19.5	100.0	250	461
400만원 이상	2.9	3.2	11.8	29.2	48.5	47.1	36.8	20.5	100.0	136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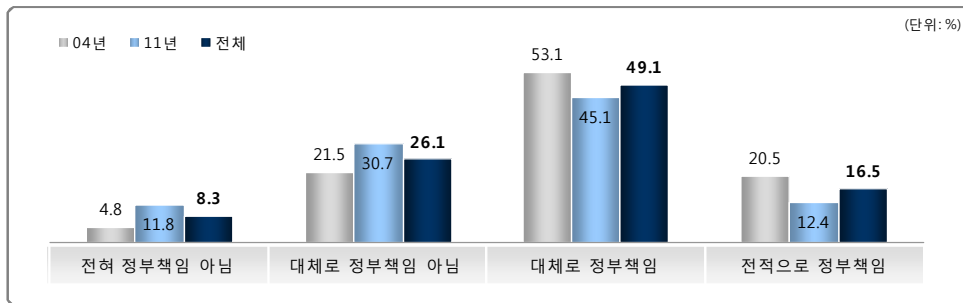
* p<.05, **p<.01, ***p<.001

라. 실업자 일정수준 생계보장

실업자들에게 일정수준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2011년에는 소득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실업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부책임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집단에서 전혀 정부책임이 아니라는 응답은 다른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라는 응답은 높게 나타나 정부책임을 다른 소득구간 집단에 비해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다.

[그림 3-20] 정부의 책임 : 실업자 일정 수준 생계보장



〈표 3-23〉 연령 및 소득별 실업자 생계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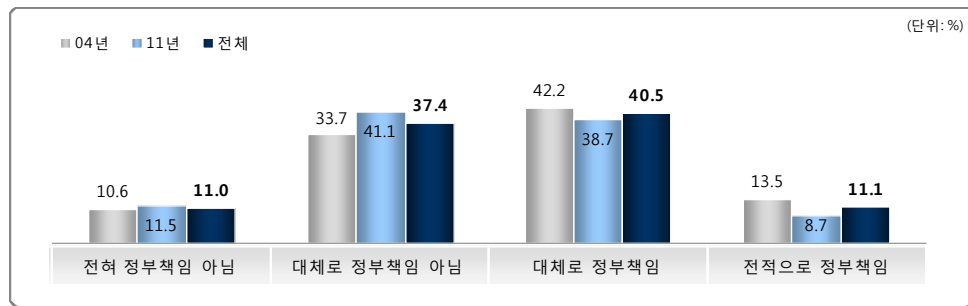
구분	전혀 정부책임 아님		정부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책임		전적으로 정부책임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106.381$)	4.9	11.8	21.5	30.7	53.1	45.1	20.5	12.4	100.0	1497	1491
연령	$\chi^2 = 20.074$ (2004) / $\chi^2 = 17.316$ (2011)										
전체	4.9	11.8	21.5	30.7	53.1	45.1	20.5	12.4	100.0	1495	1491
20대	4.4	12.7	23.4	30.0	52.0	43.1	20.2	14.2	100.0	321	267
30대	6.2	8.8	21.6	31.9	50.4	47.0	21.8	12.3	100.0	357	317
40대	5.3	10.9	23.4	29.3	54.6	49.5	16.6	10.3	100.0	337	331
50대	5.0	14.7	24.9	35.3	52.7	40.2	17.4	9.8	100.0	201	266
60세 이상	3.2	12.6	14.7	27.4	56.3	44.5	25.8	15.5	100.0	279	310
소득	$\chi^2=18.640$ (2004) / $\chi^2= 35.041^{***}$ (2011)										
전체	4.8	11.9	21.4	30.7	53.2	45.1	20.5	12.3	100.0	1494	1485
100만원 이하	4.7	5.1	10.2	25.4	57.5	45.8	27.6	23.7	100.0	127	59
101-200 만원	4.7	15.8	21.8	25.4	51.8	41.1	21.8	17.7	100.0	450	209
201-300 만원	5.2	11.0	22.6	36.2	51.6	44.5	20.6	8.3	100.0	535	447
301-400 만원	4.4	12.6	22.9	29.4	58.2	47.5	14.5	10.5	100.0	249	459
400만원 이상	4.5	10.6	23.3	29.3	51.1	45.0	21.1	15.1	100.0	133	311

***p<.001

마. 소득보장

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세대별로는 2004년에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지지가 높았으며, 2011년에는 반대로 가장 낮았다. 소득별로는 2004년, 2011년 모두 200만원 이하 소득을 가진 응답자가 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세대별 소득별 응답의 차이는 2004년 2011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림 3-21] 정부의 책임 : 모든 사람들 일정 수준 소득보장



〈표 3-24〉 연령 및 소득별 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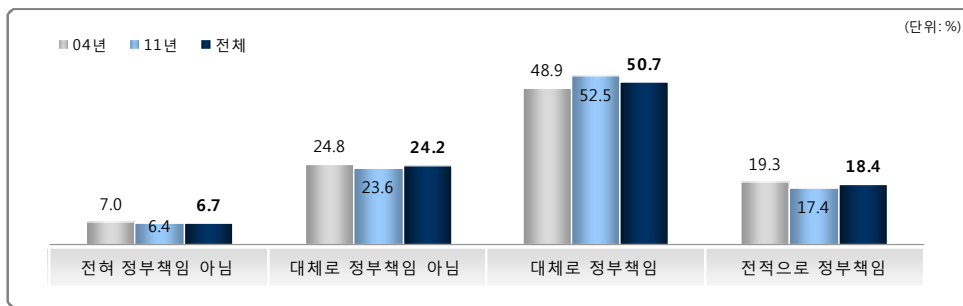
구분	전혀 정부책임 아님		정부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책임		전적으로 정부책임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28.710$)	10.5	11.5	33.7	41.1	42.3	38.7	13.5	8.7	100.0	1479	1493
연령	$\chi^2=20.064$ (2004) / $\chi^2=6.86$ (2011)										
전체	10.5	11.5	33.8	41.1	42.3	38.7	13.5	8.7	100.0	1478	1493
20대	11.1	13.4	31.4	39.9	43.5	38.4	14.0	8.2	100.0	315	268
30대	11.1	10.5	33.5	42.9	40.9	38.4	14.5	8.3	100.0	352	315
40대	12.1	12.0	39.0	39.5	39.3	39.2	9.7	9.3	100.0	331	332
50대	8.4	10.5	37.1	44.4	43.6	35.0	10.9	10.2	100.0	202	266
60세 이상	8.6	11.2	28.1	39.1	45.3	42.0	18.0	7.7	100.0	278	312
소득	$\chi^2=13.849$ (2004) / $\chi^2=9.378$ (2011)										
전체	10.6	11.5	33.8	41.2	42.2	38.6	13.4	8.7	100.0	1480	1487
100만원 이하	7.3	8.3	36.3	38.3	39.5	43.3	16.9	10.0	100.0	124	60
101-200 만원	11.3	12.3	34.0	38.4	40.8	37.4	14.0	11.8	100.0	444	211
201-300 만원	13.1	13.0	32.3	38.9	42.2	40.7	12.3	7.4	100.0	535	445
301-400 만원	6.5	11.1	36.6	43.1	42.7	37.7	14.2	8.1	100.0	246	459
400만원 이상	9.2	9.9	31.3	44.2	48.1	36.9	11.5	9.0	100.0	131	312

* $p<.05$, ** $p<.01$, *** $p<.001$

바. 저소득가정 대학생 학비지원

저소득 가정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1년에는 세대 및 소득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004년에는 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대가 저소득가정 대학생 학비 지원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라는 강한 지지가 높았다. 소득에 따라서는 2004년의 경우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정부의 책임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인 반면 2011년에는 소득이 낮을 수록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라는 강한 지지율이 높았다.

[그림 3-22] 정부의 책임 : 저소득가정 대학생 재정지원



<표 3-25> 연령 및 소득별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구분	전혀 정부책임 아님		정부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책임		전적으로 정부책임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4.109$)	7.0	6.4	24.8	23.6	48.9	52.5	19.3	17.4	100.0	1488	1496
연령	$\chi^2 = 10.982$ (2004) / $\chi^2 = 12.163$ (2011)										
전체	7.0	6.4	24.9	23.6	48.9	52.5	19.2	17.4	100.0	1488	1496
20대	6.5	5.6	24.9	26.0	46.4	47.6	22.1	20.8	100.0	321	269
30대	7.9	4.4	23.1	22.7	50.1	54.6	18.9	18.3	100.0	355	317
40대	9.0	7.5	22.5	21.9	51.1	55.6	17.4	15.0	100.0	333	333
50대	5.5	6.8	29.5	22.6	46.5	55.3	18.5	15.4	100.0	200	266
60세 이상	5.0	7.7	26.5	25.1	49.5	49.2	19.0	18.0	100.0	279	311
소득	$\chi^2 = 26.069^*$ (2004) / $\chi^2 = 7.933$ (2011)										
전체	7.0	6.4	24.8	23.7	48.9	52.5	19.3	17.4	100.0	1488	1490
100만원 이하	4.9	6.7	18.7	25.0	55.3	45.0	21.1	23.3	100.0	123	60
101-200 만원	6.9	5.2	23.3	23.6	50.9	50.9	18.9	20.3	100.0	450	212
201-300 만원	9.4	8.1	28.3	22.2	43.2	52.9	19.1	16.8	100.0	533	446
301-400 만원	2.8	5.9	23.8	23.7	56.0	54.6	17.3	15.9	100.0	248	460
400만원 이상	7.5	5.8	23.1	25.6	46.3	51.3	23.1	17.3	100.0	134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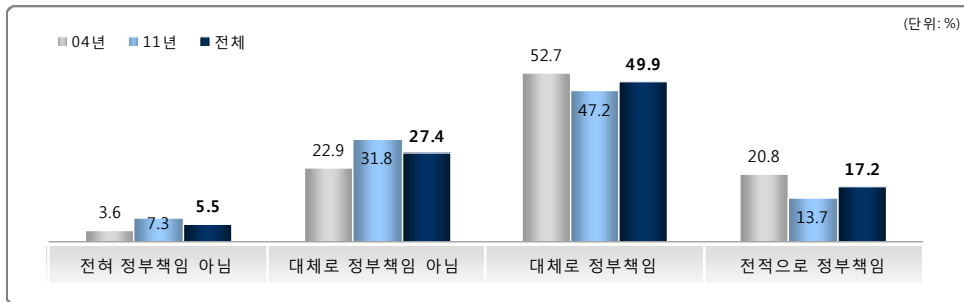
* $p < .05$

사. 주거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제공에 대해서는 세대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득에 따라서 2011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세대별로는 2004년의 경우 20대가 주거제공에 대해 정부책임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는 낮은 반면 정부책임이라는 지지율은 높았으며, 2011년의 경우 60대의 노년층에서 주거제공이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라는 강한 지지율이 다른세대에 비해 높았다.

소득별로는 2004년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응답율이 높고 정부책임이라는 지지율은 낮았다. 2011년의 경우 200만원 이하 소득집단과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에서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율은 높고 전혀 정부책임은 아니라는 응답은 낮게 나타나 강한 지지를 보인 반면 200만원 ~400만원의 소득집단인 중산층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3-23] 정부의 책임 : 어려운 사람들 적정한 주거제공



〈표 3-26〉 연령 및 소득별 저소득층 주거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구분	전혀 정부책임 아님		정부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책임		전적으로 정부책임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65.663^{***}$)	3.6	7.3	22.9	31.8	52.7	47.2	20.7	13.7	100.0	1485	1494
연령	$\chi^2=13.893$ (2004) / $\chi^2=9.232$ (2011)										
전체	3.6	7.3	22.9	31.8	52.7	47.2	20.8	13.7	100.0	1484	1494
20대	1.6	6.4	22.5	34.2	52.8	46.2	23.1	13.2	100.0	320	266
30대	2.5	6.9	23.0	30.3	53.5	49.8	21.0	12.9	100.0	357	317
40대	3.9	8.7	24.6	29.6	52.9	46.1	18.6	15.6	100.0	333	334
50대	5.0	6.8	21.0	35.3	54.0	47.7	20.0	10.2	100.0	200	266
60세 이상	6.2	7.4	22.6	30.5	50.4	46.0	20.8	16.1	100.0	274	311
소득	$\chi^2=19.260$ (2004) / $\chi^2=26.745^{**}$ (2011)										
전체	3.6	7.3	22.9	31.9	52.7	47.2	52.7	13.6	100.0	1485	1488
100만원 이하	4.9	6.8	22.1	23.7	46.7	47.5	46.7	22.0	100.0	122	59
101-200 만원	4.7	7.1	20.1	33.2	54.6	41.7	54.6	18.0	100.0	447	211
201-300 만원	3.5	9.4	24.4	31.6	54.5	49.1	54.5	9.9	100.0	536	446
301-400 만원	2.8	7.2	21.1	31.3	52.0	50.0	52.0	11.5	100.0	246	460
400만원 이상	0.7	4.5	29.9	33.7	46.3	44.2	46.3	17.6	100.0	134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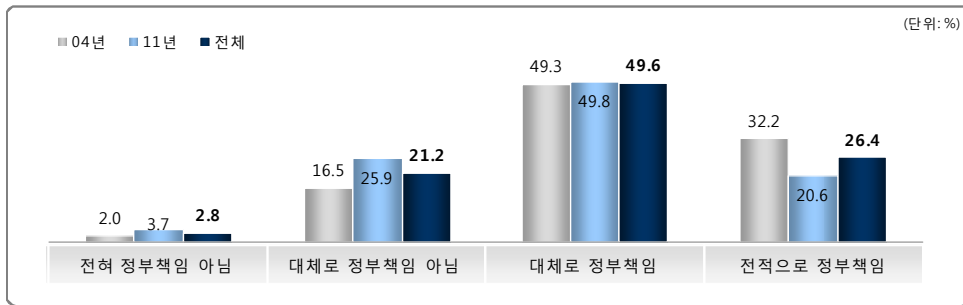
p<.01, *p<.001

아. 양질의 교육제공

양질의 교육제공에 대해서는 세대별로는 2004년의 경우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 현격히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2011년에는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별로는 2004년 2011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04년의 경우 100만원 이하 저소득집단에서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라는 강한 지지율이 현격히 높았으며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책임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1년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집단에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강한 지지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4] 정부의 책임 : 양질의 교육제공



〈표 3-27〉 연령 및 소득별 양질의 교육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구분	전혀 정부책임 아님		정부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책임		전적으로 정부책임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76.140^{***}$)	2.0	3.7	16.5	25.9	49.3	49.8	32.2	20.6	100.0	1482	1489
연령	$\chi^2 = 22.210^* (2004) / \chi^2 = 13.133 (2011)$										
전체	2.0	3.7	16.5	25.9	49.4	49.8	32.2	20.6	100.0	1483	1498
20대	2.2	3.0	16.6	26.0	51.4	52.8	29.8	18.2	100.0	319	269
30대	1.7	4.1	19.5	24.3	44.6	48.6	34.2	23.0	100.0	354	317
40대	1.2	3.3	16.4	26.6	47.6	47.3	34.8	22.8	100.0	336	334
50대	2.0	6.0	20.4	22.8	48.8	51.7	28.9	19.5	100.0	201	267
60세 이상	3.3	2.3	9.5	29.3	55.7	49.5	31.5	19.0	100.0	273	311
소득	$\chi^2 = 24.248^* (2004) / \chi^2 = 21.919^* (2011)$										
전체	2.0	3.7	16.5	25.9	49.3	49.8	32.2	20.6	100.0	1481	1492
100만원 이하	2.4	1.7	11.3	18.3	45.2	56.7	41.1	23.3	100.0	124	60
101-200 만원	1.4	2.8	12.9	25.4	51.2	50.7	34.5	21.1	100.0	441	213
201-300 만원	2.1	3.8	18.0	32.3	47.5	46.0	32.5	17.9	100.0	533	446
301-400 만원	2.4	4.1	22.9	20.8	49.8	54.4	24.9	20.6	100.0	249	461
400만원 이상	3.0	3.8	14.9	26.3	53.0	46.5	29.1	23.4	100.0	134	312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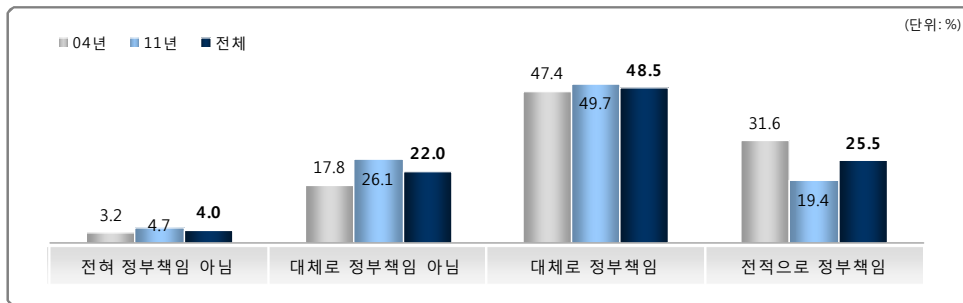
자. 빈부격차 해소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2004년의 경우 세대 및 소득별로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소득이 200만원 이하 집단과 300~400만원 이하의 집단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강한 지지율이 높았으며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세대별, 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60대 이상의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집단에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5] 정부의 책임 :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소득 격차 해소



〈표 3-28〉 연령 및 소득별 빈부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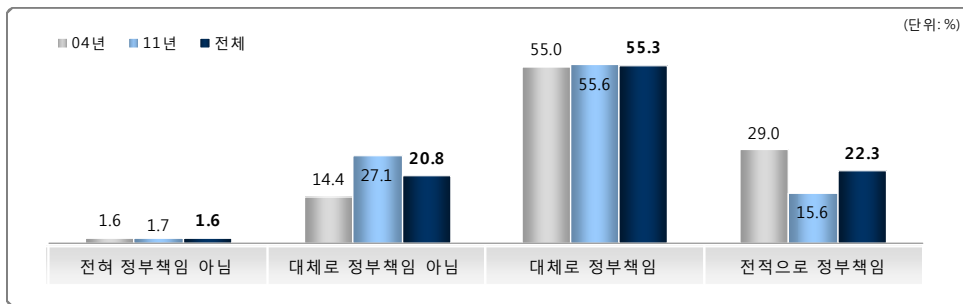
구분	전혀 정부책임 아님		정부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책임		전적으로 정부책임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71.593^{***}$)	3.2	4.7	17.8	26.1	47.4	49.7	31.6	19.4	100.0	1496	1497
연령	$\chi^2 = 23.547^* (2004) / \chi^2 = 14.238 (2011)$										
전체	3.3	4.7	17.8	26.1	47.4	49.7	31.6	19.4	100.0	1497	1497
20대	4.1	3.7	16.6	24.3	40.8	49.3	38.6	22.8	100.0	319	268
30대	3.6	5.4	15.6	22.4	45.3	51.7	35.5	20.5	100.0	358	317
40대	3.3	4.5	18.2	27.6	49.7	48.9	28.9	18.9	100.0	336	333
50대	1.5	4.5	21.8	32.6	51.0	48.7	25.7	14.2	100.0	202	267
60세 이상	3.2	5.4	18.4	24.4	52.1	49.7	26.2	20.5	100.0	282	312
소득	$\chi^2 = 23.279^* (2004) / \chi^2 = 13.450 (2011)$										
전체	3.1	4.8	17.8	26.2	47.4	49.8	31.6	19.2	100.0	1496	1491
100만원 이하	3.9	6.7	17.3	23.3	42.5	38.3	36.2	31.7	100.0	127	60
101-200 만원	3.6	5.2	13.1	24.9	48.2	48.8	35.1	21.1	100.0	450	213
201-300 만원	2.2	3.1	20.5	28.9	48.9	50.3	28.4	17.7	100.0	536	447
301-400 만원	4.0	5.2	18.4	25.1	42.8	51.2	34.8	18.5	100.0	250	459
400만원 이상	3.0	5.8	22.6	25.6	51.9	49.7	22.6	18.9	100.0	133	312

* p<.05, ***p<.001

차. 성장이 필요한 산업 지원

성장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대별로는 2004년 2011년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2004년의 경우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응답과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동시에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의 경우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에서 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6] 정부의 책임 : 성장 필요한 산업 지원



<표 3-29> 연령 및 소득별 성장이 필요한 산업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구분	전혀 정부책임 아님		정부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책임		전적으로 정부책임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118,296^{***}$)	1.5	1.7	14.4	27.1	55.0	55.6	29.0	15.6	100.0	1486	1490
연령	$\chi^2 = 14,876$ (2004) / $\chi^2 = 6,798$ (2011)										
전체	1.6	1.7	14.4	27.1	55.0	55.6	29.0	15.6	100.0	1486	1490
20대	3.1	2.2	15.7	27.3	53.6	53.6	27.6	16.9	100.0	319	267
30대	1.7	0.9	13.2	28.1	56.6	55.8	28.6	15.1	100.0	357	317
40대	1.5	2.4	15.8	25.6	51.9	55.4	30.7	16.6	100.0	335	332
50대	0.5	1.1	11.7	29.6	53.8	53.6	34.0	15.7	100.0	197	267
60세 이상	0.7	1.6	14.7	25.4	59.0	59.3	25.5	13.7	100.0	278	307
소득	$\chi^2 = 49,832^{***}$ (2004) / $\chi^2 = 29,287^{**}$ (2011)										
전체	1.5	1.7	14.5	27.2	54.9	55.6	29.0	15.5	100.0	1485	1484
100만원 이하	0.8	3.4	8.0	37.9	54.4	44.8	36.8	13.8	100.0	125	58
101-200 만원	1.1	1.9	9.6	24.5	53.3	59.0	35.9	14.6	100.0	448	212
201-300 만원	1.1	1.8	20.4	32.4	55.2	51.5	23.3	14.4	100.0	529	445
301-400 만원	3.6	1.5	14.4	23.0	56.0	62.4	26.0	13.1	100.0	250	457
400만원 이상	1.5	1.3	13.5	26.0	57.9	51.3	27.1	21.5	100.0	133	312

p<.01, *p<.001

3.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제비교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책임에 대해 지지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찬성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일과 우리나라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경제성장 등 일을 통한 복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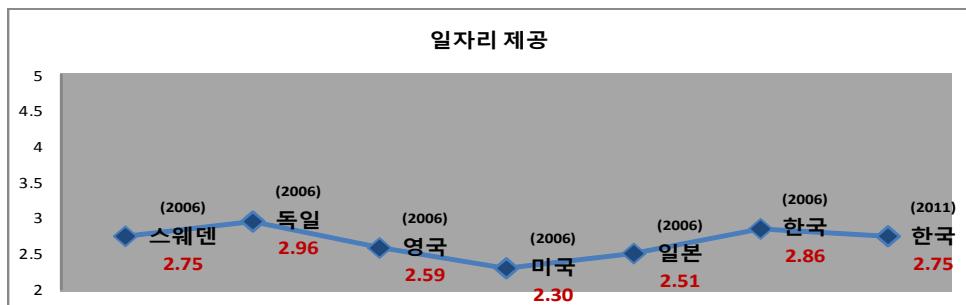
〈표 3-30〉 사회보장 관련 정부책임 국제비교 1

		ISSP 2006						2011	χ^2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한국	
일자리 제공	전혀 정부책임 아님	12.9	7.0	14.8	25.8	17.6	4.8	3.9	1091.903 ***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28.3	24.7	29.2	34.6	30.6	25.0	27.9	
	대체로 정부책임	30.3	33.1	38.6	23.7	35.4	49.3	57.4	
	전적으로 정부책임	28.6	35.2	17.5	15.9	16.3	20.8	10.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36	1564	861	1504	1089	1569	1492	
의료 서비스 제공	전혀 정부책임 아님	1.4	0.4	0.3	2.5	3.4	0.6	4.5	1452.054 ***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5.0	3.5	0.7	7.7	9.7	8.8	27.1	
	대체로 정부책임	31.1	41.6	25.8	33.3	45.5	54.7	47.3	
	전적으로 정부책임	62.5	54.5	73.2	56.4	41.3	35.9	2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47	1606	894	1506	1133	1562	1496	
노인 생계 보장	전혀 정부책임 아님	0.5	0.7	0.1	1.8	2.9	0.6	3.8	1240.381 ***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2.5	5.0	2.4	8.2	8.6	9.4	23.8	
	대체로 정부책임	30.2	46.4	34.1	32.9	44.2	54.3	52.9	
	전적으로 정부책임	66.8	47.9	63.4	57.1	44.3	35.7	19.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57	1589	898	1512	1149	1571	1498	
실업자 생계보 장	전혀 정부책임 아님	3.6	6.9	11.3	13.4	12.9	5.8	11.8	469.319* **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13.0	22.2	31.4	34.6	30.6	23.9	30.7	
	대체로 정부책임	56.5	52.4	44.0	35.9	38.2	51.8	45.1	
	전적으로 정부책임	27.0	18.5	13.4	16.0	18.3	18.4	12.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35	1532	844	1480	1077	1559	1491	
저소득 가정 대학생 재정 지원	전혀 정부책임 아님	5.7	1.6	2.2	2.4	15.3	2.5	6.4	1235.150 ***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20.6	6.2	8.7	5.6	26.8	17.4	23.6	
	대체로 정부책임	43.1	51.9	53.3	37.0	37.1	50.3	52.5	
	전적으로 정부책임	30.6	40.4	35.8	55.0	20.8	29.9	17.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13	1593	881	1512	1089	1566	1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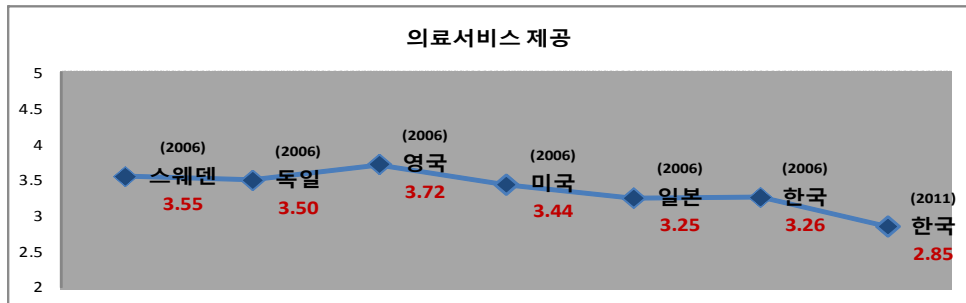
		ISSP 2011년						2011	χ^2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한국	
어려운 사람 적정한 주거제 공	전혀 정부책임 아님	3.4	3.5	3.4	4.7	26.3	4.2	7.3	1237.014 ***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17.2	18.9	10.7	18.8	35.9	25.0	31.8	
	대체로 정부책임	54.4	55.2	58.5	43.4	26.7	50.4	47.2	
	전적으로 정부책임	25.0	22.4	27.4	33.1	11.1	20.3	13.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25	1549	873	1491	1059	1564	1494	
소득격 차 해소	전혀 정부책임 아님	9.8	6.7	9.4	21.1	12.4	3.3	4.7	679.951 ***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22.5	21.1	21.3	26.7	21.7	16.1	26.1	
	대체로 정부책임	30.5	38.4	40.5	23.6	31.7	40.1	49.7	
	전적으로 정부책임	37.2	33.7	28.9	28.6	34.3	40.5	19.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25	1532	870	1477	1085	1562	1497	
성장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지원	전혀 정부책임 아님	3.8	9.2	2.2	4.8	8.4	1.2	1.7	644.667 ***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19.2	31.3	9.9	21.4	25.0	10.3	27.1	
	대체로 정부책임	50.2	39.6	57.7	45.4	44.6	55.2	55.6	
	전적으로 정부책임	26.8	19.8	30.2	28.4	22.0	33.3	15.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05	1541	868	1484	1085	1552	1490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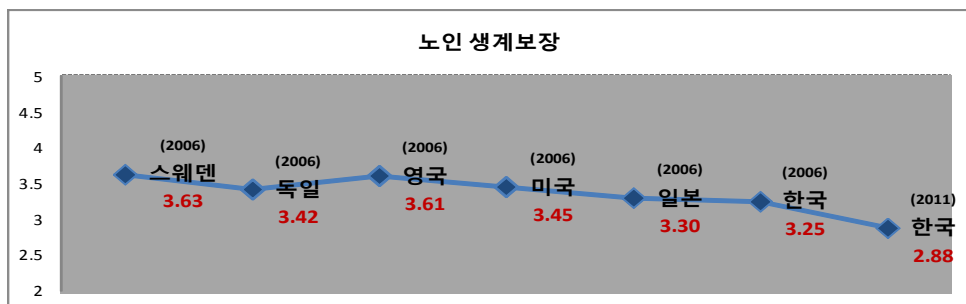
[그림 3-27]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일자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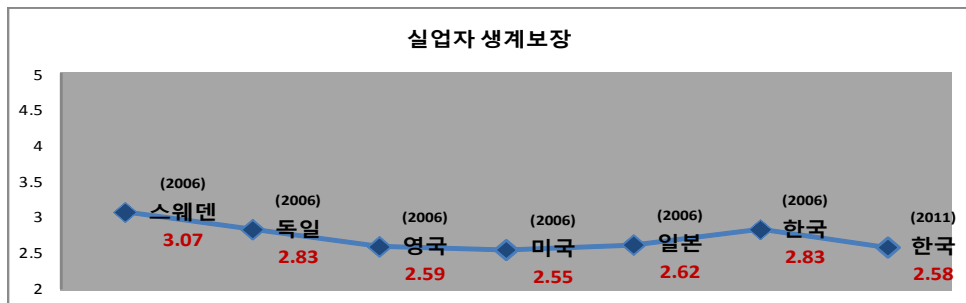
[그림 3-28]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의료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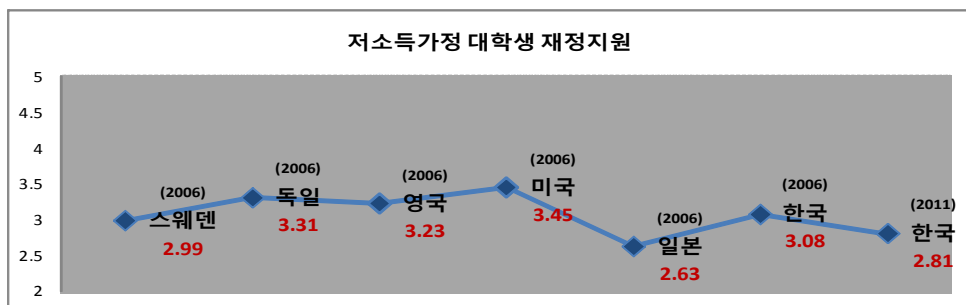
[그림 3-29]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노인 생계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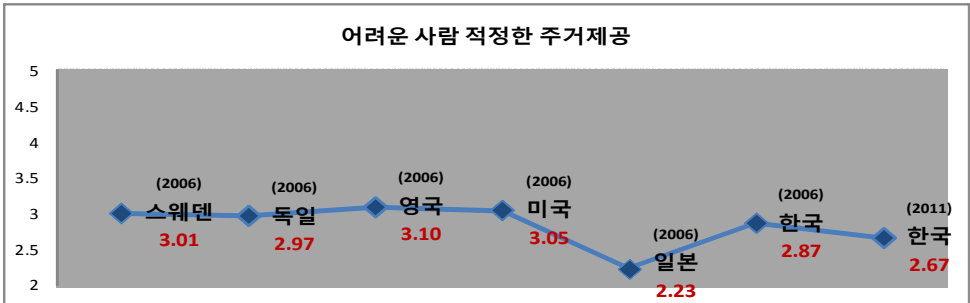
[그림 3-30]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실업자 생계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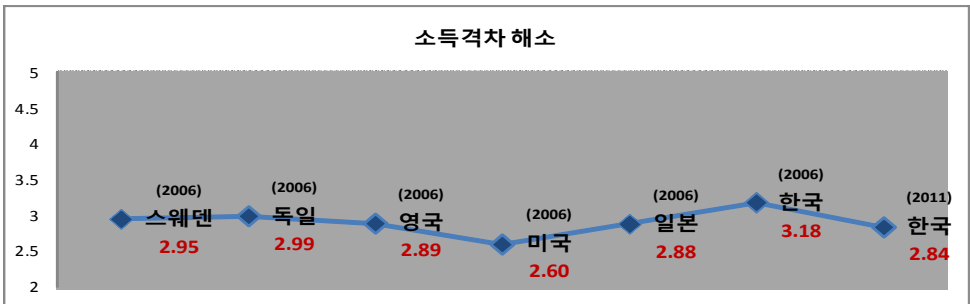
[그림 3-31]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저소득가정 대학생 재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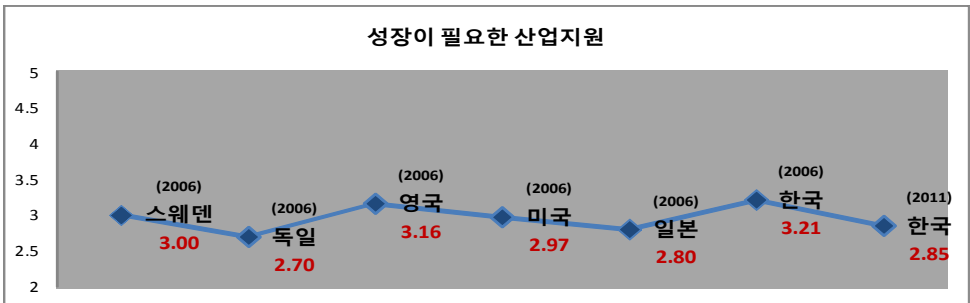
[그림 3-32]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어려운 사람 적정한 주거제공



[그림 3-33]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소득격차 해소



[그림 3-34] 정부의 책임 국제비교 : 성장이 필요한 산업지원



〈표 3-31〉 사회보장 관련 정부책임 국제비교 2(평균점수 비교)

		ISSP 2006년						2011	전체	F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한국		
일자리 제공	Mean	2.75	2.96	2.59	2.30	2.51	2.86	2.75	2.69	451.752***
	(SD)	1.01	0.94	0.94	1.02	0.96	0.80	0.69	0.93	
	scheffé	c	d	b	a	b	cd	c	-	
의료서비스 제공	Mean	3.55	3.50	3.72	3.44	3.25	3.26	2.85	3.34	612.958***
	(SD)	0.66	0.59	0.49	0.74	0.77	0.64	0.80	0.73	
	scheffé	d	cd	e	c	b	b	a	-	
노인 생계보장	Mean	3.63	3.42	3.61	3.45	3.30	3.25	2.88	3.34	523.008***
	(SD)	0.56	0.62	0.54	0.72	0.74	0.64	0.76	0.71	
	scheffé	d	c	d	c	b	b	a	-	
실업자 생계보장	Mean	3.07	2.83	2.59	2.55	2.62	2.83	2.58	2.73	270.789***
	(SD)	0.73	0.81	0.86	0.92	0.93	0.79	0.85	0.86	
	scheffé	c	b	a	a	a	b	a	-	
저소득가정 대학생 재정지원	Mean	2.99	3.31	3.23	3.45	2.63	3.08	2.81	3.09	642.541***
	(SD)	0.86	0.66	0.69	0.71	0.98	0.75	0.79	0.82	
	scheffé	c	d	d	e	a	c	b	-	
어려운사람 적당한 주거제공	Mean	3.01	2.97	3.10	3.05	2.23	2.87	2.67	2.85	619.991***
	(SD)	0.75	0.74	0.71	0.84	0.96	0.78	0.80	0.84	
	scheffé	de	cd	e	de	a	c	b	-	
소득격차 해소	Mean	2.95	2.99	2.89	2.60	2.88	3.18	2.84	2.91	276.872***
	(SD)	0.99	0.90	0.93	1.11	1.02	0.82	0.79	0.95	
	scheffé	bc	c	bc	a	bc	d	b	-	
성장이필요한 산업 지원	Mean	3.00	2.70	3.16	2.97	2.80	3.21	2.85	2.95	277.078***
	(SD)	0.78	0.89	0.68	0.83	0.88	0.67	0.69	0.80	
	scheffé	c	a	d	c	ab	a	b	-	

***p<.001

제5절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견해

1. 정부지출에 대한 견해

가. 정부지출에 대한 2011년

사회 각 분야의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정부지출을 감소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전체적으로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은 분야는 경찰과 문화·문화예술 분야로 경찰분야는 정부지

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4.4%에 비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5%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분야는 정부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2.2%에 비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지출을 감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분야에서 낮게 나타났으나, 이 중에서 도 국방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정부지출 감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1.4% 비교적 높았으며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 중에서도 대폭 감소해야 한다는 강한 응답도 4.6%로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가장 높았다. 또한 문화예술분야도 정부지출을 감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를 넘었으며 대폭 감소해야 한다는 강한 감소의향이 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지출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는 강한 찬성비율이 높은 분야로는 보건·의료 분야로 15.2%가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국방분야 14.0%, 환경과 국민연금분야가 각각 12.6%로 나타났다.

국방분야의 경우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대폭감소의 비율도 높으며 대폭 증가의 비율이 높아 정부지출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공존하고 있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감소에 대한 의견은 7.3%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반면 증가에 대해서는 58.3%로 가장 높아 다른 사회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지출증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뚜렷하게 두드러졌다.

〈표 3-32〉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 (2011년)

단위: %, 명, 점

구분	정부지출 대폭감소	정부지출 감소	정부지출 현수준 유지	정부지출 증가	정부지출 대폭증가	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환경	0.9	8.7	42.2	35.6	12.6	100.0	1488	3.50(0.85)
보건·의료	0.5	6.8	34.4	43.1	15.2	100.0	1493	3.66(0.83)
경찰	2.0	14.3	49.5	25.8	8.5	100.0	1487	3.25(0.87)
교육	1.7	8.2	32.5	45.9	11.8	100.0	1497	3.58(0.86)
국방	4.6	16.8	36.9	27.7	14.0	100.0	1485	3.30(1.05)
문화·예술	3.5	17.3	47.1	25.4	6.8	100.0	1487	3.15(0.90)
국민연금	1.3	7.4	37.5	41.2	12.6	100.0	1495	3.57(0.85)
고용보험(실업급여)	1.6	8.6	40.1	41.8	7.8	100.0	1492	3.46(0.82)
저소득층 생계지원(공적부조)	1.3	7.3	41.2	40.2	10.0	100.0	1496	3.50(0.82)

나. 정부지출에 대한 2004년과 2011년 비교

정부지출에 대해 감소와 증가에 대해서는 국방분야를 제외하고는 2004년과 2011년의 응답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2004년에 비해 2011년에는 정부의 지출을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해야 한다는 비율이 낮아졌으며 전반적으로 2004년에 비해 2011년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높아지고 정부지출이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폭 증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2004년에 비해 2011년 현격히 낮아지는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보건·의료, 교육,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적부조 분야이다. 이 중에서도 공적부조는 대폭증가해야 한다는 비율이 26.3%에서 10.0%로 고용보험도 20.5%에서 7.8%로 현격히 낮아졌다.

공적부조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을 감소해야 한다는 비율(대폭 감소+감소)이 2004년 2.9%에서 2011년 8.6%로 약 3배이상 증가하였으며, 환경분야도 2004년 4.6%에서 2011년 9.6%로 감소를 지지하는 비율이 약 2배로 높아졌다.

2004년과 비교하여 2011년에는 전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와 관련된 지출은 증가보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방분야는 2004년과 유사하게 감소해야한다는 입장과 증가해야한다는 입장 모두가 공존하고 있었다.

〈표 3-33〉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2004년 2011년 비교)

		2004년		2011년		전체		χ^2
		N	%	N	%	N	%	
보건·의료	대폭 감소	6	0.4	7	0.5	13	0.4	95.805***
	감소	43	2.9	102	6.8	145	4.8	
	현수준	354	23.7	514	34.4	868	29.1	
	증가	709	47.5	643	43.1	1,352	45.3	
	대폭 증가	381	25.5	227	15.2	608	20.3	
	전체	1,494	100.0	1,493	100.0	2,987	100.0	
	Mean(SD)	3.95(0.802)		3.66(0.833)		3.80(0.830)		99.147***
교육	대폭 감소	19	1.3	25	1.7	44	1.5	73.905***
	감소	103	6.9	123	8.2	226	7.6	
	현수준	406	27.3	486	32.5	892	29.9	
	증가	607	40.8	687	45.9	1,294	43.4	
	대폭 증가	353	23.7	176	11.8	529	17.7	
	전체	1,488	100.0	1,497	100.0	2,985	100.0	
	Mean(SD)	3.79(0.925)		3.58(0.863)		3.68(0.900)		41.237***
문화·예술	대폭 감소	46	3.2	52	3.5	98	3.3	5.768
	감소	214	14.6	257	17.3	471	15.9	
	현수준	696	47.5	700	47.1	1,396	47.3	
	증가	392	26.7	377	25.4	769	26.0	
	대폭 증가	118	8.1	101	6.8	219	7.4	
	전체	1,466	100.0	1,487	100.0	2,953	100.0	
	Mean(SD)	3.22(0.903)		3.15(0.904)		3.18(0.904)		4.876**
환경	대폭 감소	6	0.4	13	0.9	19	0.6	78.310***
	감소	62	4.2	130	8.7	192	6.5	
	현수준	471	31.9	628	42.2	1,099	37.1	
	증가	694	47.0	530	35.6	1,224	41.3	
	대폭 증가	243	16.5	187	12.6	430	14.5	
	전체	1,476	100.0	1,488	100.0	2,964	100.0	
	Mean(SD)	3.75(0.792)		3.50(0.854)		3.63(0.833)		66.202***
경찰	대폭 감소	28	1.9	29	2.0	57	1.9	81.943***
	감소	117	7.9	212	14.3	329	11.1	
	현수준	599	40.5	736	49.5	1,335	45.0	
	증가	546	37.0	384	25.8	930	31.4	
	대폭 증가	188	12.7	126	8.5	314	10.6	
	전체	1,478	100.0	1,487	100.0	2,965	100.0	
	Mean(SD)	3.51(0.881)		3.25(0.870)		3.38(0.885)		65.564***
국방	대폭 감소	52	3.5	68	4.6	120	4.1	7.353
	감소	211	14.3	249	16.8	460	15.5	
	현수준	595	40.2	548	36.9	1,143	38.6	
	증가	406	27.5	412	27.7	818	27.6	
	대폭 증가	215	14.5	208	14.0	423	14.3	
	전체	1,479	100.0	1,485	100.0	2,964	100.0	
	Mean(SD)	3.35(1.008)		3.30(1.049)		3.33(1.029)		2.026

p<.01, *p<.001

		2004년		2011년		전체		χ^2
		N	%	N	%	N	%	
국민연금	대폭 감소	38	2.6	19	1.3	57	1.9	109.308***
	감소	66	4.5	110	7.4	176	5.9	
	현수준	365	24.7	561	37.5	926	31.1	
	증가	659	44.5	616	41.2	1,275	42.9	
	대폭 증가	352	23.8	189	12.6	541	18.2	
	전체	1,481	100.0	1,495	100.0	2,976	100.0	
	Mean(SD)	3.82(0.929)		3.57(0.850)		3.69(0.900)		62.79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폭 감소	22	1.5	24	1.6	46	1.5	148.408***
	감소	75	5.1	129	8.6	204	6.9	
	현수준	383	26.0	599	40.1	982	33.1	
	증가	695	47.0	624	41.8	1,319	44.4	
	대폭 증가	302	20.5	116	7.8	418	14.1	
	전체	1,478	100.0	1,492	100.0	2,970	100.0	
	Mean(SD)	3.80(0.872)		3.46(0.821)		3.63(0.864)		122.753***
공적부조 (저소득층 생계지원)	대폭 감소	5	0.4	20	1.3	25	0.9	240.024***
	감소	38	2.5	109	7.3	147	4.9	
	현수준	340	22.9	616	41.2	956	32.0	
	증가	714	48.0	601	40.2	1,315	44.1	
	대폭 증가	391	26.3	150	10.0	541	18.1	
	전체	1,487	100.0	1,496	100.0	2,983	100.0	
	Mean(SD)	3.97(0.790)		3.50(0.823)		3.74(0.840)		252.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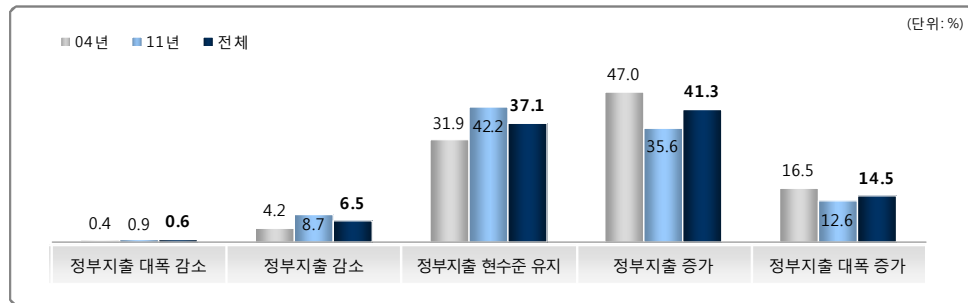
p<.01, *p<.001

2. 분야별 정부지출

가. 환경분야

환경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증감에 대해서는 세대별로는 2004년 2011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득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2004년의 경우에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에서 감소시키거나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율이 다른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소득집단에 감소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에서 증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5] 정부 지출증감 : 환경분야



〈표 3-34〉 연령 및 소득별 환경분야 지출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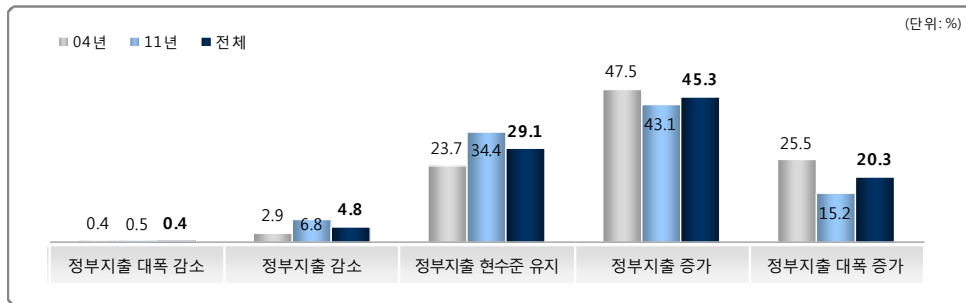
구분	감소		현수준		증가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77.481^{***}$)	4.7	9.6	31.9	42.2	63.4	48.2	100.0	1477	1488
연령	$\chi^2=6.378$ (2004) / $\chi^2=7.618$ (2011)								
전체	4.7	9.6	31.9	42.2	63.4	48.2	100.0	1478	1488
20대	4.1	6.3	29.1	44.8	66.9	48.9	100.0	320	268
30대	4.0	10.2	32.3	39.6	63.7	50.2	100.0	353	313
40대	6.0	10.8	32.7	44.9	61.3	44.3	100.0	333	332
50대	4.0	9.7	29.6	39.3	66.3	50.9	100.0	199	267
60세 이상	5.1	10.4	35.5	42.2	59.3	47.4	100.0	273	308
소득	$\chi^2=17.821^*$ (2004) / $\chi^2=26.613^{**}$ (2011)								
전체	4.6	9.6	31.9	42.2	63.5	48.2	100.0	1477	1482
100만원 이하	4.1	11.9	28.9	37.3	66.9	50.8	100.0	121	59
101-200만원 이하	4.5	11.9	27.0	40.0	68.5	48.1	100.0	444	210
201-300만원 이하	3.6	12.8	34.5	44.4	61.9	42.8	100.0	530	444
301-400만원 이하	4.8	7.8	37.5	45.5	57.7	46.6	100.0	248	459
401만원 이상	9.0	5.5	29.9	36.8	61.2	57.7	100.0	134	310

* $p<.05$, ** $p<.01$, *** $p<.001$

나. 보건의료분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세대별로는 2004년 2011년 모두 차이가 없었으며 소득별로는 2011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소득집단이 증가를 찬성하는 응답율이 높았으며 2011년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집단과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에서 지출증가에 대한 찬성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6] 정부 지출증감 : 보건·의료분야



〈표 3-35〉 연령 및 소득별 보건의료분야 지출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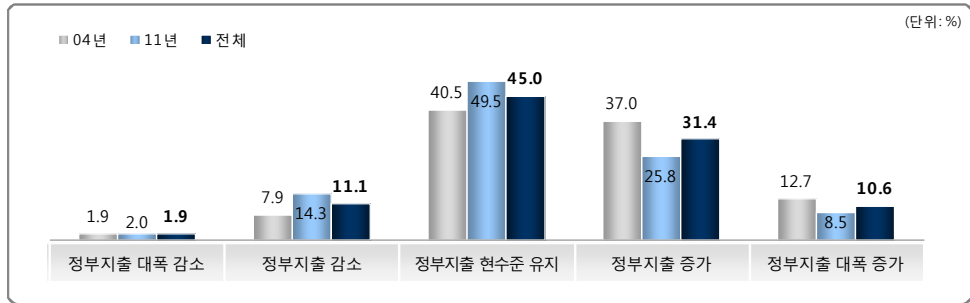
구분	감소		현수준		증가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76.972^{***}$)	3.3	7.3	23.7	34.4	73.0	58.3	100.0	1493	1493
연령	$\chi^2=10.068$ (2004) / $\chi^2=3.602$ (2011)								
전체	3.3	7.3	23.7	34.4	73.0	58.3	100.0	1494	1493
20대	2.5	7.5	23.5	32.5	74.0	60.1	100.0	323	268
30대	3.6	7.6	23.5	31.1	72.8	61.3	100.0	357	315
40대	5.4	6.6	23.7	35.8	70.9	57.5	100.0	333	332
50대	3.4	7.5	22.5	37.1	74.0	55.4	100.0	204	267
60세 이상	1.1	7.4	24.9	35.7	74.0	56.9	100.0	277	311
소득	$\chi^2=11.841$ (2004) / $\chi^2=17.231^{**}$ (2011)								
전체	3.3	7.3	23.7	34.4	73.0	58.2	100.0	1491	1487
100만원 이하	1.6	8.5	21.4	27.1	77.0	64.4	100.0	126	59
101-200만원 이하	3.4	4.7	19.0	36.8	77.6	58.5	100.0	447	212
201-300만원 이하	3.7	9.4	26.3	38.7	70.0	51.9	100.0	536	445
301-400만원 이하	3.6	7.6	27.0	33.0	69.4	59.3	100.0	248	460
401만원 이상	2.2	5.5	24.6	30.2	73.1	64.3	100.0	134	311

p<.01, *p<.001

다. 경찰 분야

경찰분야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세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득별로는 2011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400만원 이하의 소득집단에서는 경찰분야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응답율은 높고 증가시켜야 한다는 응답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집단에서 경찰분야 증가에 대한 찬성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7] 정부 지출증감 : 경찰분야



〈표 3-36〉 연령 및 소득별 경찰분야 지출증감

구분	감소		현수준		증가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 = 78.284^{***}$)	9.8	16.2	40.5	49.5	49.7	34.3	100.0	1478	1487
연령	$\chi^2 = 11.300$ (2004) / $\chi^2 = 4.274$ (2011)								
전체	9.7	16.2	40.6	49.5	49.7	34.3	100.0	1478	1487
20대	10.0	17.2	44.2	52.6	45.8	30.2	100.0	319	268
30대	7.6	16.5	39.5	49.8	52.8	33.7	100.0	354	315
40대	11.8	17.0	42.3	48.0	45.9	35.0	100.0	331	329
50대	12.0	16.6	35.0	48.3	53.0	35.1	100.0	200	265
60세 이상	8.0	13.9	39.8	49.0	52.2	37.1	100.0	274	310
소득	$\chi^2 = 4.731$ (2004) / $\chi^2 = 19.677^*$ (2011)								
전체	9.8	16.3	40.5	49.6	49.7	34.2	100.0	1478	1481
100만원 이하	8.9	11.7	44.4	48.3	46.8	40.0	100.0	124	60
101-200만원 이하	8.5	10.5	39.6	51.0	51.9	38.6	100.0	445	210
201-300만원 이하	11.4	20.5	40.0	47.3	48.7	32.2	100.0	528	444
301-400만원 이하	10.4	17.9	41.8	51.5	47.8	30.6	100.0	249	458
401만원 이상	7.6	12.6	40.2	49.2	52.3	38.2	100.0	132	309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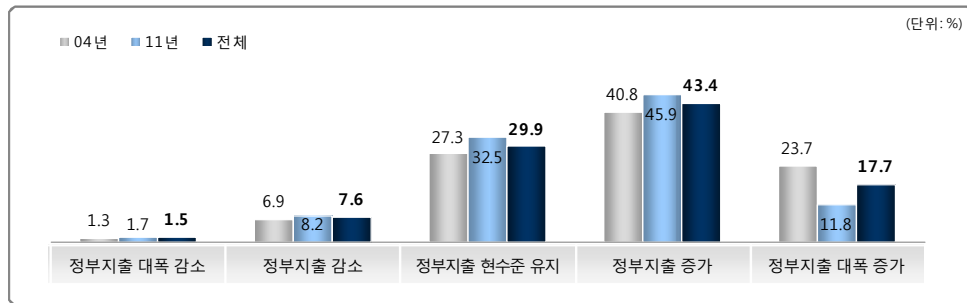
라. 교육 분야

교육분야 지출에 대해서는 2004년의 경우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다른세대에 비해 감소를 지지하는 응답율은 높고 증가를 지지하는 응답율은 낮았으며, 2011년의 경우 20대 청년층에서 감소에 대한 지지율은 가장 낮고 찬성 지지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소득에 따라서는 2004년의 경우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이 증가에 찬성하는

응답율이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의 경우 소득이 낮은 20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 증가에 찬성하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3-38] 정부 지출증감 : 교육분야



〈표 3-37〉 연령 및 소득별 교육분야 지출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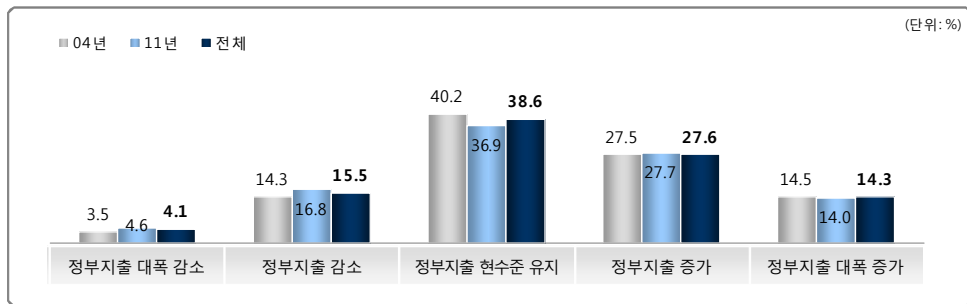
구분	감소		현수준		증가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 = 14.923^{**}$)	8.2	9.9	27.3	32.5	64.5	57.6	100.0	1489	1497
연령	$\chi^2 = 9.326$ (2004) / $\chi^2 = 4.701$ (2011)								
전체	8.2	9.9	27.3	32.5	64.5	57.6	100.0	1488	1497
20대	7.8	7.4	26.2	30.9	66.0	61.7	100.0	321	269
30대	7.6	11.4	26.1	31.0	66.4	57.6	100.0	357	316
40대	7.8	10.5	25.8	34.5	66.4	55.0	100.0	333	333
50대	7.9	9.4	25.6	33.0	66.5	57.7	100.0	203	267
60세 이상	10.2	10.3	33.2	32.7	56.6	57.1	100.0	274	312
소득	$\chi^2 = 9.230$ (2004) / $\chi^2 = 7.172$ (2011)								
전체	8.2	9.9	27.3	32.5	64.5	57.6	100.0	1489	1491
100 만원 이하	8.7	10.0	31.0	26.7	60.3	63.3	100.0	126	60
101-200 만원 이하	8.8	7.1	25.8	30.2	65.4	62.7	100.0	445	212
201-300 만원 이하	8.0	11.4	28.5	33.6	63.4	55.0	100.0	536	447
301-400 만원 이하	9.7	10.4	28.2	34.1	62.1	55.5	100.0	248	461
401 만원 이상	3.7	9.0	22.4	31.2	73.9	59.8	100.0	134	311

**p<.01

마. 국방 분야

국방분야 지출에 대해서는 2011년의 경우 세대 및 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50대 이상에서는 국방분야 지출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율이 높았으며, 소득에 따라서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집단에서 지출증가에 찬성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격히 높았다. 전반적으로 볼때 40대 이하 청장년층에서 국방분야 지출의 감소를 지지하고 있었으며, 소득에 따라서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집단에서 2004년 2011년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3-39] 정부 지출증감 : 국방 분야



〈표 3-38〉 연령 및 소득별 국방분야 지출증감

구분	감소		현수준		증가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6.949^*$)	17.8	21.3	40.2	36.9	42.0	41.8	100.0	1479	1485
연령	$\chi^2=14.988$ (2004) / $\chi^2=15.802^*$ (2011)								
전체	17.8	21.3	40.3	36.9	42.0	41.8	100.0	1480	1485
20대	20.6	22.0	39.1	38.4	40.3	39.6	100.0	320	268
30대	18.9	24.1	41.2	41.0	39.8	34.9	100.0	354	315
40대	18.2	22.0	39.7	38.4	42.1	39.6	100.0	330	328
50대	17.4	19.7	32.8	33.3	49.8	47.0	100.0	201	264
60세 이상	12.7	18.7	46.5	32.9	40.7	48.4	100.0	275	310
소득	$\chi^2=10.385$ (2004) / $\chi^2=18.303^*$ (2011)								
전체	17.8	21.4	40.2	36.8	42.0	41.7	100.0	1479	1479
100 만원 이하	15.1	8.3	45.2	30.0	39.7	61.7	100.0	126	60
101-200 만원 이하	14.8	21.4	42.0	35.0	43.2	43.7	100.0	440	206
201-300 만원 이하	18.6	22.1	37.8	36.9	43.6	41.0	100.0	532	444
301-400 만원 이하	19.0	23.5	40.9	39.9	40.1	36.6	100.0	247	459
401 만원 이상	24.6	20.0	38.1	34.8	37.3	45.2	100.0	134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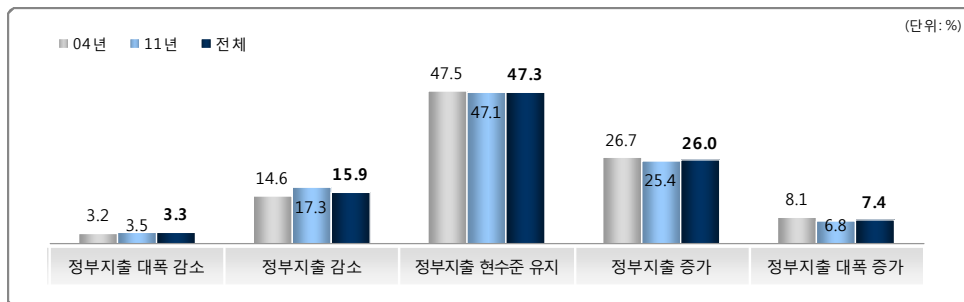
* $p<.05$

바. 문화예술 분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출은 세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2004년의 경우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현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고 다른세대에 비해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20~30대에서 문화예술분야 지출 증가에 대한 찬성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별로는 2004년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집단은 증가에 대한 찬성율이 낮았으며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이 지출증가에 대한 찬성율이 다른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011년의 경우에도 소득이 낮은 경우 지출감소에 지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3-40] 정부 지출증감 : 문화·예술분야



〈표 3-39〉 연령 및 소득별 문화예술 분야 지출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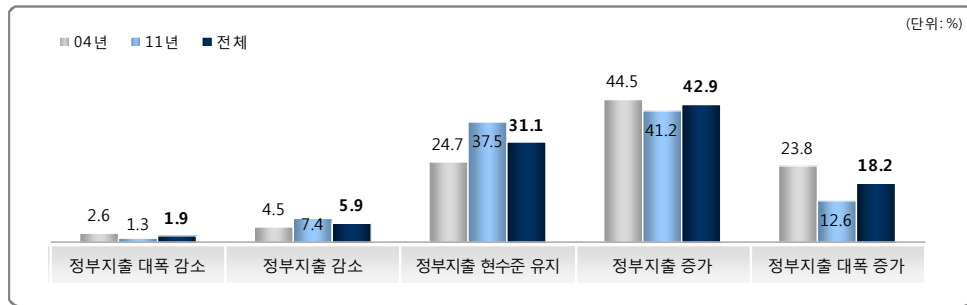
구분	감소		현수준		증가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5.119$)	17.7	20.8	47.5	47.1	34.8	32.1	100.0	1466	1487
연령	$\chi^2=10.990$ (2004) / $\chi^2=14.754$ (2011)								
전체	17.7	20.8	47.4	47.1	34.8	32.1	100.0	1467	1487
20대	17.8	17.2	43.8	46.3	38.4	36.6	100.0	320	268
30대	15.3	19.1	46.2	45.9	38.5	35.0	100.0	353	314
40대	19.8	21.5	46.5	45.5	33.7	33.0	100.0	329	330
50대	18.0	20.6	49.5	53.9	32.5	25.5	100.0	200	267
60세 이상	18.1	25.0	53.2	44.8	28.7	30.2	100.0	265	308
소득	$\chi^2=15.567^*$ (2004) / $\chi^2=7.837$ (2011)								
전체	17.7	20.8	47.4	47.1	34.8	32.1	100.0	1465	1481
100 만원 이하	22.1	28.1	55.7	40.4	22.1	31.6	100.0	122	57
101-200 만원 이하	16.1	19.9	48.9	49.3	35.1	30.8	100.0	436	211
201-300 만원 이하	19.0	24.0	47.1	44.3	34.0	31.7	100.0	527	445
301-400 만원 이하	17.7	18.6	44.4	49.1	37.9	32.3	100.0	248	458
401 만원 이상	14.4	18.7	42.4	47.7	43.2	33.5	100.0	132	310

* $p<.05$

사.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세대에 따른 차이는 2004년에만 나타났으며 소득에 따른 차이는 2004년 2011년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국민연금 분야의 지출을 증가에 대한 찬성율이 다른세대에 비해 현격하게 높았으며 20대의 경우는 낮게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는 60대 이상에서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지출증가에 대한 찬성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4년 2011년 모두 유사하였다.

[그림 3-41] 정부 지출증감 : 국민연금 분야



〈표 3-40〉 연령 및 소득별 국민연금 분야 지출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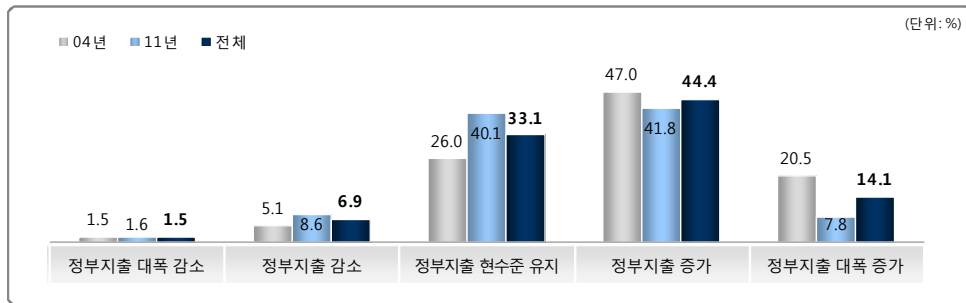
구분	감소		현수준		증가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67.462^{***}$)	7.0	8.6	24.7	37.5	68.3	53.8	100.0	1480	1495
연령	$\chi^2 = 17.224^* (2004) / \chi^2 = 7.877 (2011)$								
전체	7.0	8.6	24.7	37.5	68.2	53.8	100.0	1480	1495
20대	9.4	8.2	27.2	36.6	63.4	55.2	100.0	320	268
30대	7.1	10.4	23.1	36.4	69.8	53.2	100.0	351	316
40대	6.3	9.7	28.1	36.3	65.6	54.1	100.0	331	331
50대	7.9	9.7	26.2	37.8	65.8	52.4	100.0	202	267
60세 이상	4.3	5.1	18.8	40.6	76.8	54.3	100.0	276	313
소득	$\chi^2 = 13.004 (2004) / \chi^2 = 5.372 (2011)$								
전체	7.0	8.6	24.7	37.5	68.3	53.9	100.0	1480	1489
100만원 이하	4.0	3.3	22.6	35.0	73.4	61.7	100.0	124	60
101-200만원 이하	7.2	8.0	21.6	37.3	71.2	54.7	100.0	444	212
201-300만원 이하	9.0	10.1	25.0	38.8	66.0	51.1	100.0	532	446
301-400만원 이하	4.9	8.5	29.6	37.8	65.6	53.7	100.0	247	460
401만원 이상	5.3	8.0	26.3	36.0	68.4	55.9	100.0	133	311

* $p<0.05$, *** $p<0.001$

아. 고용보험 분야

고용보험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2004년에는 세대 및 소득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1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지출증가에 대한 찬성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집단과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의 지출증가에 대한 찬성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2] 정부 지출증감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분야)



〈표 3-41〉 연령 및 소득별 고용보험 분야 지출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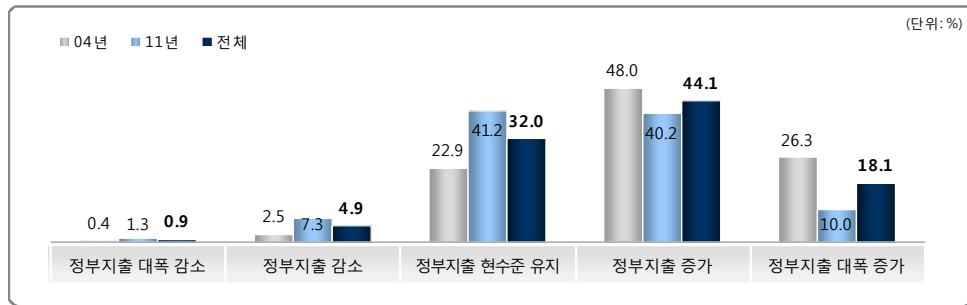
구분	감소		현수준		증가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98.007^{***}$)	6.6	10.3	25.9	40.1	67.5	49.6	100.0	1477	1492
연령	$\chi^2 = 11.086$ (2004) / $\chi^2 = 22.859^{**}$ (2011)								
전체	6.6	10.3	25.9	40.1	67.5	49.6	100.0	1477	1492
20대	6.6	9.4	25.4	34.5	68.0	56.2	100.0	319	267
30대	7.3	9.2	25.1	39.2	67.5	51.6	100.0	354	316
40대	8.8	14.5	28.1	37.3	63.1	48.2	100.0	331	332
50대	5.4	10.5	28.6	48.3	66.0	41.2	100.0	203	267
60세 이상	3.7	7.4	23.0	41.9	73.3	50.6	100.0	270	310
소득	$\chi^2 = 3.653$ (2004) / $\chi^2 = 17.433^*$ (2011)								
전체	6.5	10.3	25.9	40.2	67.5	49.5	100.0	1476	1486
100만원 이하	3.3	15.5	26.0	29.3	70.7	55.2	100.0	123	58
101-200만원 이하	7.3	8.5	24.5	45.5	68.3	46.0	100.0	441	211
201-300만원 이하	6.2	11.9	26.6	39.7	67.2	48.4	100.0	534	446
301-400만원 이하	7.3	11.5	26.9	41.9	65.7	46.6	100.0	245	461
401만원 이상	6.8	6.5	26.3	37.1	66.9	56.5	100.0	133	310

* $p<.05$, ** $p<.01$, *** $p<.001$

자. 공적부조 분야

공적부조 지출에 대해서는 세대 및 소득에 따라 2004년 2011년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증가에 대한 찬성율이 높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43] 정부 지출증감 : 저소득층 생계지원(공적부조) 분야



〈표 3-42〉 연령 및 소득별 공적부조 지출증감

구분	감소		현수준		증가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chi^2=189.831^{***}$)	2.9	8.6	22.9	41.2	74.2	50.2	100.0	1487	1496
연령	$\chi^2=11.064$ (2004) / $\chi^2=9.193$ (2011)								
전체	2.9	8.6	22.8	41.2	74.3	50.2	100.0	1488	1496
20대	2.2	7.4	25.8	45.0	72.0	47.6	100.0	318	269
30대	2.8	9.2	21.6	38.6	75.6	52.2	100.0	357	316
40대	3.6	7.3	22.1	40.8	74.3	52.0	100.0	335	331
50대	5.5	12.4	22.4	40.8	72.1	46.8	100.0	201	267
60세 이상	1.1	7.3	22.4	41.2	76.5	51.4	100.0	277	313
소득	$\chi^2=7.388$ (2004) / $\chi^2=9.469$ (2011)								
전체	2.9	8.7	22.9	41.3	74.2	50.0	100.0	1488	1490
100 만원 이하	3.2	13.3	19.0	28.3	77.8	58.3	100.0	126	60
101-200 만원 이하	2.9	6.6	21.3	44.3	75.7	49.1	100.0	445	212
201-300 만원 이하	3.0	7.8	22.4	42.8	74.6	49.3	100.0	535	446
301-400 만원 이하	3.2	8.5	24.6	39.7	72.2	51.8	100.0	248	461
401 만원 이상	1.5	10.6	30.6	42.1	67.9	47.3	100.0	134	311

***p<.001

3. 정부지출에 대한 국제비교

정부지출 증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현수준 유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으나 분야별 및 국가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찬성도가 높았는데 스웨덴의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분야의 경우도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찬성도가 모든 국가에서 높았으며 독일과 미국의 경우는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는 비율도 40%를 넘어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국가에서 가장 많았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지율보다는 감소시켜야 한다는 지지율이 높았다. 환경과 경찰분야도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방분야의 경우는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국가에서 높았으며 증가보다는 감소시켜야 한다는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분야의 경우는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모든 국가에서 높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 모두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고용보험의 현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많았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은 반면 고용보험은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2011년에는 정부지출의 증가에 대한 찬성도가 낮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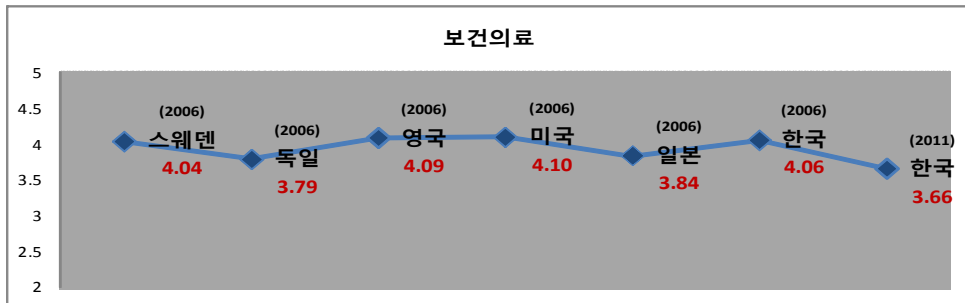
〈표 3-43〉 정부지출 관련 정부책임 국제비교 1

		ISSP 2006						2011	χ^2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한국	
보건·의료	대폭 감소	0.2	0.8	0.3	1.1	3.0	0.1	0.5	985.948 ***
	감소	1.4	5.1	1.1	4.9	6.4	1.9	6.8	
	현수준	18.6	28.4	16.4	13.8	25.9	16.8	34.4	
	증가	54.6	46.2	53.3	43.7	33.3	54.5	43.1	
	대폭 증가	25.3	19.5	28.8	36.5	31.4	26.7	15.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69	1596	895	1505	1137	1561	1493	
교육	대폭 감소	0.3	0.2	0.2	0.7	3.1	0.6	1.7	1154.541 ***
	감소	3.2	1.9	0.7	3.3	3.5	6.6	8.2	
	현수준	43.6	15.6	26.5	13.4	40.6	21.7	32.5	
	증가	39.6	41.1	50.7	41.8	31.6	44.2	45.9	
	대폭 증가	13.3	41.3	21.9	40.8	21.2	26.9	11.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54	1599	887	1511	1112	1562	1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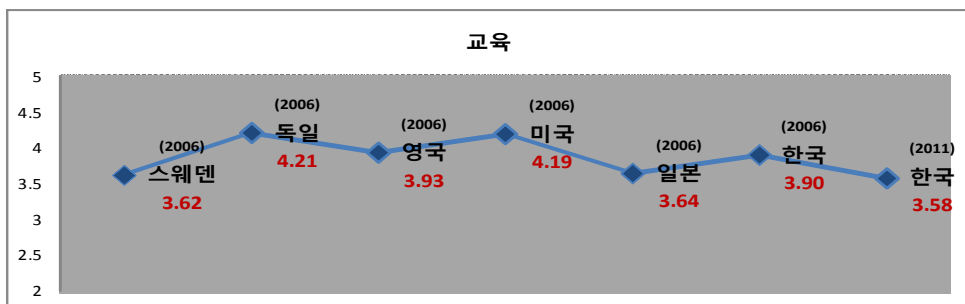
		ISSP 2006						2011	χ^2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한국	
문화·예술	대폭 감소	12.9	10.2	16.5	7.1	11.7	1.9	3.5	821.413 ***
	감소	24.8	25.6	30.9	22.6	14.1	9.2	17.3	
	현수준	49.2	46.3	41.4	46.1	53.0	50.0	47.1	
	증가	10.6	14.1	9.1	19.4	13.0	30.1	25.4	
	대폭 증가	2.5	3.7	2.1	4.8	8.1	8.7	6.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38	1542	865	1488	1035	1537	1487	
환경	대폭 감소	1.1	1.5	0.3	2.5	2.7	0.9	0.9	726.134 ***
	감소	5.9	9.1	2.9	10.5	4.3	4.2	8.7	
	현수준	50.9	51.8	40.0	33.1	34.8	21.5	42.2	
	증가	31.9	26.5	44.0	36.4	31.6	50.0	35.6	
	대폭 증가	10.2	11.1	12.8	17.6	26.6	23.4	12.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42	1579	868	1487	1087	1560	1488	
경찰	대폭 감소	0.8	1.2	0.7	1.3	8.6	0.5	2.0	1070.08 7***
	감소	1.6	6.8	2.5	6.7	13.7	3.4	14.3	
	현수준	29.5	47.5	33.9	36.2	50.1	32.3	49.5	
	증가	49.6	31.8	46.7	39.5	17.6	44.4	25.8	
	대폭 증가	18.5	12.6	16.2	16.3	10.0	19.4	8.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59	1583	882	1502	1045	1558	1487	
국방	대폭 감소	17.3	19.5	6.8	6.3	17.3	4.1	4.6	1091.75 6***
	감소	31.0	36.0	17.2	21.0	19.8	16.5	16.8	
	현수준	39.8	32.8	45.0	36.2	42.4	42.0	36.9	
	증가	9.2	8.9	21.9	23.8	11.9	25.9	27.7	
	대폭 증가	2.8	2.8	9.2	12.6	8.6	11.5	14.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24	1557	873	1497	1048	1554	1485	
국민연금	대폭 감소	0.4	1.1	0.1	1.3	3.0	1.0	1.3	533.546 ***
	감소	2.8	5.0	1.6	5.8	3.8	3.5	7.4	
	현수준	35.8	42.3	23.9	28.4	36.9	18.0	37.5	
	증가	44.0	36.1	48.7	39.6	31.1	52.4	41.2	
	대폭 증가	16.9	15.4	25.8	24.9	25.3	25.1	12.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45	1590	897	1488	1114	1553	1495	
고용보험	대폭 감소	4.5	2.7	9.3	1.8	8.1	3.5	1.6	861.670 ***
	감소	18.8	15.3	29.3	12.2	11.4	9.5	8.6	
	현수준	51.3	49.1	45.8	49.1	52.2	35.2	40.1	
	증가	19.1	23.7	11.8	25.5	17.9	38.3	41.8	
	대폭 증가	6.3	9.2	3.8	11.4	10.3	13.5	7.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51	1571	861	1489	1032	1544	1492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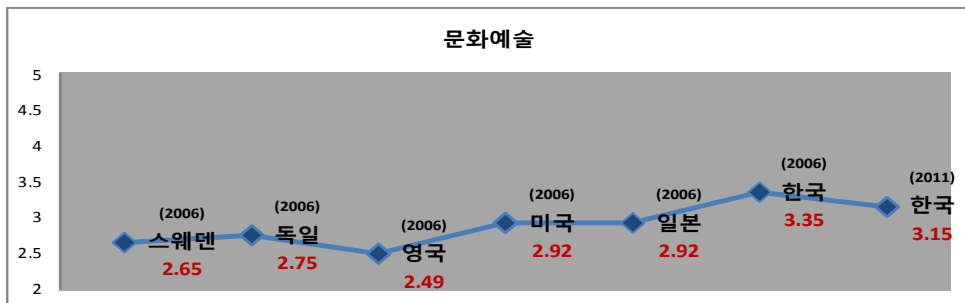
[그림 3-44]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보건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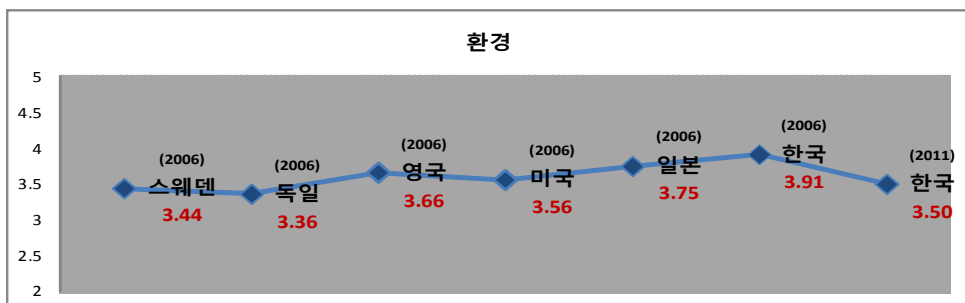
[그림 3-45]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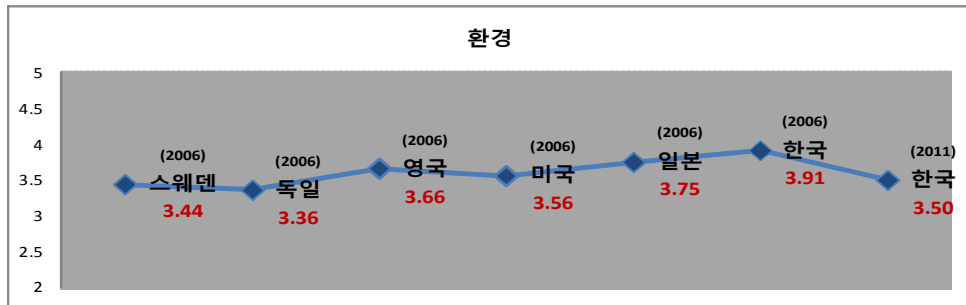
[그림 3-46]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문화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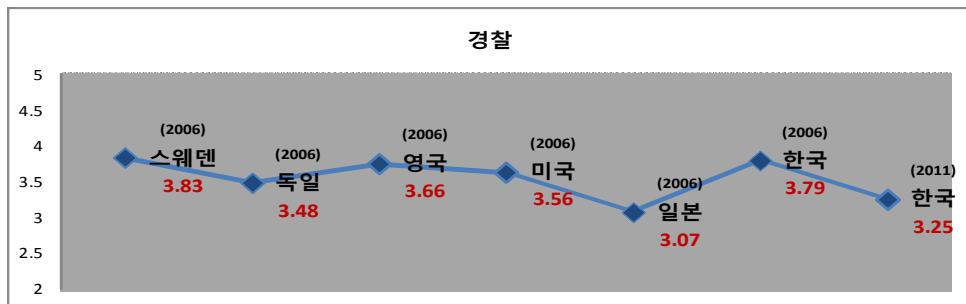
[그림 3-47]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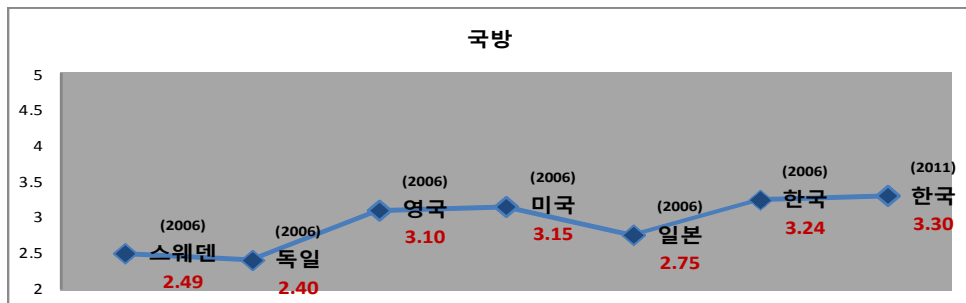
[그림 3-48]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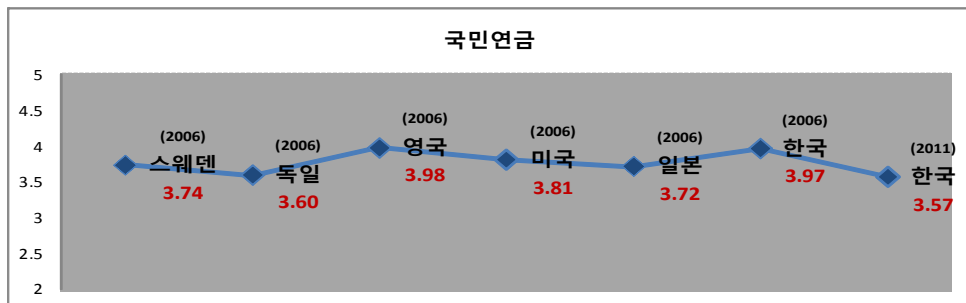
[그림 3-49]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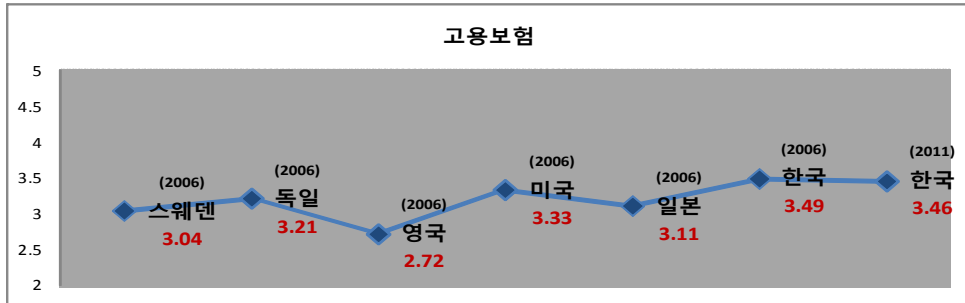
[그림 3-50]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국방



[그림 3-51]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국민연금



[그림 3-52] 정부 지출증감 국제비교 : 고용보험



〈표 3-44〉 정부지출 관련 정책 국제비교 2(평균점수 비교)

		ISSP 2006년						2011	전체	F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2006	한국 2011		
보건·의료	Mean	4.04	3.79	4.09	4.10	3.84	4.06	3.66	3.93	258.056***
	(SD)	0.71	0.84	0.72	0.89	1.04	0.72	0.83	0.85	
	scheffé	c	b	c	c	b	c	a	-	
교육	Mean	3.62	4.21	3.93	4.19	3.64	3.90	3.58	3.89	599.061***
	(SD)	0.77	0.78	0.73	0.84	0.95	0.89	0.86	0.88	
	scheffé	a	c	b	c	a	b	a	-	
문화·예술	Mean	2.65	2.75	2.49	2.92	2.92	3.35	3.15	2.93	637.178***
	(SD)	0.92	0.95	0.94	0.94	1.03	0.84	0.90	0.96	
	scheffé	b	b	a	c	c	e	d	-	
환경	Mean	3.44	3.36	3.66	3.56	3.75	3.91	3.50	3.59	307.684***
	(SD)	0.80	0.85	0.75	0.98	0.98	0.83	0.85	0.89	
	scheffé	ab	a	cd	bc	d	e	b	-	
경찰	Mean	3.83	3.48	3.75	3.63	3.07	3.79	3.25	3.54	615.411***
	(SD)	0.77	0.84	0.78	0.88	1.03	0.81	0.87	0.89	
	scheffé	e	c	e	d	a	e	b	-	
국방	Mean	2.49	2.40	3.10	3.15	2.75	3.24	3.30	2.93	1143803***
	(SD)	0.97	0.99	1.01	1.09	1.14	1.00	1.05	1.09	
	scheffé	a	a	c	cd	b	cd	d	-	
국민연금	Mean	3.74	3.60	3.98	3.81	3.72	3.97	3.57	3.76	219.673***
	(SD)	0.78	0.85	0.75	0.92	0.98	0.81	0.85	0.87	
	scheffé	b	a	c	b	b	c	a	-	
고용보험	Mean	3.04	3.21	2.72	3.33	3.11	3.49	3.46	3.24	475.849***
	(SD)	0.90	0.91	0.93	0.89	1.01	0.96	0.82	0.94	
	scheffé	b	cd	a	de	bc	ef	f	-	

* p<.05, **p<.01, ***p<.001/ a,b,c,d,e 다른 집단임

제6절 부의 재분배 정도에 대한 견해

1. 조세부담

가. 가족의 소득세 수준

가족의 소득세 부담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04년과 '11년 모두 50%를 넘어 대체적으로 소득세 수준은 높은 편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다음은 적당하다는 응답으로 30% 전후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 비해 2011년의 경우 너무 높다는 비율이 16.8%에서 5.7%로 상당히 감소했고, 적당하다는 응답은 27.2%에서 34.2%로 증가하여 지난 7년전에 비해 조세 부담은 약간 감소한 추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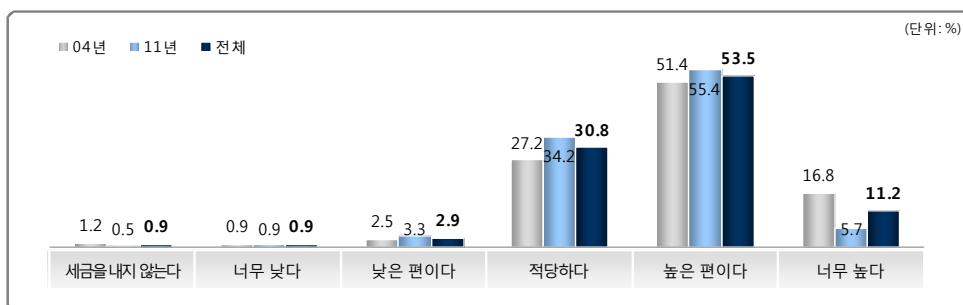
〈표 3-45〉 가족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

(단위: 명, %)

구분	2004년		2011년		전 체		χ ²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세금을 내지 않는다	18	1.2	8	0.5	26	0.9	100.245***
너무 낮다	13	0.9	13	0.9	26	0.9	
낮은 편이다	35	2.5	48	3.3	83	2.9	
적당하다	391	27.2	503	34.2	894	30.8	
높은 편이다	739	51.4	814	55.4	1,553	53.5	
너무 높다	241	16.8	83	5.7	324	11.2	
전 체	1,437	100.0	1,469	100.0	2,906	100.0	32.805***
Mean(SD)	4.77(0.873)		4.60(0.733)		4.69(0.810)		

***p<.001

[그림 3-53] 가족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



〈표 3-4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

(단위: %, 명)

구 분			너무 낮다	적당 하다	너무 높다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성 별	남자	2004년	3.6	32.4	64.0	700	1419	0.800
		2011년	3.6	34.6	61.8	719		
	여자	2004년	3.2	22.8	74.0	719	1461	27.842***
		2011년	4.7	34.2	61.1	742		
연 령 별	20대	2004년	3.8	30.6	65.6	288	547	1.810
		2011년	3.9	35.9	60.2	259		
	30대	2004년	4.0	27.0	69.0	348	661	4.333
		2011년	4.5	34.2	61.3	313		
	40대	2004년	1.8	27.6	70.6	326	648	7.393**
		2011년	4.7	33.2	62.1	322		
	50대	2004년	4.6	25.1	70.3	195	459	4.757*
		2011년	3.4	34.5	62.1	264		
	60세 이상	2004년	3.4	26.2	70.3	263	566	5.376*
		2011년	4.3	34.7	61.1	303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5.0	25.7	69.4	222	387	3.239
		2011년	6.1	33.3	60.6	165		
	고등학교 졸업	2004년	3.1	24.8	72.1	576	1279	12.789**
		2011년	4.3	33.1	62.6	703		
	전문대 졸업	2004년	2.9	29.9	67.2	174	357	1.684
		2011년	3.3	36.1	60.7	183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3.1	30.8	66.1	448	858	3.392
		2011년	3.7	36.3	60.0	410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4.2	30.9	65.0	311	601	2.618
		2011년	4.5	36.9	58.6	290		
	유배우	2004년	3.0	26.3	70.8	1046	2157	16.953***
		2011년	4.0	33.7	62.4	1111		
	사별+이혼 +별거	2004년	6.6	31.2	62.3	61	121	n/a
		2011년	6.7	36.7	56.7	60		
지 위 별	상용직 +고용주	2004년	3.1	28.5	68.4	582	1123	6.437**
		2011년	4.1	34.8	61.2	541		
	임시직 +일용직	2004년	7.9	25.8	66.3	89	207	0.175
		2011년	6.8	28.0	65.3	118		
	자영업자	2004년	2.3	27.4	70.3	303	628	7.040**
		2011년	3.7	36.0	60.3	325		
	전업주부	2004년	2.2	21.1	76.7	270	624	16.072***
		2011년	4.0	34.5	61.6	354		
	무급가족중 사자및기타	2004년	5.2	35.1	59.8	174	297	0.205
		2011년	4.1	35.0	61.0	123		

구 분			너무 낮다	적당 하다	너무 높다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월 평 균 소 득 별	100만 이하	2004년	5.2	26.7	68.1	116	172	3.951
		2011년	10.7	35.7	53.6	56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2.6	24.2	73.2	421	627	8.573**
		2011년	6.8	28.6	64.6	206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3.1	30.2	66.7	514	956	5.085*
		2011년	4.1	36.2	59.7	442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2.9	30.7	66.4	244	690	2.979
		2011년	2.9	37.2	59.9	446		
지 역 별	400만 이상	2004년	5.6	22.4	72.0	125	430	4.343
		2011년	3.3	31.5	65.3	305		
	대도시	2004년	4.6	30.4	65.0	691	1379	2.514
		2011년	3.1	32.0	65.0	688		
	중·소도 시	2004년	2.5	23.2	74.2	441	757	30.140***
		2011년	4.9	36.2	59.0	316		
	군지역	2004년	1.5	31.1	67.4	135	372	6.610**
		2011년	5.9	37.6	56.5	237		

* p<.05, **p<.01, ***p<.001

전체 연령별로는 차이는 '04년과 '11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소득별 차이는 '11년만 유의하였다. 101-200만원과 400만원 이상이 소득세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100만원 이하는 상대적으로 소득세가 낮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3-47〉 연령 및 소득별 소득세 수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낮다		적당하다		높다		계	사례수		χ^2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 체	3.5	4.2	27.5	34.4	69.1	61.4	100.0	1420	1455	5.923 ('04) 1.110 ('11)
연령별										
20대	3.8	3.9	30.6	35.9	65.6	60.2	100.0	288	259	
30대	4.0	4.5	27.0	34.2	69.0	61.3	100.0	348	313	
40대	1.8	4.7	27.6	33.2	70.6	62.1	100.0	326	322	
50대	4.6	3.4	25.1	34.5	70.3	62.1	100.0	195	264	
60대 이상	3.4	4.3	26.2	34.7	70.3	61.1	100.0	263	303	
소득별	3.3	4.2	27.5	34.4	69.2	61.4	100.0	1420	1455	10.952 ('04) 17.588* ('11)
100만원 이 하	5.2	10.7	26.7	35.7	68.1	53.6	100.0	116	56	
101-200만원	2.6	6.8	24.2	28.6	73.2	64.6	100.0	421	206	
201-300만원	3.1	4.1	30.2	36.2	66.7	59.7	100.0	514	442	
301-400만원	2.9	2.9	30.7	37.2	66.4	59.9	100.0	244	446	
400만원 이상	5.6	3.3	22.4	31.5	72.0	65.2	100.0	125	305	

주: 반대=매우반대+반대 / 찬성=찬성+매우찬성

* p<.05

나. 기업의 조세수준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수준은 2004년에는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던 반면, 2011년에는 적당하다와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동일한 29.0%로 파악되었고, 조세수준이 낮다는 응답도 '04년 28.0%, '11년 24.8%로 소득세와는 달리 기업의 조세수준은 높은 편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 평균은 5점 척도로 했을 때 '04년 3.05에서 '11년 2.82로 약간 감소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성,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거주지역 등에서 볼 때 집단별 차이가 거의 유의하였고, 2011년의 경우가 기업의 조세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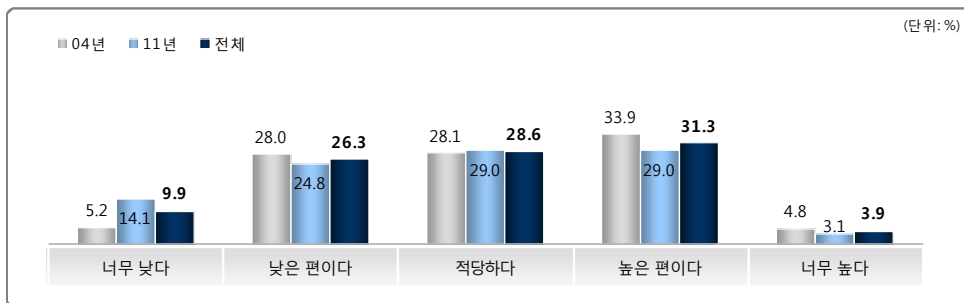
〈표 3-48〉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수준 비교

(단위: %, 명)

구분	2004년		2011년		전 체		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너무 낮다	68	5.2	200	14.1	268	9.9	66.498***
낮은 편이다	363	28.0	353	24.8	716	26.3	
적당하다	363	28.1	413	29.0	776	28.6	
높은 편이다	439	33.9	412	29.0	851	31.3	
너무 높다	62	4.8	44	3.1	106	3.9	
전 체	1,295	100.0	1,422	100.0	2,717	100.0	
MeanSD)	3.05(1.009)		2.82(1.092)		2.93(1.060)		31.786***

***p<.001

[그림 3-54]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수준



〈표 3-4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수준 비교

(단위: %, 명)

구 분			너무 낮다	낮은 편임	적당 하다	높은 편임	너무 높다	사례수	전체	χ^2
성 별	남자	2004	5.0	28.5	28.8	33.0	4.7	660	1364	45.644***
		2011	15.9	22.9	28.3	29.8	3.1	704		
	여자	2004	5.5	27.6	27.2	34.8	4.9	635	1353	25.354***
		2011	12.3	26.7	29.8	28.1	3.1	718		
연 령 별	20대	2004	5.7	23.4	35.8	31.2	3.9	282	532	17.252**
		2011	15.6	26.8	27.2	26.8	3.6	250		
	30대	2004년	4.2	31.1	27.6	31.1	6.1	312	616	33.809***
		2011년	17.4	21.1	27.6	30.6	3.3	304		
	40대	2004년	4.4	30.9	25.8	34.2	4.7	298	617	14.226**
		2011년	10.7	22.9	31.4	31.7	3.5	319		
	50대	2004년	6.6	28.2	24.9	35.9	4.4	181	439	8.72*
		2011년	14.0	26.0	28.3	29.5	2.3	258		
	60세 이상	2004년	6.3	25.7	24.8	38.7	4.5	222	513	15.156**
		2011년	13.1	28.2	30.2	25.8	2.8	291		
학 력 별	중졸 이하	2004년	6.3	29.3	26.7	33.5	4.2	191	347	7.087
		2011년	12.2	27.6	31.4	23.7	5.1	156		
	고졸	2004년	5.1	27.8	25.1	35.6	6.3	525	1219	35.316***
		2011년	12.5	26.2	29.1	30.0	2.2	694		
	전문대 졸업	2004년	5.3	25.3	37.1	28.8	3.5	170	348	16.115**
		2011년	19.1	24.2	30.9	21.9	3.9	178		
	대졸 이상	2004년	4.7	28.9	28.6	34.2	3.7	409	803	27.391***
		2011년	15.2	21.6	27.2	32.5	3.6	394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5.3	26.7	34.0	29.4	4.6	303	587	21.138***
		2011년	16.9	25.7	27.5	26.4	3.5	284		
	유배우	2004년	5.0	28.6	26.5	35.1	4.8	942	2026	46.048***
		2011년	12.9	24.8	29.2	29.9	3.1	1084		
지 위 별	사별+이 혼+별거	2004년	10.0	24.0	22.0	38.0	6.0	50	104	n/a
		2011년	22.2	20.4	33.3	24.1	0.0	54		
	상용직 +고용주	2004년	4.4	28.2	27.1	35.6	4.6	542	1065	45.136***
		2011년	16.3	24.9	27.9	28.5	2.5	523		
	임시직 +일용직	2004년	13.1	26.2	31.0	26.2	3.6	84	201	5.079
		2011년	12.0	17.1	29.1	32.5	9.4	117		
	자영업 자	2004년	4.0	25.5	27.3	39.2	4.0	278	590	19.251***
		2011년	14.4	22.8	26.3	32.7	3.9	312		
	전업주 부	2004년	5.7	30.4	25.7	32.2	6.1	230	580	17.215**
		2011년	10.0	28.9	32.3	27.7	1.1	350		
	무급가족 종사자 및 기타	2004년	5.5	28.8	34.4	25.2	6.1	163	283	11.183**
		2011년	17.5	25.8	31.7	21.7	3.3	120		

구 분			너무 낮다	낮은 편임	적당 하다	높은 편임	너무 높다	사례수	전체	χ^2
월 평 균 소 득 별	100 만원 이하	2004년	4.7	29.3	34.0	27.4	4.7	106	159	NA
		2011년	17.0	24.5	32.1	17.0	9.4	53		
	101-200 만원이하	2004년	4.9	29.6	27.6	33.8	4.1	388	585	5.642
		2011년	9.6	28.4	28.4	28.9	4.6	197		
	201-300 만원이하	2004년	6.4	27.5	28.1	33.3	4.7	469	897	14.960**
		2011년	13.6	25.0	29.7	28.3	3.5	428		
	301-400 만원이하	2004년	3.6	27.6	30.3	34.4	4.1	221	665	20.706***
		2011년	13.7	21.0	32.9	30.4	2.0	444		
지 역 별	401 만원 이상	2004년	5.4	23.4	19.8	42.3	9.0	111	405	22.191***
		2011년	17.0	28.2	22.5	30.3	2.0	294		
	대도시	2004년	4.1	27.0	29.3	35.2	4.5	642	1320	35.256***
		2011년	12.1	28.3	29.1	26.1	4.4	678		
	중·소 도시	2004년	7.3	28.3	26.3	32.0	6.2	537	1048	27.801***
		2011년	13.5	21.3	30.3	32.9	2.0	511		
	군지역	2004년	2.6	32.5	29.1	35.0	0.9	117	350	n/a
		2011년	21.0	22.3	26.2	28.8	1.7	233		

* p<.05, **p<.01, ***p<.001

연령 전체 및 소득전체를 비교했을 때 지난 7년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50〉 연령 및 소득별 기업조세 수준 비교

(단위: %, 명)

구 분	낮다		적당하다		높다		계	사례수		χ^2
	2004	2011	2001	2011	2004	2011		2004	2011	
전 체	33.2	38.9	28.1	29.0	35.3	32.1	100.0	1296	1422	
연령별										
20대	29.0	42.4	35.7	27.2	35.3	30.4	100.0	283	250	12.898 (‘04) 7.508 (‘11)
30대	35.0	38.5	27.7	27.6	37.3	33.9	100.0	311	304	
40대	35.2	33.5	25.8	31.3	38.9	35.1	100.0	298	319	
50대	34.8	39.9	24.9	28.3	40.3	31.8	100.0	181	258	
60대 이상	31.8	41.2	24.7	30.2	43.5	28.5	100.0	223	291	
소득별	33.3	38.8	28.1	29.1	38.7	32.1	100.0	1296	1416	
100만원 이 하	33.6	41.5	33.6	32.1	32.7	26.4	100.0	107	53	10.940 (‘04) 12.797 (‘11)
101-200만원	34.5	38.1	27.6	28.4	37.9	33.5	100.0	388	197	
201-300만원	34.0	38.6	28.2	29.7	37.8	31.8	100.0	486	428	
301-400만원	31.2	34.7	30.3	32.9	38.5	32.4	100.0	221	444	
400만원 이상	29.5	45.2	19.6	22.4	50.9	32.3	100.0	112	294	

주. 반대=매우반대+반대, 찬성=찬성+매우찬성

2. 복지지출과 조세

가. 사회복지지출과 세금수준

사회복지지출과 세금수준에 있어서는 지난 7년간 커다란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4년에는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이 56.8%로 세금을 줄이지는 의견에 비해 응답율이 더 높았던 반면, 2011년에는 반대로 사회복지 지출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이 55.1%로 더 높았다. 즉 복지지출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11.9%p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일반국민들 사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약간 더 많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집단의 적극적인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나, 실제로 국민들의 바램은 적은 복지와 세금의 인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상과는 달리 '11년에는 20대와 30~40대는 사회복지지출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60대는 세금이 늘더라도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49.5%나 되고 있다. 즉, 60대 이상의 경우는 노후를 위한 보장을 세금을 통해서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결혼상태는 미혼 및 유배우자일수록, 고용상태는 자영업자의 경우가, 월평균소득은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거주의 경우가 세금을 줄이는 것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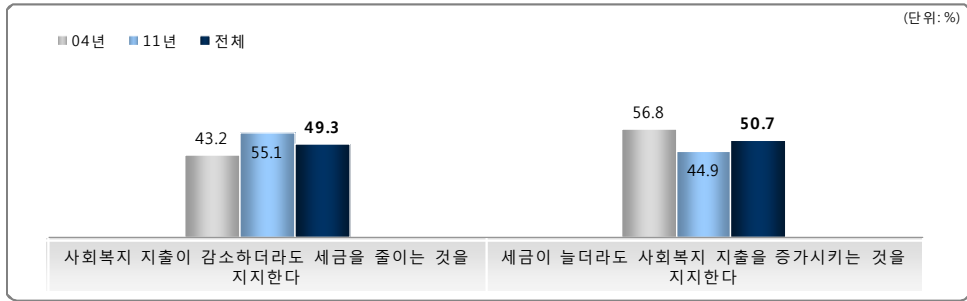
〈표 3-51〉 사회복지지출 및 세금수준 비교

(단위: 명, %)

구분	2004년		2011년		전 체		X ²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회복지 지출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	605	43.2	796	55.1	1,401	49.3	40.568***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796	56.8	648	44.9	1,444	50.7	
전 체	1,401	100.0	1,444	100.0	2,845	100.0	

***p<.001

[그림 3-55] 사회복지지출 및 세금수준 비교



〈표 3-5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복지지출 및 세금수준 비교

(단위: %, 명)

구분			세금감소 지출감소	세금증가 지출증가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성 별	남자	2004년	40.4	59.6	708	1422	34.151***
		2011년	55.9	44.1	714		
	여자	2004년	46.0	54.0	693	1423	9.920***
		2011년	54.4	45.6	730		
연 령 별	20대	2004년	40.3	59.7	293	550	14.306***
		2011년	56.4	43.6	257		
	30대	2004년	41.8	58.2	342	643	10.849***
		2011년	54.8	45.2	301		
	40대	2004년	47.6	52.4	317	641	6.138**
		2011년	57.4	42.6	324		
	50대	2004년	44.2	55.8	190	451	6.872**
		2011년	56.7	43.3	261		
	60세 이상	2004년	42.1	57.9	259	560	3.960**
		2011년	50.5	49.5	301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45.5	54.6	220	381	0.879
		2011년	50.3	49.7	161		
	고등학교 졸업	2004년	45.9	54.1	558	1263	13.579***
		2011년	56.3	43.7	705		
	전문대 졸업	2004년	46.2	53.8	173	346	1.954*
		2011년	53.8	46.2	173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37.8	62.2	450	855	27.104***
		2011년	55.6	44.4	405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40.9	59.1	323	611	15.087***
		2011년	56.6	43.4	288		
	유배우	2004년	43.7	56.3	1018	2116	29.179***
		2011년	55.5	44.5	1098		
	사별+이혼+ 별거	2004년	48.3	51.7	60	118	0.576
		2011년	41.4	58.6	58		

구분			세금감소 지출감소	세금증가 지출증가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지 위 별	상용직 +고용주	2004년 2011년	40.8 56.4	59.2 43.6	576 532	1108	26.927***
	임시직 +일용직	2004년 2011년	48.9 43.1	51.1 56.9	92 123	215	0.720
	자영업자	2004년 2011년	50.3 60.6	49.7 39.4	292 307	599	6.361**
	전업주부	2004년 2011년	45.8 53.1	54.2 46.9	251 360	611	3.100**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04년 2011년	33.7 54.1	66.3 45.9	190 122	312	12.738***
	100 만원 이하	2004년 2011년	46.2 49.1	53.8 50.9	119 57	176	0.130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2011년	44.7 50.8	55.3 49.3	412 201	613	2.011*
월 평 균 소 득 별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2011년	40.6 51.5	59.5 48.5	513 431	944	11.349***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2011년	42.8 54.8	57.2 45.2	229 445	674	8.764**
	401 만원 이상	2004년 2011년	47.2 65.3	52.8 34.8	127 305	432	12.102***
	대도시	2004년 2011년	45.2 62.9	54.8 37.1	671 692	1363	43.010***
	중 · 소도시	2004년 2011년	43.9 46.9	56.1 53.1	586 529	1115	1.026
지 역 별	군지역	2004년 2011년	31.3 50.7	68.8 49.3	144 223	367	13.463***

* p<.05, **p<.01, ***p<.001

연령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학력별로는 2004년만이 유의하였다. 고학력일수록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을 찬성하였다. 월평균소득별로는 2011년만이 유의하였는데, 201-400만원의 경우가 사회복지지출을 더 희망하고 있었다.

〈표 3-53〉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사회복지지출 및 세금수준에 관한 의견

구 분		사회복지지출감소 세금감소		사회복지지출증가 세금증가		계	사례수		χ^2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연령별	전 체	43.2	55.1	56.8	44.9	100.0	1401	1444	4.042 (‘04) 3.736 (‘11)
	20대	40.3	56.4	59.7	43.6	100.0	293	257	
	30대	41.8	54.8	58.2	45.2	100.0	342	301	
	40대	47.6	57.4	52.4	42.6	100.0	317	324	
	50대	44.2	56.7	55.8	43.3	100.0	190	261	
	60대 이상	42.1	50.5	57.9	49.5	100.0	259	301	
학력별	전 체	43.3	55.1	56.7	44.9	100.0	1401	1444	8.127* (‘04) 2.071 (‘11)
	중졸	45.5	50.3	54.5	49.7	100.0	220	161	
	고졸	45.9	56.3	54.1	43.7	100.0	558	705	
	전문대졸	46.2	53.8	53.8	46.2	100.0	173	173	
	대졸이상	37.8	55.6	62.2	44.4	100.0	450	405	
월평균소득별	전체	43.2	55.2	56.8	44.8	100.0	1400	1439	3.134 (‘04) 17.312** (‘11)
	100만원 이하	46.2	49.1	53.8	50.9	100.0	119	57	
	101-200만원	44.7	50.7	55.3	49.3	100.0	412	201	
	201-300만원	40.5	51.5	59.5	48.5	100.0	513	431	
	301-400만원	42.8	54.8	57.2	45.2	100.0	229	445	
	400만원 이상	47.2	65.2	52.8	34.8	100.0	127	305	

* p<.05, ** p<.01

나. 정책우선순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낮추는 것과 실업을 줄이는 것을 비교한 결과 ‘04년과 ’11년 모두 실업을 줄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각 67.1%와 58.8%로 더 많았다. 다만 그 비율은 8.3%p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11년의 경우 남자, 20대, 중졸이하 및 대졸, 사별/이혼/별거자, 임시직 및 일용직 종사자, 저소득자,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가 실업율을 줄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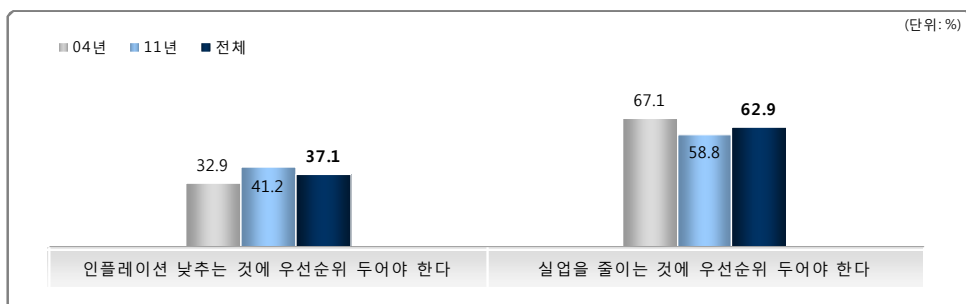
〈표 3-54〉 정책우선순위

(단위: 명, %)

구분	2004년		2011년		전 체		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인플레이션 낮추는 것에 우선순위 두어야 한다	464	32.9	597	41.2	1,061	37.1	21.322***
실업을 줄이는 것에 우선순위 두어야 한다	947	67.1	851	58.8	1,798	62.9	
전 체	1,411	100.0	1,448	100.0	2,859	100.0	

***p<.001

〔그림 3-56〕 정책우선순위



〈표 3-5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책 우선순위

(단위: %, 명)

구분			인플레이션 감소 우선	실업감소 우 선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성 별	남자	2004년	33.0	67.0	719	1432	9.814***
		2011년	41.0	59.1	713		
	여자	2004년	32.9	67.1	693	1428	11.267***
		2011년	41.5	58.5	735		
연 령 별	20대	2004년	32.0	68.0	303	564	1.899*
		2011년	37.6	62.5	261		
	30대	2004년	35.7	64.3	342	651	3.700**
		2011년	43.0	57.0	309		
	40대	2004년	34.0	66.0	321	642	5.537**
		2011년	43.0	57.0	321		
	50대	2004년	31.1	69.0	190	452	6.008**
		2011년	42.4	57.6	262		
	60세 이상	2004년	30.5	69.5	256	551	5.065**
		2011년	39.7	60.3	295		

구분			인플레이션 감소 우선	실업감소 우 선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21.8	78.2	216	375	15.029***
		2011년	40.3	59.8	159		
	고등학교 졸업	2004년	35.8	64.2	558	1266	4.880**
		2011년	42.0	58.1	708		
	전문대 졸업	2004년	30.8	69.2	182	355	4.528**
		2011년	41.6	58.4	173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35.5	64.5	454	862	2.050*
		2011년	40.2	59.8	408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31.4	68.6	328	620	2.692*
		2011년	37.7	62.3	292		
	유배우	2004년	33.6	66.4	1023	2123	18.934***
		2011년	42.8	57.2	1100		
	사별+이혼+ 별거	2004년	28.3	71.7	60	116	0.001
		2011년	28.6	71.4	56		
지 위 별	상용직 +고용주	2004년	37.2	62.8	580	1118	0.873
		2011년	40.0	60.0	538		
	임시직 +일용직	2004년	22.2	77.8	90	210	1.591
		2011년	30.0	70.0	120		
	자영업자	2004년	28.6	71.4	304	616	10.955***
		2011년	41.4	58.7	312		
	전업주부	2004년	34.6	65.5	246	601	8.507**
		2011년	46.5	53.5	355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04년	29.5	70.5	190	313	5.415**
		2011년	42.3	57.7	123		
월 평 균 소 득 별	100 만원 이하	2004년	26.1	74.0	119	173	2.157*
		2011년	37.0	63.0	54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23.7	76.3	417	619	10.424***
		2011년	36.1	63.9	202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36.5	63.5	510	937	4.566**
		2011년	43.3	56.7	427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39.5	60.5	238	691	0.158
		2011년	41.1	58.9	453		
	401 만원 이상	2004년	42.5	57.5	127	433	0.014
		2011년	43.1	56.9	306		
지 역 별	대도시	2004년	34.2	65.8	687	1380	22.535***
		2011년	46.8	53.3	693		
	중·소도시	2004년	34.9	65.1	584	1104	0.128
		2011년	36.0	64.0	520		
	군지역	2004년	18.0	82.0	139	374	14.494***
		2011년	36.6	63.4	235		

* p<.05, **p<.01, ***p<.001

연령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소득별로는 2004년만 유의하였다. 소득일수록 실업감소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2011년의 경우는 소득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56〉 연령 및 성별 정책우선순위

(단위: %, 명)

구 분	인플레이션 감소		실업 감소		계	사례수		χ ²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 체	32.9	41.2	67.1	58.8	100.0	1412	1448	
연령별								
20대	32.0	37.5	68.0	62.5	100.0	303	261	2.438 (‘04) 2.729 (‘11)
30대	35.7	43.0	64.3	57.0	100.0	342	309	
40대	34.0	43.0	66.0	57.0	100.0	321	321	
50대	31.1	42.4	59.9	57.6	100.0	190	262	
60대 이상	30.5	39.7	69.5	60.3	100.0	256	295	
소득별	32.9	41.3	67.1	58.7	100.0	1411	1442	
100만원 이하	26.1	37.0	73.9	63.0	100.0	119	54	31.341*** (‘04) 3.738 (‘11)
101-200만원	23.7	36.1	76.3	63.9	100.0	417	202	
201-300만원	36.5	43.3	63.5	56.7	100.0	510	427	
301-400만원	39.5	41.1	60.5	58.9	100.0	238	453	
400만원 이상	42.5	43.1	57.5	56.9	100.0	127	306	

***p<.001

다.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국민들은 7년전보다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04년에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을 돕는 것이 좋다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응답이 57.9%이었는데 반해, ’11년에는 64.8%로 6.9%p나 증가하였다. 반면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려 모두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는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응답은 42.1%에서 35.2%로 줄어들어, 세금부담을 최소화하여 어려운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특히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가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나머지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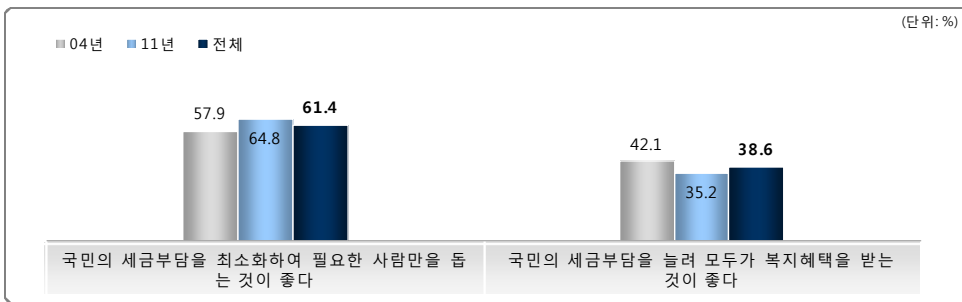
〈표 3-57〉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

(단위: 명, %)

구분	2004년		2011년		전 체		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국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을 돕는 것이 좋다	842	57.9	943	64.8	1,785	61.4	14.611***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려 모두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612	42.1	512	35.2	1,124	38.6	
전 체	1,454	100.0	1,455	100.0	2,909	100.0	

***p<.001

[그림 3-57]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



〈표 3-5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

(단위: %, 명)

구 분			낮은세금 선별복지	높은세금 보편복지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성 별	남자	2004년	56.9	43.1	720	1428	10.012***
		2011년	65.1	34.9	708		
	여자	2004년	58.9	41.1	734	1481	5.036**
		2011년	64.5	35.5	747		
연 령 별	20대	2004년	57.2	42.8	313	571	6.299**
		2011년	67.4	32.6	258		
	30대	2004년	56.3	43.8	352	664	2.959**
		2011년	62.8	37.2	312		
	40대	2004년	61.2	38.8	327	648	0.504
		2011년	63.9	36.1	321		
	50대	2004년	61.4	38.6	197	458	2.020*
		2011년	67.8	32.2	261		
	60세 이상	2004년	54.5	45.5	266	569	4.257**
		2011년	63.0	37.0	303		

구 분			낮은세금 선별복지	높은세금 보편복지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54.4	45.6	226	392	3.065*
		2011년	63.3	36.8	166		
	고등학교 졸업	2004년	61.2	38.8	585	1290	3.529*
		2011년	66.2	33.8	705		
	전문대 졸업	2004년	53.9	46.1	180	360	3.309*
		2011년	63.3	36.7	180		
결 혼 여 부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57.1	42.9	462	866	3.766*
		2011년	63.6	36.4	404		
	미혼	2004년	57.7	42.3	336	625	2.858*
		2011년	64.4	35.6	289		
	유배우	2004년	57.9	42.1	1054	2158	10.800***
		2011년	64.8	35.2	1104		
지 위 별	사별+이혼+ 별거	2004년	59.4	40.6	64	126	0.951
		2011년	67.7	32.3	62		
	상용직 +고용주	2004년	57.9	42.1	596	1129	4.657**
		2011년	64.2	35.8	533		
	임시직 +일용직	2004년	57.6	42.4	92	215	0.019
		2011년	58.5	41.5	123		
월 평 균 소 득 별	자영업자	2004년	61.5	38.5	304	617	4.168**
		2011년	69.3	30.7	313		
	전업주부	2004년	57.1	42.9	266	626	3.178**
		2011년	64.2	35.8	360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04년	53.6	46.4	194	320	3.571**
		2011년	64.3	35.7	126		
지 역 별	100 만원 이하	2004년	47.5	52.5	122	181	2.893*
		2011년	61.0	39.0	59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58.5	41.5	431	633	1.992*
		2011년	64.4	35.6	202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59.6	40.5	529	961	3.054**
		2011년	65.1	35.0	432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57.7	42.3	241	691	1.228
		2011년	62.0	38.0	450		
지 역 별	401 만원 이상	2004년	59.5	40.5	131	437	4.469**
		2011년	69.9	30.1	306		
	대도시	2004년	59.5	40.5	709	1397	17.962***
		2011년	70.4	29.7	688		
	중·소도시	2004년	54.8	45.2	599	1136	3.602**
		2011년	60.3	39.7	537		
지 역 별	군지역	2004년	63.0	37.0	146	376	0.696
		2011년	58.7	41.3	230		

* p<.05, **p<.01, ***p<.001

2개년의 연령 및 소득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59〉 연령 및 소득별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한 견해

구 분		세금최소 선별복지		세금확대 보편복지		계	사례수		χ^2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연령 별	전 체	57.9	64.8	42.1	35.2	100.0	1454	1455	6.166 (‘04) 2.903 (‘11)
	20대	47.5	67.4	52.5	32.6	100.0	122	258	
	30대	58.5	62.8	41.5	37.2	100.0	431	312	
	40대	59.5	63.9	40.5	36.1	100.0	529	321	
	50대	57.7	67.8	42.3	32.2	100.0	241	261	
	60대 이상	59.5	63.0	40.5	37.0	100.0	131	303	
월평 균 소득 별	전 체	57.9	64.9	42.1	35.1	100.0	1454	1449	6.166 (‘04) 5.485 (‘11)
	100만원 이 하	47.5	61.0	52.5	39.0	100.0	122	59	
	101-200만원	58.5	64.4	41.5	35.6	100.0	431	202	
	201-300만원	59.5	65.0	40.5	35.0	100.0	529	432	
	301-400만원	57.7	62.0	42.3	38.0	100.0	241	450	
	400만원 이상	59.5	69.9	40.5	30.1	100.0	131	306	

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견해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동등한 혜택과 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더 좋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 중 택일하도록 하였는데, 2개년 모두 전자에 대한 응답이 각 64.6%와 51.2%로 후자보다 많기는 하였으나, ‘11년의 경우 후자를 선택한 경우가 48.8%로 7년전에 비해 13.4%p나 증가한 추세이다. 즉, 최근에 올수록 더욱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복지혜택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 늘고 있다. 특히 고소득이고 대도시거주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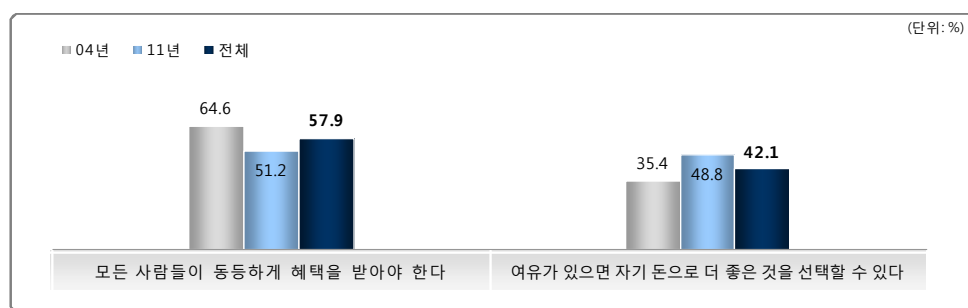
이는 앞의 일반 복지에 있어서의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를 선호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임. 즉 의료에 있어서는 보편주의적 시각이 더 많음을 나타낸다.

〈표 3-60〉 의료서비스에 대한 견해

구 분	2004년		2011년		전 체		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	954	64.6	755	51.2	1,709	57.9	54.100***
여유가 있으면 자기 돈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523	35.4	719	48.8	1,242	42.1	
전 체	1,476	100.0	1,474	100.0	2,950	100.0	

***p<.001

[그림 3-58] 의료서비스에 대한 견해



〈표 3-6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동등혜택	추가선택 가능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성 별	남자	2004년	62.0	38.0	729	1449	14.952***
		2011년	51.9	48.1	720		
	여자	2004년	67.2	32.8	746	1500	42.796***
		2011년	50.5	49.5	754		
연 령 별	20대	2004년	65.1	34.9	321	586	16.781***
		2011년	48.3	51.7	265		
	30대	2004년	67.8	32.2	354	660	11.000***
		2011년	55.2	44.8	306		
	40대	2004년	64.6	35.4	333	662	8.843**
		2011년	53.2	46.8	329		
	50대	2004년	60.3	39.7	199	464	6.174**
		2011년	48.7	51.3	265		
	60세 이상	2004년	63.1	36.9	271	580	10.307***
		2011년	49.8	50.2	309		

구 분			동등혜택	추가선택 가능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66.1	33.9	236	402	8.311**
		2011년	51.8	48.2	166		
	고등학교 졸업	2004년	65.7	34.3	583	1302	29.356***
		2011년	50.8	49.2	719		
	전문대 졸업	2004년	65.8	34.2	184	364	11.996***
		2011년	47.8	52.2	180		
결 혼 여 부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62.1	37.9	472	881	6.927**
		2011년	53.3	46.7	409		
	미혼	2004년	66.6	33.4	347	640	21.420***
		2011년	48.5	51.5	293		
	유배우	2004년	64.0	36.0	1064	2182	30.525***
		2011년	52.3	47.7	1118		
지 위 별	사별+이혼+ 별거	2004년	63.6	36.4	66	129	4.784**
		2011년	44.4	55.6	63		
	상용직 +고용주	2004년	62.0	38.0	600	1137	13.914***
		2011년	51.0	49.0	537		
	임시직 +일용직	2004년	68.8	31.3	96	219	8.122***
		2011년	49.6	50.4	123		
월 평 균 소 득 별	자영업자	2004년	67.2	32.8	311	630	10.081***
		2011년	54.9	45.1	319		
	전업주부	2004년	67.4	32.6	270	636	17.535***
		2011년	50.8	49.2	366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04년	62.3	37.7	199	328	8.718**
		2011년	45.7	54.3	129		
지 역 별	100 만원 이하	2004년	73.8	26.2	126	185	4.889**
		2011년	57.6	42.4	59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68.8	31.2	446	651	15.853***
		2011년	52.7	47.3	205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61.2	38.8	528	965	2.813*
		2011년	55.8	44.2	437		
지 역 별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64.1	36.0	242	698	6.322**
		2011년	54.2	45.8	456		
	401 만원 이상	2004년	56.4	43.6	133	444	11.550***
		2011년	38.9	61.1	311		
	대도시	2004년	68.2	31.8	717	1416	60.624***
		2011년	47.8	52.2	699		
지 역 별	중·소도시	2004년	61.3	38.7	613	1155	4.248**
		2011년	55.4	44.7	542		
	군지역	2004년	60.5	39.5	147	380	2.704
		2011년	51.9	48.1	233		

* p<.05, **p<.01, ***p<.001

소득별로는 2개년 모두 저소득의 경우 특히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즉 가구소득의 여유가 없을수록 국가로부터의 의료지원을 더 희망하고 있었다.

〈표 3-62〉 연령 및 소득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견해

구 분	모든사람 동등혜택		여유가 있으면 자기돈으로 선택 가능		계	사례수		x ²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 체	64.6	51.4	35.4	48.6	100.0	1478	1474	3.493 (‘04) 4.304 (‘11)
연령별								
20대	65.1	48.3	34.9	51.7	100.0	321	265	
30대	67.8	55.2	32.2	44.8	100.0	354	306	
40대	64.6	53.2	35.4	46.8	100.0	333	329	
50대	60.3	48.7	39.7	51.3	100.0	199	265	
60대 이상	63.1	49.8	36.9	50.2	100.0	271	309	
소득별	64.6	51.4	35.4	48.6	100.0	1475	1468	14.832** (‘04) 25.319*** (‘11)
100만원 이 하	73.8	57.6	26.2	42.4	100.0	126	59	
101-200만원	68.8	52.7	31.2	47.3	100.0	446	205	
201-300만원	61.2	55.8	38.8	44.2	100.0	528	437	
301-400만원	64.0	54.2	36.0	45.8	100.0	242	456	
400만원 이상	56.4	38.9	43.6	61.1	100.0	133	311	

p<.01, *p<.001

마. 국민연금에 대한 견해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만으로도 적정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응답은 ‘04년 55.7%에서 ’11년 48.7%로 7.0%p나 감소한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은 각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은 44.3%에서 51.3%로 7.0%p 증가하여, 국민연금의 역할 및 기대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00-200만원의 저소득층과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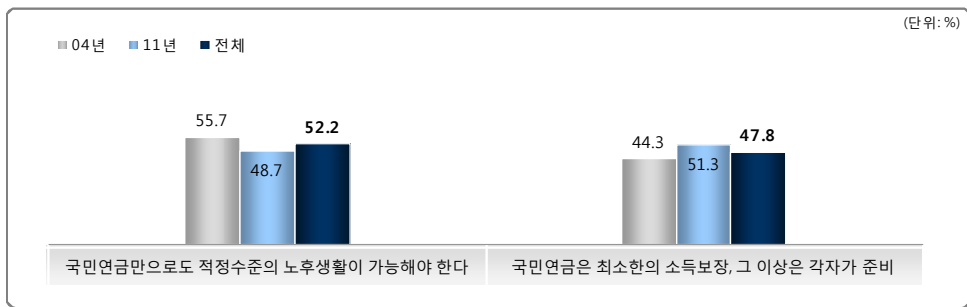
〈표 3-63〉 국민연금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 분	2004년		2011년		전 체		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국민연금만으로도 적정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820	55.7	705	48.7	1,525	52.2	14.262***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소득보장, 그 이상은 각자가 준비	653	44.3	743	51.3	1,396	47.8	
전 체	1,472	100.0	1,448	100.0	2,920	100.0	

*** p < .001

[그림 3-59] 국민연금에 대한 견해



연령 및 소득별 차이는 2011년의 경우만 유의하였다. 고연령일수록, 저소득일수록 국민연금으로도 적정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표 3-6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국민연금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적정수준 국민연금	최저수준 국민연금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성 별	남자	2004년	51.9	48.1	726	1439	1.664
		2011년	48.5	51.5	713		
	여자	2004년	59.3	40.7	745	1480	16.382***
		2011년	48.8	51.2	735		
연 령 별	20대	2004년	56.0	44.0	318	575	8.196**
		2011년	44.0	56.0	257		
	30대	2004년	51.4	48.6	350	656	0.092
		2011년	52.6	47.4	306		
	40대	2004년	55.1	44.9	334	659	5.262**
		2011년	46.2	53.9	325		
	50대	2004년	54.4	45.6	195	453	6.119**
		2011년	42.6	57.4	258		
	60세 이상	2004년	62.5	37.6	277	579	2.038*
		2011년	56.6	43.4	302		

구 분			적정수준 국민연금	최저수준 국민연금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56.7	43.4	233	396	0.587
		2011년	52.8	47.2	163		
	고등학교 졸업	2004년	56.2	43.8	584	1284	8.499**
		2011년	48.0	52.0	700		
	전문대 졸업	2004년	54.6	45.4	183	361	2.656*
		2011년	46.1	53.9	178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55.0	45.0	471	878	2.749*
		2011년	49.4	50.6	407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55.1	44.9	345	632	6.874**
		2011년	44.6	55.4	287		
	유배우	2004년	55.2	44.8	1060	2162	6.895**
		2011년	49.6	50.5	1102		
	사별+이혼+ 별거	2004년	67.2	32.8	67	126	2.802*
		2011년	52.5	47.5	59		
지 위 별	상용직 +고용주	2004년	57.4	42.6	601	1125	8.592**
		2011년	48.7	51.3	524		
	임시직 +일용직	2004년	60.6	39.4	94	216	0.364
		2011년	56.6	43.4	122		
	자영업자	2004년	47.9	52.1	307	625	0.032
		2011년	47.2	52.8	318		
	전업주부	2004년	59.9	40.1	272	628	7.195**
		2011년	49.2	50.8	356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04년	54.3	45.7	199	327	3.449**
		2011년	43.8	56.3	128		
월 평 균 소 득 별	100 만원 이하	2004년	61.4	38.6	127	185	1.540
		2011년	51.7	48.3	58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50.5	49.5	436	641	2.822*
		2011년	57.6	42.4	205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56.6	43.4	530	960	10.138***
		2011년	46.3	53.7	430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59.7	40.3	248	692	5.450**
		2011년	50.5	49.6	444		
	401 만원 이상	2004년	56.1	43.9	132	437	6.358**
		2011년	43.0	57.1	305		
지 역 별	대도시	2004년	56.7	43.3	713	1393	28.507***
		2011년	42.4	57.7	680		
	중·소도시	2004년	56.0	44.0	611	1147	0.016
		2011년	55.6	44.4	536		
	군지역	2004년	49.7	50.3	149	381	0.096
		2011년	51.3	48.7	232		

* p<.05, **p<.01, ***p<.001

〈표 3-65〉 연령 및 소득별 국민연금에 대한 견해

구 분	적정수준 노후생활보장		최소한의 소득보장		계	사례수		χ^2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 체	55.7	48.7	44.3	51.3	100.0	1474	1448	7.912 (‘04) 16.408** (‘11)
연령별								
20대	56.0	44.0	44.0	56.0	100.0	318	58	
30대	51.4	52.6	48.6	47.4	100.0	350	205	
40대	55.1	46.2	44.9	53.8	100.0	334	430	
50대	54.4	42.6	45.6	57.4	100.0	195	444	
60대 이상	62.5	56.6	37.5	43.3	100.0	277	305	
소득별	55.7	48.7	44.3	51.3	100.0	1473	1442	8.307 (‘04) 12.244* (‘11)
100만원 이하	61.4	51.7	38.6	48.3	100.0	127	58	
101-200만원	50.5	57.6	49.5	42.4	100.0	436	205	
201-300만원	56.6	46.3	43.4	53.7	100.0	530	430	
301-400만원	59.7	50.5	40.3	49.5	100.0	248	444	
400만원 이상	56.1	43.0	43.9	57.0	100.0	132	305	

* p<.05, **p<.01

제7절 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

1. 사회의 형평성 정도

가. 부의 세습

‘부유한 부모의 자녀가 돈을 더 많이 벌 기회가 많다’에 대해서는 찬성이 가장 많았는데, ‘04년 70.6% ’11년 63.1%이었다. 즉 비율이 6.5%p 떨어지기는 했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부유한 부모를 두었을 때 자녀가 돈을 많이 번다고 보고 있었다. 중립은 17.2%에서 26.6%로 9.4%p나 상승하였다. 반대는 12.3%에서 11.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부는 상속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반반이라는 시각이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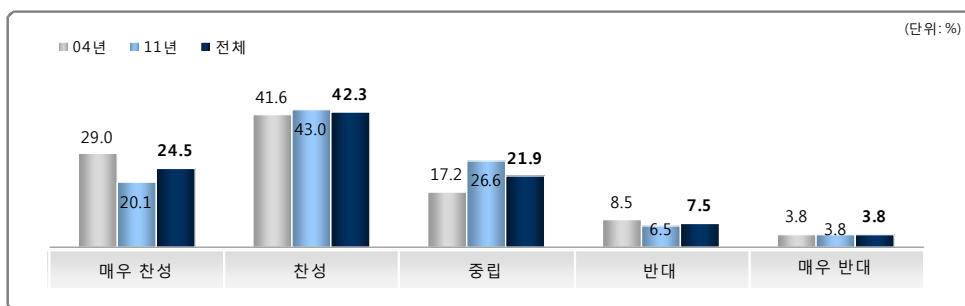
〈표 3-66〉 부의 세습

(단위: 명, %)

구 분	2004년		2011년		전체		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매우 찬성	432	29.0	301	20.1	733	24.5	58.843***
찬 성	620	41.6	644	43.0	1,264	42.3	
중 립	256	17.2	399	26.6	655	21.9	
반 대	126	8.5	97	6.5	223	7.5	
매우 반대	57	3.8	57	3.8	114	3.8	
전 체	1,491	100.0	1,498	100.0	2,989	100.0	
Mean(SD)	2.17(1.057)		2.31(0.987)		2.24(1.025)		14.641***

***p<.001

[그림 3-60] 부의 세습



〈표 3-6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의 세습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매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우 찬성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성 별	남자	2004년	3.4	7.6	18.5	40.2	30.4	741	1474	27,262***
		2011년	4.5	6.6	25.4	43.8	19.8	733		
	여자	2004년	4.3	9.5	15.9	42.9	27.6	756	1516	38,832***
		2011년	3.1	6.4	27.8	42.2	20.4	765		
연 령 별	20대	2004년	2.2	9.4	18.5	35.7	34.2	319	588	20,907***
		2011년	3.4	5.2	27.9	42.8	20.8	269		
	30대	2004년	3.6	8.4	13.2	42.3	32.5	357	674	19,720***
		2011년	4.7	7.3	22.1	46.4	19.6	317		
	40대	2004년	3.9	9.6	19.2	40.2	27.0	333	666	7,038
		2011년	3.0	7.8	25.5	42.9	20.7	333		
	50대	2004년	4.4	7.4	21.7	42.9	23.7	203	470	5,599
		2011년	2.3	7.5	29.2	42.3	18.7	267		
	60세 이상	2004년	5.8	6.8	14.8	47.8	24.8	278	590	18,206***
		2011년	5.5	4.5	29.2	40.4	20.5	312		

구 분			매 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 우 찬성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3.8	4.2	15.1	51.5	25.5	239	410	22,152***
		2011년	3.5	7.0	32.8	40.9	15.8	171		
	고등학교 졸업	2004년	3.4	7.8	17.8	43.1	27.8	589	1316	24,634***
		2011년	2.9	6.7	28.1	42.6	19.7	727		
	전문대 졸업	2004년	3.2	12.8	13.4	35.8	34.8	187	375	17,833***
		2011년	2.1	10.1	26.6	41.5	19.7	188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4.4	9.9	18.9	37.0	29.8	476	888	20,131***
		2011년	6.3	4.1	21.6	45.2	22.8	412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2.9	8.6	17.5	35.6	35.3	348	648	24,666***
		2011년	4.0	5.3	26.7	43.7	20.3	300		
	유배우	2004년	4.2	8.6	17.2	42.9	27.2	1075	2209	39,190***
		2011년	3.7	6.7	27.0	42.8	19.8	1134		
	사별+이혼+ 별거	2004년	2.9	5.8	15.9	50.7	24.6	69	133	n/a
		2011년	4.7	7.8	20.3	43.8	23.4	64		
지 위 별	상용직 +고용주	2004년	5.0	10.4	18.9	38.1	27.7	604	1150	24,538***
		2011년	3.7	7.1	25.1	45.8	18.3	546		
	임시직 +일용직	2004년	3.1	7.2	17.5	37.1	35.1	97	221	5,245
		2011년	3.2	8.1	29.8	33.1	25.8	124		
	자영업자	2004년	2.9	7.4	16.8	42.6	30.3	310	640	11,643**
		2011년	3.6	6.1	27.0	40.3	23.0	330		
	전업주부	2004년	2.9	9.1	14.9	48.4	24.7	275	641	17,926***
		2011년	3.8	6.0	27.6	44.8	17.8	366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04년	3.4	4.4	15.5	43.2	33.5	206	338	9,845**
		2011년	5.3	4.6	26.5	42.4	21.2	132		
월 평 균 소 득 별	100 만원 이하	2004년	4.0	8.9	14.5	43.6	29.0	124	184	n/a
		2011년	3.3	5.0	21.7	41.7	28.3	60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4.5	9.6	14.7	38.6	32.6	448	660	17,957***
		2011년	2.8	5.7	27.4	38.2	25.9	212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3.2	7.1	14.7	45.3	29.8	537	983	59,182***
		2011년	3.4	7.4	32.7	41.7	14.8	446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1.6	8.5	24.2	42.7	23.0	248	710	8,589*
		2011년	4.6	6.3	25.5	46.5	17.1	462		
	401 만원 이상	2004년	8.2	10.4	25.2	31.9	24.4	135	447	8,464*
		2011년	4.2	6.4	20.5	42.3	26.6	312		
지 역 별	대도시	2004년	2.7	8.6	15.3	43.0	30.4	733	1439	62,292***
		2011년	3.5	3.5	28.6	44.8	19.6	706		
	중·소도시	2004년	4.4	8.4	20.5	38.9	27.9	610	1158	12,951**
		2011년	2.4	9.3	25.2	42.2	21.0	548		
	군지역	2004년	6.7	8.7	12.8	45.6	26.2	149	393	8,764*
		2011년	7.8	8.6	24.2	39.8	19.7	244		

* p<.05, **p<.01, ***p<.001

나. 인생의 성공여부와 가족배경

‘인생의 성공여부는 가족배경에 많이 좌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04년 66.6% ’11년 59.1%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반면 중립은 21.1%에서 26.4%로 증가하였고, 반대는 12.3%에서 14.5%로 증가하였다. 인생의 성공이 가족의 배경에 달렸다는 시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비중은 약화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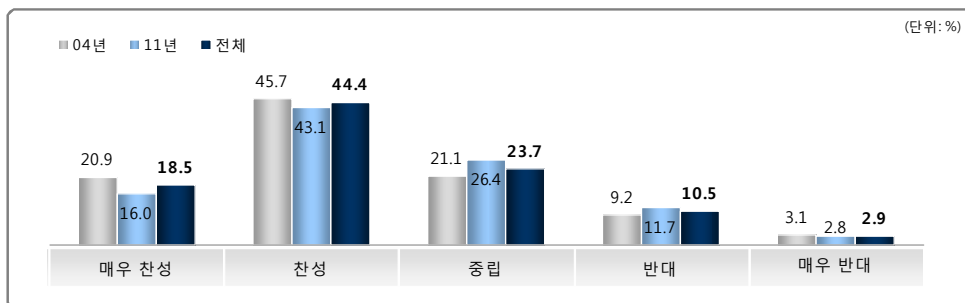
〈표 3-68〉 인생의 성공여부와 가족배경

(단위: 명, %)

구 분	2004년		2011년		전 체		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매우 찬성	312	20.9	240	16.0	552	18.5	24.208***
찬 성	683	45.7	646	43.1	1,329	44.4	
중 립	315	21.1	395	26.4	710	23.7	
반 대	138	9.2	176	11.7	314	10.5	
매우 반대	46	3.1	42	2.8	88	2.9	
전 체	1,494	100.0	1,499	100.0	2,993	100.0	
Mean(SD)	2.28(0.994)		2.42(0.984)		2.35(0.992)		15.824***

* p<.05, **p<.01, ***p<.001

[그림 3-61] 인생의 성공여부와 가족배경



〈표 3-6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생의 성공여부와 가족배경

(단위: %, 명)

구 분			매 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 우 찬성	사례수	전체 사례수	χ^2
성별	남자	2004년	3.0	9.3	21.7	44.5	21.5	741	1474	8.420*
		2011년	3.4	11.6	25.2	43.0	16.8	733		
	여자	2004년	3.2	9.2	20.4	46.8	20.4	754	1520	18.501***
		2011년	2.2	11.9	27.4	43.2	15.3	766		
연령대	20대	2004년	2.5	6.8	20.5	51.6	18.6	322	591	9.594**
		2011년	3.4	11.5	26.4	41.3	17.5	269		
	30대	2004년	3.1	7.3	22.4	42.3	24.9	357	674	9.192*
		2011년	3.2	12.0	27.4	38.8	18.6	317		
	40대	2004년	3.6	9.9	18.3	47.5	20.7	333	667	9.584**
		2011년	2.7	11.7	26.7	44.0	15.0	334		
	50대	2004년	3.5	13.8	22.2	41.9	18.7	203	470	5.126
		2011년	1.5	13.1	27.7	43.8	13.9	267		
	60세 이상	2004년	3.2	10.4	22.3	44.2	19.8	278	590	2.352
		2011년	3.2	10.6	23.7	47.4	15.1	312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0.8	5.9	24.0	47.5	21.9	238	408	n/a
		2011년	1.8	11.8	25.9	48.2	12.4	170		
	고등학교 졸업	2004년	2.4	9.6	19.6	45.6	22.8	592	1321	23.232***
		2011년	2.9	13.2	26.5	42.9	14.5	729		
	전문대 졸업	2004년	3.2	10.7	21.4	42.8	21.9	187	375	4.473
		2011년	2.7	11.7	29.8	39.4	16.5	188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5.0	9.6	21.6	46.0	17.8	478	890	3.875
		2011년	3.2	9.2	24.8	43.0	19.9	412		
결혼여부	미혼	2004년	2.9	8.1	21.6	47.1	20.4	348	648	6.073
		2011년	2.7	11.3	27.3	40.7	18.0	300		
	유배우	2004년	3.2	9.9	20.8	44.8	21.3	1079	2214	21.210***
		2011년	2.7	12.0	26.4	43.5	15.3	1135		
	사별+이혼+별거	2004년	2.9	4.4	23.5	52.9	16.2	68	132	n/a
		2011년	4.7	9.4	20.3	46.9	18.8	64		
직업별	상용직+고용주	2004년	4.3	10.3	21.2	44.4	19.9	604	1151	7.913*
		2011년	2.2	11.9	25.8	41.7	18.5	547		
	임시직+일용직	2004년	3.1	6.3	20.8	41.7	28.1	96	220	n/a
		2011년	1.6	8.9	32.3	37.1	20.2	124		
	자영업자	2004년	2.6	9.3	20.9	42.4	24.8	311	640	7.549
		2011년	2.4	12.2	25.2	43.5	16.7	329		
	전업주부	2004년	1.8	9.0	20.9	48.6	19.8	278	645	13.107**
		2011년	3.3	11.2	27.8	46.6	11.2	367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04년	1.9	7.8	21.8	51.9	16.5	206	338	8.742*
		2011년	6.1	14.4	22.0	43.9	13.6	132		

구 분			매 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 우 찬성	사례수	전체 사례수	χ^2
연령 별	100 만원 이하	2004년	4.0	11.1	20.6	42.1	22.2	126	186	n/a
		2011년	3.3	10.0	26.7	43.3	16.7	60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3.1	7.5	20.8	45.5	23.1	451	664	5.566
		2011년	1.4	8.9	25.4	47.0	17.4	213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2.6	8.2	21.6	44.7	22.9	537	984	36.844***
		2011년	2.5	15.2	30.9	39.6	11.9	447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2.0	10.5	25.5	46.6	15.4	247	708	1.602
		2011년	3.3	11.7	25.2	46.6	13.2	461		
	401 만원 이상	2004년	6.0	14.3	12.0	52.6	15.0	133	445	16.351**
		2011년	3.2	9.3	22.4	40.4	24.7	312		
지 역 별	대도시	2004년	3.1	10.0	21.3	46.5	19.1	732	1438	9.016*
		2011년	3.1	7.2	27.1	45.6	17.0	706		
	중·소도시	2004년	2.3	9.3	21.5	43.6	23.4	615	1164	17.948***
		2011년	1.5	13.8	24.6	45.0	15.1	549		
	군지역	2004년	6.1	5.4	18.2	51.4	18.9	148	392	27.699***
		2011년	4.9	20.1	28.3	31.6	15.2	244		

* p<.05, **p<.01, ***p<.001

다. 근면과 부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에 대해서는 찬성이 ‘04년 51.0%에서 ’11년 48.9%로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가장 많았고, 중립은 30.3%에서 35.2%로 약간 상승하였다. 반대는 17.8%에서 16.0%로 약간 감소하였고, 비중이 적은 편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을 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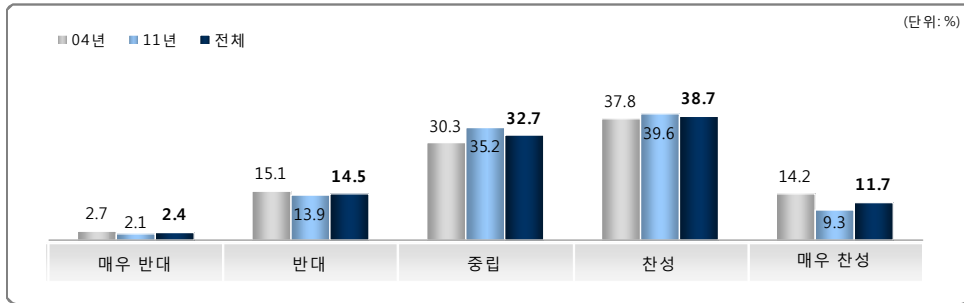
〈표 3-70〉 근면과 부

(단위: 명, %)

구 분	2004년		2011년		전 체		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매우 반대	41	2.7	31	2.1	72	2.4	23.851***
반 대	225	15.1	208	13.9	433	14.5	
중 립	452	30.3	528	35.2	980	32.7	
찬 성	564	37.8	593	39.6	1,157	38.7	
매우 찬성	212	14.2	139	9.3	351	11.7	
전 체	1,493	100.0	1,499	100.0	2,992	100.0	
Mean(SD)	3.46(0.998)		3.40(0.910)		3.43(0.955)		2.530

* p<.05, **p<.01, ***p<.001

[그림 3-62] 근면과 부



〈표 3-7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근면과 부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매 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 우 찬성	사례수	전 체 사례수	x ²
성	남자	2004년	2.7	15.7	29.4	39.1	13.0	737	1470	7.599
		2011년	2.1	13.6	35.5	38.1	10.8	733		
	여자	2004년	2.8	14.4	31.0	36.5	15.3	757	1523	23.059***
		2011년	2.1	14.1	35.0	41.0	7.8	766		
연 령	20대	2004년	2.5	15.6	30.5	38.3	13.1	321	590	4.146
		2011년	2.6	14.9	36.1	37.9	8.6	269		
	30대	2004년	3.6	14.0	33.1	37.0	12.3	357	674	6.592
		2011년	2.5	15.8	34.4	40.4	6.9	317		
	40대	2004년	3.0	14.2	30.8	36.9	15.1	331	665	2.118
		2011년	2.1	14.7	34.1	36.8	12.3	334		
	50대	2004년	1.5	17.3	26.7	37.1	17.3	202	468	n/a
		2011년	1.9	10.2	38.7	41.4	7.9	266		
	60세 이상	2004년	2.5	15.3	28.1	39.9	14.2	281	594	5.022
		2011년	1.3	13.4	33.6	41.5	10.2	313		
학 령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2.5	18.8	33.3	34.2	11.3	240	411	0.695
		2011년	2.3	15.8	35.1	34.5	12.3	171		
	고등학교 졸업	2004년	2.9	14.4	29.5	37.1	16.1	590	1319	30.819***
		2011년	1.8	11.9	35.3	43.5	7.5	729		
	전문대 졸업	2004년	2.7	12.9	25.3	44.1	15.1	186	374	10.730**
		2011년	3.2	19.7	34.6	30.3	12.2	188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2.7	14.7	31.7	38.0	13.0	477	888	3.759
		2011년	2.0	13.9	35.5	38.9	9.7	411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2.6	15.5	33.9	36.5	11.5	348	648	0.821
		2011년	3.0	15.3	36.0	36.0	9.7	300		
	유배우	2004년	2.9	15.6	28.4	37.8	15.3	1077	2212	33.786***
		2011년	1.8	13.1	35.7	40.4	9.0	1135		
	사별+이혼+별거	2004년	1.5	5.8	40.6	43.5	8.7	69	133	n/a
		2011년	3.1	20.3	23.4	40.6	12.5	64		

구 분			매 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 우 찬성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지 위 별	상용직 +고용주	2004년	1.8	14.9	30.9	38.8	13.6	603	1149	3.214
		2011년	2.4	16.5	32.4	38.1	10.6	546		
	임시직 +일용직	2004년	3.1	18.6	27.8	39.2	11.3	97	221	n/a
		2011년	0.8	11.3	33.9	45.2	8.9	124		
	자영업자	2004년	4.5	18.7	25.8	33.9	17.1	310	640	21.706***
		2011년	3.0	11.2	38.8	37.0	10.0	330		
	전업주부	2004년	3.2	11.8	31.2	39.4	14.3	279	646	10.015*
		2011년	1.6	11.7	34.3	44.7	7.6	367		
월 평 균 소 득 별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04년	1.5	12.7	35.1	38.1	12.7	205	337	n/a
		2011년	0.8	18.2	41.7	32.6	6.8	132		
	100 만원 이하	2004년	1.6	21.4	27.0	38.1	11.9	126	186	n/a
		2011년	5.0	11.7	20.0	55.0	8.3	60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3.3	14.7	29.6	36.8	15.6	449	662	4.253
		2011년	1.4	15.0	33.3	38.5	11.7	213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3.4	14.9	31.0	39.2	11.5	538	984	15.012**
지 역 별		2011년	2.2	13.7	37.4	41.3	5.4	446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0.4	13.7	31.9	39.1	14.9	248	710	n/a
		2011년	1.	13.9	37.7	40.0	7.1	462		
	401 만원 이상	2004년	3.7	13.4	29.9	32.1	20.9	134	446	1.908
		2011년	2.9	14.1	33.0	34.0	16.0	312		
	대도시	2004년	3.0	15.2	27.8	38.5	15.5	735	1441	43.227***
		2011년	1.8	12.9	36.8	42.4	6.1	706		
지 역 별	중·소도시	2004년	3.0	15.1	33.3	37.5	11.2	610	1160	9.393*
		2011년	0.9	14.4	37.6	34.2	12.9	550		
	군지역	2004년	0.7	14.2	30.4	35.1	19.6	148	391	14.102**
		2011년	5.4	15.6	25.1	43.6	10.3	243		

* p<.05, **p<.01, ***p<.001

라. 빈민의 근면성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만큼 노력하는가’의 여부에 있어서는 찬성이 가장 많았고, 반대는 소수이었다. 찬성은 56.2%와 46.8%로 9.4%p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응답비중이 높은 편이다. 중립은 33.5%에서 33.9%로 거의 비슷한 추이이다. 반대는 10.6%에서 19.3%로 8.7%p 증가하여 빈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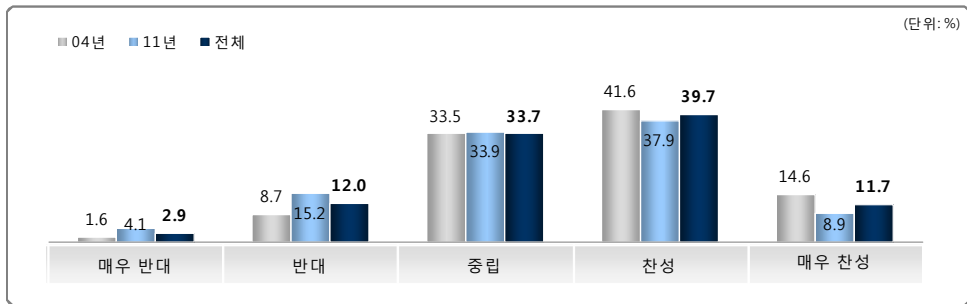
〈표 3-72〉 빈민의 근면성

(단위: 명, %)

구 분	2004년		2011년		전 체		x ²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매우 반대	23	1.6	62	4.1	85	2.9	67.800***
반 대	130	8.7	228	15.2	358	12.0	
중 립	500	33.5	507	33.9	1,007	33.7	
찬 성	621	41.6	567	37.9	1,188	39.7	
매우 찬성	218	14.6	133	8.9	351	11.7	
전 체	1,491	100.0	1,497	100.0	2,988	100.0	61.311***
Mean(SD)	3.59(0.896)		3.32(0.974)		3.46(0.946)		

* p<.05, **p<.01, ***p<.001

[그림 3-63] 빈민의 근면성



〈표 3-7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민의 근면성에 대한 견해

(단위: %, 수)

구 분			매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우 찬성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성 별	남자	2004년	1.9	9.5	34.5	39.9	14.3	737	1471	24.354***
		2011년	4.5	15.8	33.1	35.6	11.0	734		
	여자	2004년	1.2	7.9	32.7	43.4	14.9	752	1515	50.095***
		2011년	3.8	14.7	34.6	40.1	6.8	763		
연 령	20대	2004년	1.3	7.8	28.0	46.4	16.5	321	590	14.888**
		2011년	5.2	10.4	33.8	39.4	11.2	269		
	30대	2004년	1.4	6.7	37.0	40.6	14.3	357	673	24.042***
		2011년	4.1	16.5	32.9	37.7	8.9	316		
	40대	2004년	0.9	9.6	37.4	39.2	12.9	334	667	16.895**
		2011년	3.9	17.4	30.9	37.2	10.5	333		
	50대	2004년	2.5	10.0	33.0	41.5	13.0	200	467	6.941
		2011년	4.1	15.0	36.0	37.1	7.9	267		
	60세 이상	2004년	2.5	10.4	30.8	40.1	16.1	279	591	19.126***
		2011년	3.5	16.0	36.2	38.1	6.1	312		

구 분			매 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 우 찬성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2.5	11.7	34.7	35.6	15.5	239	410	8.417
		2011년	4.1	16.4	35.7	36.8	7.0	171		
	고등학교 졸업	2004년	1.0	8.0	34.7	41.5	14.8	588	1315	32.476***
		2011년	2.8	15.5	35.2	38.0	8.5	727		
	전문대 졸업	2004년	1.1	3.2	29.0	48.4	18.3	186	373	22.412***
		2011년	4.3	15.0	31.0	35.8	13.9	187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2.1	10.3	33.1	42.1	12.4	477	889	18.180***
		2011년	6.6	14.3	32.0	39.1	8.0	412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0.9	6.9	30.8	45.7	15.8	348	647	16.709**
		2011년	4.7	10.7	34.8	38.5	11.4	299		
	유배우	2004년	1.8	9.0	34.3	40.8	14.1	1076	2210	54.354***
		2011년	4.0	16.4	33.6	38.3	7.8	1134		
	사별+이혼+ 별거	2004년	2.9	13.0	34.8	33.3	15.9	69	133	n/a
		2011년	4.7	15.6	34.4	28.1	17.2	64		
지 위 별	상용직 +고용주	2004년	0.8	7.0	33.6	42.9	15.6	601	1147	50.243***
		2011년	5.0	17.0	30.4	36.6	11.0	546		
	임시직 +일용직	2004년	2.1	8.4	30.5	43.2	15.8	95	219	n/a
		2011년	4.8	16.1	32.3	33.9	12.9	124		
	자영업자	2004년	2.3	10.3	37.3	35.7	14.5	311	640	9.131*
		2011년	4.6	14.3	33.1	38.6	9.4	329		
	전업주부	2004년	1.8	9.0	33.2	47.7	8.3	277	643	11.801**
		2011년	2.5	14.8	38.8	39.3	4.6	366		
월 평 균 소 득 별	100 만원 이하	2004년	1.6	11.2	21.6	44.0	21.6	125	185	n/a
		2011년	5.0	15.0	28.3	36.7	15.0	60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2.7	7.7	32.3	39.8	17.5	452	664	19.017***
		2011년	2.4	18.4	32.6	35.4	11.3	212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0.9	8.8	36.1	40.5	13.7	534	981	21.162***
		2011년	2.7	13.7	39.4	37.4	6.9	447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0.4	9.6	37.0	42.6	10.4	249	710	14.945**
		2011년	4.1	15.4	34.9	38.4	7.2	461		
	401 만원 이상	2004년	3.0	7.6	31.8	48.5	9.1	132	443	9.963**
		2011년	7.4	15.4	26.7	39.9	10.6	311		
지 역 별	대도시	2004년	1.8	9.0	28.6	45.0	15.7	734	1437	80.597***
		2011년	5.6	20.1	31.2	37.1	6.1	703		
	중·소도시	2004년	1.6	9.2	39.0	38.4	11.8	610	1160	2.355
		2011년	2.2	11.1	36.0	39.5	11.3	550		
	군지역	2004년	0.7	5.4	35.1	37.8	21.0	148	392	12.962**
		2011년	4.5	10.7	36.9	36.5	11.5	244		

* p<0.05, **p<0.01, ***p<0.001

마. 빈곤의 원인: 노력부족

‘가난한 이유는 노력부족때문’이라는 의견에 있어서는 중립이 가장 많았고(‘04년: 35.0%, ’11년: 37.0%),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찬성의 경우는 ‘04년 31.5% ’11년 35.4%로 약간 상승한 반면, 반대는 ‘04년 33.6% ’11년 27.6%로 6.0%p 감소하였다. 즉, 빈곤이 노력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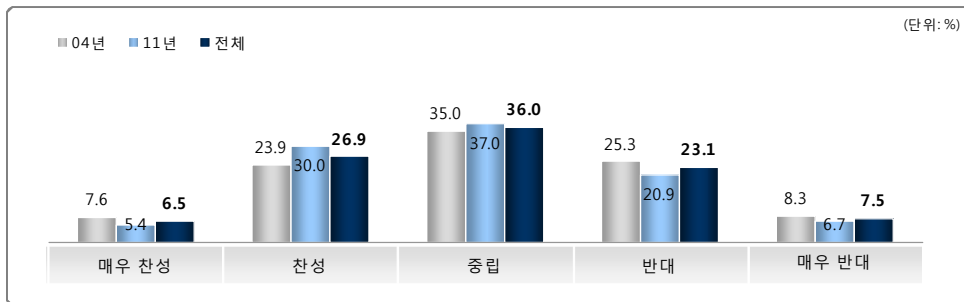
이러한 응답결과는 앞 문항과는 다소 일관적이지 않은 응답으로 빈곤의 이유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괴리가 있었다.

〈표 3-74〉 빈곤의 원인: 노력부족

(단위: 명, %)

구 분	2004년		2011년		전 체		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매우 찬성	113	7.6	81	5.4	194	6.5	25.326***
찬 성	356	23.9	449	30.0	805	26.9	
중 립	522	35.0	555	37.0	1,077	36.0	
반 대	377	25.3	313	20.9	690	23.1	
매우 반대	123	8.3	100	6.7	223	7.5	
전 체	1,491	100.0	1,498	100.0	2,989	100.0	
Mean(SD)	3.03(1.061)		2.93(0.994)		2.98(1.029)		6.017**

[그림 3-64] 빈곤의 원인: 노력부족



〈표 3-7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곤의 원인: 노력부족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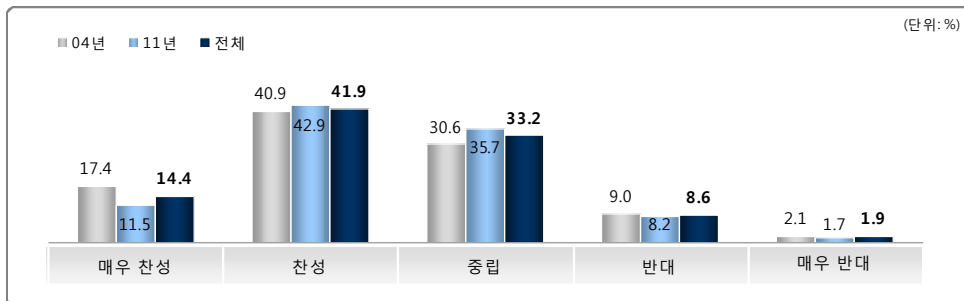
구 분			매 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 우 찬성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성 별	남자	2004년	7.9	25.4	32.6	25.4	8.7	739	1473	6.154
		2011년	7.5	22.6	34.9	28.8	6.3	734		
	여자	2004년	8.6	25.1	37.4	22.3	6.5	752	1516	23.754***
		2011년	5.9	19.2	39.1	31.2	4.6	764		
연 령 별	20대	2004년	12.7	26.6	35.9	18.9	5.9	323	592	15.276**
		2011년	5.6	22.7	38.3	28.6	4.8	269		
	30대	2004년	7.0	26.1	37.6	21.4	7.9	356	673	8.209*
		2011년	6.3	23.3	37.5	28.7	4.1	317		
	40대	2004년	6.3	26.6	32.8	26.9	7.5	335	667	8.723*
		2011년	9.3	18.4	35.5	30.7	6.0	332		
	50대	2004년	6.9	24.1	39.4	23.2	6.4	203	470	1.668
		2011년	5.2	24.3	37.8	27.3	5.2	267		
	60세 이상	2004년	8.0	21.7	30.1	30.1	10.1	276	589	7.047
		2011년	6.4	16.6	36.4	33.9	6.7	313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7.1	28.3	31.7	24.2	8.8	240	411	15.531**
		2011년	5.9	17.5	40.9	32.8	2.9	171		
	고등학교 졸업	2004년	7.6	22.1	36.3	27.2	6.8	589	1316	8.125*
		2011년	5.5	18.3	38.4	32.1	5.8	727		
	전문대 졸업	2004년	11.2	33.0	29.8	19.2	6.9	188	376	5.832
		2011년	8.0	24.5	38.3	22.3	6.9	188		
학 력 별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8.4	24.8	37.0	21.4	8.4	476	888	9.425*
		2011년	8.5	25.2	32.5	28.6	5.1	412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12.6	26.4	36.5	18.7	5.8	348	648	18.464***
		2011년	5.3	22.7	39.3	28.7	4.0	300		
	유배우	2004년	6.8	25.4	34.1	25.6	8.1	1077	2211	15.670**
		2011년	6.6	20.5	36.7	30.4	5.8	1134		
지 위 별	사별+이혼+ 별거	2004년	10.3	16.2	41.2	22.1	10.3	68	132	3.171
		2011년	14.1	20.3	32.8	28.1	4.7	64		
	상용직 +고용주	2004년	7.3	28.7	32.3	24.2	7.5	603	1150	7.768*
		2011년	7.1	22.3	34.4	29.3	7.0	547		
	임시직 +일용직	2004년	9.5	21.1	42.1	25.3	2.1	95	219	9.538**
		2011년	2.4	23.4	33.9	33.9	6.5	124		
	자영업자	2004년	8.0	20.6	32.8	28.0	10.6	311	640	9.073*
		2011년	8.2	17.9	41.3	27.1	5.5	329		
	전업주부	2004년	7.2	21.2	40.5	24.0	7.2	279	645	7.191
		2011년	5.7	20.0	37.4	32.5	4.4	366		
지 위 별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04년	12.2	30.2	35.6	15.6	6.3	205	337	17.050
		2011년	7.6	22.7	39.4	29.6	0.8	132		

구 분			매 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 우 찬성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월 평 균 소 득 별	100 만원 이하	2004년	10.4	25.6	35.2	19.2	9.6	125	185	8.413*
		2011년	10.0	25.0	25.0	36.7	3.3	60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8.9	25.7	32.6	23.9	8.9	448	660	16.157**
		2011년	9.4	13.2	40.1	30.7	6.6	212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8.4	27.2	34.1	23.8	6.5	537	984	15.601**
		2011년	5.6	20.8	40.9	28.9	3.8	447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6.1	19.8	42.5	25.1	6.5	247	708	4.617
		2011년	7.4	21.0	36.0	30.6	5.0	461		
지 역 별	401 만원 이상	2004년	6.9	26.0	33.6	26.7	6.9	131	443	0.967
		2011년	4.8	25.3	33.3	29.2	7.4	312		
	대도시	2004년	8.7	26.3	34.1	23.7	7.2	734	1439	41.801***
		2011년	4.5	16.7	37.6	34.9	6.2	705		
	중·소도시	2004년	6.1	23.3	37.1	25.3	8.4	610	1159	6.800
		2011년	7.5	23.5	35.3	28.6	5.1	549		
	군지역	2004년	14.9	27.7	31.1	19.6	6.8	148	392	4.630
		2011년	11.1	27.1	39.3	18.9	3.7	244		

바. 우리사회의 기회 불평등

‘우리 사회는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40.9%에서 42.9%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매우 찬성은 17.4%에서 11.5%로 감소하여, 전반적인 찬성은 58.3%에서 54.4% 약간 감소하였다. 중립은 30.6%에서 35.7%로 증가하였고, 반대는 11.1%에서 9.9%로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회가 불평등 하다는데 찬성의 의견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6] 우리 사회는 기회가 불평등함



〈표 3-77〉 우리사회의 기회 불평등성

(단위: 명, %)

구 분	2004년		2011년		전 체		x ²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매우 찬성	259	17.4	172	11.5	431	14.4	25.749***
찬 성	609	40.9	642	42.9	1,251	41.9	
중 립	456	30.6	534	35.7	990	33.2	
반 대	134	9.0	122	8.2	256	8.6	
매우 반대	32	2.1	26	1.7	58	1.9	
전 체	1,489	100.0	1,496	100.0	2,985	100.0	6.045**
Mean(SD)	2.38(0.943)		2.46(0.864)		2.42(0.905)		

〈표 3-7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우리사회의 기회 불평등성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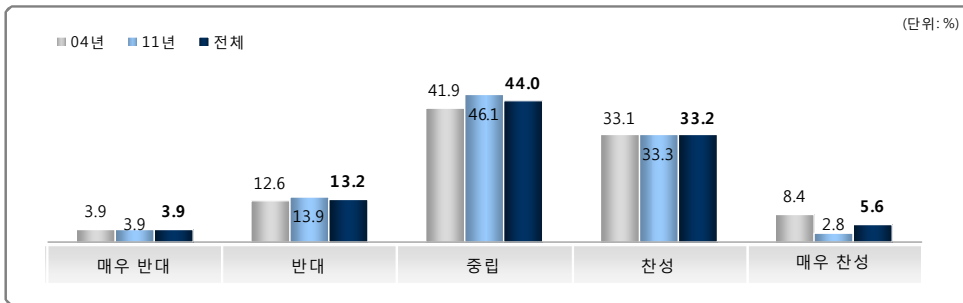
구 분			매 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 우 찬성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성 별	남자	2004년	2.5	9.8	30.0	39.7	18.1	736	1469	8.270
		2011년	2.1	8.7	33.4	42.6	13.2	733		
	여자	2004년	1.9	8.2	31.2	42.0	16.7	753	1516	19.237***
		2011년	1.4	7.6	37.9	43.3	9.8	763		
연 령 별	20대	2004년	1.9	9.4	27.5	39.4	21.9	320	588	11.306**
		2011년	1.5	11.2	32.1	43.7	11.6	268		
	30대	2004년	1.1	7.0	30.1	42.6	19.2	359	676	n/a
		2011년	1.0	7.3	32.5	48.9	10.4	317		
	40대	2004년	3.0	9.1	30.6	40.0	17.3	330	664	8.571
		2011년	1.5	7.5	38.0	41.3	11.7	334		
	50대	2004년	2.5	7.9	34.0	41.4	14.3	203	470	n/a
		2011년	1.1	6.0	36.3	42.7	13.9	267		
	60세 이상	2004년	2.5	11.9	32.5	40.4	12.6	277	587	4.302
		2011년	3.6	9.0	39.0	38.1	10.3	310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2.5	10.5	35.2	40.2	11.7	239	408	0.704
		2011년	3.0	10.7	38.5	36.7	11.2	169		
	고등학교 졸업	2004년	2.7	8.7	30.4	38.8	19.4	588	1316	24.527***
		2011년	1.7	5.8	36.8	44.1	11.7	728		
	전문대 졸업	2004년	2.1	7.0	28.3	42.3	20.3	187	374	n/a
		2011년	1.6	15.0	32.6	40.6	10.2	187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1.3	9.6	29.6	43.0	16.6	477	889	5.358
		2011년	1.5	8.3	34.0	44.4	11.9	412		

구 분			매 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 우 찬성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1.4	10.4	24.8	40.6	22.8	347	646	19,792***
		2011년	2.3	9.0	34.1	43.8	10.7	299		
	유배우	2004년	2.1	8.9	32.2	40.8	16.0	1075	2210	13,288**
		2011년	1.5	7.7	36.2	43.1	11.5	1135		
	사별+이혼+ 별거	2004년	5.9	4.4	35.3	42.7	11.8	68	130	n/a
		2011년	3.2	12.9	33.9	35.5	14.5	62		
지 위 별	상용직 +고용주	2004년	1.8	9.5	30.3	42.9	15.5	601	1148	7,668
		2011년	1.3	9.7	34.2	44.4	10.4	547		
	임시직 +일용직	2004년	2.1	7.2	25.8	37.1	27.8	97	221	n/a
		2011년	0.0	7.3	37.1	39.5	16.1	124		
	자영업자	2004년	1.6	9.1	31.6	36.5	21.2	307	636	6,609
		2011년	3.3	6.1	35.3	38.9	16.4	329		
	전업주부	2004년	2.9	9.0	31.4	43.0	13.7	277	642	11,863**
		2011년	1.9	6.6	39.7	44.7	7.1	365		
월 평 균 소 득 별	100 만원 이하	2004년	4.7	6.3	26.0	48.0	15.0	127	186	n/a
		2011년	5.1	8.5	28.8	35.6	22.0	59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1.8	7.6	27.7	38.7	24.2	447	658	13,838**
		2011년	2.8	9.5	38.4	35.1	14.2	211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1.9	10.6	32.1	38.6	16.8	536	983	16,815**
		2011년	0.9	6.9	39.6	42.1	10.5	447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2.4	9.3	30.8	46.6	10.9	247	708	2,214
		2011년	1.5	7.4	33.4	48.2	9.5	461		
	401 만원 이상	2004년	0.8	9.1	38.6	40.2	11.4	132	444	n/a
		2011년	1.9	9.9	33.7	42.6	11.9	312		
지 역 별	대도시	2004년	2.2	10.1	30.5	41.0	16.2	724	1430	19,784***
		2011년	1.1	9.4	37.0	43.1	9.5	706		
	중 · 소도시	2004년	2.1	8.0	30.2	40.8	18.9	613	1160	12,003**
		2011년	1.5	6.6	33.5	46.1	12.4	547		
	군지역	2004년	1.3	8.0	33.3	40.7	16.7	150	393	3,526
		2011년	4.1	8.2	37.0	35.4	15.2	243		

사. Deserving Poor

‘현재 국가의 공적부조를 받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은 41.5%에서 36.1%로 5.4%p 하강한데 반해, 중립은 41.9%에서 46.1%로 4.2%p 증가하였다. 즉, 반대가 약간 상승하였다.

[그림 3-66] 공적부조 수급자격의 적정성에 대한 동의



〈표 3-79〉 공적부조 수급자격의 적정성에 대한 동의

(단위: 명, %)

구 분	2004년		2011년		전 체		x ²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매우 반대	57	3.9	58	3.9	115	3.9	46.058***
반 대	184	12.6	207	13.9	391	13.2	
중 립	613	41.9	688	46.1	1,301	44.0	
찬 성	485	33.1	497	33.3	982	33.2	
매우 찬성	124	8.4	42	2.8	166	5.6	
전 체	1,463	100.0	1,492	100.0	2,955	100.0	
Mean(SD)	3.30(0.930)		3.17(0.843)		3.23(0.889)		14.208***

〈표 3-8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수급자는 Deserving Poor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매 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 우 찬성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성 별	남자	2004년	4.8	12.5	42.5	31.9	8.3	727	1458	21,008***
		2011년	3.3	11.8	48.6	33.1	3.3	731		
	여자	2004년	3.1	12.7	41.4	34.3	8.6	735	1496	31,682***
		2011년	4.5	15.9	43.8	33.5	2.4	761		
연 령 별	20대	2004년	1.9	9.6	43.6	33.4	11.5	314	582	25,107***
		2011년	3.7	13.8	52.6	27.6	2.2	268		
	30대	2004년	4.3	15.1	42.1	29.8	8.8	352	669	7,556
		2011년	3.5	15.1	45.7	31.9	3.8	317		
	40대	2004년	6.7	15.2	37.7	34.7	5.8	329	662	6,491
		2011년	3.6	14.4	44.1	34.2	3.6	333		
	50대	2004년	5.1	12.7	42.6	30.5	9.1	197	463	12,866**
		2011년	4.5	14.3	46.6	32.7	1.9	266		
	60세 이상	2004년	1.9	9.7	44.2	37.2	7.1	269	577	10,691**
		2011년	4.2	11.7	42.5	39.3	2.3	308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1.8	10.1	43.4	39.9	4.8	228	396	6,560
		2011년	5.4	8.9	48.2	35.1	2.4	168		
	고등학교 졸업	2004년	5.7	13.2	40.1	31.6	9.4	583	1308	29,217***
		2011년	3.3	12.6	46.3	34.6	3.2	725		
	전문대 졸업	2004년	2.8	12.1	39.6	35.7	9.9	182	369	14,295**
		2011년	7.0	16.6	41.7	32.6	2.1	187		
학 력 별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3.2	13.2	44.4	30.8	8.5	471	883	15,404**
		2011년	2.9	17.0	46.8	30.6	2.7	412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3.0	11.9	43.6	30.0	11.6	337	635	20,251***
		2011년	3.7	12.4	53.0	28.2	2.7	298		
	유배우	2004년	4.4	12.9	41.7	33.5	7.5	1065	2197	27,346***
		2011년	3.7	14.1	44.5	35.0	2.7	1132		
	사별+이혼+ 별거	2004년	1.6	9.8	36.1	44.3	8.2	61	123	n/a
		2011년	8.1	17.7	41.9	27.4	4.8	62		
지 위 별	상용직 +고용주	2004년	4.2	12.1	38.8	36.1	8.9	596	1143	24,421***
		2011년	3.1	14.1	47.9	31.8	3.1	547		
	임시직 +일용직	2004년	2.1	16.7	44.8	29.2	7.3	36	220	n/a
		2011년	4.0	11.3	47.6	33.1	4.0	124		
	자영업자	2004년	5.3	13.4	42.0	29.2	10.2	305	631	15,246**
		2011년	6.4	13.2	47.9	29.8	2.8	326		
	전업주부	2004년	2.9	13.6	39.9	35.2	8.4	273	637	15,121**
		2011년	2.8	14.8	40.7	39.8	1.9	364		
지 위 별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04년	3.6	9.3	52.6	29.4	5.2	194	325	3,031
		2011년	3.8	14.5	48.1	30.5	3.1	131		

구 분			매 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 우 찬성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월 평 균 소득 별	100 만원 이하	2004년	5.9	11.9	42.4	35.6	4.2	118	175	n/a
		2011년	7.0	12.3	38.6	35.1	7.0	57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4.4	12.4	41.7	30.9	10.8	437	646	13,814**
		2011년	5.3	12.0	45.0	35.4	2.4	209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2.8	14.4	41.8	33.3	7.8	529	976	14,592**
		2011년	2.2	11.6	50.1	32.9	3.1	447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4.5	11.3	44.5	33.2	6.5	247	708	11,751**
		2011년	2.6	12.6	47.5	35.4	2.0	461		
지 역 별	401 만원 이상	2004년	4.7	8.5	38.0	38.8	10.1	129	441	20,615***
		2011년	6.7	20.5	40.7	29.2	2.9	312		
	대도시	2004년	3.7	14.5	41.2	33.3	7.3	709	1414	25,026***
		2011년	2.4	16.0	46.7	32.8	2.1	705		
	중·소도시	2004년	4.1	9.7	43.1	34.0	9.1	606	1151	15,539**
		2011년	3.1	11.6	44.4	37.3	3.7	545		
	군지역	2004년	4.8	15.0	40.8	28.6	10.9	147	389	14,599**
		2011년	9.9	12.8	48.4	26.0	2.9	242		

아. 사회의 형평성 종합

이상 우리 사회의 형평성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형평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부는 세습되고 가족배경이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빈민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들이 충분히 일한다거나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견해가 많았다.

〈표 3-81〉 한국사회의 형평성 종합

항 목	평균		t값
	2004년	2011년	
1) 부유한 부모를 가진 사람은 가난한 부모를 가진 사람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다	2.17	2.31	-3.826***
2) 우리나라의 경우 인생의 성공 여부는 가족 배경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	2.28	2.42	-3.978***
3)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3.46	3.40	2.453*
4)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만큼 노력한다	3.59	3.32	-2.459*
5) 가난한 이유는 주로 스스로의 노력부족 때문이다	3.03	2.93	1.591
6) 우리 사회는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	2.38	2.46	7.831***
7) 현재 국가의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받을 자격이 있다	3.30	3.17	3.770***

주: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1, 2, 5, 6은 점수가 반대하는 의견이고, 3, 4, 7은 찬성하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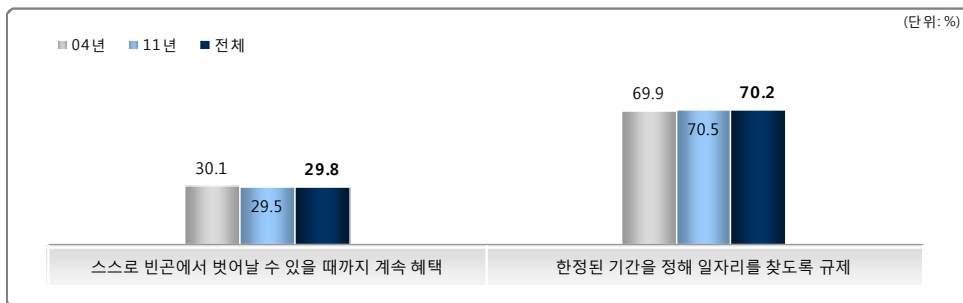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근로능력자들의 적절한 수혜기간

가. 적절한 수혜기간

근로능력자들의 지원수혜 기간에 있어서는 한정된 기간을 정해서 지원하고, 일 자리를 찾도록 규제하지는 의견이 변함없이 70%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임시직과 자영업자의 경우 이를 지지하는 비율이 다른 직업군보다 높았다.

[그림 3-67] 근로능력자들의 적절한 수혜기간



〈표 3-82〉 근로능력자들의 수혜 기간

구분	2004년		2011년		전 체		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혜택	439	30.1	421	29.5	860	29.8	0.145
한정된 기간을 정해 일자리를 찾도록 규제	1,019	69.9	1,008	70.5	2,027	70.2	
전 체	1,458	100.0	1,429	100.0	2,887	100.0	

〈표 3-8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근로능력자들의 적절한 수혜기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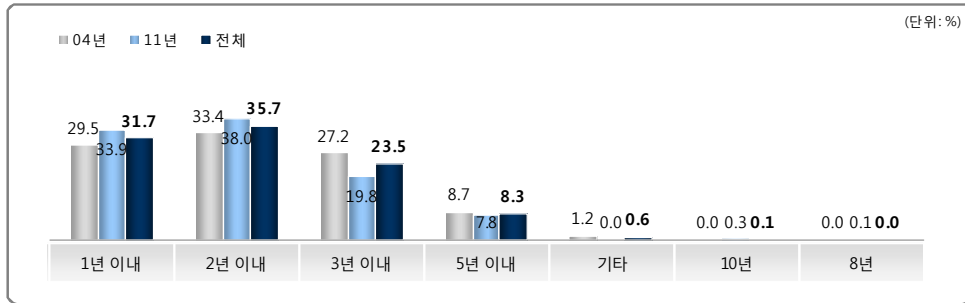
구 분			계속 혜택	기간 한정	사례수	전체 사례수	χ^2
성 별	남자	2004년	30.7	69.3	723	1434	0.009
		2011년	30.9	69.1	711		
	여자	2004년	29.6	70.4	734	1452	0.439
		2011년	28.0	72.0	718		
연 령 별	20대	2004년	31.1	68.9	315	572	0.011
		2011년	31.5	68.5	257		
	30대	2004년	30.0	70.0	347	649	0.487
		2011년	27.5	72.5	302		
	40대	2004년	30.9	69.1	330	652	0.841
		2011년	27.6	72.4	322		
	50대	2004년	22.6	77.4	199	452	0.438
		2011년	25.3	74.7	253		
	60세 이상	2004년	33.6	66.4	268	563	0.174
		2011년	35.3	64.8	295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31.9	68.1	226	379	0.485
		2011년	35.3	64.7	153		
	고등학교 졸업	2004년	31.1	68.9	582	1278	0.221
		2011년	29.9	70.1	696		
	전문대 졸업	2004년	25.4	74.6	185	361	0.414
		2011년	28.4	71.6	176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29.8	70.2	463	867	0.845
		2011년	27.0	73.0	404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29.2	70.8	339	627	0.136
		2011년	30.6	69.4	288		
	유배우	2004년	30.9	69.1	1055	2141	1.008
		2011년	28.9	71.1	1086		
	사별+이혼+ 별거	2004년	21.9	78.1	64	119	2.370*
		2011년	34.6	65.5	55		

구 분			계속 혜택	기간 한정	사례수	전체 사례수	χ^2
지 위 별	상용직 +고용주	2004년	30.5	69.5	594	1122	0.387
		2011년	32.2	67.8	528		
	임시직 +일용직	2004년	25.3	74.7	95	216	0.131
		2011년	23.1	76.9	121		
	자영업자	2004년	26.6	73.4	304	610	0.628
		2011년	23.9	76.1	306		
	전업주부	2004년	30.6	69.4	268	622	0.001
		2011년	30.5	69.5	354		
월 평 균 소 득 별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04년	36.6	63.5	197	317	0.078
		2011년	35.0	65.0	120		
	100 만원 이하	2004년	32.0	68.0	122	175	1.482
		2011년	41.5	58.5	53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27.0	73.0	429	626	2.330*
		2011년	33.0	67.0	197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30.9	69.1	531	962	0.507
		2011년	28.8	71.2	431		
지 역 별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36.2	63.8	246	693	5.017**
		2011년	28.0	72.0	447		
	401 만원 이상	2004년	23.3	76.7	129	426	1.160
		2011년	28.3	71.7	297		
	대도시	2004년	27.0	73.0	707	1384	2.892**
		2011년	31.2	68.8	677		
	중·소도시	2004년	35.8	64.2	606	1137	10.768***
		2011년	26.7	73.3	531		
	군지역	2004년	21.0	79.0	143	364	4.230**
		2011년	30.8	69.2	221		

나. 정부지원기간

적정한 지원기간은 3년이내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중 2년이내가 가장 많았고, 1년이내 > 3년이내의 순이었다. 즉,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능력자의 경우 3년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림 3-68] 정부지원기간



〈표 3-84〉 정부지원기간

(단위: 명, %)

구분	2004년		2011년		전 체		x ²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01년 이내	300	29.5	342	33.9	642	31.7	35.271***
2년 이내	340	33.4	383	38.0	723	35.7	
3년 이내	277	27.2	200	19.8	477	23.5	
5년 이내	89	8.7	79	7.8	168	8.3	
기 타	13	1.2	0	0.0	13	0.6	
10년	0	0.0	3	0.3	3	0.1	
8년	0	0.0	1	0.1	1	0.0	
전 체	1,019	100.0	1,008	100.0	2,027	100.0	

〈표 3-8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부지원기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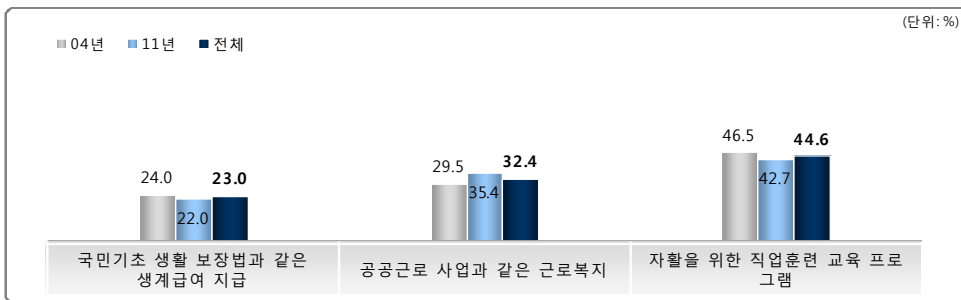
구 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사례수	전 체 사례수	x ²
성 별	남자	2004년	30.1	32.7	26.7	10.5	495	984	7.226*
		2011년	32.5	38.2	20.9	8.4	489		
	여자	2004년	29.6	34.8	28.4	7.2	511	1026	13.021**
		2011년	35.5	38.1	19.0	7.4	515		
연 령 별	20대	2004년	27.0	35.8	29.3	7.9	215	390	3.827
		2011년	22.3	45.1	26.9	5.7	175		
	30대	2004년	29.7	33.5	27.6	9.2	239	456	1.574
		2011년	32.7	35.9	23.0	8.3	217		
	40대	2004년	34.7	32.9	23.1	9.3	225	458	4.807
		2011년	40.8	35.6	15.9	7.7	233		
	50대	2004년	32.9	29.6	26.3	11.2	152	341	12.054**
		2011년	42.3	37.0	15.3	5.3	189		
	60 이상	2004년	24.7	36.8	31.6	6.9	174	364	8.844**
		2011년	30.0	38.4	19.5	12.1	190		

구 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32.7	32.0	28.1	7.2	153	251	2,762
		2011년	32.7	35.7	20.4	11.2	98		
	고등학교 졸업	2004년	31.0	34.3	26.2	8.6	397	885	7,605*
		2011년	37.9	35.3	20.1	6.8	488		
	전문대 졸업	2004년	35.3	30.9	25.0	8.8	136	261	1,299
		2011년	30.4	35.2	23.2	11.2	125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24.8	35.4	29.8	9.9	322	615	14,969**
		2011년	29.7	45.1	18.1	7.2	293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27.0	38.8	27.0	7.2	237	435	2,806
		2011년	22.2	46.5	24.2	7.1	198		
	유배우	2004년	30.0	32.0	28.0	10.0	719	1489	25,449***
		2011년	37.5	36.5	18.6	7.4	770		
	사별+이혼+ 별거	2004년	38.0	38.0	24.0	0.0	56	86	n/a
		2011년	25.0	27.8	25.0	22.2	36		
지 위 별	상용직 +고용주	2004년	30.9	33.1	25.6	10.5	411	767	14,415**
		2011년	30.3	44.7	18.5	6.5	356		
	임시직 +일용직	2004년	33.8	28.2	33.8	4.2	71	164	3,570
		2011년	32.3	32.3	24.7	10.8	93		
	자영업자	2004년	28.0	30.3	33.0	8.7	218	451	7,724*
		2011년	36.9	28.3	23.2	11.6	233		
	전업주부	2004년	29.5	35.0	26.2	9.3	183	429	12,499**
		2011년	38.9	40.6	14.3	6.2	244		
월 평 균 소 득 별	무급가족봉사자 및 기타	2004년	27.6	43.9	22.8	5.7	123	201	1,175
		2011년	29.5	37.2	28.2	5.1	78		
	100 만원 이하	2004년	34.2	37.8	23.2	4.9	82	113	2,251
		2011년	32.3	35.5	19.4	12.9	31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32.3	27.1	32.6	8.1	310	442	14,605**
		2011년	31.1	42.4	17.4	9.1	132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33.1	30.6	26.1	10.3	360	667	10,145**
		2011년	33.9	39.1	21.8	5.2	307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22.6	43.9	23.9	9.7	155	474	12,212**
		2011년	38.6	36.4	17.6	7.5	319		
	401 만원 이상	2004년	18.4	46.9	26.5	8.2	98	310	6,254*
		2011년	30.2	37.3	21.7	10.9	212		
지 역 별	대도시	2004년	31.2	33.4	26.1	9.2	509	975	26,097***
		2011년	40.8	38.4	15.0	5.8	466		
	중 · 소도시	2004년	27.9	35.0	28.5	8.6	383	768	2,912
		2011년	24.2	39.5	26.2	10.1	385		
	군지역	2004년	30.1	31.9	30.1	8.0	113	266	4,848***
		2011년	38.6	34.0	19.0	8.5	153		

2. 근로 능력있는 빈곤층에 적합한 정책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제공이 가장 많은 46.5%와 42.7%이고, 그 다음은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근로복지로 '04년 '11년 각 29.5%와 35.4%이다. 근로복지는 상승세이고,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약간 하강추세로써 일자리 연계의 복지에 대한 기대가 더욱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활훈련은 자영업자가, 근로복지는 무급가족종사 등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69] 근로 능력있는 빈곤층에 적합한 정책



〈표 3-86〉 근로능력있는 빈곤층에 적합한 정책

(단위: 명, %)

구 분	2004년		2011년		전 체		X ²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과 같은 생계급여 지급	350	24.0	324	22.0	674	23.0	11,440***
공공근로 사업과 같은 근로복지	431	29.5	522	35.4	953	32.4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679	46.5	630	42.7	1,309	44.6	
전 체	1,461	100.0	1,476	100.0	2,937	100.0	

***p<.001

〈표 3-8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근로 능력있는 빈곤층에 적합한 정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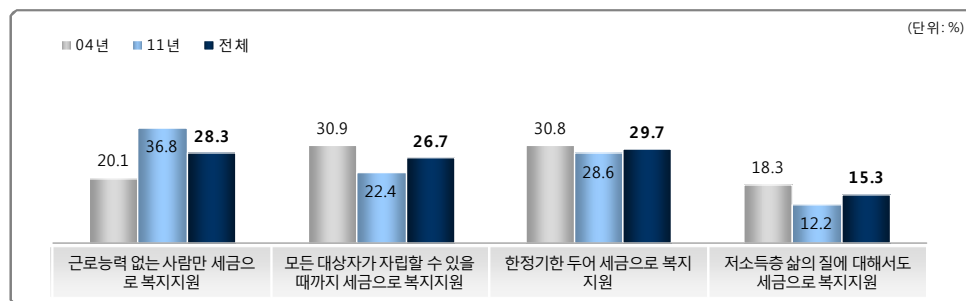
구 분			생계급여	근로복지	직업훈련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성 별	남자	2004년	21.6	29.5	48.9	726	1456	7,128**
		2011년	22.6	35.1	42.3	730		
	여자	2004년	26.3	29.5	44.2	735	1481	8,199**
		2011년	21.3	35.7	43.0	746		
연 령 별	20대	2004년	25.2	28.7	46.1	146	267	2,595
		2011년	20.5	33.7	45.8	121		
	30대	2004년	22.1	28.9	49.0	349	663	3,898
		2011년	22.6	35.4	42.0	314		
	40대	2004년	22.5	26.7	50.8	169	300	13,979***
		2011년	20.2	40.2	39.6	131		
	50대	2004년	23.1	33.7	43.2	199	460	0,666
		2011년	20.3	33.3	46.4	261		
	60세 이상	2004년	27.5	31.7	40.8	262	568	0,266
		2011년	25.8	33.3	40.9	306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31.7	28.7	39.6	230	392	11,365**
		2011년	16.7	35.2	48.2	162		
	고등학교 졸업	2004년	24.1	32.5	43.4	578	1300	2,181
		2011년	23.0	36.4	40.6	722		
	전문대 졸업	2004년	20.1	28.3	51.6	184	368	2,483
		2011년	26.6	28.3	45.1	184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21.8	26.5	51.7	468	876	11,004**
		2011년	20.1	36.8	43.1	408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22.0	29.9	48.1	341	634	0,028
		2011년	22.2	30.4	47.4	293		
	유배우	2004년	24.7	28.6	46.7	1057	2180	15,273***
		2011년	21.8	36.4	41.8	1123		
	사별+이혼+별거	2004년	23.4	43.8	32.8	64	124	0,237
		2011년	23.3	40.0	36.7	60		
지 위 별	상용직 +고용주	2004년	23.7	28.5	47.9	587	1127	16,066***
		2011년	24.3	38.5	37.2	540		
	임시직 +일용직	2004년	23.7	26.9	49.5	93	214	3,494
		2011년	21.5	38.8	39.7	121		
	자영업자	2004년	20.4	32.0	47.6	309	632	1,252
		2011년	18.9	29.1	52.0	323		
	전업주부	2004년	28.7	30.2	41.2	272	635	1,826
		2011년	24.0	32.8	43.3	363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04년	24.2	28.8	47.0	198	327	7,600**
		2011년	14.7	41.9	43.4	129		

구 분			생계급여	근로복지	직업훈련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월 평 균 소 득 별	100 만원 이하	2004년	23.4	34.7	41.9	124	180	0.262
		2011년	26.8	32.1	41.1	56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21.3	30.5	48.2	436	645	5.418*
		2011년	22.0	38.8	39.2	209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26.6	29.2	44.3	531	973	3.328
		2011년	24.0	34.6	41.4	442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23.5	31.6	44.9	247	704	1.743
		2011년	20.1	35.9	44.0	457		
지 역 별	대도시	2004년	23.6	31.0	45.4	713	1409	4.958*
		2011년	22.6	36.5	41.0	696		
	중·소도시	2004년	26.5	26.7	46.8	603	1148	6.994**
		2011년	22.4	33.6	44.0	545		
	군지역	2004년	15.9	33.8	50.3	145	380	1.299
		2011년	19.2	36.2	44.7	235		

3.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한도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도 지난 7년간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04년에는 모든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세금으로 복지지원과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을 비슷한 비율인 31%대로 지적하였는데 반해, '11년에는 가장 높은 지적을 한 응답은 근로능력 없는 사람만 세금으로 복지지원을 하자는 응답으로 36.8%가 응답하여 보편적 복지보다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표적화된 복지를 선호하고 있었다. 보편적 복지에서는 30대,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림 3-70]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한도



〈표 3-88〉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한도

(단위: 명, %)

구 분	2004년		2011년		전 체		x ²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근로능력 없는 사람만 세금으로 복지지원	302	20.1	542	36.8	844	28.3	112.671***
모든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세금으로 복지지원	465	30.9	330	22.4	795	26.7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463	30.8	421	28.6	884	29.7	
저소득층 삶의 질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복지지원	275	18.3	180	12.2	455	15.3	
전 체	1,506	100.0	1,473	100.0	2,979	100.0	

〈표 3-8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한도

(단위: %, 명)

구 분			최 소 인 원	모 든 인 원	기 간 한 정	삶의질 지 원	사례수	전 체 사례수	x ²
성 별	남자	2004년	19.3	32.6	30.3	17.9	743	1467	56.372***
		2011년	35.9	21.7	27.9	14.5	724		
	여자	2004년	20.8	29.2	31.2	18.7	763	1512	62.496***
		2011년	37.7	23.1	29.2	10.0	749		
연 령 단 위	20대	2004년	13.9	33.2	35.4	17.5	325	590	42.971***
		2011년	37.0	24.5	27.2	11.3	265		
	30대	2004년	20.6	29.8	29.8	19.8	359	673	24.072***
		2011년	36.0	26.4	26.8	10.8	314		
	40대	2004년	22.8	31.1	27.2	18.9	338	662	22.979***
		2011년	33.6	17.9	34.0	14.5	324		
	50대	2004년	24.6	29.1	29.6	16.8	203	467	15.790***
		2011년	38.6	22.4	30.7	8.3	264		
	60세 이상	2004년	20.3	30.6	31.3	17.8	281	587	25.629***
		2011년	39.2	21.2	24.2	15.4	306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2004년	20.8	32.4	34.4	12.5	241	404	11.361***
		2011년	33.1	24.5	25.8	16.6	163		
	고등학교 졸업	2004년	22.9	30.9	25.1	21.1	598	1317	50.556***
		2011년	35.3	22.3	31.2	11.3	719		
	전문대 졸업	2004년	21.4	30.5	27.8	20.3	187	370	13.747**
		2011년	36.6	20.2	29.5	13.7	183		
	대학교 졸업 이상	2004년	15.6	30.4	37.2	16.8	481	889	71.979
		2011년	40.9	22.8	24.8	11.5	408		

구 분			최 소 인 원	모 든 인 원	기 간 한 정	삶의질 지 원	사례수	전 체 사례수	χ^2
결 혼 여 부	미혼	2004년	14.0	32.0	38.0	16.0	350	645	50,133***
		2011년	38.0	25.8	26.4	9.8	295		
	유배우	2004년	21.8	30.2	28.7	19.3	1087	2204	74,047***
		2011년	36.9	21.3	29.0	12.8	1117		
	사별+이혼+ 별거	2004년	24.6	36.2	26.1	13.0	69	130	1,605
		2011년	29.5	26.2	31.2	13.1	61		
지 위 별	상용직 +고용주	2004년	19.7	31.4	29.0	19.9	608	1149	31,683***
		2011년	33.3	24.4	28.7	13.7	541		
	임시직 +일용직	2004년	17.5	30.9	35.1	16.5	97	220	11,205**
		2011년	37.4	22.0	30.1	10.6	123		
	자영업자	2004년	20.7	27.4	35.4	16.6	314	632	31,188***
		2011년	39.9	15.7	29.6	14.8	381		
	전업주부	2004년	23.7	31.2	26.2	19.0	279	642	21,644***
		2011년	37.2	25.1	28.1	9.6	363		
월 평 균 소 득 별	100 만원 이하	2004년	16.4	36.7	31.3	15.6	128	184	7,182*
		2011년	33.9	28.6	26.8	10.7	56		
	101-200 만원 이하	2004년	18.5	28.1	32.3	21.1	455	661	23,936***
		2011년	34.5	16.5	30.6	18.5	206		
	201-300 만원 이하	2004년	20.8	36.4	28.2	14.7	539	982	21,693***
		2011년	33.6	28.0	26.0	12.4	443		
	301-400 만원 이하	2004년	22.7	25.5	30.7	21.1	251	706	24,117***
		2011년	35.8	22.9	31.4	9.9	455		
	401 만원 이상	2004년	21.5	23.0	34.8	20.7	135	442	24,181***
		2011년	45.3	16.6	27.0	11.1	307		
지 역 별	대도시	2004년	20.5	32.0	28.5	19.1	738	1434	49,028***
		2011년	36.1	23.3	27.6	13.1	696		
	중·소도시	2004년	20.2	27.8	32.9	19.1	618	1160	49,838***
		2011년	37.8	24.5	27.1	10.5	542		
	군지역	2004년	18.1	38.3	32.9	10.7	149	384	32,060***
		2011년	36.6	14.9	34.9	13.6	235		

제8절 정치성향, 가구 경제

1. 정치적 성향

가. 극좌 VS 극우

정치적 성향은 중립인 경우 2004년 71.8%, 2011년 63.4%로 가장 높았다. 2004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극좌와 극우인 경우가 낮아졌으며 중도좌와 중도우의 응답이 높아졌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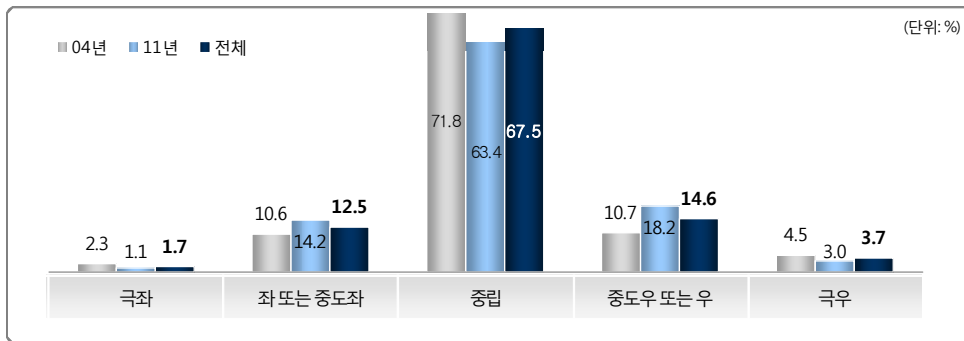
세대별로 보았을 때는 2004년에는 극우와 우인 경우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2011년에는 40대 이상인 경우 극우와 우인 경우가 30대 미만보다 높았으며 반면 극좌와 좌인 경우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표 3-90〉 귀하가 속하는 정치적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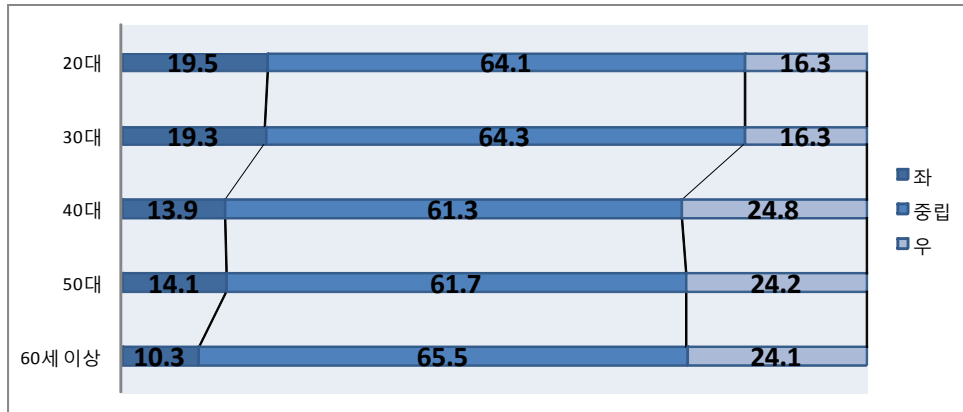
구분	2004년		2011년		전체		x ²
	N	%	N	%	N	%	
극좌	31	2.3	16	1.1	47	1.7	50.654 ***
좌 또는 중도좌	141	10.6	202	14.2	343	12.5	
중립	955	71.8	900	63.4	1,855	67.5	
중도우 또는 우	143	10.7	259	18.2	402	14.6	
극우	60	4.5	43	3.0	103	3.7	
전체	1,330	100.0	1,420	100.0	2,750	100.0	

***p<.001

[그림 3-71] 정치적 성향(좌/우)



[그림 3-72] 세대별 정치적 성향(좌/우)



〈표 3-91〉 정치적 성향(좌/우)

구분	극좌+중도좌		중립		중도우+극우		소계	전체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11	2004	2011
성 별	$\chi^2=13.822^{**}$ (2004) / $\chi^2=14.435^{**}$ (2011)								
전 체	12.9	15.4	71.8	63.4	15.3	21.3	100.0	1330	1420
남 성	15.3	19.0	67.4	60.4	17.4	20.6	100.0	680	705
여 성	10.5	11.7	76.5	66.3	13.1	22.0	100.0	650	715
연령별	$\chi^2=14.315$ (2004) / $\chi^2=22.324^{**}$ (2011)								
전 체	12.9	15.4	71.9	63.4	15.2	21.3	100.0	1328	1420
20대	14.7	19.5	73.0	64.1	12.3	16.3	100.0	285	251
30대	14.9	19.3	73.1	64.3	12.0	16.3	100.0	309	300
40대	11.5	13.9	72.5	61.3	16.1	24.8	100.0	305	323
50대	13.7	14.1	70.0	61.7	16.3	24.2	100.0	190	256
60대 이상	9.2	10.3	69.9	65.5	20.9	24.1	100.0	239	290
학력별	$\chi^2=5.428$ (2004) / $\chi^2=23.990^{**}$ (2011)								
전 체	12.9	15.4	71.8	63.4	15.3	21.3	100.0	1330	1420
중학교 졸업이하	10.8	9.9	70.6	71.7	18.6	18.4	100.0	204	152
고등학교 졸업	12.3	12.1	73.3	64.9	14.4	22.9	100.0	528	693
전문대 졸업	13.4	21.6	74.4	57.9	12.2	20.5	100.0	172	171
대학교 졸업이상	14.6	20.3	69.5	59.9	16.0	19.8	100.0	426	404
소득별	$\chi^2=3.857$ (2004) / $\chi^2=14.148$ (2011)								
전 체	12.9	15.4	71.9	63.5	15.3	21.1	100.0	1330	1416
100만원 이하	11.9	13.7	76.1	70.6	11.9	15.7	100.0	109	51
101-200만원	11.5	9.3	74.1	68.4	14.5	22.3	100.0	401	193
201-300만원	14.0	16.0	70.0	66.0	16.0	17.9	100.0	487	424
301-400만원	13.4	17.2	71.4	61.3	15.2	21.5	100.0	217	447
400만원 이상	12.9	15.9	69.0	58.8	18.1	25.2	100.0	116	301

주: 극좌 또는 중도좌=①극좌+②좌 또는 중도좌 / 극우 또는 중도우=④중도우 또는 우+⑤극우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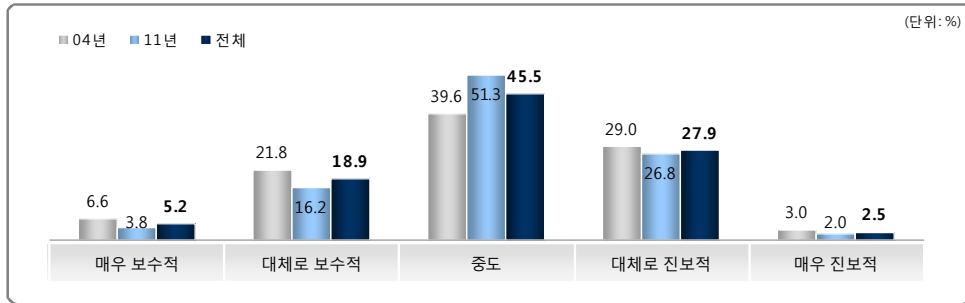
나. 정치적 성향(진보 VS 보수)

정치적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모두가 2004년에 비해 2011년은 낮아졌다. 오히려 중도인 경우가 2004년은 39.6%, 2011년은 51.3%로 2011년 확연히 높아졌다. 이러한 2004년과 2011년의 응답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로 살펴본 결과 2004년 2011년 모두 세대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적 성향이 높아졌다. 2011년 응답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는 보수의 성향이 진보의 성향보다 높았으며 반면 40대 이하의 경우 진보의 성향이 보수의 성향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2004년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집단은 보수의 경향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서 높고 진보의 성향은 가장 낮았으며 중립과 보수의 비중이 비슷하였다. 101~300만원의 중하층에서는 진보의 성향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서 가장 높았으며 중립과 진보의 성향 비율이 비슷하였다. 301만원 이상의 중상층 집단에서는 중립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진보와 보수의 성향은 낮았으며 특히 보수의 성향이 가장 낮았다. 2004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수의 성향이 적어졌다. 2011년의 경우는 2004년의 양상과 많이 달라져 전반적으로 중립의 성향이 모든 소득집단에서 높았으며 특히 1001~300만원이하 소득집단에서는 절반을 넘었다. 200만원 이상의 소득집단에서는 보수보다 진보의 성향이 더 높았으며 200만원 이하의 소득집단에서는 보수의 성향이 진보의 성향보다 다소 높았다. 이러한 소득구간에 따른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2004년과 2011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림 3-73] 정치적 성향(진보/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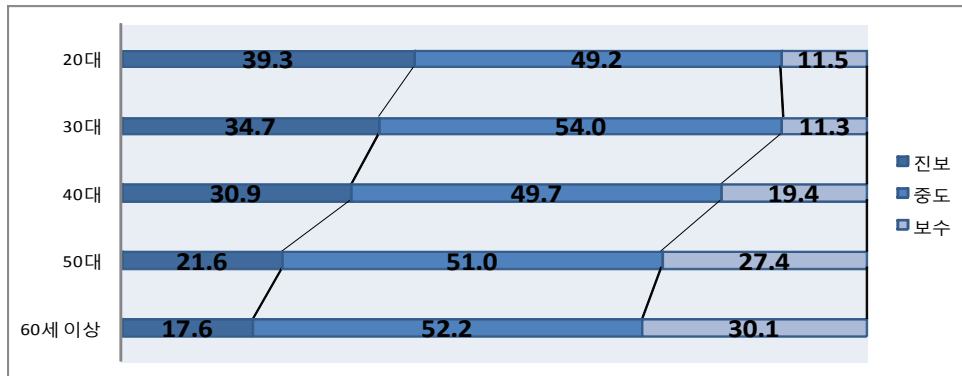


〈표 3-92〉 정치적 성향(진보/보수)

구분	2004년		2011년		전체		x ² / F
	N	%	N	%	N	%	
매우 보수적	91	6.6	54	3.8	145	5.2	47.647** *
대체로 보수적	300	21.8	230	16.2	530	18.9	
중도	546	39.6	730	51.3	1,276	45.5	
대체로 진보적	399	29.0	382	26.8	781	27.9	
매우 진보적	42	3.0	28	2.0	70	2.5	
전체	1,377	100.0	1,424	100.0	2,801	100.0	
Mean(SD)	3.00(0.945)		3.07(0.810)		3.04(0.879)		4.312**

p<.01, *p<.001

[그림 3-74] 연령별 정치적 성향(진보/보수)



〈표 3-93〉 성, 연령, 학력 및 소득별 정치적 성향(진보 VS 보수)

구분	진보		중립		보수		소계	전체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11	2004	2011
성 별	$\chi^2=18,440^{***}$ (2004) / $\chi^2=17,692^{***}$ (2011)								
전 체	32.0	28.8	39.7	51.3	28.3	19.9	100	1377	1424
남 성	35.9	33.0	34.2	45.8	29.9	21.2	100	696	707
여 성	28.0	24.7	45.2	56.6	26.7	18.7	100	681	717
연령별	$\chi^2=82,000^{***}$ (2004) / $\chi^2=74,059^{***}$ (2011)								
전 체	32.0	28.8	39.7	51.3	28.4	19.9	100	1379	1424
20대	44.3	39.3	35.1	49.2	20.6	11.5	100	296	252
30대	39.0	34.7	41.8	54.0	19.2	11.3	100	328	300
40대	29.9	30.9	42.2	49.7	27.9	19.4	100	308	324
50대	20.9	21.6	41.4	51.0	37.7	27.4	100	191	259
60대 이상	19.5	17.6	37.9	52.2	42.6	30.1	100	256	289
학력별	$\chi^2=56,098^{***}$ (2004) / $\chi^2=47,320^{***}$ (2011)								
전 체	32.0	28.8	39.6	51.3	28.4	19.9	100.0	1377	1424
중학교 졸업이하	19.7	12.6	39.4	57.0	40.8	30.5	100.0	213	151
고등학교 졸업	26.3	25.5	44.6	54.1	29.1	20.4	100.0	543	697
전문대 졸업	42.6	33.9	32.4	49.4	25.0	16.7	100.0	176	174
대학교 졸업이상	40.7	38.3	36.4	45.0	22.9	16.7	100.0	445	402
소득별	$\chi^2=21,278^{**}$ (2004) / $\chi^2=27,506^{**}$ (2011)								
전 체	32.0	28.8	39.6	51.4	28.4	19.8	100.0	1376	1421
100만원 이하	20.9	24.0	40.0	48.0	39.1	28.0	100.0	115	50
101-200만원	36.2	18.6	36.4	54.1	27.4	27.3	100.0	412	194
201-300만원	33.9	28.2	37.3	56.6	28.8	15.2	100.0	504	429
301-400만원	27.4	31.6	47.5	49.1	25.1	19.3	100.0	223	446
400만원 이상	28.7	32.8	45.1	46.0	26.2	21.2	100.0	122	302

주: 진보적=①매우 진보적+②대체로 진보적 / 보수적=④대체로 보수적+⑤매우 보수적으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p<.01, *p<.001

2. 주관적 사회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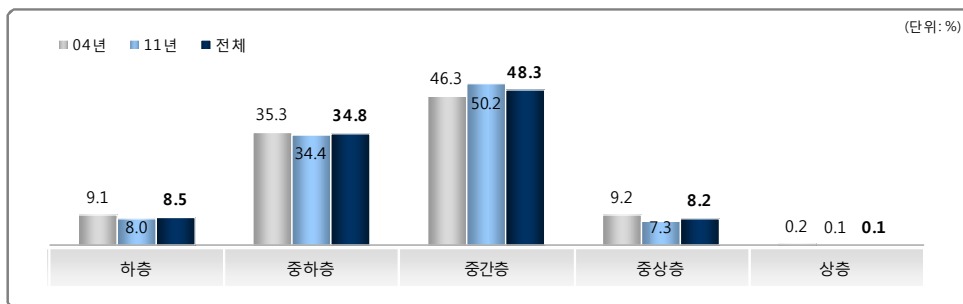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위치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살펴 보면 2004년 2011년 모두 자신이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았다. 이러한 주관적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응답결과는 연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04년과 2011년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특히 60대의 경우 절반이상이 하층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20대의 경우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

령별 차이는 2004년 2011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살펴보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율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집단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으며 200만원 미만의 집단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0~300만원 구간의 집단은 중간층이라는 응답율과 하층이라는 응답율이 높았다. 반면 4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에서는 하층이라는 응답율은 다른소득구간에 비해 현격히 줄었으며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즉 앞서 살펴본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구간별로 보았을 때도 고소득집단인 경우도 자신이 사회적으로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율이 높지는 않았다.

[그림 3-75] 주관적 사회적 위치 수준



〈표 3-94〉 주관적 사회적 위치 수준

구분	2004년		2011년		전체		x ² / F
	N	%	N	%	N	%	
하층	137	9.1	120	8.0	257	8.5	7.780
중하층	531	35.3	514	34.4	1,045	34.8	
중간층	697	46.3	751	50.2	1,448	48.3	
중상층	138	9.2	109	7.3	247	8.2	
상층	3	0.2	1	0.1	4	0.1	
전체	1,506	100.0	1,495	100.0	3,001	100.0	

〈표 3-95〉 연령, 학력 및 소득별 주관적 사회적 위치 수준

구분	상층		중간		하층		소계	전체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 체 $\chi^2 = 6,601^*$	9.4	7.4	46.3	50.3	44.4	42.3	100	1506	1498
연령별	$\chi^2 = 17,800^*$ (2004) / $\chi^2 = 20,331^{**}$ (2011)								
전체	9.4	7.4	46.3	50.3	44.3	42.3	100.0	1504	1498
20대	11.4	7.8	51.2	59.1	37.3	33.1	100.0	324	269
30대	7.3	6.0	47.2	49.2	45.5	44.8	100.0	358	317
40대	10.1	8.4	45.9	49.7	44.1	41.9	100.0	338	332
50대	11.3	8.6	46.3	51.3	42.4	40.1	100.0	203	267
60대 이상	7.5	6.4	39.9	43.5	52.7	50.2	100.0	281	313
학력별	$\chi^2 = 64,749^{***}$ (2004) / $\chi^2 = 47,004^{***}$ (2011)								
전체	9.4	7.4	46.3	50.3	44.4	42.3	100.0	1506	1498
중학교 졸업이하	5.8	3.5	35.3	38.6	58.9	57.9	100.0	241	171
고등학교 졸업	8.5	5.8	42.4	48.8	49.1	45.5	100.0	597	728
전문대 졸업	6.9	7.5	47.9	56.1	45.2	36.4	100.0	188	187
대학교 졸업이상	13.1	11.9	56.0	55.1	30.8	33.0	100.0	480	412
소득별	$\chi^2 = 248,471^{***}$ (2004) / $\chi^2 = 190,972^{***}$ (2011)								
전 체	9.3	7.4	46.4	50.5	44.3	42.1	100.0	1505	1492
100만원 이하	3.9	1.7	15.0	21.7	81.1	76.7	100.0	127	60
101-200만원	4.4	2.8	36.6	29.1	59.0	68.1	100.0	454	213
201-300만원	8.9	3.8	49.4	49.0	41.7	47.2	100.0	540	447
301-400만원	12.4	8.2	65.2	55.1	22.4	36.7	100.0	250	461
400만원 이상	26.9	15.8	61.9	65.9	11.2	18.3	100.0	134	311
지역별	$\chi^2 = 30,874^{***}$ (2004) / $\chi^2 = 5,057$ (2011)								
전체	9.4	7.4	46.3	50.3	44.3	42.3	100.0	1507	1498
대도시	8.1	6.8	44.5	50.7	47.4	42.5	100.0	739	704
중소도시	11.3	9.1	51.6	48.2	37.1	42.7	100.0	618	550
군지역	8.0	5.3	32.7	53.7	59.3	41.0	100.0	150	244

주: 상층=①상층+②중상층 / 하층=④중하층+⑤하층으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 $p<.05$, ** $p<.01$, *** $p<.001$

3.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을 살펴보면 2004년에 비해 2011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2004년의 경우 201~300만원의 소득구간이 가장 많았으나 2011년은 301~400만원의 소득구간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004년 약 279만원에서 2011년 384만원으로 약 105만원 정도가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2004년 2011년 모두 연령, 학력, 지역에 따라 소득에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예상하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경력이 풍부할수록 소득이 높아져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다 60대 이상에서는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대학이상의 학력은 가장 고소득인 501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군지역보다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3-96〉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 현황 (2인가구 이상)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 체	전체	2,788,461	2,898,284	3,038,307	3,200,005	3,390,738	3,432,021	3,631,713	3,841,586
	경상	2,679,694	2,778,718	2,905,528	3,062,027	3,254,087	3,293,928	3,491,149	3,705,284
	비경상	108,767	119,566	132,779	137,978	136,651	138,093	140,563	136,302
근 로 자	전체	3,058,451	3,213,474	3,406,365	3,589,469	3,811,962	3,805,120	3,965,336	4,198,582
	경상	2,943,306	3,088,092	3,264,668	3,450,925	3,661,458	3,650,153	3,836,406	4,061,749
	비경상	115,144	125,381	141,697	138,544	150,504	154,967	128,930	136,833
근 로 자 외	전체	2,405,183	2,459,289	2,525,752	2,659,192	2,770,222	2,867,047	3,122,076	3,274,255
	경상	2,305,468	2,347,823	2,405,393	2,521,999	2,653,979	2,754,507	2,963,742	3,138,796
	비경상	99,714	111,466	120,359	137,194	116,243	112,540	158,334	135,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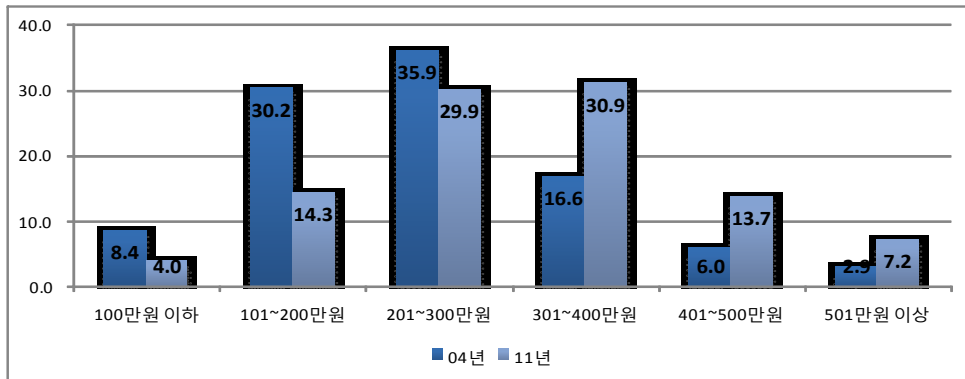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4~2011

〈표 3-97〉 가구 월평균 소득

구분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 이상		소계		전체시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11	2011	2004	2011
전 체	8.4	4.0	30.2	14.3	35.9	29.9	16.6	30.9	6.0	13.7	2.9	7.2	100.0	100.0	1505	1494
$\chi^2 = 254.048^{***}$																
성 별	$\chi^2 = 9.233$ (2004) / $\chi^2 = 4.754$ (2011)															
전체	8.5	4.0	30.1	14.3	35.9	29.9	16.6	30.9	6.0	13.7	2.9	7.2	100.0	100.0	1506	1494
남 성	7.1	3.2	32.3	13.6	35.5	31.1	16.0	31.4	5.4	13.2	3.6	7.7	100.0	100.0	743	730
여 성	9.8	4.8	28.0	14.9	36.2	28.8	17.2	30.5	6.6	14.3	2.2	6.7	100.0	100.0	763	764
연령별	$\chi^2 = 164.800^{***}$ (2004) / $\chi^2 = 460.391^{***}$ (2011)															
전 체	8.4	4.0	30.2	14.3	35.9	29.9	16.6	30.9	6.0	13.7	2.9	7.2	100.0	100.0	1507	1494
20대	4.6	0.7	26.5	7.1	40.3	28.3	17.2	30.9	7.7	17.8	3.7	15.2	100.0	100.0	325	269
30대	2.5	0.6	33.5	5.1	39.7	38.9	16.5	37.0	4.7	13.9	3.1	4.4	100.0	100.0	358	316
40대	6.2	0.3	22.7	7.5	37.8	31.6	22.7	41.3	7.1	13.6	3.5	5.7	100.0	100.0	339	332
50대	9.9	1.9	24.1	9.7	39.9	31.8	18.2	32.2	5.9	16.9	2.0	7.5	100.0	100.0	203	267
60대 이상	22.0	16.1	43.6	41.0	20.9	18.7	7.4	12.6	4.3	7.4	1.8	4.2	100.0	100.0	282	310
학력별	$\chi^2 = 183.272^{***}$ (2004) / $\chi^2 = 475.134^{***}$ (2011)															
전 체	8.4	4.0	30.2	14.3	35.9	29.9	16.5	30.9	6.0	13.7	2.9	7.2	100.0	100.0	1505	1494
중학교 졸업이하	22.9	25.4	46.3	43.2	21.7	17.2	6.3	10.1	2.5	2.4	0.4	1.8	100.0	100.0	240	169
고등학교 졸업	6.9	1.9	28.5	13.9	40.5	36.3	17.4	32.2	5.0	11.7	1.7	4.0	100.0	100.0	597	727
전문대 졸업	4.3	1.1	34.8	9.6	39.0	28.2	15.0	31.4	4.3	20.2	2.7	9.6	100.0	100.0	187	188
대학교 졸업이상	4.8	0.2	22.7	5.1	36.0	24.6	21.2	37.1	9.6	19.0	5.8	13.9	100.0	100.0	481	410
지역별	$\chi^2 = 76.444^{***}$ (2004) / $\chi^2 = 29.882^{**}$ (2011)															
전 체	8.4	4.0	30.2	14.3	35.8	29.9	16.6	30.9	6.0	13.7	2.9	7.2	100.0	100.0	1504	1494
대도시	8.0	2.8	30.2	13.6	37.0	28.9	16.3	32.6	6.0	15.2	2.6	6.9	100.0	100.0	738	706
중소도시	6.0	4.0	27.1	13.2	35.7	29.6	19.8	30.3	7.5	13.5	4.1	9.3	100.0	100.0	617	547
군지역	20.8	7.5	43.0	18.7	30.9	33.6	5.4	27.4		10.0		2.9	100.0	100.0	149	241

주: 본 문항은 주관식 문항으로 본 보고서 연구진이 ①100만원 미만 ②101-200만원 ③201-300만원 ④301-400만원 ⑤401-500만원 ⑥501만원이상으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p<0.01, **p<0.05, *p<0.1

[그림 3-76] 가구의 월평균 소득



〈표 3-98〉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당/상여금/이자소득/세금 포함 총액)

구분	2004년		2011년		x ²
	N	%	N	%	
100만원 이하	127	8.5	60	4.0	350.046***
101~150 만원	204	13.5	73	4.9	
151~200 만원	250	16.6	140	9.3	
201~250 만원	293	19.5	113	7.5	
251~300 만원	247	16.4	334	22.3	
301~400 만원	250	16.6	462	30.8	
401~500 만원	90	6.0	205	13.7	
501만원 이상	44	2.9	107	7.1	
전체	1,506	100.0	1,500	100.0	

***p<.001

나.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1) 적정소득(전체)

적정소득에 관해서는 2004년과 2011년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04년에 비해 2011년 적정소득액을 모두 높게 예상하였다. 2011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여유있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평균은 약 470만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약 383만원,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소득의 평균은 약 249만원,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소득의 평균은 약 182만원이었다. 응답자답 가구가 필요로 하는 적정 최저생계비의 평균은 약 254

만원이었으며 4인 가족이 필요한 최소한의 월소득의 평균은 약 4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응답자들이 필요소득에 관해 상향하여 응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1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439,413원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99〉 적정소득

단위: 만원

구분	2004년			2011년			값
	평균	표준 편차	사례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여유있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405.14	171.09	1506	470.01	174.98	1500	-10.277***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306.78	119.73	1506	382.89	137.98	1500	-16.150***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185.45	71.13	1506	249.30	94.23	1500	-20.960***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125.38	54.30	1506	181.63	78.65	1500	-22.811***
가구의 적정 최저생계비	171.81	73.47	1506	253.06	104.89	1500	24.587***
4인 가족이 필요한 최소한 월소득	298.84	113.11	1506	405.53	166.82	1500	20.514***

***p<.001

2) 현소득 대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현재 가구의 월평균소득에 따라 적정소득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04년 2011년 모두 응답자의 현소득에 따라 적정소득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현소득이 적정소득액을 생각하는 주관적 판단 기준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2004년 2011년 모두 여유있게 충분하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자신의 소득보다 모두 높게 응답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불충분하거나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자신의 소득과 비슷하거나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3-100〉 현소득 대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평균점수 비교)

(단위: 점, 명)

특성		2004년					2011년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사후 검증	F	평균	표준편 차	사례수	사후 검증	F
여유있게 충분	100만원 이하	271.0	135.2	143	a	93.168 ***	221.7	166.8	60	a	233.687 ***
	101-200만원 미만	349.5	155.0	506	b		320.8	136.9	213	b	
	201-300만원 미만	413.5	128.0	596	c		435.4	107.8	447	c	
	301~400만원 미만	470.1	166.5	275	d		494.0	97.6	462	d	
	401만원 이상	560.8	230.9	149	e		632.9	202.4	312	e	
	전체	404.4	171.2	1669			469.9	174.5	1494		
충분	100만원 이하	194.8	83.1	143	a	138.686 ***	164.2	126.8	60	a	307.613 ***
	101-200만원 미만	256.3	89.3	506	b		252.2	99.9	213	b	
	201-300만원 미만	319.8	90.0	596	c		351.6	77.9	447	c	
	301~400만원 미만	364.9	118.8	275	d		412.7	73.9	462	d	
	401만원 이상	418.9	169.5	149	e		515.4	152.7	312	e	
	전체	306.1	119.8	1669			383.0	137.9	1494		
불충분	100만원 이하	118.9	51.2	143	a	116.069 ***	98.4	50.4	60	a	299.001 ***
	101-200만원 미만	157.1	57.3	506	b		159.3	49.8	213	b	
	201-300만원 미만	196.0	58.5	596	c		227.3	50.4	447	c	
	301~400만원 미만	216.3	66.6	275	d		273.4	57.5	462	d	
	401만원 이상	242.0	95.1	149	e		335.7	113.6	312	e	
	전체	185.0	71.2	1669			249.3	94.2	1494		
매우 불충분	100만원 이하	80.7	36.0	143	a	79.141 ***	67.8	41.4	60	a	211.737 ***
	101-200만원 미만	105.7	42.8	506	b		111.9	36.9	213	b	
	201-300만원 미만	134.9	48.9	596	c		166.0	48.2	447	c	
	301~400만원 미만	147.2	54.8	275	cd		201.3	56.7	462	d	
	401만원 이상	153.6	72.4	149	d		244.9	98.0	312	e	
	전체	125.1	54.3	1669			181.7	78.7	1494		
응답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00만원 이하	105.0	46.4	143	a	112.079 ***	108.1	39.9	60	a	136.467 ***
	101-200만원 미만	145.6	53.7	506	b		175.1	65.6	213	b	
	201-300만원 미만	180.3	64.4	596	c		235.5	71.2	447	c	
	301~400만원 미만	196.8	72.8	275	c		280.1	79.0	462	d	
	401만원 이상	240.9	97.8	149	d		319.4	137.4	312	e	
	전체	171.5	73.5	1669			253.1	104.9	1494		
4인가구 최저생계비	100만원 이하	222.2	107.5	143	a	63.025 ***	269.7	89.1	60	a	56.631 ***
	101-200만원 미만	261.7	94.2	506	b		319.8	122.4	213	a	
	201-300만원 미만	312.9	106.8	596	c		383.5	105.2	447	b	
	301~400만원 미만	333.5	107.2	275	c		425.5	205.4	462	b	
	401만원 이상	373.0	128.8	149	d		493.6	161.2	312	c	
	전체	298.3	113.1	1669			405.8	166.9	1494		

***p<.001 / a,b,c,d, 다른 집단임

〈표 3-101〉 가구월평균소득 대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구분	100만원 이하		101-200		201-300		301-400		301-400		501만원 이상		소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여유있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chi^2 = 612.743^{***}$ (2004) / $\chi^2 = 1634.998^{***}$ (2011)																
전체	0.5	0.5	9.1	4.9	30.8	13.1	22.0	22.3	27.7	35.1	10.0	24.1	100.0	1507	1494	
100만원 이하	5.5	13.3	45.3	56.7	25.8	23.3	8.6	1.7	14.1	3.3	0.8	1.7	100.0	128	60	
101-200만원			13.4	17.8	49.5	54.0	16.3	16.0	17.1	8.5	3.7	3.8	100.0	455	213	
201-300만원			3.0		26.7	11.4	31.5	44.1	30.6	37.6	8.3	6.9	100.0	540	447	
301-400만원			0.4	0.2	19.6	3.0	22.8	16.7	39.6	56.7	17.6	23.4	100.0	250	462	
400만원 이상			0.7		9.7	0.6	14.9	7.7	42.5	23.7	32.1	67.9	100.0	134	312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chi^2 = 589.219^{***}$ (2004) / $\chi^2 = 1627.083^{***}$ (2011)																
전체	1.5	1.7	24.5	9.0	39.6	22.5	23.3	37.3	8.6	21.1	2.5	8.4	100.0	1504	1494	
100만원 이하	13.4	31.7	57.5	55.0	24.4	11.7	3.9		0.8			1.7	100.0	127	60	
101-200만원	0.9	2.8	43.5	39.4	41.5	44.6	9.9	9.9	3.1	1.4	1.1	1.9	100.0	453	213	
201-300만원			12.4	3.1	47.0	35.3	32.2	54.1	7.0	6.5	1.3	0.9	100.0	540	447	
301-400만원	0.4	0.2	9.2	0.6	35.2	11.3	32.0	50.0	19.2	35.1	4.0	2.8	100.0	250	462	
400만원 이상			6.7		25.4	7.7	34.3	20.5	21.6	38.8	11.9	33.0	100.0	134	312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chi^2 = na$ (2004) / $\chi^2 = na$ (2011)																
전체	18.8	6.4	61.0	37.0	17.5	43.0	2.0	11.0	0.7	1.6	100.0	0.9		1506	1494	
100만원 이하	64.1	78.3	32.8	20.0	3.1	1.7					100.0			128	60	
101-200만원	27.8	18.8	64.8	76.1	6.4	4.2	0.9	0.9	0.2		100.0			454	213	
201-300만원	8.0	1.6	70.9	51.7	19.4	46.3	1.1	0.2	0.6	0.2	100.0			540	447	
301-400만원	7.2	0.4	58.8	22.1	29.6	63.0	4.0	14.5	0.4		100.0			250	462	
400만원 이상	10.4		39.6	14.7	38.1	43.3	7.5	30.4	4.5	7.4	100.0	4.2		134	312	

주: 본 문항은 주관식 문항으로 본 보고서 연구진이 ①100만원 미만 ②101-200만원 ③201-300만원 ④301-400만원 ⑤401-500만원 ⑥501만원이상으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았음

*p<.001

구분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301-400만원		501만원 이상		스케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chi^2 = na$ (2004) / $\chi^2 = na$ (2011)																
전체	58.8	23.7	37.7	53.6	3.1	19.8	0.5	2.1	100.0	0.5	0.3				1508	1494
100만원 이하	89.1	96.7	10.9	1.7		1.7			100.0						128	60
101-200만원	78.7	69.0	20.0	30.5	0.7	0.5	0.7		100.0						455	213
201-300만원	46.5	19.7	50.6	70.2	2.6	10.1	0.4		100.0						540	447
301-400만원	39.2	9.1	54.4	60.0	6.4	30.5		0.4	100.0						250	462
400만원 이상	48.1	6.1	40.0	46.2	9.6	34.6	2.2	9.3	100.0	2.6	1.3				135	312
가구의 적정 최저생계비 $\chi^2 = na$ (2004) / $\chi^2 = na$ (2011)																
전체	25.7	6.8	56.1	36.4	15.7	39.0	1.8	14.1	0.7	2.7	0.1	1.0	100.0	100.0	1507	1494
100만원 이하	70.1	71.7	27.6	28.3	2.4								100.0	100.0	127	60
101-200만원	33.6	18.8	59.3	65.7	6.8	13.6	0.2	0.9		0.9			100.0	100.0	455	213
201-300만원	17.0	2.9	64.1	43.4	17.2	47.9	1.1	5.4	0.6	0.2		0.2	100.0	100.0	541	447
301-400만원	15.7	0.9	56.2	25.3	24.1	48.7	3.2	22.9	0.8	2.2			100.0	100.0	249	462
400만원 이상	10.4	0.6	40.0	24.4	36.3	36.9	8.9	25.0	3.7	8.7	0.7	4.5	100.0	100.0	135	312
4인 가족이 필요한 최소한 월소득 $\chi^2 = 270.243^{***}$ (2004) / $\chi^2 = 559.748^{***}$ (2011)																
전체	1.7	0.3	26.7	5.8	41.3	24.1	18.9	34.8	9.7	24.7	1.7	10.4	100.0	100.0	1504	1494
100만원 이하	8.6	1.7	52.3	41.7	29.7	35.0	6.3	16.7	2.3	5.0	0.8		100.0	100.0	128	60
101-200만원	1.3	0.5	40.0	17.8	41.5	46.9	13.0	24.4	3.7	7.5	0.4	2.8	100.0	100.0	455	213
201-300만원	1.1	0.2	18.0	3.1	46.8	28.2	22.8	43.6	9.1	21.0	2.2	3.8	100.0	100.0	539	447
301-400만원	0.8	0.2	14.9	1.1	41.8	16.0	23.3	41.8	17.3	32.3	2.0	8.7	100.0	100.0	249	462
400만원 이상			13.5	1.3	28.6	12.5	27.8	22.4	25.6	34.3	4.5	29.5	100.0	100.0	133	312

주: 본 문항은 주관식 문항으로 본 보고서 연구전이 ①100만원 미만 ②101-200만원 ③201-300만원 ④301-400만원 ⑤401-500만원 ⑥501만원이상으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았음

*p<.001

3) 세대 및 지역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세대별로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경우 적정소득을 다른 세대에 비하여 낮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대의 경우 적정 소득이 가장 높았다. 특히 2011년 여유있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적정소득의 경우 20대와 60대의 평균금액은 약 180만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로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2004년 2011년 모두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군지역의 경우 낮은 금액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표 3-102〉 연령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1(평균점수 비교)

(단위: 점, 명)

특성		2004년					2011년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사후 검증	F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사후 검증	F
여유있게 충분	20대	424.2	189.6	367	b	23.165 ***	531.7	191.6	269	c	56.048 ***
	30대	421.9	179.1	394	b		485.4	130.9	317	b	
	40대	432.4	153.1	370	b		497.3	162.0	334	b	
	50대	409.6	157.4	212	b		495.5	161.3	267	b	
	60세 이상	325.7	143.6	326	a		350.6	169.8	313	a	
	전체	404.4	171.2	1669			470.0	175.0	1500		
충분	20대	312.2	115.1	367	a	29.759 ***	435.5	150.3	269	c	67.541 ***
	30대	321.4	127.4	394	a		398.2	106.0	317	b	
	40대	331.8	106.8	370	a		406.5	110.9	334	b	
	50대	316.4	118.4	212	a		401.9	124.0	267	b	
	60세 이상	244.8	110.1	326	b		280.7	143.1	313	a	
	전체	306.1	119.8	1669			382.9	138.0	1500		
불충분	20대	186.6	75.4	367	b	31.045 ***	280.1	96.3	269	c	52.651 ***
	30대	194.7	64.5	394	b		255.0	72.7	317	b	
	40대	203.1	72.0	370	b		267.8	79.6	334	bc	
	50대	188.8	64.1	212	b		261.6	87.5	267	bc	
	60세 이상	148.8	65.1	326	a		186.8	103.9	313	a	
	전체	185.0	71.2	1669			249.3	94.2	1500		
매우 불충분	20대	122.9	57.3	367	b	24.708 ***	202.8	76.8	269	b	39.222 ***
	30대	132.4	51.7	394	bc		186.7	66.3	317	b	
	40대	139.6	58.3	370	c		195.8	70.3	334	b	
	50대	125.8	51.0	212	b		190.6	76.0	267	b	
	60세 이상	101.9	42.3	326	a		135.6	84.8	313	a	
	전체	125.1	54.3	1669			181.6	78.7	1500		

특성		2004년					2011년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사후 검증	F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사후 검증	F
응답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20대	168.8	75.6	367	b	17.317 ***	280.0	109.9	269	b	37.741 ***
	30대	172.4	68.3	394	b		258.5	78.5	317	b	
	40대	191.3	77.4	370	c		272.8	102.6	334	b	
	50대	178.0	70.4	212	bc		265.4	101.2	267	a	
	60세 이상	146.6	67.1	326	a		192.8	107.0	313		
	전체	171.5	73.5	1669			253.1	104.9	1500		
4인가구 최저생계비	20대	303.6	121.4	367	b	15.941 ***	446.4	166.8	269	b	18.003 ***
	30대	303.2	108.2	394	b		414.7	231.8	317	b	
	40대	319.0	112.4	370	b		416.3	126.5	334	b	
	50대	309.3	116.7	212	b		417.5	135.7	267	b	
	60세 이상	256.0	96.1	326	a		339.5	128.3	313	a	
	전체	298.3	113.1	1669			405.5	166.8	1500		

***p<.001 / a,b,c, 다른 집단임

〈표 3-103〉 지역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1(평균점수 비교)

(단위: 점, 명)

특성		2004년					2011년				
		평균	표준편 차	사례수	사후 검증	F	평균	표준편 차	사례수	사후 검증	F
여유있게 충분	대도시	429.7	188.4	817	c	25.151 ***	474.0	165.7	706	b	11.474 ***
	중·소도시	391.0	144.2	685	b		485.8	187.6	550	b	
	군지역	335.7	160.9	167	a		422.8	163.6	244	a	
	전체	404.4	171.2	1669			470.0	175.0	1500		
충분	대도시	322.6	134.5	817	c	27.201 ***	389.0	133.0	706	b	16.309 ***
	중·소도시	299.8	98.8	685	b		395.1	146.2	550	b	
	군지역	251.0	102.2	167	a		337.6	123.8	244	a	
	전체	306.1	119.8	1669			382.9	138.0	1500		
불충분	대도시	192.0	74.2	817	b	18.596 ***	248.4	83.9	706	b	20.639 ***
	중·소도시	184.0	66.1	685	b		264.2	107.2	550	b	
	군지역	155.6	69.3	167	a		218.3	83.1	244	a	
	전체	185.0	71.2	1669			249.3	94.2	1500		
매우 불충분	대도시	129.9	56.7	817	b	14.839 ***	182.9	72.8	706	b	15.015 ***
	중·소도시	124.3	51.4	685	b		190.6	89.6	550	b	
	군지역	105.0	48.8	167	a		157.8	62.6	244	a	
	전체	125.1	54.3	1669			181.6	78.7	1500		
응답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도시	179.3	77.2	817	b	11.796 ***	240.8	80.2	706	b	23.070 ***
	중·소도시	166.8	70.8	685	b		276.7	127.2	550	b	
	군지역	152.4	59.4	167	a		235.2	103.1	244	a	
	전체	171.5	73.5	1669			253.1	104.9	1500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도시	315.5	118.8	817	c	37.049 ***	405.7	140.1	706	b	15.914 ***
	중·소도시	293.0	104.2	685	b		427.4	212.2	550	b	
	군지역	236.1	94.1	167	a		355.7	96.7	244	a	
	전체	298.3	113.1	1669			405.5	166.8	1500		

***p<.001 / a,b,c 다른 집단임

〈표 3-104〉 연령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2

구분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 이상		소계		전체시세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11	2011	2004	2011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chi^2 = 164.046^{***}$ (2004) / $\chi^2 = 424.521^{***}$ (2011)																
전 체	0.5	0.6	9.1	4.9	30.9	13.1	22.0	22.3	27.6	35.1	9.9	24.1	100.0	100.0	1506	1500
20대			8.3	1.5	26.8	5.6	25.2	20.4	27.7	37.2	12.0	35.3	100.0	100.0	325	269
30대			4.2		31.8	6.6	26.2	26.2	27.9	44.8	10.0	22.4	100.0	100.0	359	317
40대			4.7	1.2	26.9	8.7	20.4	20.7	35.2	43.7	12.7	25.7	100.0	100.0	338	334
50대		0.4	9.4	0.7	25.6	12.0	24.1	23.6	30.5	33.3	10.3	30.0	100.0	100.0	203	267
60대 이상	2.5	2.6	21.4	20.1	43.1	31.6	13.5	20.4	16.0	15.7	3.6	9.6	100.0	100.0	281	313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chi^2 = 164.444^{***}$ (2004) / $\chi^2 = 445.052^{***}$ (2011)																
전 체	1.5	1.8	24.5	8.9	39.5	22.5	23.4	37.3	8.6	21.1	2.6	8.3	100.0	100.0	1507	1500
20대	0.9	0.4	22.2	2.2	40.9	18.6	24.6	36.4	8.9	25.7	2.5	16.7	100.0	100.0	325	269
30대	0.6		18.4	2.5	45.1	20.2	23.7	49.5	9.2	22.4	3.1	5.4	100.0	100.0	359	317
40대			16.3	3.0	38.5	18.6	30.8	45.5	12.1	25.4	2.4	7.5	100.0	100.0	338	334
50대	1.0	0.4	23.0	4.1	37.7	24.3	26.5	37.1	9.3	24.0	2.5	10.1	100.0	100.0	204	267
60대 이상	5.7	8.0	45.9	31.6	33.1	30.7	10.3	17.3	2.5	8.9	2.5	3.5	100.0	100.0	281	313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chi^2 = na$ (2004) / $\chi^2 = na$ (2011)																
전 체	18.9	6.5	60.9	36.9	17.4	43.1	2.0	11.1	0.8	1.6		0.9	100.0	100.0	1505	1500
20대	21.8	1.1	56.6	30.9	17.5	46.8	2.8	16.7	1.2	3.0		1.5	100.0	100.0	325	269
30대	11.2	1.3	67.3	39.4	19.3	48.9	1.7	8.2	0.6	2.2			100.0	100.0	358	317
40대	9.5	1.5	64.2	29.6	22.5	54.2	2.7	11.7	1.2	1.8		1.2	100.0	100.0	338	334
50대	15.3	2.2	65.0	36.0	17.7	45.3	2.0	14.6		0.7		1.1	100.0	100.0	203	267
60대 이상	39.1	25.2	50.9	48.2	8.5	20.1	0.7	5.4	0.7	0.3		0.6	100.0	100.0	281	313

구분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 이상		스케		전체시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11	2011	2004	2011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chi^2 = na$ (2004) / $\chi^2 = na$ (2011)																
전 체	58.8	23.7	37.7	53.7	3.0	19.7	0.5	2.1		0.5		0.3	100.0	1508	1500	
20대	64.0	13.8	31.4	53.9	4.0	28.3	0.6	2.6		1.1		0.4	100.0	325	269	
30대	52.1	16.7	44.8	59.6	2.5	21.5	0.6	1.9		0.3			100.0	359	317	
40대	47.6	15.0	46.7	59.9	4.7	21.0	0.9	3.6		0.6			100.0	338	334	
50대	55.9	16.5	40.2	61.4	3.4	19.5	0.5	1.5		0.7		0.4	100.0	204	267	
60대 이상	76.6	55.0	23.4	34.2		9.6		0.6				0.6	100.0	282	313	
가구의 적정 최저생계비 $\chi^2 = na$ (2004) / $\chi^2 = 259.907^{***}$ (2011)																
전 체	25.8	6.9	56.2	36.3	15.6	39.1	1.7	14.1	0.7	2.7	0.1	1.0	100.0	1506	1500	
20대	27.7	3.0	55.1	29.4	15.1	45.0	1.5	15.2	0.6	5.9		1.5	100.0	325	269	
30대	23.1	3.5	60.7	32.2	13.4	45.7	2.2	18.0	0.6	0.6			100.0	359	317	
40대	16.6	1.8	58.3	32.0	20.7	46.4	3.0	15.6	1.2	2.1	0.3	2.1	100.0	338	334	
50대	23.2	3.0	53.7	36.3	21.7	39.7	1.5	16.1		4.1		0.7	100.0	203	267	
60대 이상	39.9	22.7	50.9	50.8	8.5	18.8		5.8	0.7	1.3		0.6	100.0	281	313	
4인 가족이 필요한 최소한 월소득 $\chi^2 = 71.945^{***}$ (2004) / $\chi^2 = 164.985^{***}$ (2011)																
전 체	1.7	0.3	26.6	5.7	41.3	24.1	19.0	34.9	9.7	24.7	1.7	10.3	100.0	1507	1500	
20대	2.2		27.2	1.5	38.0	17.8	19.4	34.9	11.4	30.9	1.9	14.9	100.0	324	269	
30대	0.8	0.3	23.7	2.5	44.6	23.3	21.4	39.4	7.8	25.6	1.7	8.8	100.0	359	317	
40대	0.9	0.3	19.8	5.1	42.2	18.0	22.4	34.7	12.7	31.1	2.1	10.8	100.0	339	334	
50대	0.5		24.1	3.4	42.9	22.1	17.7	36.3	12.8	24.3	2.0	13.9	100.0	203	267	
60대 이상	4.3	1.0	39.7	15.3	38.7	38.3	12.4	29.1	4.3	11.8	0.7	4.5	100.0	282	313	

주. 본 문항은 주관식 문항으로 본 보고서 연구진이 ①100만원 미만 ②101-200만원 ③201-300만원 ④301-400만원 ⑤401-500만원 ⑥501만원이상으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았음

***p<.001

〈표 3-105〉 지역별 적정소득에 관한 의견 2

구분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 이상		소계		전체시계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11	2011	2004	2011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chi^2 = 96.261^{***}$ (2004) / $\chi^2 = 36.589^{***}$ (2011)																
전 체	0.4	0.6	9.0	4.9	30.8	13.1	22.1	22.3	27.7	35.1	10.0	24.1	100.0	100.0	1506	1500
대도시	0.4	0.6	7.6	4.0	28.0	12.7	19.9	22.8	31.1	35.0	13.0	24.9	100.0	100.0	737	706
중소도시		0.5	7.4	4.2	31.9	10.0	26.2	21.8	28.0	36.5	6.5	26.9	100.0	100.0	618	550
군지역	2.0	0.8	22.5	9.0	40.4	20.9	15.9	21.7	9.9	32.0	9.3	15.6	100.0	100.0	151	244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chi^2 = 71.132^{***}$ (2004) / $\chi^2 = 37.960^{***}$ (2011)																
전 체	1.4	1.8	24.6	8.9	39.6	22.5	23.3	37.3	8.6	21.1	2.6	8.3	100.0	100.0	1506	1500
대도시	1.6	1.8	20.7	7.8	38.8	20.7	24.2	38.2	10.3	22.2	4.3	9.2	100.0	100.0	739	706
중소도시	0.8	1.3	23.9	8.0	42.1	20.7	24.9	37.8	7.3	23.3	1.0	8.9	100.0	100.0	618	550
군지역	2.7	2.9	46.3	14.3	32.9	31.6	12.1	33.6	5.4	13.1	0.7	4.5	100.0	100.0	149	244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chi^2 = 34.560^{***}$ (2004) / $\chi^2 = 53.669^{***}$ (2011)																
전 체	18.9	6.5	61.0	36.9	17.5	43.1	2.0	11.1	0.7	1.6		0.9	100.0	100.0	1506	1500
대도시	17.6	4.7	59.6	38.0	19.4	43.9	2.4	11.6	0.9	1.7		0.1	100.0	100.0	737	706
중소도시	16.5	6.2	64.3	31.8	17.0	45.8	1.8	12.2	0.5	1.8		2.2	100.0	100.0	619	550
군지역	34.7	12.3	54.0	45.5	10.0	34.4	0.7	7.0	0.7	0.8			100.0	100.0	150	244

구분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 이상		소계		전체시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일평균 소득액 $\chi^2 = na$ (2004) / $\chi^2 = na$ (2011)																
전 체	58.8	23.7	37.7	53.7	3.1	19.7	0.5	2.1		0.5		0.3				1500
대도시	54.3	22.4	41.0	52.4	4.3	22.5	0.4	2.4		0.3			100.0		619	706
중소도시	59.8	22.4	37.8	53.8	1.8	19.5	0.6	2.5		1.1		0.7	100.0		150	550
군지역	76.7	30.7	20.7	57.0	2.0	12.3	0.7						100.0		1508	244
가구의 적정 최저생계비 $\chi^2 = na$ (2004) / $\chi^2 = 66.724^{***}$ (2011)																
전 체	25.8	6.9	56.1	36.3	15.6	39.1	1.8	14.1	0.6	2.7	0.1	1.0	100.0		1508	1500
대도시	23.5	6.2	54.3	38.8	19.2	42.9	1.9	10.5	1.1	1.4		0.1	100.0		739	706
중소도시	27.8	5.5	56.5	32.0	13.2	37.5	2.1	18.4	0.2	4.2	0.2	2.5	100.0		619	550
군지역	28.7	12.3	63.3	38.5	8.0	31.6		14.8		2.9			100.0		150	244
4인 가족이 필요한 최소한 월소득 $\chi^2 = 84.041^{**}$ (2004) / $\chi^2 = 50.549^{***}$ (2011)																
전 체	1.7	0.3	26.6	5.7	41.3	24.1	19.0	34.9	9.7	24.7	1.7	10.3	100.0		1505	1500
대도시	1.6	0.4	21.0	5.9	42.0	23.1	21.1	32.6	11.7	26.1	2.6	11.9	100.0		738	706
중소도시	1.1	0.4	27.5	3.6	42.2	21.6	19.6	36.2	8.6	26.0	1.0	12.2	100.0		618	550
군지역	4.7		51.0	9.8	33.6	32.4	6.0	38.5	4.7	17.6		1.6	100.0		149	244

주: 본 문항은 주관식 문항으로 본 보고서 연구권이 ①100만원 미만 ②101-200만원 ③201-300만원 ④301-400만원 ⑤401-500만원 ⑥501만원이상으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았음

***p<.001, **p<.01, *p<.05

제9절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 등

1.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 2004년과 2011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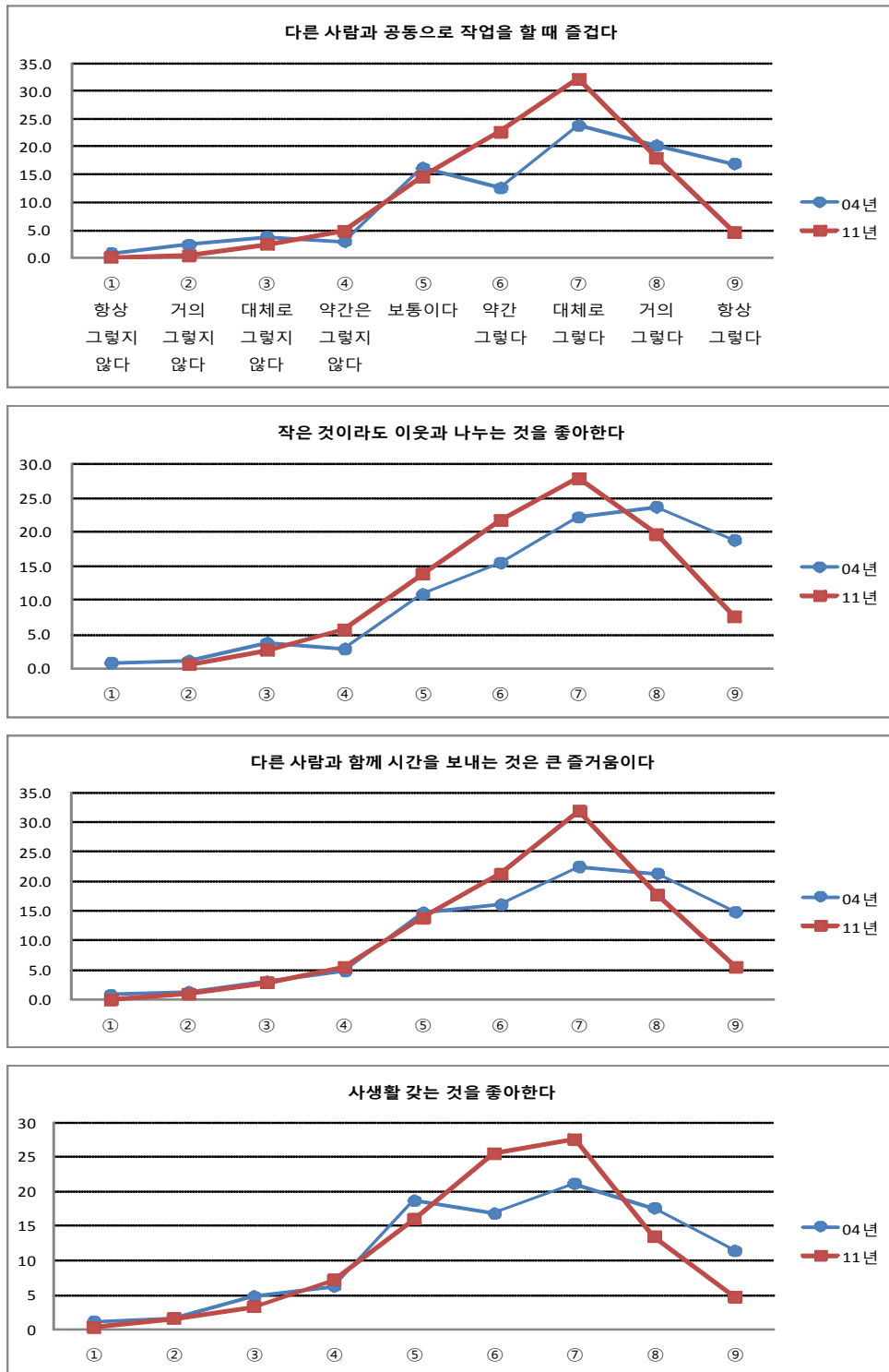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 등에 대해서 총 23문항 중에서 14문항이 2004년과 2011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단과의 조화와 관련해서는 2004년에 비하여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집단내에서 경쟁의식은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가족관계에서도 가족을 위한 희생, 노부모 부양의식 등은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06〉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2004년 2011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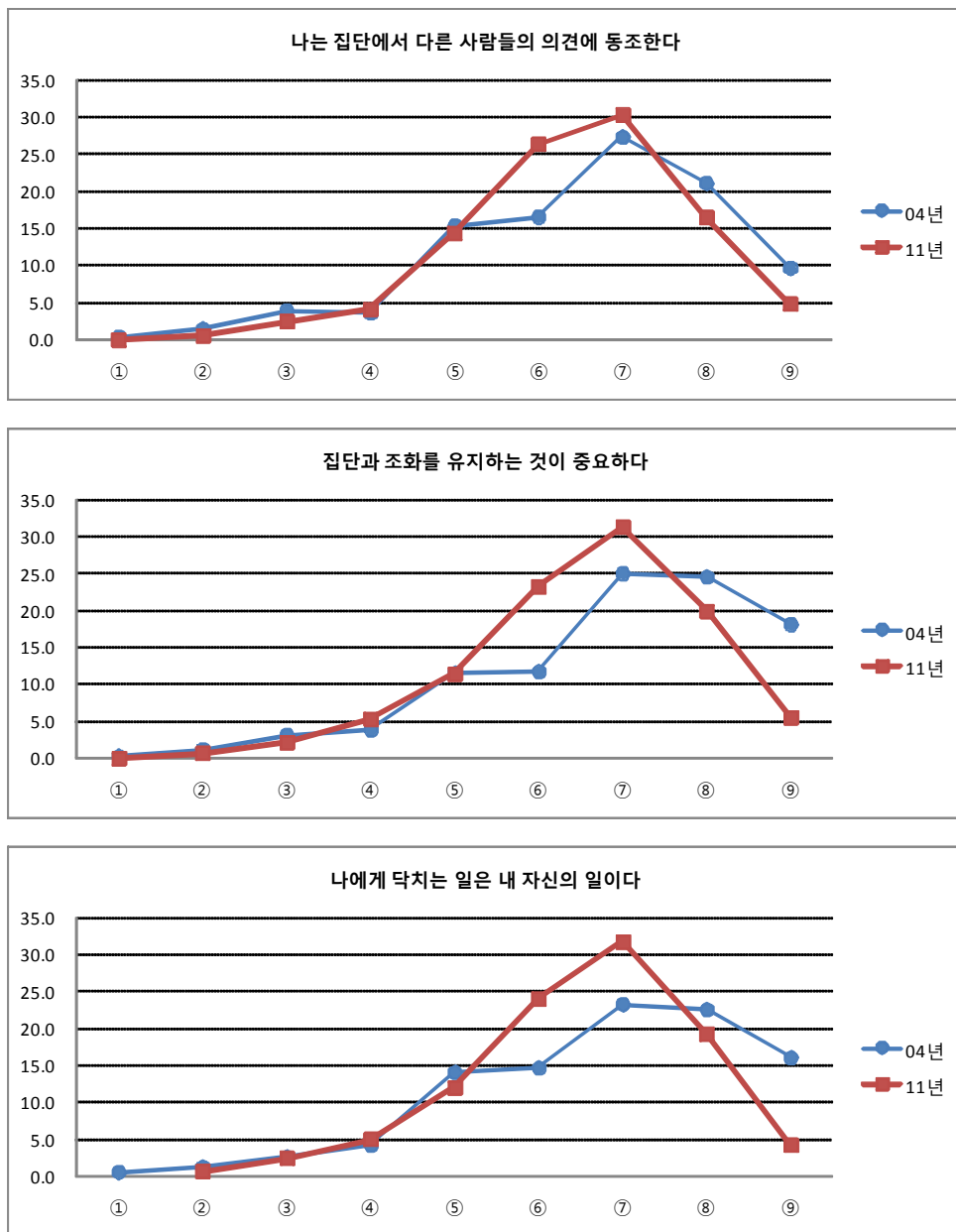
구분	2004년			2011년			t값
	평균	표준 편차	사례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다른사람과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 즐겁다	6.68	1.82	1506	6.48	1.37	1498	3.444**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6.90	1.74	1506	6.54	1.47	1499	5.988***
나는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한다	6.56	1.64	1506	6.45	1.36	1499	1.997*
동료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6.51	1.62	1506	6.45	1.34	1499	.985
내 가족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싫어도 기꺼이 하겠다	6.81	1.80	1506	6.49	1.46	1500	5.404***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6.67	1.74	1506	6.46	1.45	1500	3.453**
집단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6.93	1.69	1506	6.56	1.40	1500	6.639***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한다	6.03	1.76	1506	6.14	1.46	1500	-1.715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6.73	1.96	1506	6.21	1.68	1499	7.951***
동료가 상을 받으면 자랑스럽다	6.37	1.71	1506	6.25	1.41	1498	2.072*
긴 여행을 가기전에 사전에 부모님, 친구들과 상의한다	6.44	1.95	1506	6.26	1.53	1499	2.865**
나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달려있다	6.08	1.89	1506	6.09	1.58	1500	-.142
경쟁은 자연의 법칙이다	6.62	1.83	1506	6.51	1.42	1500	1.834
다른사람들과 다르고 독특해지려고 한다	5.62	1.89	1506	5.69	1.71	1499	-1.128
나에게 닥치는 일은 내 자신의 일이다	6.78	1.70	1506	6.51	1.37	1500	4.821***
경쟁적인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5.73	1.90	1506	5.88	1.59	1499	-2.349*
다른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것이중요하다	6.47	1.72	1506	6.42	1.40	1499	.936
다른 사람이 잘했을때 긴장이 되며 해야된다고 느낀다	6.34	1.72	1506	6.38	1.35	1497	-.664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했을 때 화가난다	5.17	1.96	1506	5.52	1.67	1499	-5.221***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6.41	1.72	1506	6.48	1.30	1498	-1.166
내 방식대로 일한다	6.18	1.76	1506	6.12	1.45	1499	1.114
나에겐 승리가 전부다	5.24	2.00	1506	5.55	1.65	1498	-4.599***
사생활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	6.33	1.81	1506	6.20	1.51	1499	2.017*
나의 성공은 나의 능력때문이다	6.28	1.81	1506	6.21	1.40	1499	1.167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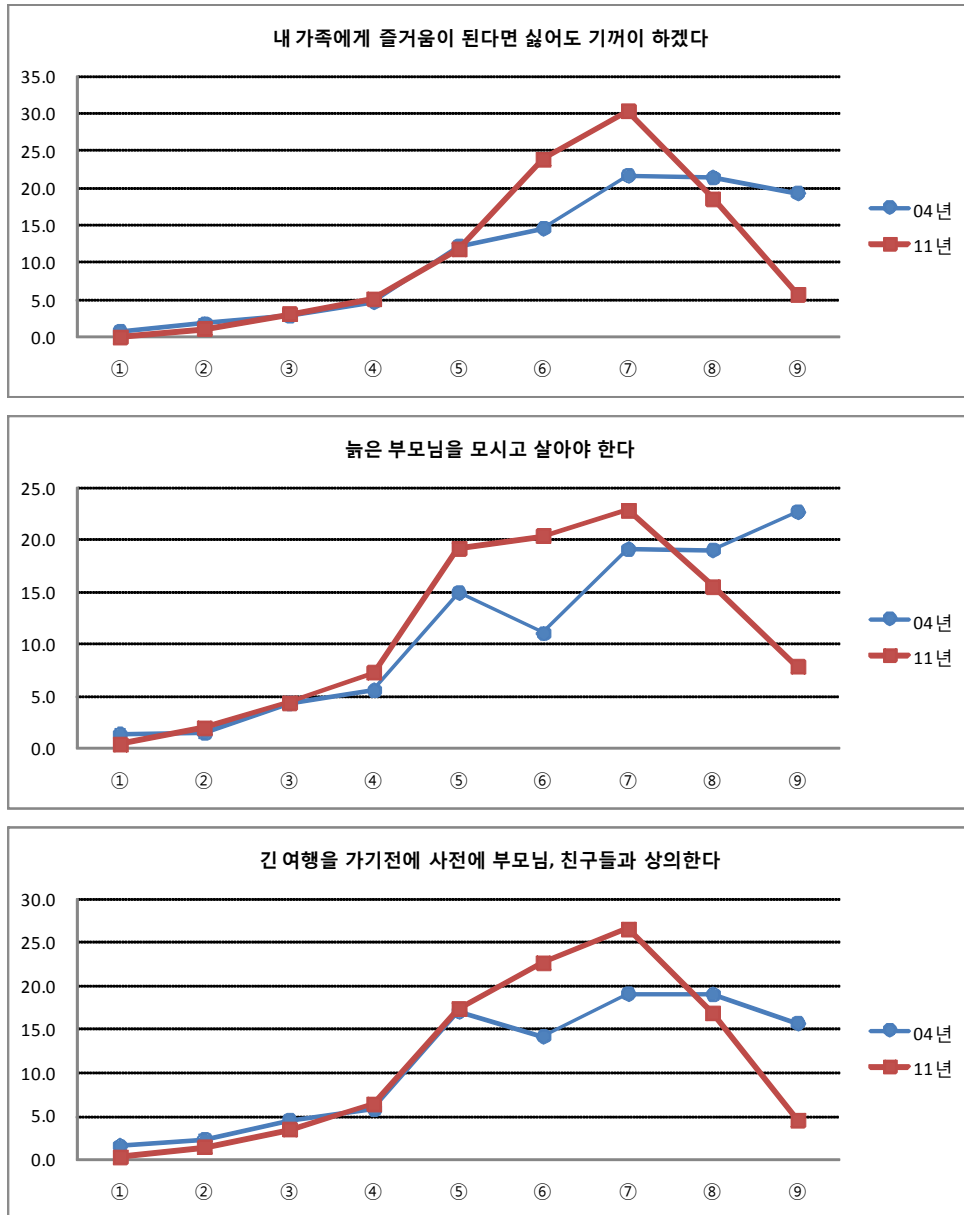
[그림 3-77] 사회관계에 대한 의식 주요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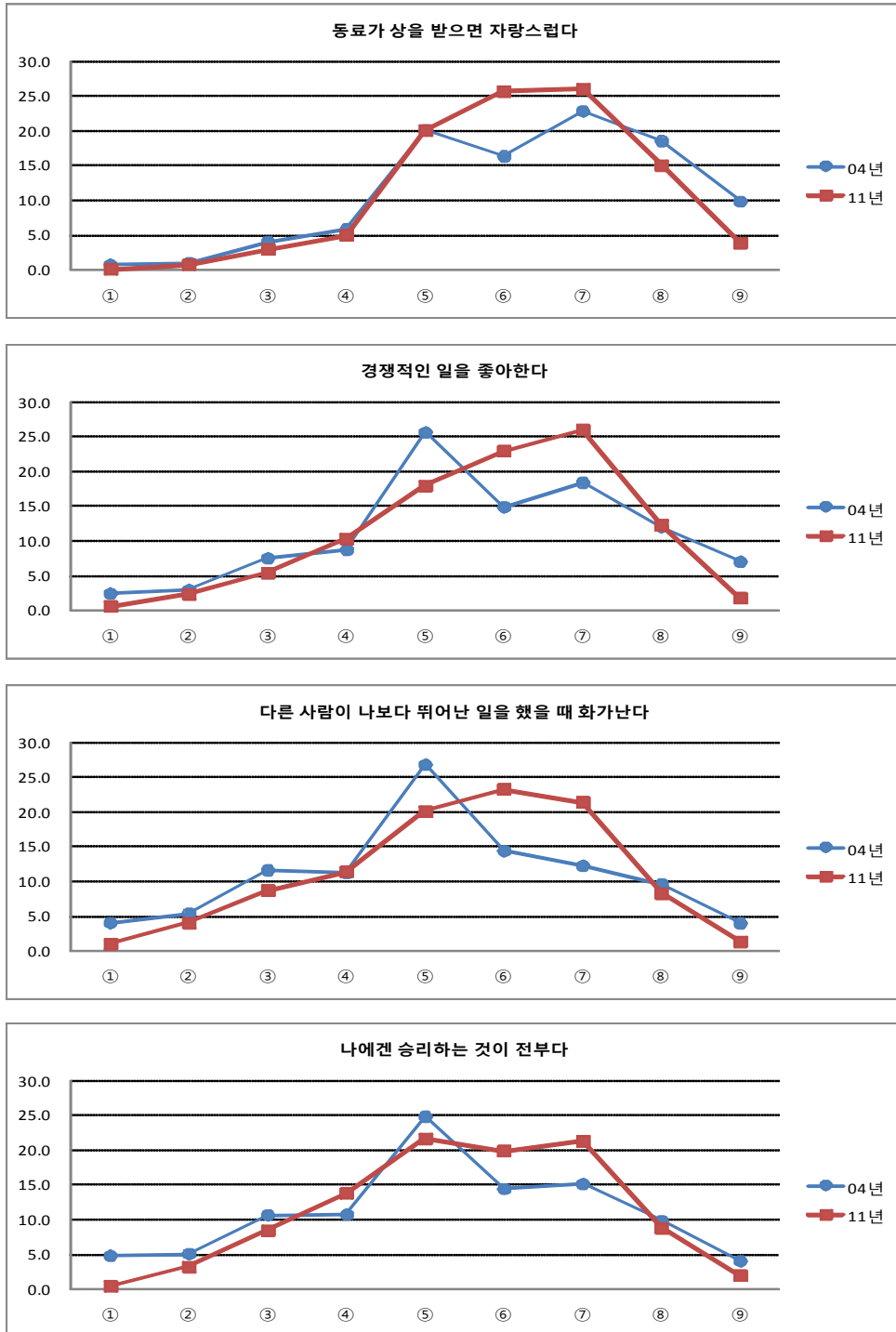
[그림 3-78] 집단조화에 관한 의식 주요결과



[그림 3-79] 가족관계에 대한 의식 주요결과



[그림 3-80] 경쟁에 대한 의식 주요결과



2. 세대에 따른 사회관계, 인생관 등의 차이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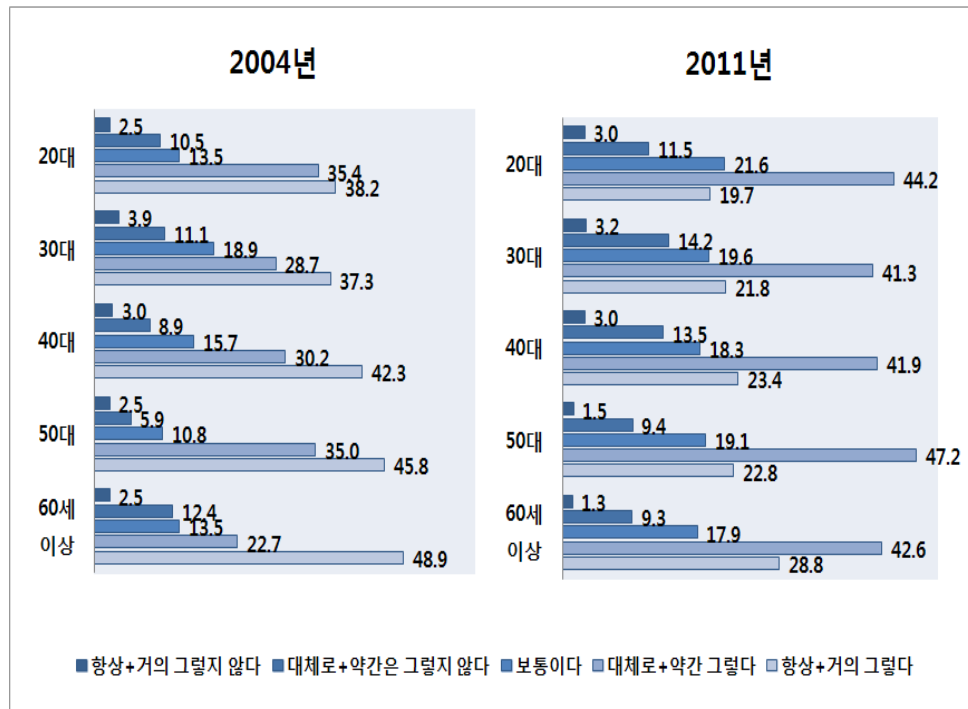
세대에 따라 사회관계, 인생관 등에 대한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107>과 같이 2004년에는 13문항, 2011년에는 10문항이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몇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2004년과 2011년 유사하였다.

〈표 3-107〉 연령별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의 차이 여부

구분	2004년	2011년
다른사람과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 즐겁다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	
나는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한다		
동료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내 가족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싫어도 기꺼이 하겠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	
집단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한다		○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	○
동료가 상을 받으면 자랑스럽다	○	○
긴 여행을 가기 전에 사전에 부모님, 친구들과 상의한다	○	○
나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달려있다	○	
경쟁은 자연의 법칙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독특해지려고 한다	○	○
나에게 닥치는 일은 내 자신의 일이다		
경쟁적인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	○
다른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것이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잘 했을때 긴장이 되며 해야된다고 느낀다	○	○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했을 때 화가난다	○	○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	○
내 방식대로 일한다		
나에겐 승리가 전부다		
사생활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	○	○
나의 성공은 나의 능력때문이다	○	

특히 연도별 및 세대별로 응답의 차이를 보인 것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 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와 관련하여 강한 긍정의 응답이 전반적으로 모두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50대 이상으로 강한 긍정적 응답이 모두 절반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4년에는 60세 이상에서는 ‘항상+거의 그렇다’의 강한 긍정적 응답이 58.9%였으나 2011년에는 28.8%이며, 50세 이상에서는 2004년 45.8%에서 2011년 22.8%로 나타났다.

[그림 3-81] 연령별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의식 비교



제10절 요약 및 시사점

1.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물가안정 및 임금규제 등 생활경제 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시장적 또는 진보적 성격이 강한 정책에 대한 특별한 요구도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경제 및 사회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04년에 비하여 강조되어 병원, 금융, 전력, 대중교통 등 공공적 성격이 있는 기간산업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정부를 통해 제공받을 것을 원하고 있었다. 주로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도도 높지만 세금부담과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방적 지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정부책임이라는 인식이 낮았다. 즉,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민들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개인의 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방향으로 다소 전환되었다.

2. 정부의 지출과 보편복지 대비 선별복지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출을 증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2004년에 비해서는 정부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낮아진 경향을 보인다. 증가 지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의료(58.3%), 교육(57.7%), 국민연금(53.8%), 공적부조(50.2%)의 순이며, 감소 지지율이 높은 분야는 국방(20.8%), 문화·예술(20.8%), 경찰(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공적 부조는 2004년에 비하여 지지율이 감소하였다.

세금을 줄이는 것과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 중 7년 전과는 달리 세금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재정지출을 현재보다는 늘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맞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서 접근해야 한다.

선별복지 대비 보편복지에서는 선별복지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응답비율은 '04년에 비하여 높아졌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을 돕는 것이 좋다'는 선별복지에 대한 인식은 '04년 57.9%보다 7.0% 포인트 증가(64.9%)하였다.

3.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 정도

형평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고, 우리나라는 부모의 부와 가족적 배경이 성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무조건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정책보다는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

해야 한다.

4. 정치적 성향 및 가구경제

전반적으로 극좌와 극우인 경우가 낮아지고 중도좌와 중도의 응답이 2004년에 비하여 높아졌다. 40대 이상인 경우 극우와 우인 경우가 30대 미만보다 높았으며 극좌와 좌인 경우는 낮았다.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중 중도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2004년에 비하여 높아졌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의 성향이 많아졌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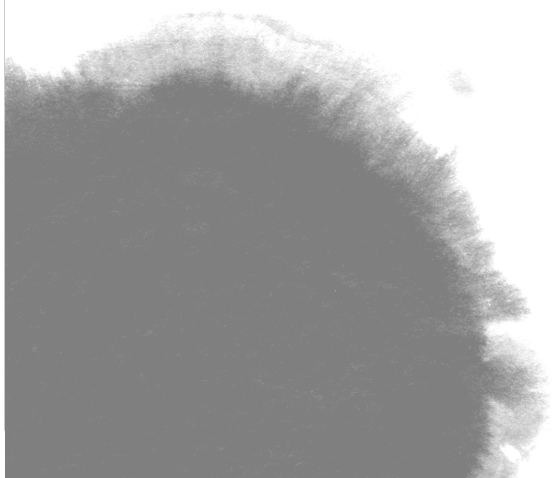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주관적 사회적 위치를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하층이라고 생각하였다. 고소득 집단인 경우도 자신이 사회적으로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율이 높지 않았다.

5.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 등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 등에 대해서 집단과의 조화와 관련해서는 2004년에 비하여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집단내에서 경쟁의식은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가족관계에서도 가족을 위한 희생, 노부모 부양의식 등은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및 세대별로 응답의 차이를 보인 것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와 관련하여 강한 긍정의 응답이 전반적으로 모두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강한 긍정적 응답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04

공생사회 구현방안



제4장 공생사회 구현방안

제1 절 복지인식의 전반적 추이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 ‘좌’와 ‘우’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 2004년과 2011년 모두 중립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63% 정도로 대부분이었다. 좌파나 우파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은 2개년도 모두 우파가 약간 더 많았다. 그러나 ‘극좌’나 ‘극우’를 선택한 사람들은 각각 1~4%로 소수였다. 특이한 사항은 2004년에는 20대와 30대에서 좌파의 비율이 약간 높았는데, 2011년에는 20대 중에 우파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점이다.

진보와 보수에 있어서는 2011년도에 ‘중도’를 택한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다. 좌파와 우파를 묻는 질문에는 우파를 답한 사람들이 약간 더 많았지만, 진보와 보수의 선택에 있어서는 진보를 선택한 사람들이 약간 더 많았다. 2004년과 2011년 모두 20대에서 40대까지는 진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50대와 60대는 보수의 선택이 많았다.

특이한 사항은 학력이 낮을수록 정치적 우파나 보수의 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소득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이하와 고소득층은 우파와 보수의 성향을 더 높게 선택한 반면, 중간층에서는 진보와 좌파의 선택이 높았다.

이 조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이념적 성향을 선택한 사람들도 이념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방향에 있어서 단순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구분으로 좌와 우의 선택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안법 등에 더 치중되어 있다면, 진보와

보수는 사회복지나 형평성과 같은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보안이나 반공과 같은 면에서는 천안함사건 등으로 인해 20대의 우방향 선회가 있었지만, 사회복지나 형평성은 꾸준히 진보적 성향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념의 선택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중립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념에 치중한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합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설문조사의 각 부분의 내용에서도 국민들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진보적 성향이 약간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보수적 성향이 높은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규제정책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2004년보다 2011년에 더욱 높게 나타난다. 정부지출에 대해서도 축소를 원하는 국민들이 과반수가 넘는다. 2004에는 세금을 높이더라도 사회복지지출을 더 하자는 의견이 다소 높았던 반면, 2011년에는 세금도 줄여주고 사회복지지출도 줄이자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규제나 정부지출과 사회복지지출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층과 소득계층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지출에 대해서만 100만원 이하의 소득층이 사회복지지출을 늘이자는 응답을 약간 높게 선택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에 대해서는 2004년에는 20대에서 40대까지 세금을 더 내고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자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선택되었지만, 2011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세금과 사회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국민들이 이념적 선택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도 합리적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수의 이념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국민의 뜻과 다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향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음 절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제2절 정부의 역할 및 책임

전통적으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이 국가와 관료에 많이 의지해 왔던 발전국가적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와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 진보나 보수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나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들은 시장적 성격이 강한 정책이나 진보적이고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정책을 구분하여 선호하지 않고 있다.

시장적 성향이 강한 질문에 있어서 국민들은 최저임금제, 규제완화, 정부지출 축소, 산업기술 지원 등의 정책에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진보적 성향이 강한 국가의 역할인 정년보장, 일자리를 위한 공공사업, 물가통제, 사양산업지원 등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주당근로시간 축소에 대해서만 찬성이 과반수가 되지 않지만 40%가 넘는 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장적 역할이나 진보적 역할 모든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득계층간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100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적 정부에 대해 다른 계층보다 찬성의 비율이 낮다. 특히 주당근로시간 축소에 대해서는 생계와 직결된다는 생각인지 찬성의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많이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문민정부 이후로 강한 이념적 목소리를 높이는 소수의 집단들에 의해 정부정책의 방향이 포퓰리즘적으로 변화해 왔고 그 결과로 정권재창출에 어느 정도도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 및 사회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질문들에 있어서 2004년에 비해 2011년에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선호가 바뀌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저축은행사태와 같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불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운영주체로서 국가가 더 합당하다는 방향으로 선호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변화는 연령별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계층 간에 있어서는 완전 선형적이지는 않지만 소

득이 낮을수록 국가의 역할을 민간부문의 역할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9개 문항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과반수를 훨씬 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예외가 되는 한 문항은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 소득보장’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항에 대한 선택도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선택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2011년에는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2004년보다 2011년에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비중을 낮추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4년과 2011년 사이에 세금과 사회보장지출을 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 문항과 일치한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층별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계층 간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았다. 200만원 이하의 낮은 소득층에서는 2004년과 2011년 사이에 국가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상의 분석은 정부의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국민들은 경제정책과 사회보장서비스 정책 어느 분야에 정부가 더 치중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이나 보수적인 정책 중 하나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소수집단의 목소리에 따라 포퓰리즘적 정책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신뢰를 잃게 된다.

둘째, 국민들은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민간부문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더 신뢰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과 에너지위기에 대한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순환의 한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안정감을 위해 더 높은 개입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해서 국민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점차 개인의 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보장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에 대해 일정소득을 보장을 해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2011년에는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는 현재 ‘서민’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치권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념적 이익집단이 아닌 침묵하는 국민들은 과반수가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 조사가 포퓰리즘적 보편적 복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 정치적 상황에서 조사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정부의 지출과 복지

어느 나라에서 조사를 하거나 국민들은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서비스는 증가시키기를 원한다. 이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정부의 지출은 줄이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한 분석보다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더 큰 정부지출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모든 분야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2004년보다 2011년에 정부지출의 증가를 찬성하는 비율이 줄고 반대하는 비율이 늘었다. 하지만 분야별로 정부지출을 찬성하는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났다. 정부지출의 증가를 찬성하는 비율이 줄어든 부분 중에 상당한 비율은 현재유지로 이동했고, 정부지출의 감소를 찬성하는 비율은 약간 늘었다.

2개년도 모두 경찰, 국방, 문화예술 분야는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방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이나 사회보장서비스 중에서는 고용보험이나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분야가 2011년에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바라는 선택이 대폭 늘어서 40%를 웃돌았다. 찬성의 비율도 2004년에는 70% 안팎이었지만 2011년에는 50% 수준으로 대폭 찬성비율이 낮아졌다.

소득계층별로는 정부지출의 선호에 대한 차이가 크다. 소득이 낮을수록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지출의 선호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비용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은 2004년보다 2011년에 정부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사회보장 외에 저소득층은 교육에 대한 지출도 2011년에 더 증가시켜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다.

조세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가족들이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이 높다고 답하고 있다. 2004년에 비해서는 2011년에 적당하다는 비율이 약간 높아진 반면 너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다. 조세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는 연령이나 소득계층과의 관련성이 적었다.

기업에 대한 조세에 대해서 2004년에는 높은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지만, 2011년에는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다.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특이한 점은 고소득층이 기업의 세금부담이 낮다고 답하고 있는 점이다.

조세와 복지지출과 관련해서는 2004년과 2011년 사이에는 응답자들의 선택이 완전히 전환되었다. 2004년에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사회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높았던 반면, 2011년에는 세금을 덜 내더라도 사회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줄이고 사회복지지출도 줄이자는 응답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까지도 세금을 줄이고 사회복지도 줄이자는 응답비율이 2011년에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출과 복지에 대한 이 조사결과는 정부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이 조사가 가지는 일관성에 대한 인식이다.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무조건 세율은 낮추면서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들은 가구당 조세부담이 너무 높다고 느끼면서 정부의 지출도 줄이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둘째,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나 교육에 있어서도 점차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부는 무

분별한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무상급식이나 반액등록금과 같은 정책에 대해 정치권이나 이념적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의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무조건 수긍할 것이란 생각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들은 가구의 조세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기업에 대한 조세는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소득이 높은 계층이 기업에 대한 조세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의 지출이 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를 높일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국민들은 현 정치권의 생각과 달리 조세도 줄이고 복지지출도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낮기 때문에 조세도 늘리고 복지도 늘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은 그 반대로 향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절대성을 지닌 선형적 규범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시대적 상황과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영국의 복지국가의 실패를 보는 시각 중에는 자유주의의 선구적 국가였던 영국이 무분별한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발생한 괴리에 주목하는 견해도 있다. 한국도 국민들의 의식과 달리 정치권의 표대결을 위한 정책으로 복지정책을 이끌어 간다면 영국의 실패를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4절 형평적 부의 재분배 방안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형평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형평성이 높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 비해서는 2011년 형평성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부모의 부와 가족적 배경이 경제적 사회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소득계층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도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중간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율이 높게 나타난다.

빈곤층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2004년에 비해 2011년에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는 높지만 2011년에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가난한 이유가 노력부족이라는 인식도 높아졌다. 2011년에는 가난한 이유가 노력부족이란 응답이 아니라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로 현재 공적부조를 받는 사람들의 자격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중립이거나 부정적인 응답이 2011년에 높아졌다.

형평성과 빈곤층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에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2004년에 비해 2011년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20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2004년 보다 2011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중요시하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2011년에도 실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2004년이나 2011년이나 모두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율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응답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빈곤층에 대해서도 가능한 자활이나 일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의 기간에 대해서도 2004년에는 63%, 2011년에는 72%가 2년 이하의 기간의 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의 의존하고자 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11년에는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선택의 비율이 48.8%로 거의 과반수에 접근하고 있다.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2004년에는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하지만 2011년에는 최소한의 소득보장만 국민연금에서 해결하고 그 이상은 각자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율이 더 높아졌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무조건 국민들에게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정책보다는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대학생들에 대한 반액등록금보다는 초·중·고의 공교육을 내실화 있게 발전시켜서 어려운 학생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일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집안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반액등록금으로 여유있는 공부를 하는 것은 기회의 형평성에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공공부조 역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보장보다는 자활서비스나 근로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물론 한국의 공공부조정책에 자활서비스와 직업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성과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형식적인 수준의 자활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의 통제도 잘 되지 못했었고, 자활서비스 기관의 보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의 공공근로사업이 소위 ‘눈먼 돈’이란 지적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복지관리의 수준을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국민들은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의 효율적 측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제적 수준과 관련없이 모두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현재 일부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영국식의 NHS시스템에 대한 주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선호도가 선회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앞부분의 정부의 역할에서 병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민간의료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의 민영화를 추구하는 것이나 의료시스템을 국영체제로 하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영 의료시스템을 늘리지만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에 대해 국가가 복지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노인들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될 정도의 소득보장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그 이상

은 각자의 경제적 수준에 맞도록 생활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물론 현재 국민연금이나 노인연금은 그 수준도 보장하고 있지 못하지만, 선거철마다 모든 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늘리려고 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5절 사회통합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극화라는 현상에 대해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도 정치권이나 언론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된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본인이 중간층이라고 대답하는 정도가 2004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 반면에 중상층 이상이나 중하층 이하라는 응답은 줄어들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산층의 붕괴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높다고 주장하는 학자나 정치인들은 복지국가로 불리는 북유럽의 세후 및 소득이전포함 지니계수와 한국의 지니계수를 비교해서 무척 높다고 주장하고 양극화를 주장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니계수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국가의 중간정도에 해당이 된다.

상대적 빈곤율로 본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국가에서 높은 편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해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국 센서스 조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국민소득의 중위수를 계산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확한 상대적 빈곤율을 알기 위해서는 전국 센서스 조사에서 소득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국민소득의 정확한 중위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본조사에 의한 월평균소득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그것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소득분포는 상당히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월평균소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꽤 상위권에 속하는 소득이 된다. 네덜란드 학자인 얀 펜(Jan Pen)에 의하면 어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한 시간 동안 소득수준의 순서로 행진을 하게 되면, 평균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약 45분 정도에 나온다고 한다. 물론 국가나 사회마다 사정을 다르겠지만 그만큼 평균소득은 상위계층에 속한

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시근로자기구의 평균소득은 우리 사회의 상위소득에 해당된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평균소득이 발표되면 대부분 중위소득으로 이해하면서 자신들의 소득이 낮다고 인식하게 되고 주관적 불평등도가 높아지게 된다. 바로 정부의 무책임한 통계의 발표가 의도하지 않은 주관적 불평등도를 높이게 되고 국민들의 소득에 대한 불만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상당수인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월 최저생계비를 250만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월 최저생계비를 300만원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1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은 2011년 1/4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을 385만원 정도로 추계하였다. 얀 펜의 이론에 따르면 월 300만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무지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상세한 설명도 없이 제공함에 따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소득수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의 양극화나 주관적 불평등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일부 이와 같은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교육수준, 동일한 의료수준, 동일한 소득수준을 맞추어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은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 모두의 소득, 교육, 의료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재정을 통해 소득지원과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개개인에 대한 세금을 높일 것이란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통합은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대안으로 해결되길 원하고 있다. 무분별한 복지지출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사회통합의 분위기는 역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아직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책임과 재정지출 증가의 필요성

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점차 국가의 책임과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견제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복지의 재정지출을 현재보다는 늘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맞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인 것보다 자활사업이나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와 의료에 있어서도 현재보다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소득수준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본인의 선택에 맞기는 것을 원한다.

셋째,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해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올리는 것도 합당하다.

넷째, 복지를 통한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물가통제를 통한 실질적 소득감소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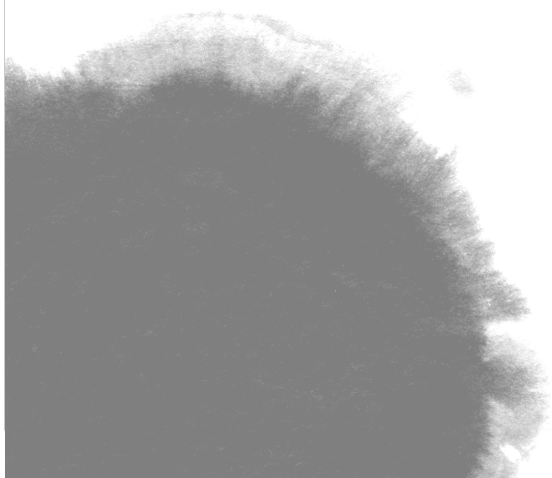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다섯째, 정부의 복지와 같은 진보적 정책에도 책임이 있지만,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책임도 크다. 따라서 균형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김신영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 요인 연구: 국가의 공정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Vol.11. pp87-105.
- 김상균·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25권. pp.1-33.
- 김영란 (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 계급 및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모 (1991). 한국인의 복지의식 재론. 사회정책연구. 13. pp.5-17.
- 김주성 (2011). 공정사회 1년의 회고와 공생발전의 과제,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공정사회 추진방안 국민토론회(2011. 8. 3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p.5~19.
- 류만희·최영 (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도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4, pp.191-210.
- 문화체육관광부 (2011). 공생발전 함께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http://www2.korea.kr/expdoc/viewDocument.req;JSESSIONID_KOREA=nkznP5ZZvDqpy3t5ndMh4McP9xX3f3jtw1r95brLnWP559j1pQLY!-1279736954?id=29903
- 변미희 (2002).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가족복지학. 제7권, 제2호 pp.75-89.
- 신광영·조문돈·이성균 (2000). 한국인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50, pp33-59.
- 안상훈 (2000). 복지정치의 메커니즘과 비계급적 균열구조. 사회복지연구. 16. pp.87-115.

- 안치민 (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고가 계급. 고려사회학논집. 9. pp.211-228.
- 유범상·이현숙 (2008). 영국의 복지유형과 의식과 괴리: 그 기원과 시사점, 사회복지연구, pp.325-352.
- 이근식 (2011). 상생발전,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모색: 정치 경제적 접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9.26), pp. 3~22.
- 이성균 (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pp.205-228.
- 조돈문 (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효과, 산업노동연구, 제7권 제1호, pp.157-191.
- 주은선·백정미 (2008) 한국인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권. pp.203-225.
- Jakobsen, Tor (2011) "Welfare Attitudes and Social Expenditure: Do Regimes Shape Public Opin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01, Issue 3, pp.323-340.
- Taylor-gooby, P (1985). Public Opinion, Ideology and State Welfare. Dondon: Rouledge.
- Wilensky, Harold L.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부 록



ID

지금부터 공생발전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1]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평소 선생님의 생각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 반대	잘모름
	긍정 → 부정					
1) 최저임금제 등과 같이 정부가 임금을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8)					
2) 정부가 물가를 통제(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8)					
3)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8)					
4)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8)					
5)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가 공공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8)					
6)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8)					
7)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산업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8)					
8) 정부가 고용보호를 위하여 사양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8)					
9)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주당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8)					

[문2]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분야에 대하여 민간부분(민간조직 또는 기업)과 정부부분 중 주로 누가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주로 민간 부문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주로 정부 부문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잘 모르겠다
1) 전력산업	① ----- ② ----- (8)		
2) 병원	① ----- ② ----- (8)		
3) 금융기관	① ----- ② ----- (8)		
4) 대중 교통수단	① ----- ② ----- (8)		

[문3]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적으로 정부책임	대체로 정부책임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	전혀 정부책임 아님	잘모름
1) 일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일자리 제공	① ---- ② ---- ③ ---- ④ ---- (8)				
2) 의료서비스 제공	① ---- ② ---- ③ ---- ④ ---- (8)				
3) 노인들 에게 일정 수준의 생계보장	① ---- ② ---- ③ ---- ④ ---- (8)				
4) 실업자 에게 일정 수준의 생계보장	① ---- ② ---- ③ ---- ④ ---- (8)				
5)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	① ---- ② ---- ③ ---- ④ ---- (8)				
6) 저소득 가정 대학생 에 대한 재정지원	① ---- ② ---- ③ ---- ④ ---- (8)				
7)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주거제공	① ---- ② ---- ③ ---- ④ ---- (8)				
8) 양질의 교육제공	① ---- ② ---- ③ ---- ④ ---- (8)				
9)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소득 격차 해소	① ---- ② ---- ③ ---- ④ ---- (8)				
10) 성장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지원	① ---- ② ---- ③ ---- ④ ---- (8)				

[문4] 지금부터는 사회 각 분야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다음의 각 분야에서 정부지출이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정부지출 대폭 증가	정부지출 증가	정부지출 현수준 유지	정부지출 감소	정부지출 대폭 감소	잘모름
1) 환경분야	① ---- ② ---- ③ ---- ④ ---- ⑤ ---- (8)					
2) 보건·의료분야	① ---- ② ---- ③ ---- ④ ---- ⑤ ---- (8)					
3) 경찰분야	① ---- ② ---- ③ ---- ④ ---- ⑤ ---- (8)					
4) 교육분야	① ---- ② ---- ③ ---- ④ ---- ⑤ ---- (8)					
5) 국방분야	① ---- ② ---- ③ ---- ④ ---- ⑤ ---- (8)					
6) 문화·예술분야	① ---- ② ---- ③ ---- ④ ---- ⑤ ---- (8)					
7) 국민연금 분야	① ---- ② ---- ③ ---- ④ ---- ⑤ ---- (8)					
8) 고용보험(실업급여) 분야	① ---- ② ---- ③ ---- ④ ---- ⑤ ---- (8)					
9) 저소득층 생계지원(공적부조) 분야	① ---- ② ---- ③ ---- ④ ---- ⑤ ---- (8)					

[문5] 귀하께서는 귀하의 가족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이 너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낮다고 보십니까?

- ① 너무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적당하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너무 낮다 ⑥ 세금을 내지 않는다 (8) 잘 모르겠다

[문6] 귀하께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수준이 너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낮다고 보십니까?

- ① 너무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적당하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너무 낮다 (8) 잘 모르겠다

[문7] 만약,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것과 사회복지비를 증가시키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귀하는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 ① 사회복지 지출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
②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8) 잘 모르겠다

[문8] 그렇다면,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과 실업을 감소시키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플레이션 낮추는 것에 우선순위 두어야 한다
② 실업을 줄이는 것에 우선순위 두어야 한다
(8) 잘 모르겠다

※ 인플레이션 :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문9]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두 가지 의견 가운데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을 돕는 것이 좋다
②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려 모두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8) 잘 모르겠다

[문10] 의료서비스에 대한 두 가지 의견 가운데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
② 여유가 있으면 자기 돈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8) 잘 모르겠다

[문11] 노후대책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의견 가운데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민연금만으로도 적정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②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은 각자가 준비해야 한다
(8) 잘 모르겠다

[문12] 다음의 제시된 각각의 주장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 여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 반대	잘모름
	긍정 → 부정					
1) 부유한 부모를 가진 사람은 가난한 부모를 가진 사람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2) 우리나라의 경우 인생의 성공 여부는 가족 배경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3)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4)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만큼 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5) 가난한 이유는 주로 스스로의 노력부족 때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6) 우리 사회는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7) 현재 국가의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지원)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받을 자격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문13]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 수혜 기간에 대해 선생님은 다음 중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①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혜택(☞ 문14로 이동)
 ② 한정된 기간을 정해 일자리를 찾도록 규제 (☞ 문13-1로 이동) ↓
 ⑧ 잘 모르겠다 (☞ 문14로 이동)

[문13-1] (문 13의 ② 한정된 기간을 정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년 이내 ② 2년 이내 ③ 3년 이내 ④ 5년 이내 ⑤ 기타 ()

[문14] 다음 중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정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과 같은 생계급여 지급
 ② 공공근로 사업과 같은 근로복지
 ③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⑧ 잘 모르겠다

[문15] 다음 중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가장 찬성하는 것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근로능력 없는 사람만 세금으로 복지지원
 ② 모든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세금으로 복지지원
 ③ 한정기한 두어 세금으로 복지지원
 ④ 저소득층 삶의 질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복지지원
 ⑧ 잘 모르겠다

[문16] 정치적 성향을 다음과 같이 좌와 우로 구분할 때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극좌 ② 좌 또는 중도좌 ③ 중립 ④ 중도우 또는 우 ⑤ 극우 (8) 잘 모르겠다

[문17] 정치적 성향을 다음과 같이 진보와 보수로 구분할 때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진보적 ② 대체로 진보적 ③ 중도
④ 대체로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 (8) 잘 모르겠다

[문18]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를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수준으로 나눈다면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간층 ④ 중하층 ⑤ 하층
(8) 잘 모르겠다

[문19]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당/상여금/이자소득/세금 포함한 총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원
--	--	--	--	----

[문20] 다음의 제시된 각각의 주장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금액**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세금 포함)	응 답				
1)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원 정도면 여유있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table><tr><td></td><td></td><td></td><td></td></tr></table> 만원				
2)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table><tr><td></td><td></td><td></td><td></td></tr></table> 만원				
3)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원 정도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table><tr><td></td><td></td><td></td><td></td></tr></table> 만원				
4)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원 정도면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table><tr><td></td><td></td><td></td><td></td></tr></table> 만원				

[문21] 현재 귀댁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월평균 최저생계비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금 포함)

				만원
--	--	--	--	----

[문22] 그렇다면,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4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한 달에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금 포함)

				만원
--	--	--	--	----

[문23]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항상 그렇다	거의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항상 그렇지 않다	잘모름
	긍정 부정									
1)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업을 할때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2)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3) 나는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4) 동료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5) 내 가족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싫어도 기꺼이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6)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7) 집단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8)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9)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10) 동료가 상을 받으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11) 긴 여행을 가기전에 사전에 부모님, 친구들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12) 나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13) 경쟁은 자연의 법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14)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독특해지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15) 나에게 닥치는 일은 내 자신의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16) 경쟁적인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17) 다른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18) 다른 사람이 잘했을 때 긴장이 되며 해야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19)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했을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20)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항 목	항상 그렇다	거의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항상 그렇지 않다	잘모름
	긍정 → 부정									
21) 내 방식으로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22) 나에게 승리하는 것이 전부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23) 사생활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24) 나의 성공은 나의 능력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8)

응답자 일반 사항

IDQ1] 학력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IDQ2]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IDQ3] 동거 가족수 총 _____명 (14세미만 아동: _____명 / 대학생: _____명 / 60세 이상 : _____명)

IDQ3-1] 가구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 ① 독신가구 ② 부부 ③ 부부+자녀 ④ 한부모+자녀
⑤ 조부모+부부+자녀 ⑥ 형제자매 ⑦ 조부모+손자녀 ⑧ 기타 ()

IDQ4] 종교

- ① 불교 ② 개신교(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기타 () ⑦ 종교없음

IDQ5] 주거 형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

IDQ6]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 ① 참여 ② 비참여

IDQ7] 직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⑧ 주부 ⑨ 대학생 ⑩ 무직, 실업 ⑪ 퇴직자는 응답후 조사종료)

- ① 전문직 ② 경영관리직 ③ 사무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자영업 ⑥ 생산직/기능직/노무직 ⑦ 농림·어업/광업 ⑧ 전업주부
⑨ 대학생 ⑩ 무직, 실업 ⑪ 기타 () ⑪ 퇴직

IDQ7-1] 종사산업 (IDQ 7의 ⑧ 주부 ⑨ 대학생 ⑩ 무직, 실업 ⑪ 퇴직자 제외)

- ① 농림·어업/광업 ② 제조업 ③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④ 건설업
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⑥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⑦ 금융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⑧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⑨ 기타분류 불능업 ()

IDQ7-2] 종사상 지위 (IDQ 7의 ⑧ 주부 ⑨ 대학생 ⑩ 무직, 실업 ⑪ 퇴직자 제외)

-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 종사자

♣ 응답에 감사하여 작은 답례품을 마련하였습니다. ♣

♣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